

제7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우리회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산하에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 분야 연구 활동 지원사업은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인권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고찰과 이를 보완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진행한 ‘제7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총 11팀이 참가 신청하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팀을 선정하였습니다. 김현임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조사 권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류정화 변호사 외 2인 팀은 ‘기후변화 등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ESG 평가 지표의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박대영 변호사 외 3인 팀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교육 지원방안’을 주제로, 신수경 변호사 외 2인 팀은 ‘메타버스 내의 아동권리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한상원 변호사 외 3인 팀은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교권침해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주제로 각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권침해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권, ESG, 보호종료아동 자립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들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바, 평소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필요로 하셨을 만한 귀중한 연구 결과를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제7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에 힘써주신 연구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계기로 변호사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변호사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등 연구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회는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및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는 회원님들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서울지방법변호사회장 김정욱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개요

1. 취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인권이 더욱 획기적으로 증진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형성하는 제도 및 정책 등의 변화가 필요한 바, 공익·인권의 관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또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을 지원하는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2. 참가 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3. 지원 부문

- 공익·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연구
- 공익·인권 관련 정책 제언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국외 인권 환경 및 제도, 판례 등에 대한 연구
- 기타 공익·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이론적·실무적 연구

4.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5. 진행 일정

구분	날짜	비고
모집 공고	2022. 9. 20. ~ 11. 4.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전 회원 이메일 공지
심사 기간	2022. 11. 7. ~ 11. 18.	1차 심사 :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2차 심사 : 상임이사회
결과 발표	2022. 11. 25.	선정 회원에게 개별 연락
연구 중간보고서 접수	2023. 2. 17.	제출한 중간보고서는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에서 검토 후, 연구자에게 보완 요청
연구 최종보고서 접수	2023. 4. 28.	

6. 최종 선정팀 및 선정 이유

연구팀	연구 주제	선정 이유
김현임 변호사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조사 권한에 관한 연구	<p>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수사권이 2023년 이후 완전히 폐지되면서 조사 권한만 남게 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이 없어, ‘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p>동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연구로써 인권침해 등 야기될 수 있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익성, 활용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p>
류정화 변호사 외 2인	기후변화 등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ESG 평가 지표의 현황과 대안	<p>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며 주류 흐름으로 자리매김한 ESG경영의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 제기 사례들을 연구해 봄으로써,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ESG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며 안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p>여기에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판점과 대안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방식과 지표들이 ESG가 근본적으로 지향한다고 알려져 있는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와 관련한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가들의 제도 개선 혹은 법적인 대응 방향에 있어서의 실무적인 참고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선정함.</p>
박대영 변호사 외 3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의 자립역량 강화와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교육 지원방안	<p>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이후 법률지식과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단기간내 소비하거나 사기 범죄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범죄 피해의 위험성을 사전 예방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실성 있는 법률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에 공감함.</p> <p>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와 선행연구 보고서, 학술논문 등을 분석함으로써 위 연구는 향후 우리 회 등에서 법률교육안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선정함.</p>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개요

<p>신수경 변호사 외 2인</p>	<p>메타버스 내의 아동권리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 아동의 참여권을 중심으로</p>	<p>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아동의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존중되고 구현되고 있는지, 소외되거나 외면되는 것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p> <p>아동청소년의 메타버스 이용이 높아지고,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된 것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아동의 참여권 논의와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범죄에 있어, 아동의 권리적인 측면을 짚어봄으로서,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신규 입법요청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선정함.</p>
<p>한상원 변호사 외 3인</p>	<p>발달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절차적 권리 보장 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p>	<p>발달장애학생이 징계사건 당사자가 되었을 때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으로 귀결되어 발달장애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등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제 및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황임.</p> <p>이에 해당 연구가 발달장애학생 또는 발달장애인이 징계처분의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절차적 권리보장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후속 연구를 촉발하기 위한 참고자료임과 동시에 정부, 국회, 교육청에 대해 법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활용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p>

목 차

01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조사와 인권

-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조사 업무의 범위와 수행 방법에 따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례 연구

I. 서론	14
II. 본건 조사와 여타 행정조사와의 비교	19
III. 권력적 행정조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27
1.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27
2. 공정거래법상 조사	38
3. 소결	45
IV. 개정 국정원법에 의한 본건 조사 규정의 문제점	46
V. 본건 조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제언	66
1.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의 명문화	66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	71
3. 내사 절차에 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	73
4. 기타	74
VI. 결론	76
〈참고문헌〉	77

목 차

02 ESG 경영 공시 및 평가의 현황과 대안

- 실무자 설문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81
1. 연구배경 및 목표	81
2. 연구범위	82
3. 연구방법	84
II. 글로벌 ESG 경영 공시 기준 및 평가 기관 현황	86
1. ESG 경영 공시 기준	87
2. ESG 경영 평가 기관	89
III. 한국의 ESG 경영 현황	95
1. ESG 경영 관련 현행 국내 제도 분석	95
2. 국내 ESG 경영 관련 공시 현황	113
IV. 설문 및 인터뷰 결과	115
1. 설문 응답자의 ESG 실무 현황	115
2. ESG 실무상의 어려움	119
3. 대책 방안 및 제언	132
4. ESG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조직 내) 지원 사항	138
5. ESG 경영의 의미 및 ESG에 대한 인식	140
V. 해외 사례 및 관련 주요 법제	143
[의무 공시 기준 및 관련 제도]	143
1. SEC 기후 공시	143
2. CSRD - ESRS	144
3. ISSB 공시 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145
4. SEC, ESRS, ISSB의 비교	146
5. ESG 투자 상품 공시 규칙	147
6.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149
7. 기타 금융권 의무 기후공시 제도	152
8.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	153

VI. 토의	155
1. ESG 인식 및 개념	155
2. 기업 또는 업무 특성에 따른 입장 차이	157
3. 공시 의무 법정화 및 평가 기준 일원화	158
4. 변호사(법조인)의 프로보노 영역으로서의 ESG	159
VII. 결어	161
VIII. 참고문헌	163
[별지]	167

목 차

03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법률교육안 제언

I. 서론	19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
2. 연구의 방법	197
II.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 법률교육 실태	199
1.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199
2.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	200
3.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실태	201
4. 당사자 및 관계자 경험 분석	204
5. 문제점 분석 및 정리	208
III. 청소년 법률교안의 개발	209
1. 법률교안 필요사항	209
2. 기존 법률교안의 분석 및 개선방안	211
3. 법률교안 초안의 개발	214
4. 교안 초안에 대한 피드백 및 법률교안 보완	225
IV. 법률교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35
1. 법률교안 활용방안	235
2. 법률교안 제작에 따른 기대효과	235
V. 결론	236
〈참고문헌〉	237
[별지]	238

04 메타버스 내의 아동권리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 아동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I. 서론	288
1. 연구 목적	288
2. 연구설계 및 방법	291
II. 메타버스의 특징과 규율	293
1. 메타버스(Metaverse)의 의미	293
2. 메타버스 관련 법적쟁점	296
3. 메타버스 내 규율의 분류	302
III. 비대면 문화와 아동의 권리	312
1. 유엔아동권리협약	312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315
3. 코로나 19와 아동의 권리	319
IV. 메타버스 내 아동의 보호권 침해	328
1. 메타버스 내 아동 대상 범죄의 유형 및 특징	328
2. 메타버스 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법제도 현황	331
3.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	342
V. 메타버스 내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제언	354
1. 메타버스 내 참여권이 가지는 의미	354
2.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에 대한 국내외 논의	356
3. 메타버스 내 아동친화적 정보제공	373
4.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	374
5. 아동의 표현의 자유	378
6. 아동의 의견 개진	380
VI. 요약 및 결론	382
〈참고문헌〉	386

목 차

05 초·중등교육에서의 발달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징계절차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I. 서론	390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92
1. 연구대상	392
2. 연구방법	392
III. 선행연구 분석	394
IV. 국내 법제 및 해외 사례 분석	397
1. 국내 법제	397
2. 해외 사례	405
V. 심층인터뷰	409
1. 인터뷰 대상자 및 심층인터뷰 일정	409
2. 심층인터뷰 결과	410
VI. 제도개선 방안	426
1. 정책 제언	426
2. 법 개정안	431
VII.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444
VIII. 결론	446
〈참고문헌〉	448

01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조사와 인권

-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조사 업무의 범위와 수행 방법에
따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례 연구

김현임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공 · 익 · 인 · 권 · 분 · 야 · 연 · 구 · 결 · 과 · 보 · 고 · 서

I. 서론

가. 연구의 배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 5. 16. 군사정변 당시 비상계엄 하에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 기관으로서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수행의 장애 제거’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는데(구 국가재건최고회의법(1961. 6. 10. 시행 법률 제618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 구 중앙정보부법(1961. 6. 10. 법률 제61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중앙정보부법’이라 한다) 제1조) 수사 범위가 제1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중앙정보)부장이 구 중앙정보부법 제1조에 규정된 정보수사에 관하여 국가의 타기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아니하는 등(구 중앙정보부법 제3조 제2항, 제6조 제2항) 수사 권한의 오·남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여건 하에 운영되었다.

이후 수사 범위가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 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정보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 범죄 수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구 중앙정보부법(1963. 12. 17. 시행 법률 제1510호로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5조, 제8조) 이러한 내용은 그 큰 틀을 유지한 채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거쳐 1999년 이후 국정원법으로 이어져 내려왔다.¹⁾

1) 다만 수사 범위 가운데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는 1994. 1. 5. 법률 제 47908호로 개정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 삭제되었고,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가 신설되었으며 금지되는 정치관여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은 1994년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구 국가안전기획부법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것) 1996. 7. 소위 간수 간첩사건, 같은 해 9.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을 계기로 1996년 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회복되는 등(구 국가안전기획부법 1996. 12. 31. 법률 제5252호로 개정된 것)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대공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법원의 (재심) 판결을 통해 이들 기관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사권한 폐지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결국 2021. 10. 19. 법률 제18519호로 국정원법 개정(이하 ‘개정 국정원법’) 당시 직무 범위에서 수사 업무가 삭제되었다. 다만 부칙 제3조에서 2023. 12. 31.까지는 구 국정원법(2021. 10. 19. 법률 제18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 수사와 관련한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023. 12. 31.까지 수사권한이 유지되었다.

한편 개정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수사권한이 폐지되는 대신 국정원 직원은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동호 라목)(이하 동호 다목, 라목에 규정된 범죄를 ‘안보범죄’라 한다)에 관한 정보’ 등 구 국정원법에 따른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와 거의 유사한 범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동호 가목),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동호 나목),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동호 마목)의 수집, 작성, 배포 업무(이하 개정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업무를 ‘정보수집 등 업무’라 한다) 및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동조 제2호)를 수행하며 이 가운데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이하 ‘본건 조사’라 한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개정 국정원법 제5조 제2항). 또한 위 직무 가운데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동조 제3항).

그런데 2023. 5. 현재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2024. 1. 1.부터 국정원이 행사하게 되는 본건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개정 국정원법은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한다는 규정(동법 제5조 제2항)과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있을 뿐(동법 제5조 제4항)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동조 제4항)²⁾ 본건 조사권한의 성격, 범위, 조사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 및 절차,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등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이에 관한 논의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본건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대강의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칙이나 지침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은바,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하위 법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을 통하여 현재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구 국정원법에 따른 국정원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인권보호수사규칙’,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수사(내사) 과정에서 위 법규들에 따른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은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이므로(국정원법 제8조), 국정원 수사 관련 하위 법규에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만약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는 피의자 등의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점에서 그 수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규 내용은 위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관한 규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의자 등이 실질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본건 조사의 경우는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내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이나 경찰에 의한 수사, 내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향후 본건 조사에 관한 하위 법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안보범죄 등 사건의 경우 국정원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장기간 내사(또는 입건 전 조사, 이하 ‘내사’라 한다)³⁾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인데,

2) 다만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제4조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같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개정 국정원법 제4조 제2항, 제3항) 국회에 의한 통제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3) 2021. 1. 1.부터 시행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21. 8. 30.부터 시행중인 경찰수사규칙 제19조 및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까지 법규상 및 강학상 ‘내사’라는 용어가 통용되어 왔고, 여전히 ‘내사’ 용어가 사용되는 다수 법규가 존재한다. 양자 가운데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 수사한다’는 법문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내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용어를 혼용하고자 한다.

이는 주로 피내사자에 대한 감시, 미행 및 사진 촬영, 탐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전화·전자우편 등에 대한 감청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본건 조사 역시 이러한 기존 내사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 필자는 2021. 4.부터 국정원 외부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되어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 체포·압수·수색 현장 및 피의자신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피의자와 면담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적어도 필자가 만난 범위 내에서는 - 수사에서의 적법절차 규정에 관하여 숙지가 되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국정원 역시 적법절차나 피의자가 인권 보호 면에서 필자가 지적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조사 권한의 범위 및 한계,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면 조사 권한의 남용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향후 본건 조사 권한에 관한 대통령령이나 하위 지침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행정기관인 국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본건 조사는 개념상으로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 즉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건 조사 방식 역시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은 국가안전보장, 형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5호) 본건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방식이나 절차가 그대로 준용되기는 곤란할 것이다.

오히려 개정 국정원법상 본건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보다는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에 의한 조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6조에 따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조사 등 조사의 성격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⁴⁾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형사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의 조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무상으로는 그동안 국정원이 해왔던 내사 방식을 상당 부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본건 조사는 규정 형식상으로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동법 규정 대부분이 배제되는 한편, 그 실질적인 내용은 범죄 수사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사(입건 전 조사)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고, 본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타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사와 본건 조사와의 차이 및 유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범죄 수사와 관련된 여타 행정조사의 비교, 기존 내사 실무의 문제점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본건 조사와 관련한 하위 법규를 마련함에 있어 본건 조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2015. 8. 11. 법률 제13456호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4급 또는 5급)으로 하여금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동법 제5조 제49호)이 신설되었으므로 2015. 8. 11. 이전에는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7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II. 본건 조사와 여타 행정조사와의 비교

가. 문제의 소재

구 국정원법은 제3조 제1항에서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를 규정하고 제16조에서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구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의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따르면 위 범죄 가운데 구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정보사범등’이라고 규정하고(동 규정 제2조 제5호)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등의 내사·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검거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동 규정 제7조 제1항),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동조 제2항),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동조 제3항),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을 것(동 규정 제8조 제1항), 정보수사기관이 주요정보사범등·귀순자·불온문건 투입자·납북귀환자·망명자 및 피난사민에 대하여 신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을 것(동조 제2항), 정보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을 것(동 규정 제9조 제1항),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추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국정원장과 협의(동조 제2항),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불온문건 기타 금품을 압수하

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을 것(동 규정 제10조)을 규정하는 등 안보범죄의 경우 내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은 사실상 국정원의 통제 하에 놓여 있도록 되어 있다.⁵⁾

이 밖에 구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직무 수행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안보범죄와 관련된 위와 같은 정보의 수집 등은 수사 전 단계에서의 조사 내지 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구 국정원법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국정원 직원이 안보범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사’로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사의 일환으로 파악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서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가 삭제되고 아울러 사법경찰권 부여 조항도 삭제되었으면서도 동일한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신설됨으로써 본건 조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의가 애매하게 된 상황이다.

나.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조사와 비교

전술한바와 같이 국정원에 의한 조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를 때 형식적인 면에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개념에 부합한다.

즉,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2호),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동조 제1호).

5) 국정원의 수사권한이 폐지되는 2024. 1. 1.에 맞추어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 가운데 국정원장이 안보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하는 규정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강학상 ‘행정조사’에 관해서는 좁게 보아 ‘권력적 조사활동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의 한 수단’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행정청의 모두 자료조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으나⁶⁾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5조)⁷⁾ 현행법상 행정조사는 비권력적 조사활동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권력적 조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하며,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건 조사의 경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헌법 제66조 제4항),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국정원법 제1조, 제2조) 국정원은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안보범죄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본건 조사는 일응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및 ‘형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5호)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한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행정조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하중, 『행정법총론』(법문사, 2004) 449쪽

7)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경우 개정 국정원법 역시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개정 국정원법 제5조 제4항)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정 국정원법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적용에 문제가 없다. 나머지 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역시 개정 국정원법에 의한 조사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법,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와 비교

다음에서는 본건 조사와 마찬가지로 형식상 행정조사에 해당하면서도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사 가운데 조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경우, 즉 범죄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조사이면서도 조사권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공정거래법 및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전술한바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은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동항 제6호)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81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의한 조사를 규정하고 제80조 내지 제87조에서 조사 방법, 조사 절차, 조사권 남용 금지, 이행강제금 등 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상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⁸⁾ 자본시장법 제426조 및 제427조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의한 조사를 규정하고 제445조 제48호에서 제42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는 범위에서 사법경찰직무법상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검사장에 의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49호, 제6호 제46호), 이와는 별도로 자본시장법은 동법 제427조 제1항 소정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심문·압수·수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자본시장법 제4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8조에서 ‘법 제4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및 제427조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 제426조 및 제427조와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구 사법경찰직무법에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사

8) 2007. 8. 18. 구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당시에도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다. 다만,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0. 2. 1. 시행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된 것) 제378조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8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 공정거래법상 조사 및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⁹⁾는 조사 주체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사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한이 없으나 조사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본건 조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조사들의 경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으나, 본건 조사의 경우 조사에 불응하는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사들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이하 조사 거부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사들을 ‘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통칭한다)¹⁰⁾.

그런데 개정 국정원법에 따르면 본건 조사의 일부와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은 협력하여야 하고(제5조 제3항) 사법경찰관리를 국정원 겸직 직원으로 파견받아 국정원장의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제12조 제1항, 제3항) 예컨대 본건 조사를 수행하다가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정원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는 겸직 직원인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게 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함께 현장에 참여하여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하거나 사실상 수사 현장을 지휘하는 등으로 본건 조사가 순식간에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즉, 구 국정원법에 따른 수사 실무를 살펴보면 대체로 국정원이 주체가 되어 혐의자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여 충분히 증거가 수집되면 수사로 전환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또는 체포 영장을 발부

9)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은 이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745 판결), 본 논문에서는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에 따른 조사의 법적 성격은 논외로 하고 동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 공정거래법에 의한 조사 등 강제성을 띠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표현하는 견해로는 최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민주법학』 제65호, 2017), 이재영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255호, 2022) 등이 있고, 그 밖에 그 절차가 ‘형식적으로는 임의적인 행정조사 절차이지만 실질적·잠재적 형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강수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와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7호, 2012), ‘고권적 행정조사’[최용, “고권적 행정조사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의 준수 및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입법학 연구』 제18집 제1호, 2021)]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반(半)강제적, 권력적 성격’을 가진다거나(이근우, “공정거래분야 행정조사 제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1호, 2022)], 사실상 수사나 다름없다고 보아 ‘행정수사’[이상돈, 『조세형법론』(세창출판사, 2009) 105쪽, 박혜림, “수사단계의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고찰”(『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2013) 586~587쪽]라고 표현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받고 경찰의 지원 내지 협조를 받아 경찰과 공동으로 압수·수색 또는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구 국정원법 하에서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국정원 직원이 직접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직접 집행하면서 경찰의 협력을 받은 반면 개정 국정원법 하에서는 국정원이 경찰에게 ‘영장을 신청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거나 겸직 직원인 사법경찰관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찰로 하여금 영장을 신청하게 하여 발부, 집행하도록 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강제수사 현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국정원이 주도가 되어 내사를 수행한 후 내사 종결시 경찰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강제 수사를 해왔던 기존 실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수사권한이 삭제된 개정 국정원법에 의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은 여전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개정 국정원법 제20조), 국정원 직원이 간첩 혐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 범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기 사용이라는 강력한 수단까지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개정 국정원법 하에서도 국정원장은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 제6호 소정의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서¹¹⁾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행정기관에 의한 권력적 행정조사보다 오히려 강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건 조사의 경우 개정 국정원법에서 비록 조사를 간접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범죄 수사와 관련되어 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언제든지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사 거부에 대한 불이익

11)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이란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바, 문언 해석상 ‘정보 및 보안업무’와 ‘수사업무’를 둘 다 취급하는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와 별도로 제7조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동조 제3항에서 제6조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하면서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 문구를 삭제하여 준용하고 있는 점(즉 통신제한조치의 상대방이 수사의 객체인 피의자나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의 피내사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 수사가 아닌 정보 및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의 경우에도 정보기관이 대부분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정보수집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사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정보 및 보안업무만 취급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정보수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을 규정하고 있는 권력적 행정조사들과 비교할 때 강제성이나 피조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 예컨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및 조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 발급(동조 제9항),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동법 제82조), 조사시 변호인 참여권(동법 제83조) 등 조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물건, 피조사자가 임의로 행한 진술, 제출한 자료 등은 추후 피조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구체적인 조사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태도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건 조사 역시 조사 결과가 형사 처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건 조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 전부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정원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개정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조사권의 범위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에 관한 내용을 거의 통째로 대통령령에 위임해버림으로써 졸속으로 입법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문제점만 지적해두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본건 조사와 관련한 바람직한 원칙·기준 등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건 조사와 같이 범죄 수사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나 강제성을 띠는 권력적 행정조사 - 그 중에서도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의한 조사,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조사의 특징 및 그 문제점에 관하여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Ⅲ. 권력적 행정조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1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가. 조사 유형 및 절차

구 자본시장법은 제426조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 의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의 조사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 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 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⑤ 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 2. 29.>

-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103. 법 제4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는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426조에 의한 조사 방법은 ‘진술서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물건 등 제출’, ‘장부·서류·물건 등 영치’, ‘사무소 등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물건 등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

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직접 강제할 방법은 없고, 다만 동조 제2항 소정의 요구(진술서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물건 등 제출)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 형벌을 과하여 이를 간접강제하는 수단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¹²⁾이 위탁 받은 업무는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소정의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 요구,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제출 요구권 등으로서 임의 조사 권한만 보유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게 위탁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동법 제426조 제3항, 제427조 소정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권한, 현장조사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임의조사 및 강제처분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나.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의한 조사의 법적 성격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의한 조사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되므로 금융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수사권한을 행사할 주체가 될 수 없어 행정조사라는 견해¹³⁾ ② 자본시장법 제426조의 조사는 증권범죄의 형사처벌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¹⁴⁾ ③ 행정조사가 형사책임 추급의 이중목적성을 갖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¹⁵⁾ 등으로 나뉘며, 판례는 수사행위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하에서는 구 자본시장법(2009. 7. 23. 시행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09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에 의한 조사시 위반 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이 고지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11 판결

위 판결은 2009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추가조작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한 사안

12)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조사 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 안현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법조』 제68권 제4호, 2019) 96-97쪽

14) 구승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논의와 관련하여”(『법조』 제71권 제7호 2012. 7.) 71쪽

15) 이근우, “행정조사의 형사법 한계설정”(『고려법학』 제72호, 2014) 369쪽

에서 위 조사시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이 고지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이하 '2010고합11 판결'이라 한다)으로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위 사건의 피고인 B는 S 주식회사 자금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4. 2. 19. 한미은행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역 U가 2009. 7. ~8.경 피고인 B를 조사할 당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그 본질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수사'에 해당하고, 조사역인 U는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 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는 U와 B 간의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U에 대한 진술조서와 증인 U의 진술 중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조사 당시 2009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2010고합11 판결의 재판부는 “수사(搜查)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搜查機關)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 위 법 제427조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명,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사공무원은 일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법 제426조 상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조사역'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소속 조사역인 U는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U는 위 법 제426조 제2항 상의 '이 법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자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나, U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U는 위 권한에서 나아가 위 법 제427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U의 조사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 제1항 소정의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심문'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로서, '① 종로경찰서는 2008. 8. 5. 금융감독원에게 이 사건 한미은행 주식매매가 정상적인 헤지거래인지 시세조종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한 사실, ② 금융감독원 조사역 U는 2009. 7. 21. 피고인 B를 혐의자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출석시켜 문답서를 작성받으면서 피고인 B가 주가조작 행위를 하였는지 추궁한 사실, ③ U는 2009. 8. 7. 피고인 B와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 B가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는지, 대표이사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녹취록을 작성한 사실, ④ U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말한 내용에 대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경위, U가 피고인 B를 조사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면, U는 피고인 B를 '관계자'로 보고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혐의자"로 보고 "심문행위"를 하였다고 본 뒤, U가 위 법 제427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인 B를 출석시키거나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권한 없는 기관의 수사행위이고, 위 문답서 및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사 작성의 U에 대한 진술조서와 증인 U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즉, 2009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만 규정하고 있었고, 위반 행위 혐의자에 대한 심문은 동법 제4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재판부는 위 문답서 등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위 변호인의 주장과 결론에서는 일치하였으나, 위 U가 피고인 B를 조사한 행위를 동법 제427조 제1항의 위반 행위 혐의자에 대한 심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위 재판부는 U의 행위가 동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조사 행위임을 전제로 동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이 고지되어야 한

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⁶⁾

참고로 이후 2013. 5. 28.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동법 제42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자’ 외에 ‘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가 추가되었고, 아울러 2009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증언’은 위 2013. 5. 28. 개정 당시 ‘진술’로 개정되었다. 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9 자본시장법	2013. 5. 28. 개정 자본시장법
제426조 (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관계자에게</u>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u>관계자에게</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u>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u>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사항에 관한 <u>증언</u> 을 위한 출석	2. 조사사항에 관한 <u>진술</u> 을 위한 출석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고단3067 판결

한편 자본시장법 제4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2010고합11 판결과 거의 유사한 법률적 쟁점이 다루어졌던 사안에서 문답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위 2010고합11 판결과 결론을 달리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고단3067 판결. 이하 ‘2013고단3067판결’이라 한다)가 있으므로 위 2010고합11판결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013고단3067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S의 7개 계열회사의 회장 겸 실질 사주로서 주식회사 S 주식 약 2,000만주를 담보로 2010. 1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채업자 및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07억원 상당을 조달한 후 2011. 1. 6.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주식회사 S 주식에 대한 통정·가장매매주문, 고가매수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16)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745 판결로 확정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892 판결이 있으며, 이 역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3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후 금융감독원 조사역 X는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A를 금융감독원에 출석시켜 시세조종혐의에 관하여 조사하여 그 내용을 문답서의 형태로 작성하였고, 이후 검찰은 피고인 A를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X가 작성한 문답서 및 검사작성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본시장법 제427조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리인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은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 같은 법 제427조 제1항의 ‘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금융감독원 조사역은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심문권한이 없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조사역 X는 피고인 A를 시세조종 혐의자로 보고 그를 금융감독원에 출석시켜 추가조작을 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문답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 A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X가 위와 같이 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감독원에 출석시켜 추궁을 하면서 문답서를 작성한 행위는 ‘심문’에 해당하고, 이러한 심문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이는 위법한 심문이다. 따라서 위 문답서, 검사 작성의 X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한 부분, 위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조사결과 처리안’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역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자본시장법 제427조 제1항 소정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로서의 ‘심문’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시세조종 혐의자를 심문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수사로서 위법하다는 2010고합11 판결의 취지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2013고단3067 판결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 조사역에게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권한이 있다고 보아 2010고합11 판결과 달리 판단하였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는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①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법 제426조 제1항), ② 관계자에게 진술서의 제출, 증언을 위한 출석,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③ 위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또한, 위 조치의 내용을 정한 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 제4항,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에서 조사업무의 집행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였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조사역은 시세조종에 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법령이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은 위 조사권한의 하나로 관계자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규정은 ‘증언을 청취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자를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절차 규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금융감독원에서는 법원·국회에서와 같은 방식에 의한 증언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이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면서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부분이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으로 변경된 것은 ‘증언’이라는 문구가 적절하지 않아 ‘진술’이라는 문구로 바로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통상 법원에서는 증인에 대하여 신문의 형태로 증언을 청취하는데, 신문의 사전적 의미와 심문의 사전적 의미 간의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④ 심문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심문을 바로 수사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각종 법령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게 일정한 조사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감독원 조사역은 시세조종에 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감독원에 출석시켜 시세조종 혐의에 관하여 자세히 따져 물으면서 그 조사내용을 문답서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금융감독원 직원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심문’에 해당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 제1항에 의한 수사에 해당한다는 2010고단11 판결과는 달리 2013고단3067판결의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조사역은 시세조종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게 진술서의 제출,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바(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 비록 이와 같은 요구에 불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활동을 강제하고 있지만(동법 제445조 제48호), 금융감독원 조사역에게는 혐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조사역의 조사활동은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에 불과할 뿐 수사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위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

신상황도 인정되므로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금융감독원 직원이 범죄 혐의자인 위 A를 조사한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 제1항의 위반 행위 혐의자에 대한 심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금융감독원 직원의 권한 범위에 속해있는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2010고합11 판결과 다르게 판단하였고, 따라서 동법 제426조에 의한 조사는 수사가 아니므로 위 A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3) 소결

금융감독원 조사역에 의한 시세조정 혐의자에 대한 조사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두 판결은 서로 결론에 있어서는 엇갈렸으나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의한 조사가 ‘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결론이 일치하였다. 다만 위반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여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2010고합11판결은 이를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 소정의 ‘심문’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로 보았고, 2013고단3067판결은 이를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정의 조사의 일환으로 보아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생각건대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의한 조사 방법 및 절차가 (임의)수사 방법 및 절차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할 것이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245조의10), 이에 따라 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정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현행 법제하에서 위 조사가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8호는 동법 제42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는 그 조사 결과가 조사 대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로 이어질 수 있고, 조사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사실상 조사 요구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임의 수사가 가지는 임의성조차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단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 즉 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완전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하는 상황에 놓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8호 벌칙 규정의 문제점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8호에 따르면 동법 제42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자인 경우에도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절차에서도 피의자의 경우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또는 동법 제201조, 제70조 제1항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구속의 경우 이에 더하여 동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절차까지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동법 제200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긴급체포되는 등 강제처분을 받게 될 수는 있으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아니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경우에는 출석을 직접적·간접적으로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데 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출석 조사의 경우 위반행위 혐의자는 물론 위반행위 혐의자가 아닌 단순한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행정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과태료 등 행정 질서벌을 부과받을 수 있음은 별도로 하고 이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지, 특히 수사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제3자가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매우 의문이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의한 조사를 수사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동조 제2항의 진술서 제출·진술을 위한 출석·장부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이 진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445조 제48호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강제수사 못지않은 강제력을 갖게 되며, 특히 제3자의 경우에는 그 법익 침해의 심각성이 수사 절차에서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의한 조사의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인지 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① 조사 내용이 조사 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라는 점, ② 조사 결과가 조사 대상자

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③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완전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고 조사 거부시 형사처벌을 받는 중 조사가 간접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수사에서 피의자가 보장받는 절차적 권리에 준하여 위 조사 절차에서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공정거래법상 조사

가. 조사 유형 및 절차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바(공정거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공정거래법상 조사의 유형과 형사소송법상 수사 유형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공정거래법	형사소송 관련 법규
①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1호)	① 피의자,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1항)
②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동항 제2호)	② 감정·통역 또는 번역 위촉(동법 제221조 제2항)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동항 제3호)	③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동법 제218조)
④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이하 ‘출입 조사’라 한다)(동조 제2항)	④ 피의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에 장소 수색(동법 제109조, 제219조)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동법 제215조)
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출입 조사시 당사자 등의 진술 청취, 사업자 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동조 제3항, 제6항)	⑤ 물건 압수,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제출 명령(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

다음, 공정거래법상 위와 같은 조사와 관련하여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와 형사소송 관련법규상 수사 절차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공정거래법	형사소송 관련 법규
①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었을 때는 진술조서 작성(동법 제81조 제5항)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신문조서 작성(형사소송법 제48조, 제244조) 피의자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 작성(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12조,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2항)
② 사업자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일시보관할 때는 보관조서 작성, 발급(동조 제7항)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한 경우 목록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형사소송법 제49조, 제129조, 제219조)
③ 사업자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이 조사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즉시 반환(동조 제8항)	③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④ 출입 조사시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문서 발급(동조 제9항)	④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 발송(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제6항)
⑤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 또는 진술 기회 보장(동조 제10항)	⑤ 피의자, 사건관계인, 변호인의 자료·의견 제출 기회의 보장(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25조)
⑥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 예외적으로 정규 근무시간 외에 조사(동법 제82조 제1항)	⑥ 심야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의 원칙적 제한(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⑦ 원칙적으로 조사공무원은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 종료. 예외적으로 조사기간 연장(이때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 발급)(동조 제2항, 제3항)	⑦ 12시간 이내로 장시간 조사 제한(인권보호수사규칙 제44조)
⑧ 사업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동법 제83조)	⑧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동법 제243조의2)
⑨ 사업자 등의 조사 연기 신청권(동법 제85조)	⑨ 피의자의 출석연기 신청권(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⑩ 당사자 등의 자료열람 요구권(동법 제95조)	⑩ 피의자, 사건관계인, 변호인의 수사서류 등 열람 복사 신청권(수사준칙 제69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조사의 유형은 출석 및 진술 청취, 감정 위촉, 임의 제출하는 물건의 보관(압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물건 조사, 물건 제출 명령(당사자 동의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등 형사소송법상 수사 유형과 유사하며 다만 압수 수색에 해당하는 현장 조사의 경우 강제수사가 불가하고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조사 절차에 있어 공정거래법은 진술조서 작성, 보관조서(수사의 경우 압수조서) 작성, 보관물(수사의 경우 압수물)의 환부, 조사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문서 발급(수사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은 출석요구서 발송), 당사자의 의견 제출 또는 진술 기회 보장, 근무시간 내 조사(수사의 경우 심야조사 금지,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조사(출석) 연기 신청권 등 수사절차에서 보장되는 절차와 유사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 절차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하위 규칙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규칙’) 제4조는 상위법인 공정거래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즉, 아래와 같이 조사절차규칙 제4조는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라는 제목하에 제1항 본문에서 변호사 참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뒤 단서 각호, 제2항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선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조사절차규칙〉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조사절차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미리 예정되어 있는 출석 조사가 아니라 예고 없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조사 공무원의 현장 도착 이후 비로소 당사자로부터 참여 요청 연락을 받은 변호인이 조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위 조항을 들어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

다음 동항 단서 제2호, 제3호는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또는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바, 변호인이 조사 대상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려고 할 때 ‘신문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고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배제하거나 변호인이 조사 대상자를 위해 변론 진술을 하려고 할 때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문 과정에서 언제든지 변호인이 조사 대상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변호인이 조사 대상자를 위하여 변호를 하려는 경우 변호인의 진술 기회 역시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신문 도중에 변호인이 조사 대상자와 의논, 상담하려는 경우 혹은 변호인이 진술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도중에는 예외적으로 검사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243조의2 제3항)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한다(제31조 제1항).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하고,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동조 제3항)’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하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이나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조사절차규칙 제1항 단서 제4호는 신문 내용의 기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간략히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조사 대상자 및 그 변호인으로서는 조사 당시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추후 자신을 변론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할 것이므로 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32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기로 메모(노트북·휴대용 컴퓨터 등 전자 기기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변호인이 메모한 내용을 열람하거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변호인이 신문 내용 전부를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메모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실제로 변호인이 신문 내용 전부를 메모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변호인이 메모한 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신문 내용을 전부 메모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절차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사유로서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뚜렷한 이유 없이 혹은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조사 대상자와 상담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한다’고 하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배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더하여 조사절차규칙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시급성’을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부분 조사의 경우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위 조항은 자칫 변호인의 참여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¹⁷⁾

마지막으로 조사절차규칙 제4조 제3항은 변호인의 참여시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변호인으로 이미 선임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17) 2003년 폐지된 대검찰청 지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운영지침’ 제5조에서는 ‘변호인이 검사의 신문에 개입하는 경우, 피의자 대신 답변하거나 유도답변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메모지를 전달하는 경우,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기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퇴거하도록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는바[김영중,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변호인의 조력권을 받을 권리의 의미”(『경찰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8) 151쪽] 조사절차규칙은 이와 같이 이미 20여 년 전에 폐지된 대검찰청 예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대착오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 역시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 교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9조 제1항은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 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30조 제1항 역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의자와 접견 교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은 제30조 제2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임서는 사후에 제출받아 보완한다’는 규정까지 두어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 역시 예고 없이 사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할 것이므로 조사 참여 당시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사 공무원으로서는 일단 변호사 신분증 등을 제시받아 변호사임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후 선임서를 제출받아 보완하면 족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조사는 그 유형 및 절차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유형 및 절차와 매우 유사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직접 강제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임의 조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조사를 강제하는 면이 있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경우가해지는 벌칙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나. 공정거래법상 조사와 관련한 벌칙 조항

공정거래법은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동법 제125조 제7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126조 제6호),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동법 제130조 제1항 제6호) 조사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형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조사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바, 공정거래법상 조사는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사실상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¹⁸⁾

그런데 위 벌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비교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폭행 또는 협박’(동법 제136조 제1항) 또는 ‘조지’(=저지)(동법 제136조 제2항)의 경우만 규정되어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폭언’이나 사무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단순한 부작위에 해당하는 ‘지연’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조사를 거부·방해·기피의 결과에 이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사 거부나 기피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결국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조사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있었으나 조사 거부·방해·기피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위반죄의 미수범에 해당하지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법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인데, 공정거래법상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미수범에 해당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미수범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기수범에 해당하는 행위(징역 3년 이하)보다 더 높은 형(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기이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조사 현장에서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또는 동법 제126조 제6호(제81조 제6항), 동법 제125조 제7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 이는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2조) 예컨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지연’ 등 단순한 부작위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에 의하지도 아니한 공정거래법상 조사에 대하여 ‘지연’ 등 단순한 부작위로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조사 공무원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만약 조사 현장에 사법경찰관을 대동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위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신체 수색, 체포현장 내지 범죄 장소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호, 제3항) 공정거래법에 따른 현장 조사가 영장도 없이 순식간에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18)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거부·불이행에 대한 형벌 규정들은 위헌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이근우, “행정조사의 형사법 한계설정”(『고려법학』 제72호, 2014) 380쪽

다. 소결

위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유형 및 절차와 비교해볼 때 공정거래법상 조사 유형 및 절차는 수사 유형 및 절차와 더욱 유사한 면모를 띠고 있으나,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상 조사 역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벌칙 조항에 의해 조사를 사실상 강제할 뿐 아니라 현장 조사가 실제로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 절차에서 조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조사 절차에 비해 진일보하였다고 할 것이나 하위 규칙에 사실상 이를 형해화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권력적 행정조사 가운데 사법경찰관직무법에 의해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면서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조사로서 조사 결과가 피조사자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사실상 조사가 강제될 수 있는 유형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따른 수사의 경우 현장 조사 절차가 실제로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결론적으로 이들 조사는 그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인지 수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못지않게 조사 대상자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경우 제출받은 물건 등의 환부, 당사자의 의견 제출·진술 기회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조사 연기 신청권, 자료열람 요구권 등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인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 국정원법은 구체적인 조사의 유형 및 절차에 관하여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절차 위반 시 제재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본건 조사 역시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개정 국정원법에 의한 본건 조사 규정의 문제점

가. 본건 조사 대상의 특징

개정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에 의한 조사 대상은 방첩,¹⁹⁾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같은 호 마목),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동조 제2항)이고, 범죄와 관련된 조사 대상 정보는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와 같은 안보범죄 등(동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이다.

이러한 안보사범의 특징에 관하여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데다 첨단 암호통신을 사용하고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범죄인 색출·추적 및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고, 범죄인 대부분이 확신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원사항마저 답변을 거부하고 죄의식도 갖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육체적·정신적·기술적·이념적·사상적으로 최고의 범죄 전문가들로서 범행수법은 물론이고 수사와 재판에서의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으로 주도면밀한 판단을 한 후에 범행을 감행하며 범죄자금 관리 및 증거 인멸·도주에 있어서도 특수한 전문가들’이므로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속성상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출발부터 진실의 한편을 외면하고 사법정의 구현의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견해가 있다.²⁰⁾

19) 방첩업무규정(방위사업청예규 제514호)에 따르면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 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동규정 제2조 제1호).

20) 채성준·임석기, “정보기관 수사권에 대한 연구” (『2018년도 국회정보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8) 46-47, 51쪽

즉,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국가안보사범에 대해 일반 치안범죄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절차로 범죄증거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거의 모든 국가안보사범에게 무죄가 선고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의 완화가 요청’되고 ‘비밀스러운 내용을 탐지해내려는 정보수집의 생략적인 특성상 어떤 기준과 원칙하에 법 합치적인 방법으로만 정보수집 활동을 하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방첩공작의 와중에 입수된 정보나 자료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적법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²¹⁾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수사 및 조사 활동에 있어서는 적법절차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일반 범죄와 비교해볼 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범죄의 경우 이를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지만, 안보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수사 및 조사 활동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법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적법절차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위 대법원 2007도 3061 판결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국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나 조사에 있어서도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경우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21) 채성준·임석기, 위 논문 50, 53, 99쪽

나. 본건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개정 국정원법은 본건 조사 방법에 관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동법 제5조 제2항) 본건 조사와 관련된 국정원의 직무 및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직무	본건 조사	수사기관 상호 공조체계 등	직무수행 필요사항 대통령령 위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	○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	○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	○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		○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제외)	○		○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4. 사이버공격 관련(생략)			○

한편 본건 조사를 포함한 국정원의 직무 수행 절차 등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국정원법 제5조 제1항)

- ② 동법 제4조 제1호의 정보수집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할 것(동법 제5조 제3항)
- ③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동조 제4항)
- ④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함(동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⑤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동법 제13조)
- ⑥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동법 제14조)
- ⑦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하여 무기를 사용(동법 제20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조사 가운데서도 특히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부터 라목)의 경우 안보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개정 전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수행하였던 수사 업무의 범위와 거의 일치하며,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 역시 과거 수행하였던 내사 방식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국정원과 각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정원장이 사법경찰관을 겸직 직원으로 파견받아 국정원장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과거 내사 종료 후 국정원이 주체가 되어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경찰의 지원을 받았던 기존 수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사 절차에서 피내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적법절차원칙이 본건 조사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며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의 적법성 및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겸직직원 파견 및 기타 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적법성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건 조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내사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피내사자의 권리 및 피내사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

관이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비롯한 본건 조사 관련 절차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 피내사자의 권리 및 피내사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쟁점들

강학상 '내사'란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범죄 인지 전의 은밀한 조사활동을 의미하는바, 그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²²⁾ 우리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5조)…수사의 개시를 위한 범죄의 혐의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라고 하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그 근거를 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 개시 시점(= 내사 종료 시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설을 취하고 있으나(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아(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실질설로 보충하고 있다. 즉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구 국정원법 하에서 사법경찰관만이 있는 국정원 직원은 안보범죄 등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죄 혐의자를 미행, 감시, 사진 촬영, 탐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전화·전자우편

22) 내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 동법 제199조 제2항의 사실조회가 내사의 전형적인 방법이므로 여기서 내사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견해, 동법 제195조 및 제22조에서 찾으려는 견해, 동법 제195조 및 제199조 제1항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광훈, "내사의 허용범위와 법적통제"(『영남법학』 제34호, 2012) 150쪽 참조.

등에 대한 감청 등의 방법으로 내사를 수행하여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수사를 개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신문을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였다.

그런데 내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적 보장을 받는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절차와 관련한 피내사자의 권리 또는 피내사자에 대한 처분 - 예컨대 피내사자의 진술거부권, 임의동행한 피내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내사자에 대한 긴급체포,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 내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내사 단계에서의 통신제한조치, 장기 내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법적인 쟁점이 되어왔던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피내사자의 진술거부권

우리 헌법은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제244조의3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아(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 전 내사 단계에서 피내사자를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사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조사 시작 전에 수사기관이 진술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면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자 16진정0411500 결정 참조).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국정원 직원이 본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도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본건 조사 단계에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한 문제점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임의동행한 피내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제30조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제34조에서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구속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아니라 임의동행한 피내사자에게도 위와 같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바,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접견교통권을 위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한바 있다(대법원 1996. 5. 3. 선고 96도18 결정).

3) 피내사자에 대한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본문).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다소 불분명하나 피내사자의 경우 수사 개시 요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대체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긴급체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수사 개시의 요건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의 관계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긴급체포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체포시간이 장기 48시간 내로 제한되며,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수사 개시 요건보다는 더욱 충분한 범죄혐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대법원은 A에 대한 내사를 하던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A를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긴급성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에서 A에 대한 긴급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다6668 판결) 긴급체포 당시 A가 피내사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피의자

에 지위에 있었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사 개시의 요건과 긴급체포의 요건을 비교해볼 때 위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긴급체포 당시 A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 아니하여 수사 개시조차 되지 아니한 피내사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긴급체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²³⁾

4)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은 제4조 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피내사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체포되기 전 피내사자의 지위에서 출국금지를 당했던 A가 ‘아무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6개월 간이나 출국금지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담당 검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및 제2심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위 A에 대한 출국금지의 요건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고 하여 피내사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11. 3. 2005다40907 판결).

그러나 출국금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신장

23) 같은 취지에서 ‘대인적 강제처분과 관련해서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수사가 개시되므로,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인 내사에서는 강제처분을 할 수 없고 수사개시 후에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취지상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박광현 “내사의 허용범위와 개선방안”(『형사법연구』제32권 제2호, 2020) 225쪽

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바(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결정) 아직 범죄 혐의가 불분명하여 수사가 개시조차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단지 내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항 13호 '출국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출국금지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내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형사소송법은 제215조 제1항에서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위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견해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2조 제2항에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압수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며,²⁴⁾ 이에 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범죄인지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내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24) 박광현, 앞의 논문 225쪽 참조.

압수·수색 행위 자체가 수사 개시행위로 간주되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개시할 정도의 혐의를 가진 사안이라면 내사사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법익의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최소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무 역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내사자의 거주지 등에 대하여 압수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이를 작성하여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⁵⁾

6) 내사 단계에서의 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조 제1항²⁶⁾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25) 김현수, “적법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관한 고찰”(『인권과 정의』 vol 490, 2020. 6.) 10쪽

26)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so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 (이하 생략)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정법 해석상 동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은 그 요건으로서 제1항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수사 개시 요건을 넘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에서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만약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의 지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7) 장기 내사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사 착수 시점부터 피내사에 대한 내사 종결 통보 시점까지 4년 이상 경과하였고 내사 착수 및 종결일시, 구체적인 내사혐의나 내사 종결 이유 등에 관해서는 알리지 아니한 사안에서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12조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등 각종 법령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수사절차에서 수사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종 의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입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사 뿐 아니라, 범죄인지 또는 입건 전(前)단계에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내사의 경우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범죄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과 절차가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내사의 경우 통상의 수사절차에 비해 밀행주의가 강하여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크고 광범위하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스스로 내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내사 착수 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지휘를 받은 후 지체없이 등재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 내사사건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 2018. 5. 10.부터 내사 활동 없이 13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다가 2019. 6. 13.에서야 이 사건 내사를 종결한 점’을 이유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내사라고 보았고, 아울러 ‘피진정인이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 외에 내사의 착수 및 종결 일시, 적

용법조 및 구체적인 내사 혐의, 내사 종결의 이유 등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서 요청되는 적절한 고지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어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5. 27.자 19진정0821200 결정).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사에 있어서도 수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등이 당연히 적용되고, 내사의 경우 오히려 밀행주의가 강하여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크고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정도가 더 클 수 있다고 보았는바, 이는 본건 조사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라. 본건 조사 관련 규정의 문제점

1) 국가기관 등의 자료 제출 등 의무

구 국정원법은 제15조에서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국정원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협조 및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사실의 조회·확인, 자료 제출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요청 대상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민간 단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등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까지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사실 조회·확인, 자료 제출 등 지원·협조를 요청하고 이들 단체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 위 조항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예상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거부한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결국 위 규정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 단체로부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민감하고 은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등 의무 및 파견 요청에 의한 겸직 직원

개정 국정원법은 제5조 제3항에서 동법 제4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을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상호 협력’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예컨대 구 국정원법에 따른 수사 실무와 같이 내사 종료 후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경찰인력을 지원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정보 공조)하면서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에게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협력’을 받아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할 때 국정원 직원이 위 강제수사 현장에 참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조언하는 방법으로 수사 진행을 돕거나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방법으로 ‘협력’하는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간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하므로 예컨대 경찰청장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하여 국정원의 지시·감독하에서 겸직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사법경찰관인 겸직 직원으로 하여금 영장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하면서 국정원장의 지시·감독하에 있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는 상황도 가능할 것이다.

구 국정원법 역시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개정 국정원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구 국정원법 시행 당시에는 국정원 소속 직원 역시 원장의 지명에 의해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구 국정원법 제16조) 수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리를 파견받아 그를 겸직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더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아 겸직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국정원장

의 지시·감독을 받게 한다면 이는 수사기관과의 단순한 협조 관계를 넘어서 국정원이 주체가 되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우려가 있다.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에 대한 역사적 경험 및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되어 형식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정보 업무와 수사 업무가 통합됨으로써 발생하는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양 업무의 분리를 추구하는 소위 ‘분리원칙’은 1950년 독일 연방헌법보호법 제정과 함께 명시되었으며, 이는 나치 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독일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에 대한 반성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보호청(BfV)’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존속 및 안전을 해치는 일체의 움직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예로서 이스라엘의 경우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보안정보부(ISA)’에서 주변 이슬람 테러조직들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²⁷⁾ 영국의 경우 국내 정보기관으로서 보안부(MI5)를 두어 국가안보 관련 비밀정보를 획득, 분석, 평가하기 위해 혐의 점이 있는 개인 혹은 조직에 대한 조사 및 첩보의 수집·관리, 국가안보 위해 세력 처벌을 위한 증거물 확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²⁸⁾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보호청은 경찰의 권한이나 경찰에 대한 지시권을 갖지 못함은 물론 경찰에 대하여 업무협력 방식으로 원해 헌법보호청이 처리할 권한이 없는 처분을 요청해서도 안된다는 규정을 두어²⁹⁾ 정보기관이 경찰로부터 업무협력을 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보기관의 수사권 행사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국정원법은 수사권한을 폐지하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한 대신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생각건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60년 이상 안보범죄수사를 해온 국정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위법수사나 정치 관여, 인권 침해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보범죄 수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경험 및 수사기법을 축적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안보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타 기관 수사관들이 국정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위와 같은 경험 및 수사기법은 다

27) 최영관, “‘분리원칙’ 및 ‘가외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정보 활동 방향에 관한 연구”(『한국테러학회보』 제14권 제4호, 2021) 11-12쪽

28) 최영관, 위 논문 14-15쪽

29) 최영관, 위 논문, 8-10쪽

른 수사기관과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국정원법 제5조 제3항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필요성을 넘어 전술한바와 같이 국정원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협력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12조 3항 역시 사법경찰관리의 경우 국정원장의 지시·감독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국정원이 사실상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조치 등

국가안보사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에 따르면 국가안보사범은 ‘광범위한 감청활동과 비밀분류 시스템이 적용되고 정보와 수사가 연동되는 영역’이고, 특히 스파이 활동의 경우 비밀성을 생명으로 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보안 유지와 고도의 훈련을 통한 위장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각국이 스파이활동을 적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신고나 첩보를 토대로 거동 수상자들의 일상 대화를 감청하고 사생활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지나 시설물에 대한 녹음이나 감청으로서,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적발의 단초는 감청이라고 본다.³⁰⁾

실제로 안보범죄의 특성상(예컨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죄,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종 예비·음모죄 등) 기존 국정원에 의한 수사(내사) 역시 전화나 전자통신기기, 전자우편 등에 대한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정법 해석상으로 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항등 종합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대상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³¹⁾

30) 채성준·임석기, 위 논문 47, 50쪽

31)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동법 제6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본다고 규정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을 삭제하고 준용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피의자나 피내사자일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관’으로서(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³²⁾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의미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8항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정원 소속 정보기관의 장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동법 제13조의4 제1항) 그 절차에 있어 제7조 내지 제9조, 제9조의2 제3항, 제4항 제6항 등이 준용되므로 결국 본건 조사 절차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역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구 국정원법상 내사(수사)의 가장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는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조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및 동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요건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인 데 비해, 동법 제7조 소정의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및 동법 제13조의4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경우는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협을 방지’(통신제한 조치의 경우) 혹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경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즉 국정원으로서의 범죄 수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지 아니한다면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컨대 개정 국정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건 수사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동시에 내사로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또는 제13조에 따

32)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5.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른 통신제한조치 등을 허가 받아 이를 제공받은 후 다시 이를 국정원과 ‘공조’하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결국 국정원이 본건 조사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동법 제6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등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 무기 사용의 문제

개정 국정원법 제20조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생각건대 본건 조사 과정에서 예컨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의 직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밖에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 등의 활동을 확인·견제·파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도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무기 사용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 국정원법 하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위 조항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는지, 준용될 수 있는 범위 및 내용은 어떠한지 별도로 검토를 요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서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

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의 경우 국정원 직원은 (강제)수사권한이 없으므로 ‘현행범인’이 아닌 한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본건 조사는 임의 조사라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행 단서 제1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때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동행 단서 제2호 나목의 경우 국정원 직원은 영장 집행의 주체가 아니고, 동호 라목, 동행 단서 제3호의 경우 국정원 직원이 범인에 대하여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동행 단서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경우 역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은 금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조 제3항 ‘대간첩·대테로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 수행’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부대단위로 운용되는 공용화기³³⁾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인명 살상이 예상되는 소규모 전투에 이르는 정도의 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안보범죄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하면 더 이상 사법경찰권한이 없고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이 인명 살상이 예상되는 이러한 작전에 참여하여 공용화기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그 업무 범위는 물론 수사기관과의 협력 범위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조 제3항은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3)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3조 제2호에 따르면 ‘공용화기’란 ‘유탄발사기·중기관총·박격포·저격총·산탄총·로프발사총·다목적발사기(고폭탄을 사용하는 경우)·물발사분쇄기·석궁 등 부대단위로 운용되는 장비’를 의미한다.

V. 본건 조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제언

이상에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본건 조사가 도입된 배경, 본건 조사와 여타 행정조사와의 비교 및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검토, 기존 내사의 적법성과 관련한 쟁점들, 본건 조사와 관련한 규정들의 문제점 등 검토를 통해 본건 조사 절차에서 예상되는 조사 대상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건 조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또는 하위 법령 제·개정을 통해 다음의 내용이 반영될 것을 제언한다.

1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의 명문화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동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우리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 권리고 보장하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제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武器平等)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헌법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이에 관해서는 ① 질문이 행정조사 및 형사책임추급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는 견해, ② 진술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치국가적 인식이 결여된 채 행정편의만을 중시한 입법으로, 진술증거의 수집에 관한 진술거부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 ③ 법령상 진술 또는 신고의무가 명백히 형사적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와 실질에 있어서 형사책임의 증거획득을 목적으로 부과된 것이어서 실질적 형사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후자에 대해서는 조사의 결과가 형사절차상 증거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³⁴⁾

본건 조사의 경우 그 유형의 하나로 ‘진술 요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정원 직원은 안보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기존 실무는 내사 절차에서 증거 수집이 상당히 이루어진 뒤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향후에도 수사 개시 전 본건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건 조사 단계에서도 자신에게 범죄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하여 임의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지위는 임의동행한 피내사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정된다고 본 반면(대법원 1996. 5. 3. 선고 96도18 결정),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서는 피내사자(형식적으로는 피내사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8698 판결 등). 특히 우리 대법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12조 제2항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 의한 조사 절차에 있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

34) 이재구·이호영,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쟁점”(『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018) 422쪽

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³⁵⁾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본건 조사 내지 내사를 받는 피조사자(피내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이 추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문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주체로서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고 보았고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고 하면서 호흡측정의 결과가 곧바로 주취운전죄라는 범죄의 직접적 증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주취운전의 혐의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 11 결정).³⁶⁾

같은 취지에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35) 이후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72조의2 제7항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상 일반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헌법적 권리이므로 형사절차는 물론 국세청의 조세범죄 조사 등 준형사절차에도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이 하는 선거범죄의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절차는 형사절차나 준형사절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행정조사절차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범죄혐의자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나 고발권이 있고, 이를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조사자는 조사개시 당시에 조사자의 진술 결과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사자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정한중,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외법논집』제38권 제2호 2014 제51쪽).

36) 다만 헌법재판소는 '호흡측정행위는 진술이 아니므로 호흡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진술강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중 “범위반사실의 공표” 부분³⁷⁾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뿐 아니라 특정 절차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률’에 의한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표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범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이와 같이 ‘행정절차’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에 따르면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는 대상자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피내사자’인지 ‘행정조사 대상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조사 결과가 ‘범죄의 직접적 증거’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자료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동 명세서 등 회계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구 정치자금법(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중 제22조 제1항의 허위기재 부분과 제24조 제1항의 허위보고 부분, 그리고 동법 제31조 제6호³⁸⁾이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96헌가11 결정을 인용하여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결정).

37)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범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8) 구 정치자금법(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同前)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또는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명세서·영수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자금 자료가 기재된 회계장부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는 자 역시 이를 위반할 경우 장차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헌법재판소에 태도에 따르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나 다름없는 자, 행정절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진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뿐 아니라 심지어 행정절차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법률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이탈리아의 증권시장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자 거래와 시장 조작과 관련된 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진술을 거부하자 조사 협조의무 위반으로 50,000 유로(한화 약 6,8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정상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는³⁹⁾ 만약 행정조사결과가 ‘형벌적 성격’을 갖는 행정 제재로 귀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여기서 특정 제재가 형벌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국내법상 위법행위의 법적 분류, 위법행위의 본질적 성격,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재의 심각성’을 들었다. 여기서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제재는 반드시 형사벌일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가혹하여 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면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진술 그 자체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⁴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가운데에는 ‘국세 범칙단속법상 질문 조사절차는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형사책임 추궁을 위한 자료취득 수집으로 헌법상 진술거부권 보장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⁴¹⁾

39) Case C-481/19, *DB v Commissione Nazionale per le Società e la Borsa (Consob)*. 위 사건은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데 대법원 위 제재금의 근거가 되는 이탈리아 법 조항이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였고,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위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분이 EU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국내법에 기한 것이므로 UE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것이다. 장윤영,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에 관한 고찰”(『행정법연구』 제68호 2022. 8.) 165-166쪽 참조

40) 장윤영, 위 논문 168-169쪽, 173쪽 참조

41) 最高裁 昭和 59年 3月27日裁決 (刑集38卷5号 2037頁 稅資142号1456頁) 안현수, 위 논문 89쪽에서 재인용

결론적으로 본건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가 한 진술은 추후 자신의 유죄의 증거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 행정절차에서 혹은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조사 역시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국내 입법례가 있는 점, 행정조사결과가 형벌적 성격을 갖는 행정 제재로 귀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해외 사례, 본건 조사의 경우 조사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범죄 혐의자의 진술 청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존 실무 역시 내사 종료 직후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는바 양자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조사 절차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

헌법 제12조는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선언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고문의 금지, 진술거부권을 제3항에서 강제수사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를, 제4항 및 제5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를 고지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한 사람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변호인(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따라서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닌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의문이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는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고 하여 불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불구속 피의자

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하면서(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 위 선례(2008헌마430 결정)를 변경하였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피의자· 피내사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는 이유로 피내사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였는바(대법원 1996. 5. 3. 선고 96모18 결정), 피내사자는 수사 개시 전 조사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의 지위와 비교해볼 때 인권 보장 및 방어준비 면에서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위 피조사자에게도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본건 조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제83조에서 사업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하위 규칙인 조사절차규칙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예컨대 조사 종료 후는 물론 조사 도중에도 피조사자와 상담· 조언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밖에도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조사자의 후방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조언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⁴²⁾ 변호인의 조력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변호인’ 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내사 절차에 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

우선,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 규정들 - 예컨대 진술조서·보관조서 작성, 보관 물건의 환부,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제출 기회 보장, 조사 연기 신청권 등은 본건 조사를 위한 절차 규정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자료 제출 기회 보장, 출석요구서 발송,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조사 과정의 녹화 및 보존,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사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등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건 조사 방법 가운데 하나인 ‘현장 조사’와 관련하여 사진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사진촬영은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 영장 없이 허용되는 것으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조사 방법의 하나로서 사진 촬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 본건 조사 절차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는 규정을 두어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19진정082120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본건 조사에 착수한 경우 이를 조사사건으로 등재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본건 조사 종결 후 수사기관에서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조사 착수 및 종결 일시, 구체적인 조사 혐의, 조사 종결 이유 등에 대하여 통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내사 절차에서 문제되었던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예컨대 조사 대상자에 대한 긴급체포, 출

42)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참조.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자세한 해석에 관해서는 김영중, 위 논문 151-153쪽 참조.

국금지, 압수·수색의 경우 본건 조사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

1) 개정 국정원법 제5조 제1항의 개정 또는 제한적 운용의 필요

국정원장의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대상 기관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뿐 아니라 민간단체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조항은 사실상 민간을 상대로 무제한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청 대상 기관 축소 내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혹은 최소한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우회적인 수사권 행사의 방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국정원법 제5조 제3항,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이 악용될 경우 사실상 국정원이 구 국정원법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보범죄에 관한 (강제)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개정 국정원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협력 의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의 착수 및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국정원의 협력을 금지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조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 동법 제12조 3항의 경우 예컨대 국정원에 파견된 검직 직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강제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정원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조치 허가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있어 국정원은 정보수사기관으로서 동법 제7조에 따른 허가 및 제13조의4에 따른 요청 요건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며, 위 협력 의무나 검직직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동법 제6조 제1, 2항, 제13조에 따른 허가나 요청을 함으로써 우회적

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3) 무기 사용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둘 것

국정원 소속 직원이 정보 수집 등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더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어서 (강제)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국정원 직원이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아니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어서 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그 사용 범위의 해석에 관하여도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무기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국정원 직원의 무기 사용에 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하기보다는 별도의 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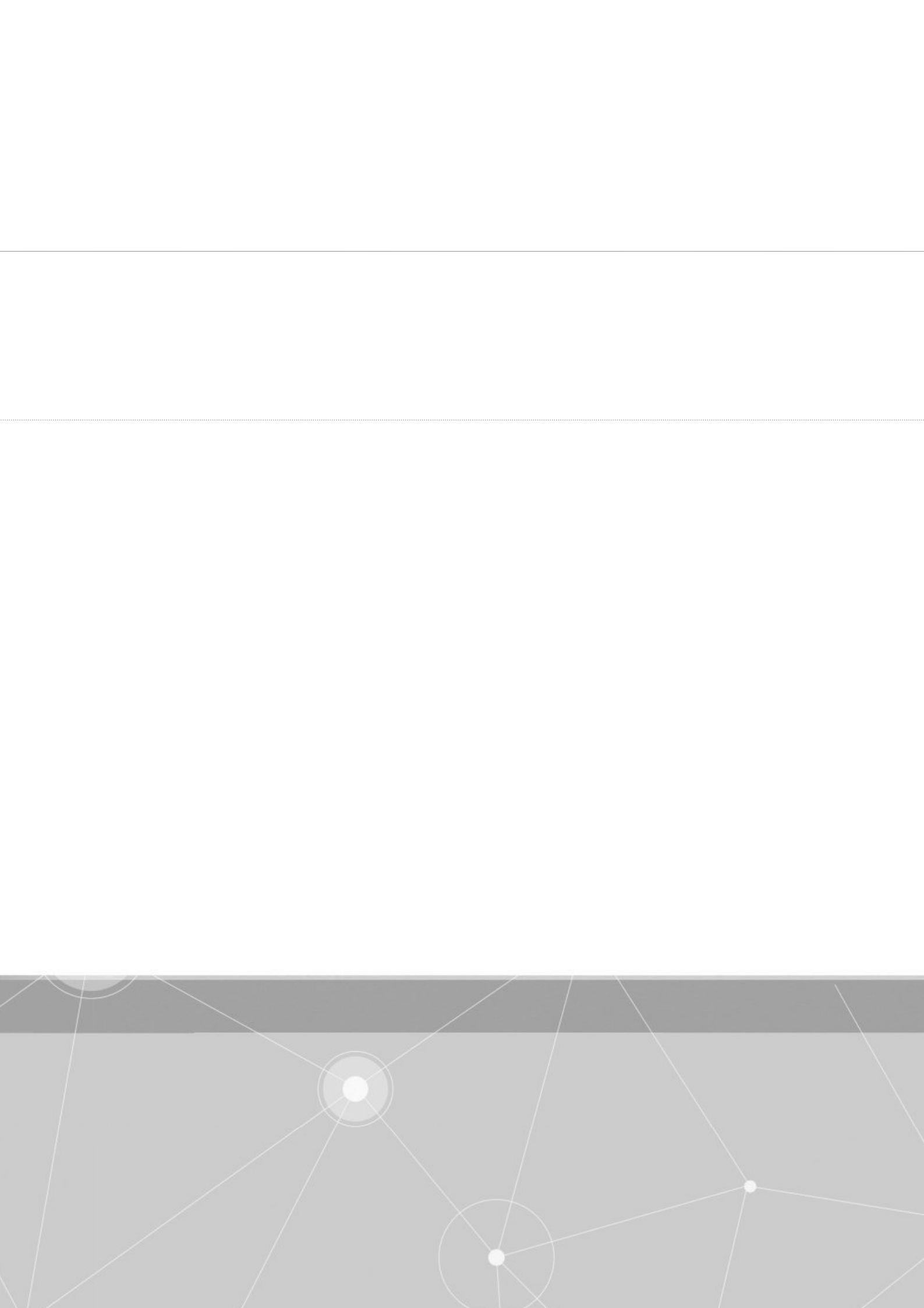
VI. 결론

2년 넘게 국정원 외부 인권보호관으로서 활동하면서 필자가 접했던 국정원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 및 적법절차에 관하여 잘 이해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필자가 국정원 외부 인권보호관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절차적인 면에서 -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은 논외로 하고 -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60년 이상 축적해온 안보범죄 관련 수사 기법 역시 그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에게 전수되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본건 조사에 관한 규정들은 그 자체로 국정원이 우회적으로 수사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국정원법 개정 혹은 적어도 하위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새롭게 도입되는 조사 권한의 남용 방지와 적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역시 기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기획하게 되었고, 향후 개정 국정원법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 시 이 글이 작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줄고를 마친다.

〈참고문헌〉

- 강수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와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동권 제 37호, 2012
- 구승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법조』 제71권 제7호, 2012
- 김영중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경찰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8
- 김현수, “적법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vol 490. 2020. 6.
- 박광현, “내사의 허용범위와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2020
- 박혜림, “수사단계의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2013
- 안현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4호, 2019
- 이근우, “공정거래분야 행정조사 제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1호, 2022
- , “행정조사의 형사법 한계설정”, 『고려법학』 제72호, 2014
- 이상돈, 『조세형법론』, 세창출판사, 2009
- 이재구· 이호용,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쟁점”,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018
- 이재영,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255호, 2022
- 장윤영,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에 관한 고찰”, 『행정법연구』 제68호, 2022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4
- 정한중,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2014
- 조광훈, “내사의 허용범위와 법적통제”, 『영남법학』 제34호, 2012
- 조인현, “수사기관의 내사와 형사소송절차”,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3
- 채성준· 임석기, “정보기관 수사권에 대한 연구”, 『2018년도 국회정보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8
- 최영관, “‘분리원칙’ 및 ‘가외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정보 활동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14권 제4호, 2021
- 최용, “고권적 행정조사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의 준수 및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입법학 연구』 제18집 제1호, 2021
- 최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민주법학』 제65호, 2017



ESG 경영 공시 및 평가의 현황과 대안

- 실무자 설문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류정화
이승혜
조수빈

[표 1] 약어 목록

약어	영문원어	한글용어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FTSE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영국 주식 시장의 대표 지수임)
GHG	Greenhouse Gas	온실가스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기준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관리위원회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N/A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CGS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
KRX	Korea Exchange	한국거래소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N/A
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SSAF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지속가능성 기준 자문 포럼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GC	UN Global Compact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VC	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 경제 포럼

I.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목표

최근 ESG 경영¹⁾은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면서 주류의 흐름으로 자리잡으려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미 그 직접적 피해의 심각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도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한국보다 앞서 ESG 경영 평가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었던 유럽과 미국을 선두로, ESG 경영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ESG 경영에 대한 평가 방식과 공시 기준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기준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시 업무 등의 ESG 실무들이 ESG 경영이 근본적으로 지향한다고 알려져 있는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²⁾’을 실현하는 데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가와 관련한 문제 의식이다.

1) ESG는 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overnance 거버넌스를 지칭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거버넌스)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ESG라는 표현을 대신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시각도 있다(한국거래소, 2021). 이러한 ESG의 각 요소를 고려,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비재무적인 경영 활동을 일반적으로 ‘ESG경영’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2) ‘지속가능성’은 생태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으로(“Sustainability is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while living within the carrying capacity of supporting eco-systems”), 유엔환경계획(UNEP)이 1991년 ‘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에서 사용하였다(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et al., 1991). 이에 앞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을 가리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 역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WCED, 1987). 또한 2020년 5월에 제정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법”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둔 ‘지속가능경영’,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경영 패러다임이 출현하였다. ESG는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이 진화하여 규범화 혹은 제도화된

이는 기본적으로 ESG 경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투자자 중심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ESG 경영이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수백개에 달하는 ESG 경영 평가기관과 수십개의 보고(공시) 기준들, 그 밖에 계속하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각국 정부의 다양한 규제 및 관련 가이드라인들로 인하여, ESG 정보 공시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는 물론 공시된 정보가 파편화될 가능성 및 정보 간 비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2,3년전부터 ESG 경영에 대해 매우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사회 및 경영 전반 일선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ESG 경영의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중간 검토 또는 상황 점검의 의미로서 현재 국내에서 ESG 관련 실무 상황과 그것이 ESG 경영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미 한국보다 앞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해외에서, 상기 지적한 평가, 공시를 포함한 ESG 경영과 관련한 문제 제기 및 관련 논의에 대한 사례들을 연구해 봄으로써,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ESG 경영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며 안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ESG 및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 등, 한국이 갖는 산업, 기업 구조, 관련 법률과 규제 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스템과 규정 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바, 국내 제도 개발과 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 본 연구가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범위

ESG는 자본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의 요인이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ESG는 크게 투자의 관점과 경영의 관점에서 보는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투자의 관점에서는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서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것 혹은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속가능경영은 경제, 환경, 사회 등 그 밖의 대한 여러 요소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판단하는 것이고,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2개의 차이를 설명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성장 중심 경영에서 지속가능경영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 및 그에 따른 지표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하였고 ESG 경영은 해당 비재무적 요인의 관리와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KRX ESG 포털, 2023; 머니투데이, 2020; 아웃소싱타임스, 2021; 한국표준협회, 2023).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인 금융리스크 외에 ESG 관련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과 연계하여 투자의 향후 가치 및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사회적책임투자, 임팩트 투자 등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도 ESG 투자의 부분으로 넓게 볼 수 있겠으나, 지속가능한 장기적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ESG 투자의 최근 흐름이다. 한편, 경영의 관점에서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 외에 환경 혹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하거나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ESG가 사용되고 있다. ESG 경영은 ESG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경영 활동을 통해 창출한 ESG 성과를 공개하는 ESG 공시 및 해당 공시의 사전 작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ESG 평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구분과 같이 ESG 투자와 ESG 경영을 엄격히 나누기 보다는 지속가능성의 실현이라는 ESG의 궁극적 목표 달성 가부의 관점에서, 현재의 국내외의 제도 및 실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투자 영역 혹은 관련 주무 관청 등에서 나온 제도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ESG 경영’과 ‘ESG 투자’라는, 특별히 더 구분된 개념에서 접근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ESG 경영’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현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ESG 또는 ESG 경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의 범위 역시 매우 광범위하다(E 환경, S 사회, G 거버넌스 각 요소에 어떠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 활동들을 ESG 경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의 판단 기준에 대한 사항 등).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ESG 경영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기 보다는, ESG 경영 개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ESG 경영 성과에 대한 공시와 평가 및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측면의 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고,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실현의 측면에서의 ESG 경영의 전반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도 함께 연구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탄소국경세, 공급망실사법, 인권실사법, 그린워싱(Green Washing)³⁾ 이슈 등은 실제로 ESG 혹은 ESG 경영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법 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활용되고 있는지의 간략한 소개 정도로만 다루기로 한다.

3) 기업들이 실제로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라고도 설명된다(de Freitas Netto et al., 2020).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 성과에 대한 공시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민간 혹은 공공기관, 또는 학계에서 ESG와 관련된 실무와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설문 및 인터뷰 질문 내용은 별지1 참조).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은 구체적으로는, 현재 사용되는 ESG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 혹은 공시 및 평가 기준 중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들(GRI, SASB, TCFD, MSCI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판점과 대안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이며, 주로 문헌 연구로 진행하였다. 현재 마련되어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 역시 주로 문헌 연구로 진행하였다.

설문과 관련해서는, ESG 실무를 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 가능한 해결책, 도움이 필요한 부분, ESG 경영의 의미 등을 물어보았으며 한 문항(ESG 경영의 의미)을 제외하고는 전부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응답자의 답변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설문을 최대한 객관식으로 구성하다보니 연구자들이 사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보기)의 내용과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설문지에 제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연구자들 개인 및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수집되었던 ESG 실무자들의 경험 및 문헌 등에서 나타난 점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문항에 ‘기타’ 항목이 있어, 답변(보기)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도 응답자가 직접 작성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이처럼 기타 항목에 직접 답을 작성하여 제출한 응답자들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제시된 항목들을 응답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점도 향후 분석에 참고되었다.

심층 인터뷰의 경우, 국내의 경우로만 한정될 수는 있겠으나, ESG 경영 관련 업무 종사자(특히 상시 공시 및 평가 기준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 위주)를 대상으로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ESG 업무를 수행할 때에 활용되는 ESG 경영 성과에 대한 공시 혹은 평가 기준들이 실제로 그 목적이나 의도대로 활용이 되는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ESG 경영 실무에 있어 어떻게 도움이 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될 수 있을지,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ESG 경영 평가 혹은 공시 기준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및, 필요하다면, 더 효과적인 기준 개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설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이 개선된 사례 혹은 개선하기 위한 제도 등 ESG 경영과 관련한 선진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ESG

경영이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안착될 수 있기 위한 시사점 및 방법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구원으로 ESG 경영 공시와 평가를 포함한 ESG 경영 컨설팅 종사자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인 관점에 더하여 좀 더 다양하고 실무적인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해당 연구 결과는 ESG 경영 관련 법무 담당자 등의 법률가들이 조금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ESG 경영 실무 및 제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불평등, 인권 등 기업의 활동이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투자 중심 관점의 ESG 경영이 어느 정도로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법률가들의 제도 개선 혹은 법적인 대응 방향에 있어서의 실무적인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II. 글로벌 ESG 경영 공시 기준 및 평가 기관 현황

ESG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 혹은 공시 관련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개이며, 기업들의 ESG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점수나 등급을 발표하는 기관은 해외에만 600여 곳 이상이다. 이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기업들이 ESG 경영 성과 공시와 평가를 위해 선택, 사용하는 주요 기준들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보고 기준 및 평가 기관들 위주로 그 내용과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주요 기준들이 수렴되고는 있지만 하나의 기업이 하나가 아닌 다수의 ESG 경영 공시보고 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여러 ESG 경영 평가 기관의 평가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전세계적인 ESG 경영 공시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단일한 기준 혹은 통일된 체계나 강제성의 부과 없이,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특히 투자자) 등의 요구 혹은 기업 내부의 각성 등에 의해 ESG 경영에 대한 공시나 보고가 시작되었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의 각기 다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여러 기준들에 각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공시에 있어,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ESG 경영 관련한 요소들을 가지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준들이 아래에 소개될 GRI, TCFD, SASB, CDP 등이다. 기업이 단일한 기준 하나만 활용하면 된다면, 여러 기준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 공시 업무가 용이해 질 수도 있겠으나 각 기준들이 지향하는 목표 또는 중점을 두는 내용 및 공시 요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외의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보고 기준들에 의거해 공시를 하고 있다.

ESG 경영 평가의 경우 역시, 공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특정 기준에 기하여 경영 평가를 받을 의무가 강제되어 있다거나 평가와 관련하여 단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기관들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ESG 경영 평가 작업을 하기보다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업 상장 여부, 규모 등) 일괄적으로 해당 기업들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평가기관 혹은 평가기준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 ESG 경영 공시 기준

현재 국내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ESG 경영 공시와 관련한 국내외의 규정(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 공시 항목과 기준, 의무 범위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글로벌 기준들을 주로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ESG 경영 보고서(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한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다.

1.1.1 GRI

글로벌 보고 기준(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은 1997년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CERES와 UNEP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인 GRI 가이드라인(2016년)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GRI 가이드라인의 모태가 된 G1(2000년)은 최초로 만들어진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국제 기준이다. GRI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에 대한 보고를 재무 보고와 같은 수준으로 정형화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RI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공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어 있는 기준 중 하나이다. 보고서 작성 지침, 공통 작성 항목, 기업 조직 등, 보고서에 포함될 일반적인 사항 등으로 이뤄진 보편 표준(Universal Standards)인 GRI 1(Foundation, GRI 표준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 및 원칙), GRI 2(General Disclosures, 보고 조직에 대한 공개), GRI 3(Material Topics, 조직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공개 및 지침)과 함께 주제 관련 표준 (Topic-specific Standards)에 해당하는 산업 부문별 표준, 주제별 표준으로 구분된다. GRI 200, 300 및 400에서는 이러한 주제별 구분에 따라 경제 파트 7개(~207), 환경 파트 8개(~308), 사회 파트 18개(~418)의 항목으로 구성된다⁴⁾. 해당 기준들은 계

4) GRI Standards(GRI, 2022)

속하여 업데이트되며, 추가되는 내용은 새로운 번호의 표준으로 추가되는 형식이다⁵⁾. 2023년부터 산업별 표준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3개 산업이 발표되었고, 차후에는 40여개 산업별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사항에서는 산업별 기준 추가 외에도 특히 실사(due diligence)에 대한 내용과 조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강조되었다.

1.1.2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2015년 3월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이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지고 올 잠재적 영향을 정량화하여 재무적인 영향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의 기후변화를 어떻게 새로운 기업 가치 혹은 기업의 리스크로 반영할 것인가가 이 기준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는 가장 기본적인이고도 출발점에 있는 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CFD 기준은 산업별로 공시할 항목과 공시 분량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의 케이스는 유럽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을 미국, 캐나다 등이 따르고 있다.

일본 증권위원회의 경우, 기업지배법(Corporate Governance Code)에서 각 기업들이 TCFD 권고에 따라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서도 TCFD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2020).

1.1.3 SASB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⁶⁾은 투자자가 비재무적 정보를 재무적 정보와 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2018년 미국의 가치보고재단(VRF, Value Reporting Foundation)⁷⁾이 발표한 ESG 기준서이며,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중 79%(104개사)가 SASB 기준을 채택하였다).

5) 2021년과 2022년에 GRI 11(Oil and Gas Sector), GRI 12(Coal Sector) 및 GRI 13(Agriculture, Aquaculture and Fishing Sectors)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6) SASB Standards(SASB, 2023)

7) 2022년 8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 통합되어 현재는 IFRS 재단 산하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의 감독 하에 있음.

SASB에서는 ‘지속가능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총 11개 산업 부문 하의 77개 산업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의 기본 개념, 원칙, 정의, 목표를 기술한 ‘SASB 개념 체계(SASB Conceptual Framework)’ 및 각 산업별 기준 검토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SASB 기준 적용 지침(SASB Standards Application Guidance)’도 포함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ISSB 공시 기준과 통합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제 기업에서 사용되는 공시 기준들은 차츰 소수의 몇 개로 수렴되고 있고, 또한 본 연구 후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표준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국내의 기업들이 이러한 공시 표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SASB 기준을 국문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SASB 기준 적용 지침 및 총 40개의 산업별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이 공개되었고⁸⁾, 나머지 산업 기준들에 대해서는 기업 수요가 있을 시 번역될 예정이라고 한다⁹⁾.

2 ESG 경영 평가 기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 경영 평가 점수나 등급을 발표하는 기관은 해외에만 600여 곳 이상이 있으며 자연히 그 평가 기준이나 결과 역시 다양하다. 그렇기에 동일한 기업이 어느 한 평가 기관에서는 높은 등급을, 다른 평가 기관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혼란을 불러오기도 한다¹⁰⁾.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이며 다양한 ESG 경영 평가 기관의 존재는 기업 실무자들과 실제 기업들의 ESG 경영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표 2에는 국내외 주요 평가 기관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며¹¹⁾, 이를 통해 ESG 경영 평가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파악을 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 평가 기준, 평가 결과 도출 방법, 결과의 활용 방식, 그리고 평가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출처 및 수집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교하였다.

8) 회계기준원에서 국문번역본 확인 가능(SASB, 2021)

9) “S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추가 공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2023)

10) “ESG 성적표 잘 받는 법...글로벌 3대 지수를 기억하라”(매일경제, 2021)

11) ABCs of ESG Frameworks and Ratings(ESG Navigator, 2023) 참조

한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어떠한 평가 기관들이 어떻게 중점적으로 활용되는지도 살펴보았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MSCI와 KCGS의 평가 결과를 주로 활용하며, 기업들의 경우 내부적으로 CDP, EcoVadis, Refinitiv를 활용하여 공급사·협력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공급망 관리 시에 EcoVadis의 평가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기업은 공급자 또는 협력업체들에게 EcoVadis 점수 및 EcoVadis 기준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CDP도 비슷하게 활용된다. Refinitiv의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논란이 될 만한(controversial)한 이슈가 나올 때 투자자들이 많이 자문을 받는 평가 기관이며, 국민연금도 투자시 주요 자문사 중 하나로 Refinitiv를 활용한다¹²⁾.

[표 2] ESG 경영 평가 기준(기관) 비교 표

평가 기준	MSCI ESG Research	S&P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FTSE Russell's ESG Scores ¹³⁾
평가 기관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	S&P Global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FTSE) Russell
연관 지수 (Index)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DJSI) Family	FTSE4Good Index 시리즈
평가 기관 및 기준의 특징	- 전문 평가 기관	- 신용 평가 기관	- 전문 평가 기관 - 유럽 시장 내의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
평가 대상 기업	- 7,000개 이상 글로벌 상장기업 - 국내 기업의 경우,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 중 100개 기업이 평가 대상	-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 5,000개 이상 상장기업 - 특정 산업 ¹⁴⁾ 제외한 지수도 제공함 (기본 지수에는 포함)	- 전 세계 47개국 7,200개 기업 - 담배, 무기, 석탄 등 일부 산업군 기업 제외

12) 국내 기관투자자(익명) 대상으로 본 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인터뷰 (2023년 2월 12일)

13) ESG Scores (FTSE Russell, 2023)

14) 무기, 주류, 담배, 도박,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평가 기준 및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 리더(상위권 기업)와 비교 평가 - ESG 영역별 10개 주제, 37개 핵심 이슈 평가 - 업종별 기준표 140여개 - 거버넌스 평가에 가중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특성 반영하여 가중치 부여 - ‘Climate Strategy’ 부문은 CDP Climate Change 질문지 상의 답변을 기반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주제별, 300개 이상 지표 - 17개 UN SDGs¹⁵⁾ 전부 반영 - G: 이사회 감독, 장단기 기업 목표, 기후변화 정책 - E: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Scope 1, 2, 3¹⁶⁾), 재료 및 물 공급, 관리 리스크 및 기회 - S: 인권, 노동자, 다양성, 건강 및 안전, 제품 안정성 및 품질, 공동체 관계
평가 주기	상시	1년에 한번 (평가 질문지 4월에 제출, 결과 발표는 9월)	분기별 지수 편입 기업 발표
평가 결과 (점수, 등급 및 지수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등급 보고서 발간 - AAA ~ CCC 7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 전체 등급 & E, S, G 영역별 등급 별도 부여 - 평가 등급은 일반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평가 결과 상위 10%는 DJSI World 지수에 포함 (DJSI Asia Pacific 지수는 상위 20%, DJSI Korea 지수는 상위 30%의 기업 포함) - 분기마다 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0~5점(가장 좋음 5점) - 기업의 평가 항목 관련 정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특정 부문에서 기준에 미달 되면 지수 편입에서 제외
정보 수집 & 기업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정보 기반: 기업 정보, 정부 DB, 학계, NGO DB 등 - 보고서 발행하기 전의 정보 검증 과정에 평가 대상이 된 기업으로부터 피드백 수집 - 평가 대상이 된 기업은 MSCI ESG 포털에 데이터 업데이트 및 등급 재평가 요청 가능 (1-2개월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평가 기관에서 요청한 설문 응답 내용에 기반 - 설문 내용은 공통 평가 & 산업별 항목으로 구성됨 - 80~120개 문항 - 기업은 산정된 점수가 포함된 benchmark 보고서를 수령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정보만을 사용 - 4주 피드백 기간 제공 - 별도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제공

15)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ited Nations, 2015)

16) 미국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와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 NGO 및 정부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관한 기준을 개발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1998년 “GHG 프로토콜 이니셔티브(GHG Protocol)”를 발족하였다. Scope 1~3은 동 프로토콜에서 설정한 개념으로서, 각 기업/조직이 자체적으로 혹은 공급업체 및 고객과 같은 광범위한 가치 사슬에서 생성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를 위한 범위를 말한다. Scope 1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기업/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원천으로부터의 온실가스(예: 생산을 위한 제조 라인 운영 혹은 설비 시설 가동 등에서 생성되는 온실가스), scope 2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기업/조직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예: 구매한 전력)를 생산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그리고 scope 3은 scope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예: 기업의 상품 구매에 의한 간접 배출, 고객의 제품 사용 혹은 폐기에 의한 배출)이 해당된다. “GHG 프로토콜”(연합인포맥스, 2022).

[표 2] ESG 경영 평가 기준(기관) 비교 표(이어짐)

평가 기준	CDP Scores	Refinitiv	EcoVadis
평가 기관	Carbon Disclosure Project	FTSE Russell	EcoVadis
연관 지수	x	x	x
평가 기관 및 기준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은 특히 신경써야 하는 평가 기준으로 알려져 있음. -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란이 되는 이슈와 관련하여 투자자 측에 자문 제공 -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자문사 중 하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서비스 - 주로 기업 구매팀이 공급사(협력업체 등)의 ESG 성과를 분석할 때 사용 - EcoVadis 서비스 구독 시 기업의 ESG 성과를 산업/지역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평가 가능
평가 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뿐 아니라 도시, 국가, 지역 등에 대해서 평가 - 전 세계 9,600여개 기업에게 정보 공개 요구 - 공시된 정보를 분석하여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9,000여개 상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여개 기업
평가 기준 및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환경)에만 집중. G(거버넌스)는 E에 관련된 경우에만 평가함. - 기후, 물, 공급망, 숲과 관련한 사항도 평가 - 평가 방법 및 기준 완전 공개, 투명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여개 metrics 사용 → 186개 data points 도출 → 10 ESG category scores 산출 → E, S, G 3pillar 점수 & 가중치 부여 → 최종 Refinitiv ESG 점수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개 이슈를 4개 주제로 분류 (환경, 사회, 윤리, 지속가능한 구매) - 각 주제에 대한 7개 관리 지표 - CDP Climate score이 EcoVadis Scorecard에 반영되어 있음
평가 결과 - 점수, 등급 및 지수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egory level 점수 공개 - 더 자세한 점수를 알기 위해서는 유료 서비스 구매 필요 - 설문지 답변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CDP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부터 D까지 등급 부여, percentile rank 점수 - 10 ESG category scores 산출 → E, S, G 3 pillar 점수 & 가중치 부여 → Refinitiv ESG 점수 산출. - 'Controversy(논란이 되는 이슈)' 주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Vadis Scorecard 산출 - CSR Rating 산출 - 각 주제별 점수 & 전체 점수 모두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매겨짐. - 전체 점수는 4개 주제에 가중치 둔 평균
정보 수집 &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응답 내용 기반. 설문지의 질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함 - 일부 산업은 특화된 질문 내용이 있으며,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정보 기반: 기업 발간 보고서, 기업 웹사이트, 기업에 직접 연락 등 - 평가 대상 기업이 평가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바가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협력업체 등의 공급사, 이해관계자 대표, 제3자 기관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 - 기업이 supporting document 제공 & 맞춤형 설문에 답변 → ESG 성과 결과 도출 → 설문 분석 결과와 산업 부문에 따른 솔루션 제공

[표 2] ESG 경영 평가 기준(기관) 비교 표(이어짐)

평가 기준	ISS ESG	Sustainanalytics	KCGS
평가 기관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Sustainanalytic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관 지수	x	x	한국거래소 ESG 테마지수 5종의 종목 구성에 활용
평가 기관 및 기준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에게 중요. - 세계 최대의 의결권 관련 자문기관 - 대형 기관투자자 주주총회에서 안전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에 관한 의견이 ISS 권고와 90% 일치하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정보 회사 - ESG 리스크 평가와 관련하여 영향력 큼 -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검증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 ESG 평가 기관
평가 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2만개 기업에 대해 평가 등급 제공 - 국내외기업의 ESG 채권 발행 시, Sustainanalytics ESG 평가와 인증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사
평가 기준 및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 200개 이상 평가 요소 있음(이사회 구조, 보상, 주주권리, 감사, 위험관리 등) - E: 환경위험 관리, 탄소/기후, 자연자원, 폐기물 및 독성 등 - S: 인권, 노동, 건강 안전, 주주와 사회, 제품 안전, 품질, 브랜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리스크가 기업 재무 가치에 미치는 영향 측정 - 산업별로 다른 기준 적용 - 각 산업별 보통 70개 지표 - 3개 관점 분석: 준비성, 정보공개, 성과(preparedness, disclosure,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ESG 위험 회피 시스템, 기업 가치 훼손 이슈 진단 - ESG 각 영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평가 모형 개발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ISO26000 등 국제 기준 부합 - 국내 법제도, KCGS 모범 기준 활용
평가 결과 - 점수, 등급 및 지수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 품질 점수, 거버넌스 품질 점수: 1~10등급으로 나누어 평가(1등급이 리스크가 낮고 품질적으로 우수한 기업) - ISS ESG 기업 평가: A~E로 나누어 등급 부여, 상위 10% 기업에 대해서는 'Prime' 기업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0점 사이 점수 (점수 높을수록 리스크 큼) - 리스크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단계 등급 - 평가 등급 결과는 KCGS 홈페이지에 공개 - 대상 기업에게는 개별 평가 결과 보고서 제공 - 한국거래소 ESG 테마지수 5종의 종목 구성에 활용 → 기업 주가에 직접적 영향
정보 수집 &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정보 기반으로 평가 - 대상 기업에게 평가 결과 리뷰, 검증, 피드백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정보 기반으로 평가 - 평가 결과 공개 전에 대상 기업은 평가 보고서 초안을 제공 받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정보 기반 평가: 기업 공시, 뉴스 등 - 기업별 900개 이상 기초 데이터 수집 - 웹 기반 평가 시스템 통한 양방향 피드백 이루어짐 - 평가 완료 후 각 대상 기업은 피드백 기간에 추가 소명 자료 제출하면서 기존 답변 내용 수정 가능 → 평가 등급 변경 가능

[표 2] ESG 경영 평가 기준(기관) 비교 표(이어짐)

평가 기준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한경 ESG 평가모델
평가 기관	N/A	N/A	한국경제신문, 연세대학교, IBS 컨설팅
평가 기관 및 기준의 특징	N/A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ESG 평가모델 지향 - 한국 기업 특수성 반영 - 'ESG 등급 인플레이션' 등 온정주의적 평가와 다른 차원의 객관적 기준 적용
평가 대상 기업	- 국내 상장사	-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	- 2021년 4월, 국내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46개사 (2019 기준) 분석
평가 기준 및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개발 평가 모델 (ESG Value) 활용. - ESG 관리 수준 평가 - 지배구조 영역 강점 	E, S, G의 3가지 부문의 정보 취합, 자체 분석 모형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최고 기업(E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 기업, S와 G는 모든 지표 상위 5%인 가상의 국내 기업)을 기준으로 상정하여 평가 - 업종별로 다른 지표를 적용하거나 반영 비율 조정 - 한경, 연세대, IBS 컨설팅이 개발 ESG 평가 모델 사용
평가 결과 - 점수, 등급 및 지수 편입	N/A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등급: 평가 기준의 95% 이상을 만족한 역량 - B 등급: 80% 이상 만족 - C 등급: 기업별 격차가 상당한 바, 세분화하여 평가할 계획

III. 한국의 ESG 경영 현황

1 ESG 경영 관련 현행 국내 제도 분석

1.1 정책

2020년, 한국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국가적 투자를 통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선도 국가를 표방하고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명시적으로 탄소중립을 지향함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 등 저탄소 유망산업 육성의 계획을 담은 바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조 전반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하였다¹⁷⁾. 이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의 다수 정책에는 ESG 경영을 기업의 무형자산이 갖는 가치를 분석하는 도구이자 기후변화의 규제 수단으로서 보는 시각에 상응하여 ESG 경영을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물론 ESG 경영의 직접적인 배경이자 출발점인 투자 분야와 관련한 여러 금융, 재정 및 투자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도 ESG 경영에 관한 내용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포함, 발표되고 있으며, “ESG”라는 용어 자체를 반드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ESG의 각 요소인 환경, 사회 혹은 지배구조와 관련성을 가진다면, ESG에 관한 정책으로 분류되어 소개되고 있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었던 환경 분야 외에도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성이 있어 ESG 경영의 주요한 요소이자 요건으로 고려되는 국내의 정책들을 소개한다.

1.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기업 관련 인권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 1993년 세계인권 회의에서 채택되었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유래하였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인권위원

17)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p19.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회가 권고안을 작성하면 정부가 이를 기초로 인권NAP를 수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⁸⁾.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인권NAP가 수립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인권NAP(2023~2027)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된 바 있다.

인권NAP는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진 만큼, 인권NAP에서도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 수립, 정부의 관련 지원 강화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인권NAP에서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및 관련한 이주민의 인권 문제, 성별 임금격차 해소,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성폭력 문제, 조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과 개선, 상병(傷病) 제도 도입 및 운영¹⁹⁾, 플랫폼 기업 등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노동권 관련 보호, 간접고용 노동자²⁰⁾의 노동인권 증진, 위협의 외주화 구조로 인한 사고 방지,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 관리 제도의 전면 확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인권보호 기준 마련,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²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업의 인권경영·인권존중 책임 실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 개선, 기업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 발생 시의 보호 관련 배상 및 구제 제도 마련,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정부의 과제로써 제시하고 있다.

1.1.2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²²⁾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및 2022년 말에 예정되었던 EU(유럽연합)의 ESRS²³⁾(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18)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a)

19)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계없는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현재 한국에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임금 노동자가 업무의 상병을 이유로 한 휴가 또는 휴직에 대해 법적인 권리 혹은 제도로서는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2022.7, p 219. (국가인권위원회, 2022a)

20)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등

21)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대해 그 대상이 된 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의사 표현, 이의 제기,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취할 권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거서, pp 248~249.

22)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 경제구축 -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2022)

23)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EU 기업과 외국 기업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관련 기준과 공시 내용 등을 정함.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되는 흐름과 더불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²⁴⁾ 및 공급망 실사²⁵⁾ 등을 통한 ESG 이행 부담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2년 12월 국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방안의 요지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 ESG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ESG 공시 제도 정비

(a) 국내 ESG 공시 체계 정비

공시 제도의 난립, 공시 의무 이행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 그간 ESG 경영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온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글로벌 기준 및 공시 표준화의 흐름에는 맞춰가야 하겠으나 국내 실정상 관련된 기준 등을 빠짐없이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국내 ESG 공시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정비하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앞서, 글로벌 차원의 공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ISSB 공시 초안에 한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2022년 7월, 회계기준원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였음). 또한 ISSB 위원에 한국인 1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ISSB의 공식 자문 기구)에 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도록 추진하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글로벌 공시 표준 작업에 한국도 최대한 관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내 차원에서는 기업 간의 ESG 경영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정보 공시를 위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먼저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guidance)와 자본시장법령 등의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게 ESG 경영 공시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결정, 공개된 바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세부 일정을 이번 방안을 통하여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ISSB 국제표준 및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국내 공시기준을 만들기 위한 별도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회계기준원 내 산하기구(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로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24) EU내에 물품과 서비스 등을 수출하는 업자에게 해당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

25) EU내의 기업 및 그와 거래하는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거래처, 협력업체에 환경, 사회(인권 등), 지배구조의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 공시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b) ESG 공시·공개 제도간 연계 강화

본 방안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발간은 ESG 공시 제도의 영역인 반면, 이와 별개로 환경정보 공개 제도, 고용형태현황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는 공개 제도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보고 있는 바, ESG 공시 제도와 정부 각 부처 관할의 공개 제도 간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환경정보 공개 제도 운영 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하여 중복되는 항목의 명칭을 일원화함으로써²⁶⁾,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ISSB 국제표준을 따라 국내의 ESG 공시 관련 법령도 개정될 것을 전제로, ‘의무이행 간주’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 ‘의무이행간주’란, 공시나 공개 제도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다른 제도에 있는 해당 항목 역시 공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정부는 국제적으로 중요도가 있는 항목 인지, 간주함에 있어 실질적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

(a)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전환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혹은 컨설팅 지원 및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용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ESG는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기업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정부가 마련하였던 가이드라인이다²⁷⁾.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ESG 항목 및 경영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서를 새롭게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ESG 경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체크리스트²⁸⁾를 만들고 관련 심층 진단 및 컨설팅도 병행한다.

그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ESG 사내전문가 육성 과정²⁹⁾을 개설하여 전국 단위로 이를 실시할 계획

26) 예를 들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관련,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고용형태 현황’ 서식(별지 제2호 서식) 내의 항목인 ‘소속 외 근로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직원이 아닌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라는 지표와 실질적으로는 유사하므로, ‘소속 외 근로자’를 ‘직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음. 관계부처 합동, 전거서, p9.

27) 후술할 ‘1.3 유관기관 가이드라인 등’에서 상세 내용 참조

28) 후술할 ‘1.3 유관기관 가이드라인 등’에서 상세 내용 참조

29) 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ESG 경영 평가 대응에 대한 교육 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³⁰⁾ 및 일터 혁신³¹⁾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사업 전환을 위한 ESG 금융 지원³²⁾,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ESG 전용펀드 조성³³⁾ 및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비용 부담 없이 측정 및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³⁴⁾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b)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대외 수출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요소로, 수출기업 및 그 협력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하여 EU의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주로 ESG 공급망 실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가이드북('ESG 수출 가이드북')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대기업이 그들의 협력사인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해 주거나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도 포함되며, 이미 시행 중인 사항들도 있다. 동반성장위원회³⁵⁾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ESG 평가 지원' 지표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 실적을 평가 지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⁶⁾. 또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 시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실시 중에 있다³⁷⁾.

30)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이행 방안에 대한 컨설팅. 관계부처 합동, 전게서, p10. 외부 컨설팅 서비스 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31)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임금 체계, 작업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관계부처 합동, 전게서, p10.

32)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각 5천억원을 마련하는 기후대응보증 (2023년), 산업은행이 마련하는 1조원 에너지 전환 자금 (2022년) 및 기업은행이 마련하는 2천억원 지속가능연계대출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전게서, p10.

33) 2022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계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 절차와 실사 점검표를 포함한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 발표하였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ESG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선정되며, 모태펀드 167억원이 출자되었다.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해 시범운영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2022)

34)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가 진단하는 방식의 온실가스 측정과 보고가 가능한 시스템 및 에너지공단에서 한전 전력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검증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의 검증을 제공하는 시스템. 관계부처 합동, 전게서, p10.

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민간 위원회

36) "중소기업 ESG 도우면 동반성장 평가 가점 받는다", (데일리임팩트, 2022)

3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항: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25%(중소기업), 8%(중견기업) 혹은 2%(대기업)을 곱한 금액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다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6호: 「산업발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컨설팅 비용

산업발전법 제19조: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다. ESG 투자 활성화

(a) ESG 채권 발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동 방안은 투자기관 및 투자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즉, 민간 ESG 채권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투자 기관의 ESG 투자를 위한 가이드언스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ESG 경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이나 공시·평가 실무와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녹색 분류체계³⁸⁾를 반영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며, 나아가 사회적 분류체계³⁹⁾에 의한 투자 활성화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도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을 위한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환경 친화적이며 사회 가치 창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ESG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지수인 ‘ESG 지수’ 등을 활용하여 ESG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 등이 있다.

(b) ESG 평가 기관 가이드언스 마련 및 ESG 평가 지원

ESG 평가 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및 ESG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기관의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에 평가 기관 가이드언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 기초가 될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권고안에서의 ESG 평가 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ESG 평가방법론 및 원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확보
- (나) ESG 평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확보와 이해 상충 방지
- (다) 평가의 독립성·객관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 및 관계 등의 회피
- (라) ESG 평가 방법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적인 공개와 투명성 확보

38) 그린 텍소노미(Green taxonomy).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즉 어떠한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ESG 혹은 녹색 투자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2020년 6월 EU가 발표한 개념

39) 소셜 텍소노미(Social taxonomy).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원칙과 기준의 제시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권, 근로자 안전, 일자리, 소비자 권익, 지역사회, 공급망 협력, 공정 전환 지원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EU는 2022년 2월 social taxonomy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라. ESG 정보·인력 지원 체계 구축

(a)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 마련 및 ESG 평가 지원 강화

ESG와 관련한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고 그만큼 정보량도 방대한 반면, 해당 정보를 다양한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각기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ESG 정보이용자가 좀 더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정보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구체적으로는 ESG 경영과 관련한 실무 담당자 및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ESG 경영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외 동향, 정부 지원 정책(기업의 재무 정보와 ESG 평가 등급을 결합한 시계열 정보 등), ESG 자가 진단 프로그램, ESG 교육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투자자, 기업 평가기관 혹은 일반 국민 등 외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ESG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코스피 상장기업의 공시 정보, 사회책임투자 채권 정보, ESG 평가기관 정보 등 투자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반면, 기존부터 활용되어 왔던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 산업안전통계 포털, e-고용노동지표, 기업집단 포털 등은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 시기 혹은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거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ESG 관련 정보 공개 도구로서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b) ESG 전문 인력 양성

기존부터 ESG 관련한 업무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분야의 인력들(경영 컨설턴트,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사원 등)에게 ESG 관련 전문 혹은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ESG 전문가로 전환할 계획이며 2023년에 최대 300명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공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특성화 대학원 혹은 지역 거점 대학 등에 ESG 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해서 정식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에서의 ESG 경영의 현재까지의 흐름이나 연혁을 고려한다면 현실성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으로 인력 양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a)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내에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게 하고, 이를 경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경영 평가 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한 배점 확대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규정 및 세칙 등

1.2.1 인권정책 기본법(제정안)

ESG의 S(사회)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는 법규로 이해되고 있는 법안으로서, 2021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는 2007년에 시작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통합적, 종합적 인권 정책 추진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규범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인권정책 기본법의 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⁰⁾.

-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
-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구 설치
- (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의무
- (라) 인권 실태 조사 규정 도입
- (마)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인권 정책 반영 규정 마련
- (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마련

상기의 기본 내용 중 (바)에서 언급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관련하여, 법안에서는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여야 하고,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기업의 사회적(인권존중)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법안은 어디까지나 기본법으로서의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인권존중)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안은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세부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회의 통과 후 현재까지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한 논의는 특별히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0)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2021),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인권위원회, 2021)

1.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2021년 11월 24일 한국거래소가 개정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2023년 현재, 자산 1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의무는 2024년에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기업, 20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법인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동 규정에 따라 공시할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에 대한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시의 해당 사유이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공시 항목의 예시⁴¹⁾는 다음과 같다⁴²⁾.

가. 주주 권리의 보장

주주총회 소집 통보·안건 제공일, 주주총회 분산 개최 노력, 전자투표 도입 여부, 배당 성향 및 배당 계획

나.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IR·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실적, 공시 의무 위반 이력, 영문 홈페이지 운영 여부, 영문 공시 실적, 계열 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혹은 경영진 또는 지배 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 장치, 사업 및 자본 구조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주주의 이익보호 정책

다.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대표이사 위임 사항,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내부통제정책(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공시조직,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

라. 이사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각 이사의 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현황, 과거 횡령 혹은 배임 판결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 여부

41)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모범 기준 및 G20 또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에서 제시한 내용들이다.

4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공시항목 예시,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금융위원회, 2022)

마. 사외이사의 독립성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사에 재직한 경력 유무, 사외이사별 재직 기간 및 장기 재직 현황, 사외이사 겸직 현황

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정책, 사외이사 보수 정책,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 및 재선임 결정 여부

사. 이사회 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

정기 혹은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안건별 찬성률 등 이사회 의 주요 활동 내용

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의 설치 현황

자. 내부 감사 기구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업무 수행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선임 현황,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후보자 선정 요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등 지원 현황, 정기적 회의 개최 여부

차. 외부감사인의 공정성 및 회계 투명성에 대한 기여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 자회사를 통해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는지의 여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

이러한 공시 의무에 대한 불이행 혹은 불충분한 이행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진다. 공시 기한(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 미준수, 허위 공시, 공시 항목 오기재 혹은 누락에 관한 정정 공시 요구에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누적되는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 거래 정지(10점 이상), 관리 종목 지정(15점 이상) 등의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서,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간을 통한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⁴³⁾. 2023년 현재는 기업의 자율 공시를 장려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2021년 1월 한국거래소에서 공개⁴⁴⁾, 아래 1.3에서 상술)’가 작성되어 제시되고 있는 정도이나, 향후에는 거래소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에 대해서, 2030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에는 ESG의 개념과 중요성 및 ESG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고려할 원칙과 실무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가이드스로 볼 수 있다.

ESG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ESG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 등 경영에 통합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비재무적인 ESG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에 따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의 확산을 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⁴⁵⁾. 관련하여 많은 글로벌 규범과 규제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의 필수적인 절차로서 ESG 요소를 검토 및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 역시 이러한 추세 및 요구에 맞춰가기 위한 ESG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ESG 가이드스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와 관련한 일반 원칙
- (나) 중요성 평가 관련 내용과 참고 가능한 기준(GRI, SASB 등)
- (다)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주제 선정 - 보고 기획 - 내용 작성 - 내용 검증 - 대외 공개)
- (라) 상기 사항과 관련한 우수 사례 등

43) 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21)

44)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2020, p1(한국거래소, 2021)

45)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2020, p1(한국거래소, 2021)

1.3 유관기관 가이드라인 등

1.3.1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과 자발적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이미 2014년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한 바 있다⁴⁶⁾.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인권경영을 도입하여 실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 원칙과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자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 내의 인권경영을 위해 ① 인권경영체제 구축, ② 고용상의 비차별,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④ 강제노동의 금지, ⑤ 아동노동의 금지, ⑥ 산업안전 보장,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⑧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⑨ 환경권 보장, ⑩ 소비자인권 보호의 10가지 기업 활동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신의 기업 활동으로 인해 노동자, 소비자 및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기한 것이며, 자회사 또는 협력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인권 침해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상기 10개의 각 운영 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기업이 해당 원칙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2011년 발표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이 기업의 인권경영 실사(Due Diligence)를 포함한 인권경영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체크리스트에서도 UNGP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경영체제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운영 원칙에서의 주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별로 문답 형식으로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지표 역시 제시되어 있으며, 지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통해 왜 당해 이슈가 각 운영 원칙에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당해 운영 원칙에 따른 인권경영이 가능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기업 경영 사례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물론 동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므로 완성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개별 기업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기 어려움 부분도 있다. 이에, 해당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각 기업의 사업과 조직 상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게 인권경영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4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2014)

는 동 가이드라인에서도 밝히고 있다.

한편,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권경영 체제 구축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로,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⁴⁷⁾. 인권영향평가는 기업이 자신의 활동이나 사업 관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거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에 앞서서, 해당 행위들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대해 미칠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인권영향평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규정예의 위반 여부가 기준이 될 것이며, 기업이 활동하는 해외 국가의 법규 및 국제 규범 역시 기준이 되어야 한다⁴⁸⁾. 그 밖에 구체적인 규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산업 내에서의 관행, 문화, 사회적 관습 등도 고려할 기준이 된다.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내외 법규와 국제 규범들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외부 전문가로서 변호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고 또 기대되는 부분이다.

1.3.2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경영을 위해서는 소비자, 지역사회, 공급망 내의 관련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권경영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와 실천 성과와 관련한 정보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기업 스스로가 인권경영을 점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도 하다. 이에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관의 필요에 따른 보고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적기에 공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작성, 공개한 바 있다.

지침의 내용은 크게 인권경영 보고지침과 인권경영 평가지침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보고지침과

47) 인권경영에서는 기업이 인권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방지, 완화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기업 활동과 그 영향을 분석, 조사,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인 '인권 실사(Due Diligence)' 역시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성, 발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2022)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이러한 인권 실사 활동에 포함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2b).

48)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규는 해당 기업의 사업과 활동 영역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동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내 법규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헌법 등이 있다.

관련, 인권경영 추진 체계 및 인권정책선언과 관련한 내용은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주요 정보로서 보고 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계획, 과정 및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로 식별된 인권 이슈 및 이미 식별되어 대응을 요하였던 이슈와 그 대응 결과에 대한 사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구제 절차(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원상회복 및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기업 내 인권경영 교육 체계와 교육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가 지침에는 이와 같은 보고 지침에 따라 공개될 사항에 대하여, 지표 및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⁹⁾.

한편, 인권경영의 보고와 관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서 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⁵⁰⁾.

1.3.3 K-ESG 가이드라인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의 중점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K-ESG 가이드라인 v1.0을 발간, 배포하였다⁵¹⁾.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비재무적 요소가 고려되고 이에 따른 비재무적 경영 성과 공시가 강화되는 추세 하에서, ESG를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금융·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ESG 준수 요구 및 EU 등의 국가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가 늘어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할 사항이다. 이에 국내 기업도 ESG 경영과 그에 수반하는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600여개에 달하는 ESG 평가기관의 각각 상이한 지표를 전부 파악하기가 어려워 일관된 평가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 어렵고, ESG 경영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이 부족하여 대응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지표와의 정합성을 만족하면서도 한국의 산업 특성과 법·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한 K-ESG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49) 동 지침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를 위한 것인 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이를 평가하는 경우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 사기업 등의 경우에도 내부적인 인권경영 평가 시 이를 활용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서도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0) 유럽 국가들의 경우, 민간 기업에게도 별도의 독립적 인권경영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별도의 인권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내의 민간 기업 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실례는 별지3 참조

51) “K-ESG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2021)

K-ESG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글로벌 ESG 지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주요 글로벌 ESG 경영 평가 제도 및 공시 기준 13개⁵²⁾를 조사하여 국내 기업에게 주로 해당되면서 이들 기준들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을 기초로 하여 K-ESG의 기본 진단항목 체계(영역, 범주, 항목, 진단 기준)를 설계하였다. 이렇게 글로벌 지표를 기본으로 한 위에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국내 산업계, 경제 단체, 연금기금, NGO,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본 진단항목정의서의 고도화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책과 제도와의 정합성을 위해 이와 상충하는 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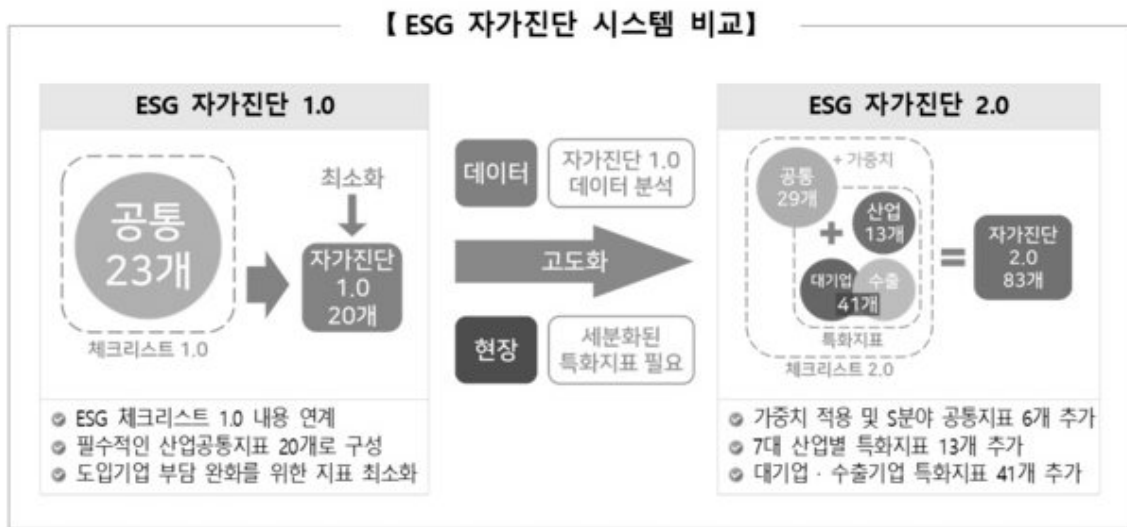
K-ESG 가이드라인의 영역은 기본적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외에, 각 영역의 정보 공시에 관한 형식, 내용 및 검증에 관한 공시(Public) 영역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ESG 정보 공시 여부 및 그 주기와 범위 외에도, 공시 정보의 통합성 여부, 중대성 평가 결과의 공시 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K-ESG의 범주는 모두 27개로, 상기의 글로벌 평가 제도 및 공시 기준들에서 도출된 공통 제시 이슈를 기반으로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 가치를 설정한다. 여기에 이것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세부 항목으로서 61개의 진단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각 진단 항목에는 항목 정의서, 추가 설명, 용어 정리 및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어, 진단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E) 영역에서는 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 재사용 및 재활용의 비율, 온실가스·오염물질·폐기물 배출을 중심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17개 문항). 반면, 사회(S) 영역에서는 채용과 고용 유지, 교육 훈련, 직원의 복리후생과 교육 훈련,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의 노동 범주, 양성 평등(여성 구성원 비율 및 여성 급여 비율), 산업 안전, 인권(인권 정책 수립 및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 성장(협력사 ESG 경영 및 지원), 지역사회(사회공헌 및 봉사 참여), 개인정보보호와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22개 문항). 지배구조(G) 영역에서는 주로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포함하여, 주주의 권리 관련 사항(주주총회 소집 공고, 배당 정책 및 이행 등), 감사기구,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총 17개 문항). (상세한 항목의 내용은 별지2 참조)

한편,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범용적 가이드라인 성격의 기존 K-ESG v1.0에서, 현재 2023년에는 항목별 가중치 반영, 산업별 특화 지표, 기업 특색별 특화 지표가 추가된 고도화된 K-ESG v2.0이 적용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52)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GRI, WEF 등



[그림 1] ESG 자가진단 시스템 비교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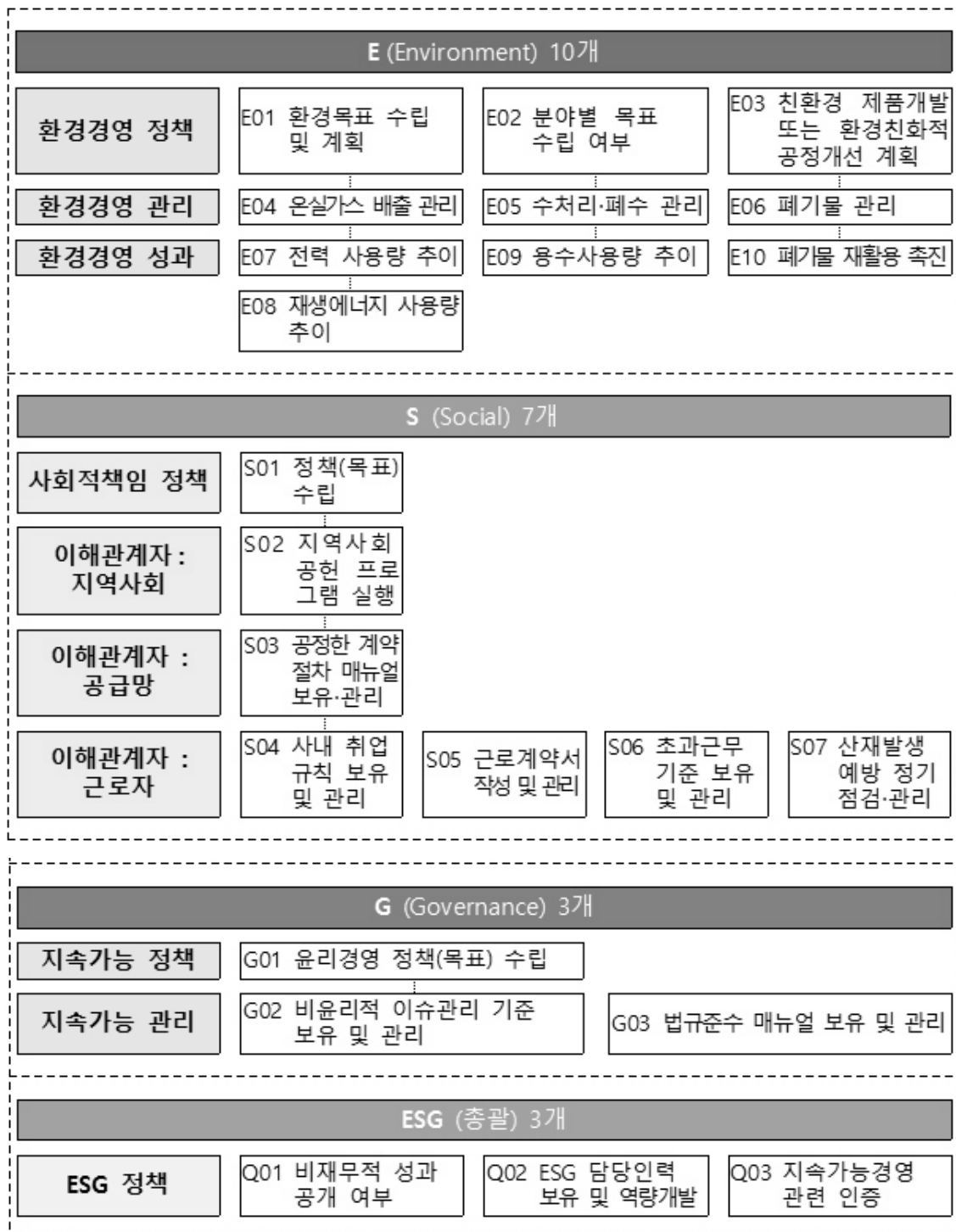
K-ESG는 평가 항목별로 평가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제시하여 기업 스스로의 자가 진단을 통해 ESG 경영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수립, 효율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의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지침서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실제로 현장에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ESG 평가와 공시 기준에 직접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한 효용성이 어느 정도 높을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과 진단항목 정의서 상의 내용 불일치 혹은 진단항목 정의서와 추가 설명 간의 내용이 불일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의 추가 설명과 관련해서도, 제시된 진단 항목의 점검 대안 내용이 실제로는 활용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경우도 있고, 진단항목과 무관한 추가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ESG 평가 대응에 기업이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ESG 경영의 근본적인 목표와 필요성, 지속가능성 등, ESG 경영 내재화와 기업 내부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ESG 경영(혹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미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1.3.4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기의 K-ESG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과 내용의 공통 지표 23개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선별하여 “중소기업 ESG 체크리

스트(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림 2]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ESG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최소 수준의 지표로서, 온라인 시스템⁵³⁾을 통해 동 자가 진단을 실시하면,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ESG 수준 및 분야별 개선과제가 포함된 결과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동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ESG 민관협의 회와 함께 구축한 ‘ESG 통합 플랫폼⁵⁴⁾’의 일부로, 국내외의 ESG 규제 정보와 예상 영향, 정부 및 주요 기관의 ESG 지원 사업, ESG 및 탄소중립 진단시스템 등을 모두 모아 놓았다. ESG 경영 및 공시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와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탄소배출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룬 정도의 상세한 ESG 경영 평가와 공시 에 대한 기준이나 지표에 대한 소개, ESG 데이터 관리 및 구체적인 실무 방향 등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3.5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여, 중견 및 중소기업이 이러한 공급망 실사 시에 활용할 수 있 도록,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⁵⁵⁾. 현재 산업별 이니셔티브 및 원사 업자(즉,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고객 또는 도급업자)별 공급망 ESG 진단 혹은 실사 지표가 다양해지고, 그와 함께 지표별 내용 및 실사 방법론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즉,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영 현황 및 상태에 대한 조 사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 비용, 시스템 등이 미흡하므로, 경영 진단 혹은 실사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관리해 놓지 못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사용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이나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산업별 이니셔티브 등의 지표를 종합 검토, 공통적이고 핵심 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를 선정하여 진단 항목을 설계하였고,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진단항목인지 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강제성이 있는 관련 법·제도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실사 대응에서 그치 지 않고 원사업자의 개선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직접 수행하여 ESG 경영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 등의 실무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견 및 중소기업을 위한 업무표준 매뉴얼도 개발되어 함께 제공되고 있다.

53) “ESG 진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a)

54) “ESG 통합 플랫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b)

55)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022)

1.3.6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벤처 투자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년 7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⁵⁶⁾.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이하 “VC”)에 ESG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규정한다는 것인데, ESG 거버넌스 정착, 투자처의 발굴, 심사, 투자, 사후 관리 및 회수 전반에 ESG 요소가 적용되는 ESG 프로세스가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ESG 펀드를 운용하는 VC가 ESG 벤처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심의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⁵⁷⁾ 평가 기준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ESG 투자 검토 기업을 위해서는 ESG 리스크 분석의 실시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ESG 실사 결과를 분석하라는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 단계에서는 상기 가이드라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이후 투자 의사 결정, 사후 관리, 투자 회수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으로만 적용된다.

2 국내 ESG 경영 관련 공시 현황

국내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345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82개에 이른다. 이 중 SASB 기준을 사용한 보고서가 61개, TCFD 기준을 가능한 보고서가 58개(중복 가능)이다.

또한,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1년 179건으로, 2020년 143건 대비 25%가 증가⁵⁸⁾한 만큼 지속적으로 그 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 중 SASB 기준을 사용한 기업은 2020년도 12개사(32%), 2021년 55개사(71%), 그리고 2022년 104개(79%)에 이른다⁵⁹⁾.

기업에 따라서는 UNGP reporting framework 등을 사용하여 인권 이슈부터 공시하는 등, 해당 기업이 중시하는 요소 혹은 해당 기업의 특색에 따라 공시 방식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기 언급된 SASB, TCFD를 포함하여,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싶은 요소 혹은 해당 기업의 특색을

56) “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해 시범 운용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2022)

57) ESG 기준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나 펀드 구성에서 배제하는 투자 전략을 뜻한다. 이는 책임투자전략의 한 방식으로, ESG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것인 바, 대표적인 배제 대상의 산업은 무기, 담배, 핵에너지, 도박, 주류 등이 있고, 노사관계나 환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기업도 배제 대상이다. 투자 대상 기업의 총 매출이나 총 수익에서 배제 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연합인포맥스, 2018)

58) “혼란의 ESG 공시…어떤 기준 따라야 할까” (매일경제, 2022)

59)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시 SASB 기준을 활용한 기업, 한국거래소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KCGS가 발표한 ESG 상위 등급 3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⁶⁰⁾를 분석한 결과, SASB, TCFD, ISSB 등의 기준을 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따라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만을 발간, 공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무적인 사항 중심의 사업 보고(재무 실적 보고를 위한 연차보고서 혹은 annual report)와 지속가능경영 보고(혹은 사회책임경영 보고) 사항을 통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이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ESG 경영의 실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에 더하여 인권경영보고서까지 따로 발간하는 경우도 있다.(별지3 참조)

60) 기업에 따라 발간되는 보고서명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바, '지속경영가능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ESG경영보고서', 'ESG보고서' 등의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설문 및 인터뷰 결과

1 설문 응답자의 ESG 실무 현황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과 대면 심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ESG 경영 관련 실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⁶¹⁾.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식과 환경에서 ESG 관련 실무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⁶²⁾.

1.1 현재 수행 중인 ESG 관련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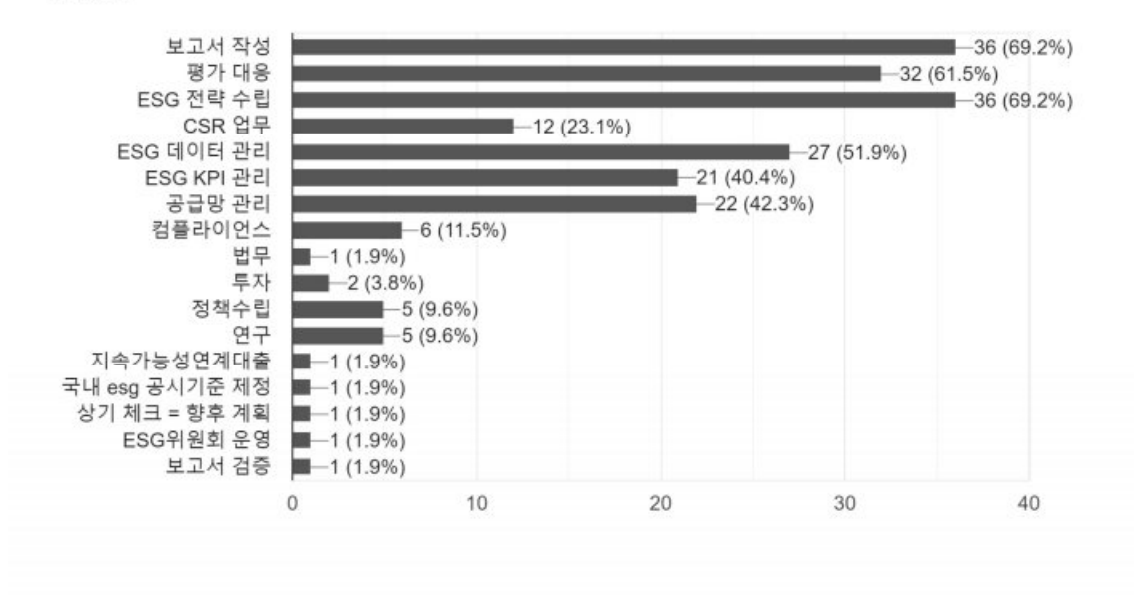
ESG 경영 성과 및 관련 정보 공시와 관련성이 높은 ESG 경영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ESG 보고서 작성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ESG 전략 수립과 ESG 데이터 관리 업무도 실무자들의 주요한 업무에 속하였다.

61) 2023.2.28. - 2023.3.31. 의 기간 동안 진행한 서면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총 52명이 응답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총 18명과 심화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면 설문 조사 관련, 설문지의 선택지는 복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으며, 실무자 본인의 직무, 직책, 업무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질문인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의 질문 전문과 심화 인터뷰 질문 전문은 별지1 참조

62) 동 실무자들은 기업 소속 직원(36%), 외부 ESG경영 컨설턴트(34%), ESG 평가기관 직원(7%), 공공기관 혹은 정부 관계자(7%), 투자자 (금융기관 소속, 6%), 시민단체 소속(4%)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소속 실무자 응답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대기업 소속이며 (52%), 해당 기업의 산업은 제조업(37%), 금융업(31%), 에너지(25%), IT서비스(12%), 건설/바이오/유통(6%) 등의 순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ESG 관련 업무 (여러개 선택 가능)

응답 52개



[그림 3] 설문 답변 결과 - 현재 수행하고 있는 ESG관련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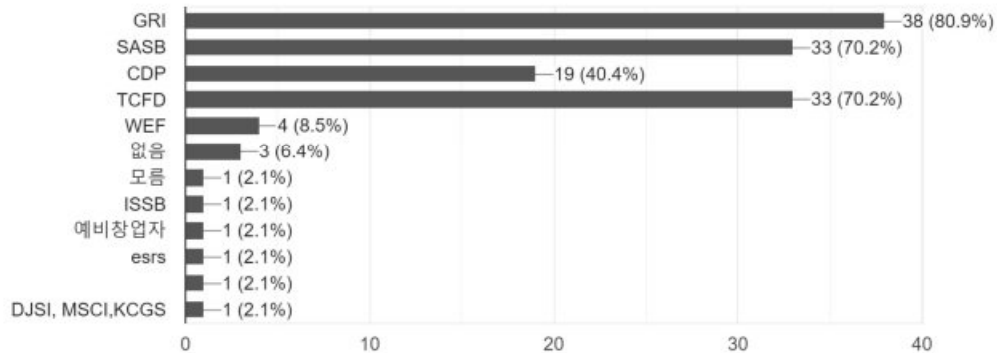
1.2 ESG 공시 업무 관련 현황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실무자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ESG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공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바,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GRI, SASB, TCFD 등 소수의 공시 기준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시 기준을 사용한 보고서 작성 작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공시(보고) 기준 및 상세 지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62%), 공시하여야 하는 지표가 너무 많다는 점(56%), 지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집계하고 취합하기 위해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수월하지 않다는 점(54%), 지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수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4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 직장이 사용하는 ESG 공시 기준은? (여러개 선택 가능)

응답 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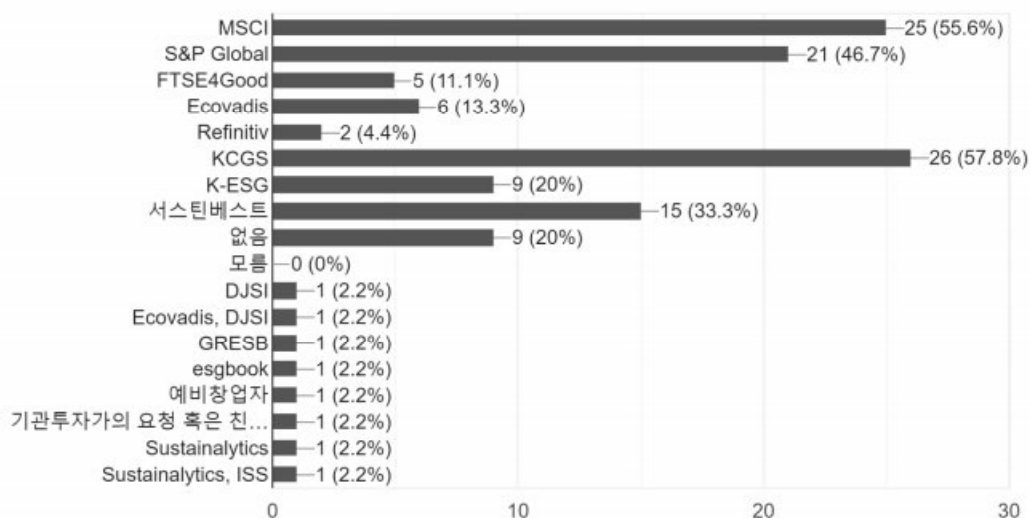
[그림 4] 설문 답변 결과 - 현재 사용 중인 ESG 공시 기준

1.3 ESG 평가 업무 관련 현황

역시 상기 1.1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실무자들이 ESG 평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ESG 평가 기관 혹은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인만큼, 국내 평가 기관인 KCGS에 대한 대응 및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 직장이 대상/대응 중인 평가 지표/기관은?

응답 45개



[그림 5] 설문 답변 결과 - 현재 대응 중인 ESG 평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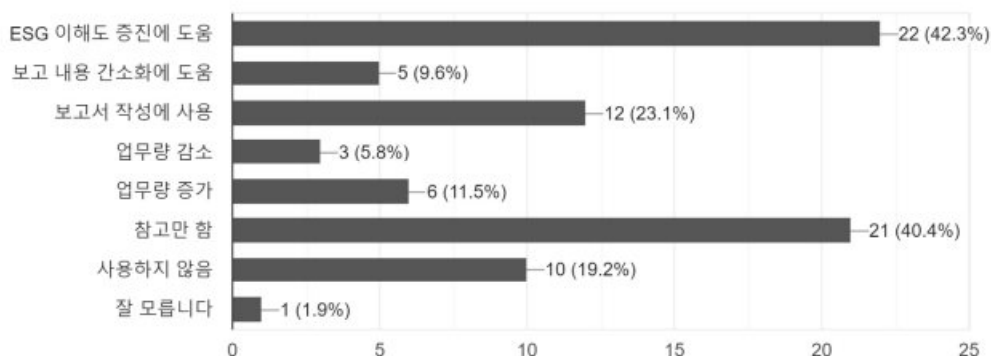
이러한 평가 기관 및 기준을 사용한 평가 대응 작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평가를 위해 응답하여야 할 질문의 양 자체가 너무 많다는 점(55%),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55%), 평가 질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하다는 점(53%), 평가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피드백이 늦는 등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문제점(3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4 K-ESG 활용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ESG 경영 공시에 대한 요구가 대외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의무화 되는 경향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특성도 고려한 공시 기준으로서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고도화 및 추가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래와 같은 설문 응답자들의 답변에 비추어보면, 현장에서는 K-ESG가 실질적인 공시 기준으로서 보다는, 업무 참조용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K-ESG가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여러개 선택 가능)

응답 5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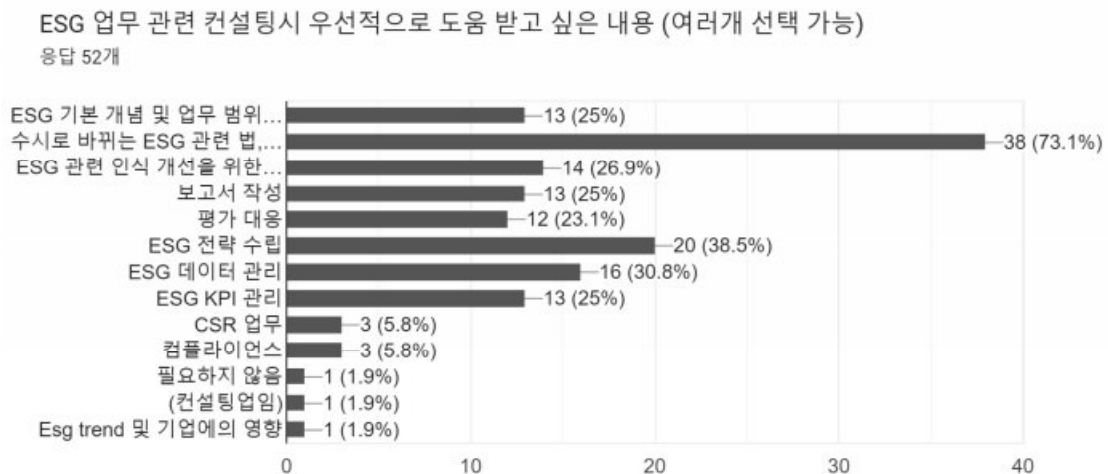
[그림 6] 설문 답변 결과 - K-ESG가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1.5 조직 내 ESG 관련 교육 현황

주로 기업 내에서 ESG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조직 내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아직까지 관련 교육 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가장 많았고(35%), ESG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는 부서(환경팀 등)에 대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았다(28%). 그 밖에는 일회성 내부 교육, 외부 교육에 대한 수강료 지원, 혹은 외부 강사 초청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6 실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

ESG 관련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항에 대해 가장 많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질의하였고, 이는 ESG 관련 실무에 있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수의 응답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ESG 관련 법령, 규제 내용, 제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시에 업데이트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73%). 다음으로 ESG 경영 전략 수립(38%), ESG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30%), ESG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26%) 및 ESG 경영의 기본 개념 및 업무 범위 확립(25%) 등과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설문 답변 결과 - ESG 업무 관련 우선적으로 컨설팅 받고 싶은 내용

2 ESG 실무상의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서면 설문과 대면 심화 인터뷰를 통하여, ESG 경영 평가와 공시 업무를 주로 포함한 업무 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이하는 응답자가 서면 설문에서 업무상의 어려움에 해당한다고 선택한 각 사항이다(중복선택 가능). 아래 답변 항목들은 우선적으로 유사한 항목끼리 묶고 설문 응답자들이 선택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하였으며, 해당 비율의 수치를 병기하였다. 그 외에도 사전 연구와 심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답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설문 상에서는 질문 내용이 아니었으나 심화 인터뷰를 통해 언급된 경우 비슷한 설문 항목 또는 답변 내용과 함께 기재하였다.

앞서 연구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답변의 용이성을 위해 설문 문항들은 대부분 객관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답변 선택지와 항목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전에 선정되어 제시되었다. 모든 문항에 ‘기타’ 항목이 있어 응답자들은 선택지에 나온 내용 외의 다른 답변을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응답자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선택지로 제시된 내용들을 선택, 답변하였다. 하지만 심화 인터뷰를 통해 발견된 점은, 설문에 제시된 항목 외에도, 혹은 제시된 항목과 유사하지만 뉘앙스나 기조가 다른 답변들도 많았고 이들은 설문을 통해 충분히 파악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설문지 상의 질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심화 인터뷰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음을 밝힌다.

2.1 공시 및 전략 관련

2.1.1 공시 관련 기준 또는 지표들의 난립 및 불통일성(65%)

ESG 경영 성과 및 정보 공개 시, 이를 위해 사용할 지표나 기준의 선택에 있어서는 현재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 없이 정보를 공개할 해당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ESG 공시 및 평가와 관련한 기준 또는 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약 600여개가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 중에 소수의 몇 개의 기준들만이 널리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국내의 예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상기 “1.2 ESG 공시 업무 관련 현황”에서 실무자들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들이 소수의 몇 개로(GRI, SASB, TCFD, CDP 등) 수렴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준들은 상호간에 공통되는 세부 지표들도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각각 모두 다른 세부 지표들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SG 실무자, 특히 ESG 경영 성과 및 정보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공시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모두 다른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곧 업무량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공시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또는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공시 기준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유사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준들이 요구하는 공시 방식에 따라 정보 수요자에게 어떻게 해석될 지 예측하기 힘들 수 있다는 어려움도 존재하였다. 또한 공시 기준이 많다 보니, 공시 업무 상의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우며, GRI와 같은 백과사전식 공시 기준의 경우에는 전부가 아니라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일부 중요한 지표만 선택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 지표 선택을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간의 통합을 위한 국내외에서의 시도가 있으나, 통일된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에 범용되던 공시 기준을 정보 수요자(특히 투자자들)이 여전히 요구하거나 할 가능성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공시 기준 하나가 또 추가될 뿐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2.1.2 법률 등의 법적 제도(예: 의무 공시 사항 등)와 ESG 관련 지표·가이드라인 간의 간극 혹은 괴리(30%)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ESG 경영 공시가 법적 의무가 아닌 바, 적지 않은 기업들이 해당 공시를 하여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투여되는 자원을 가능한 한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ESG 경영 공시는 ESG 평가 대응을 포함하여 해당 공시 또는 평가 지표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측정, 관리, 취합, 집계 및 일정 부분 가공하는 작업을 요한다. 이는 당연히 상당한 전문성을 동반한 업무량 증가를 가져온다.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작업들을 기업 내부적으로 혹은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ESG 경영 공시를 외부 전문가를 사용해야 하는 비용 문제로서 보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기업 전반적으로, 현재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투자자가 직접 요구를 하거나 관련 문의를 해 오기 때문에 ESG 경영 공시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ESG 경영 공시를 통해 투자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목표와 역량을 알리는 것이 투자 유치 혹은 상장 시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 하에 여러 기업들이 ESG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등, 공시가 의무화된 사항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기준 혹은 지표(GRI 공시 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국내 제도를 통해 공시 의무화된 내용에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업 실무자들은 업무량만 증가했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외 기관의 평가 지표가 국내의 법제도나 기업 내외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수 있었다. 일례로, 이사회 사외이사 구성과 관련하여, 해외의 ESG 평가 지표에는 7년 혹은 8년 이상 연차의 사외이사 선임을 ESG 경영에서의 좋은 평가 등급의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한 사외이사(그룹사에서의 사외이사 기간까지 더해 9년까지)는 계속하여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⁶³⁾. 기업에서는 국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

63) 상법 시행령 제72조

므로, 사외이사 구성에 대한 평가 시에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해당 평가 기관이나 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1.3 수시로 바뀌는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ESG 경영 평가와 공시를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준들 내용과 구체적 지표들도 자주 업데이트 되고 매년 바뀌기도 하다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모두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또 적시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벅차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지 경영 공시 기준뿐 아니라 ESG 경영의 영역의 것으로 구분되는 법이나 제도(예를 들면 인권 실사법, 공급망실사법, 탄소국경세 등)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국내외적으로 수시로 바뀌고 새로 생기고 있다 보니, 이들에 대한 파악과 적용까지 해야 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2.1.4 산업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

산업별로 중요한 지표뿐 아니라 강화 혹은 집중하여야 할 ESG의 요소 또는 지향점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준들도 많고 ESG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사업 특성 혹은 산업에 적합한 기준이나 지표를 선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ESG 경영 보고 기준의 경우 SASB는 77개 산업별로 구분하여 공시 지표를 정하고 있는 반면, GRI는 공통 기준의 지표가 200여개가 넘는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가장 효율적이고도 해당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한 공시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Scope 3에 대한 공시를 위해 어느 범위까지 관련 데이터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지⁶⁴⁾, 조직의 경계 설정(즉, 공시의 대상이 되는 경영을 하는 기업이 해당 법인 자체만인 것인지, 계열사도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해야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등) 또한 산업 특성에 맞게 선택하라는 식의 자율성이 높은 지표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해당 지표에 맞는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선택해서 공시하여야 할 지 확신하기 어려운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표와 범위의 공시 내용의 선정은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의되고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기업의

64) Scope3는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것인 동시에, scope 1과 2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한다.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공급망 전반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검증 및 관리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scope 3에 관한 공시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자체적인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공시된 내용은 기업마다 차이가 많고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 경영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기업을 다른 기업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SG 경영 지표로서의 ESG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지표를 선정한 이후에도 해당 지표의 KPI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산업 특성의 영향으로 지표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수주 산업의 경우 차년도 KPI 예측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목표 수치를 정하면 좋을지 어렵다고 하였으며, 산업 특성상 여성 임직원의 비중이 낮은 일부 제조업의 경우(건설, 철강 등) 여성 임직원 수 또는 비율에 대한 목표치 설정을 어려워하였다. ESG 경영 도입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업계의 경우, 관련한 사례가 누적될 만큼 많지 않아 참고할 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2.1.5 기업에 유리한 선택적 공시 및 ESG 워싱⁶⁵⁾의 위험성

공시 기준 및 지표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산업과 기업 특성을 잘 반영한 효율적 공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경영 결과만 보이도록 지표나 단위 등을 선택할 수 있어 단점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이 인터뷰를 통해 여러번 지적되었다.

가장 단순하게는 산업 재해, 폐기물이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부정적인 데이터나 정성적 사항은 처음부터 아예 공시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거나, 동일한 공시 사항에 대해서도 절대값 또는 비율 중에서 덜 부정적으로 보이거나 기업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부정적 지표의 경우 숫자가 작은) 쪽으로 선택해서 공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시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조직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은 범위를 설정하거나, 다르거나 잘못 설정된 범위를 대상으로 공시하는 문제점들도 있었다. 공시 혹은 평가의 기준이나 지표가 애매한 경우, 특히 정성적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준의 경우에는 기준을 해석함에서도 달리 볼 여지가 많은 바, 기준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ESG 워싱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65) ESG Washing. 그린워싱(Green Washing)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외부에는 마치 ESG경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2.2 인식 관련

2.2.1 업무 이해관계자들의 ESG 경영 관련 이해도 부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어려움(48%)

실제로 아직도 적지 않은 기업들은 ESG 경영이 기업의 사회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과 대동소이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나 둘 사이에 정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발간되어 있는 기업들의 ESG경영보고서(혹은 지속가능보고서 등 동일 취지의 공시나 기타 보고 포함)에서, 기업의 ‘좋은’ 또는 ‘선한’ 활동으로 보일 만한 내용이라면 모두 ESG 경영의 범위에 포함하고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부터 통상적으로 해 온 경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ESG 경영에 따라 새롭게 하게 되었다거나, 특별히 지속가능성과의 관련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에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ESG 경영으로 소개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⁶⁶⁾. 특히 이는 그린워싱 혹은 ESG워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Venture Capital(이하 “VC”) 등의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투자운용사의 ESG 정책이 투자자의 ESG에 대한 의도 혹은 철학과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투자 대상의 선정부터 최종적인 투자금 회수 단계까지 ESG 정책 혹은 경영 등의 기준이 고루 반영되는 것이 아닌, 투자 결정 전 단계의 실사 단계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 정도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UN PRI, 2021년 VC에서의 ESG 투자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UN PRI의 상기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VC의 ESG 투자(ESG 요소를 내부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이며, VC 또는 스타트업의 사업 수행 또는 경영 방식이 ESG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는 ESG에 대한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 비해서 사회적(S) 측면이나 거버넌스(G) 측면이 부각되는 곳으로 투자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측면 중에서도 다양성과 포용 이슈(DEI, 즉 Diversity, Equity, Inclusion)와 관련한 투자가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66) 예를 들어, 국내의 한 IT 서비스 대기업의 ESG경영 보고서에서는, 고객의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수리하는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였다는 점 및 청소년 전용 대출 핀테크 상품을 출시하여 청소년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을 ESG 경영으로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및 청소년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여 ‘S(사회)’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영 활동 혹은 상품 개발로서 ESG경영이라고 특별히 소개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투자자들의 공급망과 인권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고, 거버넌스의 경우에도 이사회와 관련한 관심이 위주인 관계로, 부패방지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가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 내에서 ESG 실무 부서 외의 부서나 경영진 등의 ESG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ESG 관련 업무 지원에 대한 적극성은 낮은 경우가 많음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투자업계의 경우, ESG 경영에 대응하는 것이 당장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존재하며 일부 경영진은 ESG 부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ESG 경영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유관 부서(예를 들어 환경 관련)에 있는 인터뷰이의 경우, ESG 경영에 대해 관심은 많으나 ESG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목표의 공유 없이 그저 ESG팀에서 시키는 대로(데이터 수집 등)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점차 흥미를 잃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탈석탄 선언을 한 기업의 경우, 석탄 관련 산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천연가스 등 다른 화석연료가 포함된 사업은 여전히 주력 사업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사가 먼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기업 내부에서 먼저 ESG 이슈를 언급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 관련 이슈로 해외에서 시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안이 심각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이를 본인들 기업의 ESG경영과 연계하여 생각하는 공감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여전히 직접적인 매출액 혹은 수익률이 기업 경영에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2.2.2 ESG·지속가능성 개념의 모호성 및 그에 대한 개인·집단간의 인식 차이(36%)

기존의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도구였던 재무 공시와는 달리, ESG 경영의 평가와 공시는 비재무적인, 나아가서는 인문사회적인 요소,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의 관계 또는 그와 관련한 문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ESG라는 틀 안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재무적인 요소를 완전히 정형화되고 통일된 프레임 안에서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설령 그러한 프레임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개개의 기업의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얼마나 정확히 대변해 줄 수 있을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은 상기의 “2.1 공시 및 전략 관련”에서 언급된 사항과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ESG 평가와 공시 기준과 지표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SG 경영 활동이라고 표현 내지는 공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괄적인 명확화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ESG에 대한 공통된 전제나 정의가 없다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아직도 적지 않은 기업들은 ESG 경영이 기업의 사회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과 대동소이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나 둘 사이에 정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뷰이들 간에도, 좀 더 엄밀한 시각에서 ESG 경영을 보는 실무자와 그렇지 않은 실무자 간의 차이가 있었다. 실무자 간에도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바, 개인 간의 편차, 나이가 부서, 조직 혹은 업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투자자, 투자처(기업), 경영자, 직원, 일반 이해관계자 등의 각 입장에서 보는 지속가능성 혹은 ESG경영의 개념과 범위 역시 조금씩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ESG경영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자체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느껴지게 할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는 ESG 실무자의 입장뿐 아니라 정보 수요자에게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정보라고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하여, ESG 혹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공통된 전제나 정의가 없다(응답자의 21%가 문제로 지적함)는 점도 이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비슷한 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인다.

2.2.3 ESG 전문가에 대한 인식

위 2.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직 내부의 비 ESG 실무자의 ESG에 대한 낮은 인식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조직 내의 ESG 실무자나 외부 컨설턴트 등 소위 ESG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ESG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ESG 전문성이 과대 포장된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ESG 전문가가 부족하고, 나이가 ESG 전문가 자체에 대한 정의나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나 법무법인에 있는 ESG팀들의 전문성이 특별히 더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형 컨설팅 회사 혹은 대형 법무법인의 규모나 이미지 때문에, 경영진이 그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2.4 보고와 평가에만 대응하는 문제

서면 설문지 및 인터뷰 질문지에 질의 및 선택지로서 직접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적지 않은 인터뷰 응답자들이 현재 실무 현장에서는 ESG 경영의 내재화보다는 ESG 경영의 공시와 평가 자체가 더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ESG 경영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 혹은 기업의 비전과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나 운영 방식에 ESG의 요소를 적극 반영하는 등의 ESG 경영의 내재화와 같은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보다는, ESG 평가에 잘 대응하여 좋은 등급을 받고, 그러한 좋은 결과를 공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ESG 경영의 내재화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하며 단기間に 성과를 바라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ESG 평가와 공시의 궁극적 목적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의 전 과정을 포함한 경영 전반에 ESG의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당장의 좋은 평가 등급을 받는 것만을 염두에 두면 부정확한 혹은 임의의 데이터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그에 따른 신뢰성이 낮은 공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ESG 경영을 위한 공시와 평가, 특히 중요도(materiality) 평가의 개념과 체계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ESG 경영 평가, 공시와 그를 기반으로 한 투자는 ESG 경영이 지향한다고 하는 지속가능성과는 사실은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결국은 투자 유치와 그를 통한 사업 확대와 이윤 증대를 위해 개발된 ESG 평가와 공시 모델과 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ESG 경영 패러다임과 그 도입은 현재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된 기후변화, 불평등 등의 사회 문제의 개선에 있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변화의 모습이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3 데이터 관련

2.3.1 공시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측정 및 수집과 관련한 어려움(48%)

현재 많은 기업 등의 조직에서는 ESG 경영 평가와 공시와 관련한 데이터의 관리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데이터의 명확한 정의나 산출식이 부재하여 데이터 취합 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취합 작업이 수차례에서 수십차례 반복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평가·공시 항목에 대한 데이터 취합을 유관 부서에 요청하는 경우, 요청 시마다 전달되는 데이터가 달라져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에 공시되는 데이터 수치나 정보가 최종 보고서 발간 시까지 여러 번 변경되거나, 그렇게 변경하였음에도 보고서 발간 후에 데이터 변경이나 오류가 발견되어 다음 해에 정정 공시를 하기도 하는 사례를 알 수 있었다.

한편, 데이터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데이터의 모수(母數)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측정해야 할 지, 데이터 수집과 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변수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모호하게 또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 산출과 관련 일반적으로 특정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에 관계된 전력 사용량 등에 대한 원천 데이터의 집계는 가능하지만, 탄소배출량이나 탄소발자국 등 환경 데이터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데이터의 적절한 측정이나 산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공시 등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담당자를 통해 개별 데이터 파일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시할 데이터나 정보가 따로 관리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아예 예상치를 사용해 버리거나 비율로 일괄 계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잘 관리되지 않아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정확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증빙 자료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제3자 검증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검증을 맡은 기관의 검증 수준이 기관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3자 검증을 통해 보고서 상의 모든 오류를 찾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직간 위계 또는 구조 문제 등으로 인해 계열사나 해외사업장 등 현장의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협력사의 데이터의 경우 최대한 집계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특히 많은 경우 대기업의 협력사는 중소·중견기업인 경우가 많아 데이터를 제공할 여건이나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요청하여도 협력사의 데이터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기업 또는 고객사의 이러한 지속적인 요청이 경영 간섭, 갑질 등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의 공정거래 사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감한 데이터는 협력사에게 요청하지 않기도 하고, 결국 공시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2.4 평가 관련

2.4.1 다양한 ESG 경영 평가 기준들 간의 내용의 상이함(46%)

이미 살펴본 문제점과 유사한 시각으로서,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도 어떠한 평가 기관 및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 혹은 평가 등급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는 평가기관마다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 비중을 달리 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ESG 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경영 활동의 영역 자체가 매우 넓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투자처를 검토 혹은 검증할 수 없도록 혼란을 줄 위험이 있고, ESG 경영 정보 공시를 하는 투자처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ESG 경영 및 ESG 정보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많은 서면 질문지 응답자들이 이를 평가 관련 애로사항으로서 선택했던 동시에, 평가 기준을 통일하거나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면 심화 인터뷰에서는 적지 않게 지적되었다. 각 평가 기관마다의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으므로, 산업별, 기업별 특색에 맞게 평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인 바, 획일적인 기준 하에서는 잘 드러낼 수 없었던 기업 고유의 특색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 그를 통해 제대로 평가받아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기준의 일원화는 ESG 경영 평가 방법론의 발전을 막아 건전한 ESG 평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2.4.2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관한 어려움(46%)

상기의 문제점과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각기 다른 평가 기관과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결과 및 등급이 달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동일한 투자처에 대한 평가임에도, 평가 결과가 기관에 따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지 않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었다. 특정 평가 기관에서의 ESG 경영 평가 결과는 최상위 등급에 속하였지만, 다른 평가 기관에서는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면서, 평가기관을 통한 ESG 경영 평가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추후 ESG 경영 공시는 외부의 평가 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회사 자체의 기준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Tesla는 지난 2021년 DJSI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ESG 경영 평가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결과 역시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으며, 이로 인해 ESG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ESG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실무자들은 평가의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들을 비교적 많이 제시하였다. 동일한 ESG 경영 내용에 대해, 최초 평가를 받았을 때와 이후 기업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제공했을 때의 평가 등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동일한 사항에 대해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나 배경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일부 평가 기관은 평가를 위한 ESG 경영 데이터 수집을 일반에 공개된 정보가 아닌, 기업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은 데이터나 설문 응답을 통해서 하고, 이후 기업의 피드백을 받는 평가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기업들로부터 직접 데이터나 피드백을 받으면 당연히 데이터 관리나 피드백 등에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4.3 ESG 평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

ESG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사실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적용의 문제라는 지적들도 있었다. ESG 평가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인 바, ESG 평가는 업종별로 이루어지는 상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대 평가라고 기업들이 오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ESG 경영 평가에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거나 특별히 ESG 평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없어서 이에 신경쓰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ESG 경영 평가 결과와 실제 기업 경영의 건전성이나 수익성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한국 ESG 평가 시장의 문제라고 지적된 점으로서, 평가 결과를 마치 시험 성적이나 등수와 같이 인식하고, 소위 말하는 ‘줄 세우기’라는 관점에서 ESG 경영 평가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해외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SG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 대응과 개선에 활용하려는 반면, 한국은 등급 혹은 등수 자체에 집중하여 기업들 간에 비교 및 경쟁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평가 기관, 컨설팅 회사 및 언론사들까지 있어서 ESG 경영의 본질을 해친다는 지적이었다.

2.5 인력 부족

2.5.1 ESG 업무 역량 및 인력의 부족(17%)

ESG 업무를 담당할 인력 혹은 관련 비용의 부족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등의 고객사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ESG 평가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요청한 고객사나 상대 측으로부터 실질적으로 ESG 업무에 도움이 될 정도의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ESG 경영 항목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

지 못하고 있거나, ESG 업무를 담당할 인력 배정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대기업 등의 고객사들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중소기업에게 권하지만, 중소기업 내에서는 이를 담당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여 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부로부터의 컨설팅 바우처 제공, 대기업에서의 업무 협조 제공,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 실정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정부가 지원하는 ESG 컨설팅 바우처는 대략 그 금액이 2,000~3,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컨설팅 회사에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ESG 경영 및 공시 자문에 대가는 동 금액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에 이르기도 한다.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용역 계약 금액에 따라 투입 인력을 구성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ESG 업무에 대한 예산 혹은 투자 규모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받는 컨설팅의 양이나 질은 대기업에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ESG 업무 인력 혹은 역량의 차이는 현재도 심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더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30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앞으로 공급망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더 많아지는 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ESG 경영 평가를 받아도 그에 대응할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차이가 크게 날 것이고 이는 구조적으로 좁혀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SG 경영 평가 대응은 이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자본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 ESG 경영의 모습과는 다른 평가 결과가 도출되고 또 그대로 공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중소기업에게는 불공정한 결과(투자 유치의 어려움, 고객사·협력사의 요구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거래 지속의 어려움 등)를 가져올 수 있다. 중대형 VC와 소형 VC 운용사 간에 ESG 투자를 위한 평가 작업을 담당할 자원과 역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동일한 연장선 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6 기타

그 외 서면 설문지 상의 답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면 심화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점들은 아래와 같다.

-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요자 간 ESG에 대한 관심도의 불균형(생산자의 관심도보다 수요자의 관심도가 높다) (30%)
- 본인의 ESG 관련 전문성 부족(23%)
- ESG 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 기회 및 지원 부족(21%)

3 대책 방안 및 제언

상기 “2. ESG 실무상의 어려움”에서 검토한 점에 대하여, 심화 인터뷰 및 자체 연구를 통해 고려 가능한 제도적 개선이나 지원과 관련한 대책 및 제언은 아래와 같다⁶⁷⁾. 서면 설문지에서는 “업무에 도움이 될 제도적 개선이나 지원”이라는 문항으로 질문한 내용이다.

“2. ESG 실무상의 어려움”과 같이, 심화 인터뷰를 통해서 서면 설문지의 객관식 항목에서는 미처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특히 ‘공시 및 평가 기준 관련’ 분야의 경우, 설문에서는 높은 비율로 선택, 응답된 아래의 3.2.1 ~ 3.2.4의 항목들이 인터뷰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설문지의 질문 및 선택지 항목들이 연구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고, 응답자들의 설문 답변 시에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선택되었으나 심화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3.1 해외 가이드라인 등의 국문 제공

해외 주요 ESG 관련 가이드라인의 공식 한글 번역본 제공(73%)

설문 응답자와 인터뷰이 대다수는 본인들이 재직 중인 기업 혹은 고객사를 위한 ESG 경영 공시와 관련하여 해외의 ESG 평가 기관 혹은 해외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투자자, 특히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ESG 공시 및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67) “2. ESG 실무상의 어려움”과 동일하게, 본 내용은 ESG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총 응답자 52명)과 대면 심화 인터뷰(총 18명)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아래 답변 항목들은 우선적으로 유사한 항목끼리 묶고 설문 응답자들이 선택한 비율이 높은 항목이 있는 순서대로 기재하였으며, 해당 비율의 수치를 병기하였다. 각 설문 항목마다 사전 연구와 심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설문 항목에 없던 내용이 심화 인터뷰를 통해 언급된 경우 비슷한 설문 항목 뒤에 함께 기재하였다.

사용한 기업의 ESG 평가 결과 및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며, 국내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정도로 확립되었거나 신뢰를 얻고 있는 기준이나 평가 기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약 3여년 전까지만 해도 ESG 경영의 개념조차 잘 알지 못했다는 인터뷰이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ESG 실무자들이 해외의 관련 기준이나 지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에 따라 관련 해외 평가기관의 지표나 ESG 경영 정보 공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계속하여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수정되고 그 분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해외 기관에서 작성된 내용들을 파악·숙지하여 실무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국내 실무자를 위한 한글 번역본이 그에 맞게 준비되어 제공된다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서 GRI의 국문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2016년 버전에 대한 번역본으로, 개정된 GRI 2021년 버전에 대해서는 번역본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시 항목에 한해서만 번역되어 있고, 그 밖의 용어의 뜻이나 공시 항목에 대한 취지, 목적이나 배경, 권고 사항, 가이드نس 등에 대해서는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바, 2021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공시 요건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는 ISSB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GRI 사례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단순 번역본 외에도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서나 설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밖에도 UNGC⁶⁸⁾ 한국 지부에서는 UNGC가 발행한 영문 가이드라인의 국문 번역본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고,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 정보 공시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S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국문 번역본⁶⁹⁾이 추가 공개된 바도 있다.

68) UN Global Compact.

69) “S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추가 공개” (금융위원회, 2023)

3.2 공시 및 평가 기준 관련

3.2.1 글로벌 공시 혹은 평가 기준과 국내법 상의 관련 기준이 대체로 일치하도록 조정 (55%)

국내법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미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시를 위한 준비 및 여건 마련이 되어 있을 것인 바, 데이터 측정과 수집을 포함한 기타 공시 및 평가 작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면 설문지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동 항목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으로 선택한 것과 달리, 심화 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개선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공시와 평가 기준 자체가 많고, 국내외의 고객사들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준들 역시 각기 차이가 있으며, 이미 통용되고 있는 해외 기준들이 국내법과 일치되기에는 용어나 법적 기준의 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글로벌 기준과 국내법을 각각 충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2.2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우선 순위로 볼 사항들을 정하고 이를 실무자에 배포(44%)

ESG 경영 혹은 더 구체적으로 ESG 평가 및 공시 업무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은 매우 폭넓음과 동시에 관련하여 여러 시각과 입장이 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지, 또는 중요한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시나 기업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한 업계 전반의 통일된 컨센서스 혹은 의견 수렴이 있다고는 아직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하여 법적인 형태로 확실한 강제성 등이 부과된 사항도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명확하고 확실한 ESG 경영 및 관련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 준다면, 국내 기업들은 이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등의 해외 평가기관과의 평가 대응 업무 시에 활용할 수 있다. 즉, 많은 기준이나 지표와 평가 대응에 일일이 자원을 투입하는 대신, 정부 가이드라인 단일 지표만 활용하여 가장 시급하고 주요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기업이 인지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자원 투입을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해외 기관의 평가 지표가 국내의 법제도나 기업 내외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수 있었다. 일례로, 이사회 사외이사 구성과 관련하여, 해외 평가지표에는 7년 혹은 8년 이상 연차의 사외이사 선임은 좋은 등급의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

을 초과한 사외이사(그룹사에서의 사외이사 기간까지 더해 9년까지)는 계속하여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⁷⁰⁾. 이러한 국내 법규와 해외 평가 기준 사이의 간극 외에도, 해외 평가 기준(특히 유럽 위주의 서구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성평등 혹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제도 등은 사실 한국에서는 특정 기업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한국 전반의 문화와 가치관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ESG 경영 문제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개개의 기업이 다수의 ESG 평가 기관의 질문이나 평가 절차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대응 혹은 한국 기업의 입장 정리(예를 들면 한국의 법, 제도, 산업 환경, 문화 등에 관한 설명 제공 등)를 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기업과 산업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요구사항의 의도에 우려를 표명한 의견들도 있었다.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고하기 쉽고 힘들이지 않고 평가 결과를 좋게 보이는 지표들을 추려 달라는 요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외이사 건처럼 법적으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 해외 기준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으니, 기업 현실에 맞게 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것은 ESG 경영 공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우선 순위로 볼 사항들도 기업들마다 다르기에 정부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재정해서 배포하는 것이 ESG 공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혹은 실제로 효율적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3.2.3 현실적인 공시 지표의 개발(40%)

실무 수행에 너무 부담이 되어 ESG 공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목표와 실제 공시 지표의 내용 간의 간극이 너무 크지 않은 현실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ESG 경영 및 공시·평가를 위해서는 기업과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글로벌 수준에서 공시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3.2.4 지표 방법론 또는 해당 로직 자체가 폭넓게 공개되어 각 기업 입장에 맞게 정보 수요자가 해당 공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34%)

정보 수요자가 개별 기업들의 ESG 경영 성과와 현황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해당 평가 결과

70) 상법 시행령 제72조

(점수, 등급 등)를 도출하게 된 데이터와 평가 방법론, 계산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평가 방법론을 공개하는 것이 평가기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3.2.5 공시 의무화 및 ESG 데이터 베이스의 공개

서면 설문지 내용으로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상기에서 논의한 “3.2 공시 및 평가 기준 관련”에서의 사항들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및 ESG 데이터의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이 많았다. 공시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고, 산업별로도 표준화가 되어 Scope 3 배출량 가이드라인도 정해지면 공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대응이 수월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공시 기준 및 지표가 확정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 유리한 데이터나 단위를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ESG 위상 위험도 줄어든다. 표준화된 데이터가 공시됨에 따라 다른 기업들간에 비교도 용이해지며, 활용되는 데이터와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평가 결과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하고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의 SEC 기후공시, 유럽의 CSRD,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의 ISSB의 개발 및 도입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ESG 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미국 SEC 기후공시, 유럽 CSRD 및 ISSB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V. 해외 사례 및 관련 주요 법제”에서의 각 상세 설명 참조).

한국의 경우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ESG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공시된 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 의무 또한 특별히 부과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향후 도입될 미국의 SEC 기후공시와 유럽의 CSRD는 공시해야 할 지표들이 보다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제 3자로부터 검증받을 의무도 있다.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진출해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SEC와 CSRD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국내에서의 공시 의무 자체가 강화되지는 않더라도 해외 규제에 맞춰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ISSB가 확정되면 국제 기준인만큼 우리나라 또한 이를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만큼 아직 논의 중이다.

특히 회계연도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CSRD의 경우, ESG 공시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과 신뢰 가능성(reliability)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위해 표준화

된 보고 기준인 ESRS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신뢰가능성을 위해 제 3자 검증을 의무화하였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V. 해외 사례 및 관련 주요 법제”를 참고).

3.3 데이터 관련

3.3.1 ESG 관련 데이터 측정, 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19%)

ESG 데이터의 수집이나 관리에 있어서는 수집 설비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자체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기업들의 경우 이를 외부 업체에 용역 등으로 위탁해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나, 데이터의 측정 설비 등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비용 보조 등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었다.

3.3.2 ESG 데이터 관리 툴의 보급 및 교육

데이터 관리를 위한 비용 보조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를 위한 툴이나 템플릿이 개발되어 보급되는 것,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실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되었다.

3.4 중소기업 관련

3.4.1 ESG 업무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25%)

& 3.4.2 중소기업에 대한 ESG 업무 지원(21%)

앞서 ‘IV. 2. ESG 실무상의 어려움’ 중 ‘ESG 업무를 할 역량 및 인력의 부족’ 항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은 ESG 업무에 있어서 대기업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 비용이나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미 컨설팅 비용이나 ESG 플랫폼 자가진단, 인벤토리 구축 등 현재 일부 정부의 지원이 있고 더 확장할 예정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 금액이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앞서 살펴본 ‘III. 1.3.4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ESG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에는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공시 방법이나 형식에 대해서까지는 언급이 없다. 보고서를 발간해서 홈페이지

지 등에 게시를 해야 하는 경우, 일관된 공시 양식, 표준 템플릿이나 예시들 또는 엑셀 톨과 같은 간편한 공시 모델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 내의 협력사이고,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또는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ESG 공시 및 평가에 협조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즉, 중소기업이 자발적, 자체적인 시작으로 ESG공시 실무를 하기보다는,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따라서 정부뿐 아니라 대기업들 역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3.5 교육 관련

3.5.1 ESG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전사 교육(19%)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ESG 관련 사내 교육이 아예 없거나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SG 실무를 수행하는 팀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ESG 경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이해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ESG 개념과 미션 등에 대한 전사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ESG 데이터 관리 등 실무적인 측면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4 ESG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조직 내) 지원 사항

다른 모든 업무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위한 업무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경영진 및 타 부서 협조가 필요하다.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과 관련, 서면 설문과 대면 심화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⁷¹⁾.

4.1 예산(55.8%)

설문과 인터뷰 모두에서 경영진 및 타 부서 협조를 얻기 위해 ESG 실무진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꼽혔다. 컨설팅이나 인증, 데이터 시스템 및 인벤토리 구축 등 ESG 관련하여 예산이 필요한 일

71) 설문에서는 “본인의 업무 혹은 ESG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임원, 경영진 그리고 타 부서들로부터 협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질의로 조사함

이 많고, 다음 필요한 점으로 꼽힌 인력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ESG 실무 부서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다 보니, 경영진 혹은 기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지원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ESG 업무는 회사 전체의 장기적인 성과에 기여하는 업무인 만큼 단기적 관점 하의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예산이 더 있다면 당장의 보고서 작성이나 평가 대응 외에도 더 폭넓은 ESG 관련 사업이나 활동으로 ESG 경영 관련 업무의 범위를 넓히면서 ESG 경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4.2 인력(53.8%)

ESG와 관련한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는 오래 되지 않은 반면,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큰 관심과 빠른 도입으로 인하여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다. 대체적으로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G 경영 관련 업무는 계속해서 많아지는 추세라서, 기업 내 조직에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인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시각이었다. 조직 내에서는 현재 ESG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ESG 경영 전반 혹은 관련한 각 세부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치가 충분한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양성한 이후,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ESG 실무를 전파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4.3 사내 조직구조 개선(51.9%)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권한이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체계나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실제로 ESG 관련 부서가 사장 직속이거나 CEO 또는 임원진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는 경우, ESG 관련 부서의 권한이 많고 ESG 업무 수행이 보다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관련 정책이나 지침을 실제로 조직 내에서 실천하기 위해, ESG 관련 목표와 성과가 KPI와 임원평가 등에 반영되면 조직에서 ESG 경영과 업무 수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개편뿐 아니라 CEO 및 전반적인 경영진 및 이사회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다는 부가적인 의견도 있었다. 경영진 및 이사회 내부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해외의 법 제도가 외부적 압박의 역할을 하여, 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4.4 전사교육(38.5%)

앞서 '3. 대책 방안 및 제언'의 '3.5 교육 관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는 ESG에 관련한 충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되었다. ESG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직 전체가 동일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4.5 관련 법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32.7%)

인식의 전환이 내부적,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한 외부적 요인을 통해 당위성이 주어지면, 인식의 전환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 나아가 ESG 경영 공시나 경영 평가에 직접 관련된 법 등의 제도를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보다는, 사회 전반의 법 제도가 ESG 혹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이해관계자 관리와 위기 관리가 진정한 ESG 경영이라고 본다면 굳이 'ESG' 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명칭의 법이나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인권이나 환경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구제를 위한 관련 법 집행 등, 기존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면 ESG 출연의 배경이 된 문제점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의 의견이었다.

4.6 시간

현재 ESG 분야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들은 결국 더 시간이 지나면 자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ESG 경영 및 관련 실무를 전문으로 한 인력들이 많아지고, 또 그들 중 일부가 임원이 될 만큼의 시간이 되면 ESG 경영의 중요성과 근간도 더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5 ESG 경영의 의미 및 ESG에 대한 인식

서면 설문과 대면 심화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ESG 경영에 대한 의견과 ESG에 대한 인식은 아래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ESG 경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선한 형태의 비즈니스로서 여러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면서 사업의 수익률 증가 혹은 사업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더라도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이러한 가치 창출이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경영을 ESG 경영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ESG 실무자들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지만 경영진이나 일반 대중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 답변도 있었다.

또한 북미나 유럽처럼 ESG를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해외 주요 투자자들인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많은 경우 단기적 투자를 지양하고 장기적 투자 지향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기관들을 시작으로 점차 많은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중요 리스크로 보고 관리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하여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의견이었다.

현실적으로 ESG 경영 및 관련 실무는 외부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해서 이에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많은 기업들, 특히 상장사나 금융업계에서는 국내외의 법적 혹은 업계 내에서의 규제와 고객사 및 투자자의 ESG 대응 관련 요청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여 그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내에 ESG 부서를 신설하고 ESG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시작된 계기와 목적에 맞게 외부의 요구에 가장 최적화된 대응을 위한 방향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상장사 역시, 특히 금융기관들의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 등 감독기관이나 규제기관에서의 많은 ESG 관련 정책, 규제, 요청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금융기관이 아닌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국내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해외에 고객사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ESG 관련 규제와 ini셔티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상장사와 다르지 않게 적극적으로 ESG 경영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기업 조직 및 내부 운영의 측면에서, ESG 경영이나 ESG 실무 부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일이 많고 타 부서나 팀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부서라는 인식이 대다수였다. ESG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타 부서에 ESG 관련 데이터나 KPI 설정 요청 등 요구하는 것이 많고, ESG와 관련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전사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ESG 경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모든 업무를 ESG 부서에서 전담하고 다른 부서들의 경우 요청을 받게 되면 ESG 부서를 ‘도와준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SG 경영은 어느 한 부서나 팀의 노력으로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ESG 실

무를 하지 않는 구성원들은 개념적으로만 ESG를 알고 단순히 요청받은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보인다. ESG 실무 부서만 ESG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모든 부서와 구성원의 업무에 ESG 요소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ESG 실무자들과 경영진 및 실무자와 일반 대중·언론 미디어 사이에서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ESG 실무자들의 경우, 대다수는 ESG 경영 혹은 관련 대응의 필요성과 그 기저의 지속가능성 추구 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반면, 기업의 임원진들은 그 정도의 명확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 대중들은 ESG를 ‘착한 일’ 또는 사회공헌활동의 의미 이상으로는 보지 않거나, 일시적인 트렌드일 뿐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특히 일부 신문사 등 언론사들이 ESG 경영을 지나치게 비즈니스 아이템으로만 접근하고 그들의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G 경영은 경영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따라서 장기간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몇 개월 혹은 며칠 만에 끝내는 ESG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우수 ESG 경영 기업 시상식 등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만들어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및 시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은 기사를 쓴다거나 홍보를 소홀히 해 주는 식의 불이익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언론사들의 행위가 ESG는 일시적 트렌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투자업계에서는 기득권 층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ESG 대항 담론 또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ESG 경영이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젊은 직원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V. 해외 사례 및 관련 주요 법제

특정 분야 혹은 기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과 한국 정부가 ESG 경영에 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도입 및 정착화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전부터이다. 그에 반해, 이보다 앞서서 ESG 경영 혹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관련 해외 사례들을 소개한다⁷²⁾.

[의무 공시 기준 및 관련 제도]

1 SEC 기후 공시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기후공시는 2021년 미국 하원에서 ESG 공시 표준화 법안(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의 통과로 도입되었다. SEC 기후공시 규칙안은 TCFD 및 GHG 프로토콜에 따라 지배구조, 기후 관련 활동 영향, 기후 관련 위험 관리, 온실가스 배출 지표(Scope 1, Scope 2, 총 배출량), 특정 조건 하에서의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4월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⁷³⁾. 현재는 환경(E) 부문에 대한 공개 의무만 부과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사회(S) 영역에 대한 공개도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72) “企業のESG対応をめぐる課題”, (Thomson Reuters Institute, 2022) 참조

7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ope 3 공시를 위해서는 기업의 통제 밖의 공급망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배출 전반에 대해 측정 및 검증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 증가 외에도, 배출 범위와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특정이나 검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시 의무 준수와 관련한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2 CSRD - ESRS

2022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회계연도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ESG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ESRS는 일반 원칙 2가지, 환경 기준 5가지(기후변화, 오염, 수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사회 기준 4가지(자체 내부 인력, 가치사슬 내의 구성원들,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소비자, 최종사용자), 거버넌스 기준 1가지(비즈니스 수행)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산업별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CSRD는 현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잇는 지침으로 NFRD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NFRD 지침에 따라 비재무적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해 왔다. NFRD 지침에 따라 공시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할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가 적고(모기업이 EU 역내에 있는 상장기업만 NFRD의 적용을 받음), 공시 기준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GRI, SASB 등에서 선택 가능), 공시 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을 의무도 없다. EU는 NFRD의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별 ESG 경영 현황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바, 새로운 지침인 CSRD를 통해서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비교가능성과 공시 신뢰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대상 기업들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시 기준인 ESRS를 따라야 하며, 공시의 신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것이 의무화된다(한정적 인증, 즉 limited assurance - ISAE 3000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검증이 되어야 함).

CSRD는 공시 의무의 적용 대상 기업 또한 대폭 확대되어, 모기업이 EU 내에 있지 않은 기업이라도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1차적으로 회계연도 2024년부터는 규모가 큰 EU 내 공익법인들이 CSRD의 적용 대상이 되며, 회계연도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들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회계연도 2028년부터는 EU 역외에 모기업이 있더라도 EU 내에서 사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기업은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약간 낮춰진 ESRS 기준을 따라 ESG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EU역내에 자회사나 지사가 있다면 해당 자회사나 지사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 회계연도 2024년 또는 2026년부터 CSRD에 의해 ESRS 기준을 따라 ESG 경영 공시(지속가능경영 보고)를 해야 하고, 해당 기업의 모기업도 회계연도 2028년부터 (약간 낮춰진) ESRS 기준에 맞추어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하여야 한다.

ESRS는 특히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⁷⁴⁾를 도입한 기준으로, 대상으로 하는 이해관계자가 넓고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한 SEC 기후공시와 아래 소개될 ISSB 공시 기준은 ESG 이슈가 조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중점으로 보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중 중대성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업 등의 조직이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으로서 양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하게 한다. 따라서 중대성 평가를 하여 보고할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SEC 기후공시나 ISSB 공시 기준에 비하여 공시지표의 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특징적인 바, 이는 자발적 공시 기준인 GRI와 유사한 점이다.

3 ISSB 공시 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2022년 3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산하 기관인 국제 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ISSB의 공시 기준은 기후변화에 대한 TCFD 공시 기준을 지속가능성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의 측면에서 관련 재무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일반 공시 기준(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적 요구안⁷⁵⁾)과 기후 관련 공시 기준(S2,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⁷⁶⁾) 초안이 공개되어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중 최종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IFRS S1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시에 'SASB 기준 상의 공시 주제' 등을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고, IFRS S2에서는 SASB 기준으로부터 도출된 공시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등, IFRS 공시 기준의 상당 부분이 SA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등 다른 환경 영역 및 인권, 노동,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등의 사회, 거버넌스 영역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도 논의 중에 있다.

ISSB는 상기에서 살펴본 SEC 기후공시와 ESRS 기준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 공시 기준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자발적 공시 기준보다는 의무 공시 기준에 더 가까운 면이 있어 이 항목에

74) 중대성(materiality, 혹은 중요도)이란, 각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이슈나 요소를 뜻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정보가 중요할 지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나 이슈를 우선순위로 선별하는 방법 및 작업을 '중대성 평가'라고 한다. 이중 중대성은 외부의 ESG 요소로 인해 기업이 받는 영향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개념인 바, 이중 중대성 평가는 이와 같은 양 방향으로의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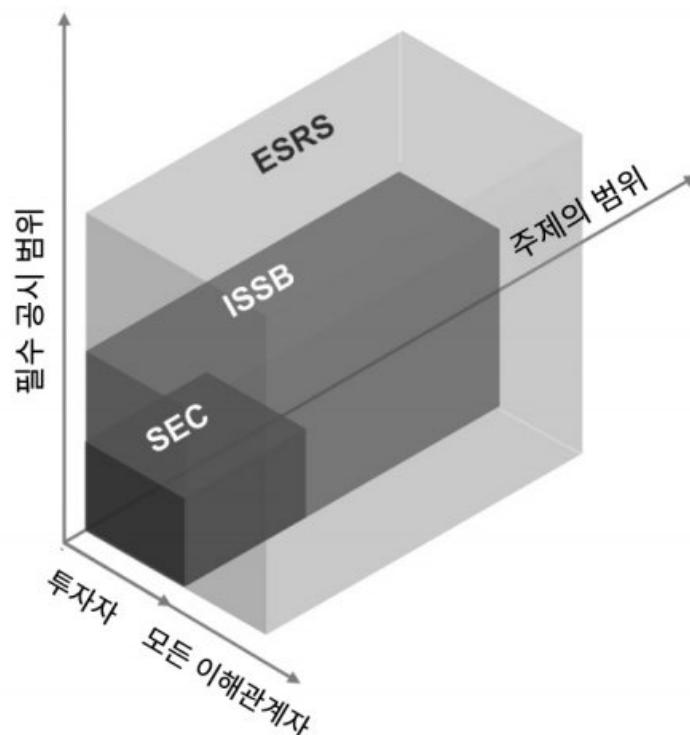
75)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76) Climate-related Disclosure

포함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회계 공시의 표준을 제정한 IFRS 재단이 ISSB 공시 기준을 작성하고 공개한다는 점에서, 또한 ISSB 공시 기준만으로 비재무적 요소(ESG) 공시와 회계 공시가 통합되어 글로벌 ESG 공시의 표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각 국가에 도입할지의 여부 및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의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현재 국내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제도 및 업계 내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호환 혹은 비교 가능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ISSB 기준으로 ESG 경영 공시를 하기로 한 기업이라면 2025년부터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공시하여야 하고(Scope 3 배출량 공시는 1년간 유예), 2026년부터는 기후변화 외의 다른 모든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도 공시하여야 한다⁷⁷⁾.

4 SEC, ESRS, ISSB의 비교

중요한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SEC 기후공시, ESRS 및 ISSB 공시 기준이 주요하게 논의되는 바, 이들의 특징을 비교하여 아래 그림 8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8] SEC, ISSB, ESRS의 특성 비교.

출처: KPMG International – Get ready for the next wave of ESG reporting

77) “ISSB, ESG 공시 첫 해인 ‘25년엔 기후공시만 의무화”, (ESG경제, 2023)

[표 3] SEC 기후공시, ISSB 공시 기준, ESRs의 특성 비교

	SEC	ISSB	ESRS
이해관계자	투자자	투자자	모든 이해관계자
공시 분야	기후변화	일반,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 관련 초안만 공개됨. + 이후 다른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내용 추가 예정	일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총 12개 분야 + 산업별 기준 추가 예정
감사 재무제표에 포함 여부	○ 주석으로 포함	X	X
연간 보고서 상에서의 공시 필수 여부	○	○ 위치는 유연하게 선택 가능	○ 경영 보고서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 여부	○	○	○
Scope 1 & 2 포함 여부	○	○	○
Scope 3 포함 여부	○ 중요하거나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	○
탄소배출 집약도	○ 전체배출 (scope 1 + 2) ÷ 순이익	X	○ 전체배출 (scope 1+2+3) ÷ 순이익
목표 공개 여부	목표 사용 시 공개 요	목표 사용 시 공개 요	파리협약에 기반, 공개 요

5 ESG 투자 상품 공시 규칙

2022년 5월, 미국 SEC는 ESG 펀드에 대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G 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개정안 및 투자회사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⁷⁸⁾.

ESG에 대한 요소가 고려된 펀드를 포함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ESG에 대한 공통된 공시 체계나 가이드스가 없어 실제로 해당 투자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된 ESG 투자가 맞는지, 어떻게 ESG 전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서 출발한 것인만큼, 증권거래소에 펀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펀드 유형별로 요구되는 ESG 관련 사항들을 공시할 것을 개정안

78) “SEC Proposes to Enhanced Disclosures by Certain Investment Advisers and Investment Companies about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vestment Practices”, (SEC, 2022)

에서 정하고 있다. ESG 요소의 반영 정도에 따라 통합 펀드(integration funds), ESG 중점 펀드(ESG-focused funds) 및 임팩트 펀드(impact funds)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펀드를 거래소에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한 공시 요소 역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좀 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거래소 미등록 투자자문사에게도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시 사항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펀드 유형에 따른 공시 사항 구분

펀드 유형	내용	공시할 사항
통합 펀드	일반적인 비(非)ESG 투자 상품에 ESG 요인을 통합한 형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ESG 요소를 고려하지만, 펀드 설계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펀드 성과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의 설계 절차와 방법론 • 투자 대상인 프로젝트 혹은 기업의 ESG 개선 여부 및 지원 내용
ESG 중점 펀드	하나 이상의 ESG 요소를 펀드 설계에 있어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펀드	ESG 심사 기준, 이행 전략, 이행 방안
임팩트 펀드	하나 이상의 특정 ESG 영향 혹은 전략(i.e. 재생에너지/물 사용 개선/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향상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팩트 창출 방법 및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 펀드 운용 시기별 성과 예측 및 방법 • 임팩트 창출에 대한 상쇄 요소 (상기 ESG 중점 펀드의 공시 내용 역시 포함)

투자자문사의 경우에는 상기의 공시사항에 더하여, 자문업 등록서류에 ESG 전략⁷⁹⁾, 기준 및 방법론⁸⁰⁾ 및 ESG 관련 의결권 대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⁸¹⁾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⁸²⁾.

한편, 이와 함께 이른바 “Names Rule”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대한 개정안도 SEC에서 발표되었다. 동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상품명에 투자 대상 혹은 투자 항목이 표시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ESG에 대한 큰 관심에 편승하여 펀드 상품명에

79) 투자자문사가 특정 ESG 요소 또는 요소들의 조합을 해당 펀드에 통합하는지 여부와 방법, 중요한 투자 전략 분석 방법에서 고려되는 ESG 요소

80) ESG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를 평가, 선택, 제외 시 사용되는 기준 및 방법론

81) 투자자문사가 고객 증권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 시에 하나 이상의 ESG 고려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 및 절차가 있는 경우, 어떠한 ESG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설명

82) “미국 SEC의 ESG 펀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Name rule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포커스, 2022-16호 (공경신, 2022)

clean(청정), environment(환경), impact(임팩트), responsible(책임), social(사회), sustain(지속가능) 혹은 ESG 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정안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린워싱 리스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바, 본 개정안에서는 펀드 자산의 80% 이상을 정해진 항목에 투자하는 펀드만이 해당 용어를 상품명에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공시 및 보고 의무 항목이 제시되어 있어, 투자를 결정한 펀드매니저 등 투자자문사가 해당 투자의 이유 등을 보고서 등에서 공개할 때에 미리 정해진 방식과 내용으로 하도록 되었다. 비상장 폐쇄형펀드의 경우에는 주주 투표 없이 펀드 상품명과 관련 요소에 펀드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기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ESG에 부합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과 결정을 통일되고 비교 가능한 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EU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과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하여, 지난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법·제도적 기반 환경 구축, 금융리스크 관리 개선, 금융시장 관행 개선의 3개 부문 하의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⁸³⁾. 이러한 행동계획의 일환으로서, 10개 항목 중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해당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 Sustainability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2019년에 발표하였고, 2021년부터 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 및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⁸⁴⁾.

SFDR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투자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인 바, 투자 자산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동 투자로 인한 사회 및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을 부

83) 법·제도적 기반 환경 구축: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구축, 녹색금융상품 식별 기준과 인증 제도 구축(Standards & Labels), 프로젝트 투자 촉진(Investment support), 투자 자문(Investment advice, 투자 적합성 평가 관련),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Sustainability benchmarks)
금융리스크 관리 개선: 신용평가(credit ratings),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Investment duties),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quirements)
금융시장 관행 개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Sustainability disclosures), 기업지배구조 촉진(Corporate governance)
EU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European Commission, 2018)

84) “지속가능금융의 의의와 통계 현황”(이상현, 2022)

과하는 제도이다. 즉,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운용이 지속가능성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 국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분야의 18개 지표를 공시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1단계 참조 기간(Reference Period)은 현재 모두 경과했고, 2023년 1월부터는 2단계인 기술적 세부규칙(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이 적용 중에 있다. RTS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할 때의 게시 위치와 방법, 정보 공시 목록,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 및 환경적·사회적 특성 달성을 측정하는 방법, 데이터 출처 및 처리 방법, 제한 사항 등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⁸⁵⁾.

SFDR에는 금융회사 단위의 공시사항과 판매상품 단위의 공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금융회사 단위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PASI, Principle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을 분석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 언급한 18개의 지표로 공시 사항이 구성되어 있다(기업 투자 시 적용되는 사회/환경 관련 지표 14개, 국가 및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지표 각 2개 아래 표5 참조). 이 외에도 PASI 식별 및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정책, PASI 완화 계획, 과거와의 비교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ASI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매상품 단위의 공시와 관련해서는, 투자 상품이 환경(E)이나 사회(S)적 측면의 특성이 있다고 홍보하는 상품,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의 지속가능성 특성 및 목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러한 특성이나 목표를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실사 프로세스 정책, 벤치마크로 지정된 지수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에 더하여, 연차보고서에 이러한 특성이나 목표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정기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시의 방식은 RTS에서 정한 내용 및 양식·템플릿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85) “유럽의 지속가능금융공시 최종보고서 및 기술표준 초안 주요 내용과 전망”, 자본시장포커스 2021-07호(공경신, 2021)

[표 5] SFDR 의무공시사항 지표⁸⁶⁾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적용되는 지표		
기후 및 다른 환경 관련 지표		
온실가스 배출	(1)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 2023년 1월 1일부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2)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3) 투자회사의 온실가스 강도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강도
	(4) 화석연료 부문 익스포저	화석연료 분야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5) 재생 불가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	피투자기업의 재생 불가 에너지 생산 점유율(%)
	(6) 고영향 기후부문별 에너지 소비 강도	피투자기업의 수익 대비 에너지 소비량(GWh/백만유로)
생물 다양성	(7) 생물 다양성에 민감한 지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생물 다양성에 민감한 지역에 있거나 그 근방에서 피투자회사의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비중
물	(8) 오염수 방출	피투자기업의 오염수 배출량(투자액 백만유로당 배출량(톤), 가중평균으로 계산)
폐기물	(9) 유해 폐기물 비율	투자액 백만유로당 피투자회사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폐기물(톤)
사회·노동자, 인권, 부패 방지, 뇌물 금지		
사회·노동자	(10) UNGC ⁷⁹⁾ 원칙,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UNGC 원칙,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11) UNGC 원칙,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준수 모니터링 체계 및 규정 준수 구조 부재	UNGC 원칙,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준수 여부, 관련 고충 및 불만 처리 구조 모니터링 정책이 없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12)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 격차	피투자기업의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 격차
	(13)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피투자기업 이사회의 남·녀 비율
	(14) 논란성 무기에 대한 익스포저 (대인지뢰, 화학무기, 상화학무기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피투자기업 투자 비중
국가 등에 대한 투자 시 적용되는 지표		
환경	(15) 온실가스 강도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강도
사회	(16) 사회적 위반 국가	국제조약 및 협약, UN 원칙, 국가 법률에서 언급되는 사회적 위반에 해당하는 피투자국가 수
부동산자산 투자 시 적용되는 지표		
화석연료	(17) 부동산자산을 통한 화석연료 익스포저	화석연료 추출, 저장, 운송, 제조에 관련된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에너지효율	(18) 에너지 비효율적인 부동산자산 익스포저	에너지효율이 낮은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86) 전계서

7 기타 금융권 의무 기후공시 제도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TCFD 연계 기후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2019년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녹색금융전략(Green Finance Strategy)⁸⁷⁾을 발표하면서 동 공시 의무화 계획을 공개하였고, 2022년부터 자산운용사,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업체, 연금 운용사, 보험 기반 투자 상품 및 확정기여형 연금 상품 관련 생명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중에 있다. 공시 의무 대상자들은 투자 관리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및 투자 상품의 기후 영향을 TCFD에 기초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동 공시의무는 2025년까지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⁸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상장기업에 대한 ESG 정보 공시 의무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2020년 ‘3개년 자본 시장 로드맵’의 내용으로 ESG 내부 위험 관리 및 ESG 공시 품질 개선 조치를 발표하면서, Sustainalytics, ISS 및 FTSE의 ESG 등급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ESG 대시보드’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ESG 정보 공시를 독려했으나 실제 정보 공시를 한 기업이 소수에 그쳤고, 이에 모든 상장 기업이 ESG 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정하게 되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의무 공시의 내용에는 물 사용량, 탄소배출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환경(E) 관련 사항과 노동 안전, 성 평등, 여성 직원 비율, 작업장 내 사고나 부상 건수 등의 사회(S)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⁸⁹⁾.

홍콩 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장 기업들에 대해 2021년부터 ESG 공시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주거래 시장 상장 규칙(Main Board Listing Rules)을 통해 연차보고서에 공개해야 하는 ESG 공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⁹⁰⁾, 필수 공시 요구사항(ESG 이슈에 대한 이사회 감독, 전략, 평가 사항 및 ESG 보고서 작성 시 고려된 중요도, 지표, 방법론 등)과 함께 환경(기후변화, 자원 사용, 배출 등) 및 사회(고용, 안전 보건, 근로기준, 공급망 관리, 제품 책임, 반부패, 지역 투자 등)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과 사회의 각 항목에 대해 공시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는, 이른바 ‘comply or expla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87) 금융권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파악, 청정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및 글로벌 녹색 금융 시장 선점 기회 포착 등의 내용을 포함함.

88) “Enhancing climate-related disclosures by asset managers, life insurers and FCA-regulated pension providers”(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21)

89) “대만, 2022년까지 상장기업 의무적으로 ESG 공개해야 한다”, (임팩트온, 2021)

90) Appendix 27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Guide (HKEX, 2023a)

홍콩증권거래소는 2024년부터는 새로운 ISSB 기준에 맞춰서 기후 공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거버넌스, 위기 관리, 예상되는 재무 효과, 에너지 전환 및 scope 1, 2, 3의 배출량이 포함되어 있다⁹¹⁾.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장 기업이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여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⁹²⁾. 동 보고서에는 중요 ESG 요소, TCFD 기반의 기후 관련 공시, 정책 및 이행, 목표, 지속가능 보고 체계, 그리고 지속가능 실천에 대한 거버넌스의 6가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에 가능하면 공통되는 지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이 협의하여 작성한 핵심 ESG 지표(Core ESG Metrics)도 공표하였는데, 이는 투자자의 투자 대상의 평가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주제 하의 총 27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⁹³⁾.

또한 2021년부터 TCFD 기반의 기후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2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에게 ‘comply or explain’ 기반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를 부과, 2023년부터는 금융업, 농업, 식품업 및 에너지 분야의 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의무 공시, 2024년부터는 운송업과 건축업 분야의 기업도 추가적으로 의무 기후 공시를 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계속하여 ‘comply or explain’ 기준 적용).

8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⁹⁴⁾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사와 정보 공개 책임을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91) Scope3 배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등 일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최초 2년 동안에는 기업의 내부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위험 노출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양적 공시가 적용된다.

“홍콩증권거래소, 2024년부터 상장사의 기후 공시 의무화”, (임팩트온, 2023)

“Exchange Publishes Consultation Paper on Enhancement of Climate Disclosure under its ESG Framework”, (HKEX, 2023b)

92) “Sustainability Reporting”, (SGX, 2023b)

93) 환경: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폐기물 발생

사회: 젠더 다양성, 연령 다양성, 고용, 개발과 교육, 보건안전

거버넌스: 이사회 구성, 경영진 다양성, 윤리적 태도, 인증 등

“Starting with a Common Set of Core ESG Metrics”, (SGX, 2023a),

94) “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nnex”, (European Union, 2022)

한국무역협회, “EU,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안) 발표”, 2022,

2021년 EU 의회에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속 조치로서, 2023년에 예정된 의회에서의 표결에 따라 승인이 되면 EU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해당 지침의 내용으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CSDD의 구조는 (1)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의 정책에 포함되도록 할 것 (2) 공급망 내의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구현할 것 (3) 인권 및 환경 상의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한 예방 혹은 완화 조치를 이행할 것 (4) 실제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 피해 구제 절차 등을 개발 및 구현할 것 (5) 공급망 내의 인권 및 환경 관련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식별, 예방, 해결,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6) 상기 실사의무 이행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CSD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역내의 직원 수가 500인 이상으로 전 세계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그룹1, 지침 발효 시점에서 4년 후부터 적용) 또는 역내의 직원 수가 250인 이상으로 전 세계 연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가운데 고위험군(High impact sector)⁹⁵⁾의 매출이 2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그룹 2, 지침 발효 시점에서 5년 후부터 적용)이다. 직원 수와 무관하게 역내의 연매출이 1.5억 유로 이상 혹은 4천만 유로 이상이 되면 각각 그룹 1과 2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상응하는 기준의 실사 의무가 부과된다. 중소기업들은 동 지침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으나, 대기업의 공급망 내의 참여자로서 지침의 영향에서 무관할 수 없다. 이에 지침에서는 각 회원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CSDD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이 자사의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⁹⁶⁾.

지침의 이행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EU 각 회원국이 지정하는 관계 당국이 관할하며, 위반 시 벌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침에서는 공급망 상의 인권 혹은 환경 관련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실사의무 이행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5)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산업 분야. 섬유 및 가죽 생산과 도매, 농림어업, 축수산업, 식품 제조, 의류업, 기초농산물 도매, 동물, 목재, 식음료, 광업 채굴 및 무역, 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 및 중간 광물 원자재 교역 등.

96) “EU ESG 규제 중 가장 큰 부담 꼽힌 ‘공급망 실사법(CSDD)’, AtoZ로 살펴봄!”, (Greenium, 2023)

VI. 토의

1 ESG 인식 및 개념

1.1 ESG 경영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인식

본 연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조직 내부에서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 담당 부서 실무진을 제외한 타 부서나 경영진들은 ESG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고, 매출이나 주력 사업보다 우선 순위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ESG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조직 전반에서, 또한 사업 전반의 수행에 걸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부서가 담당하는 홍보 또는 사회공헌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접근하는 단편적인 인식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ESG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사 교육, 경영진의 인식 전환을 위한 경영진 교육 및 규제 도입, ESG 팀에 권한이 더 부여될 수 있는 조직 구조 개편 등이 언급되었다.

일반 대중에게는 ESG가 ‘착한 일’ 또는 ‘사회공헌’에 가깝게 인식되어 근본적인 ESG 경영의 개념과 활동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즈니스 트렌드의 하나로 인식되어 언론 등에서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소비되는 경향 또한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려는 ESG 경영의 근본적인 취지를 해칠 수 있는 우려사항으로 지적되었다.

1.2 ESG의 다면적 특성

ESG는 형태상으로는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로 나뉘어져 있지만, ESG 관련 지표들이 다룰 수 있는 범위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회 전반적인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다. ESG가 경영 전반, 더 크게는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바, 현재는 환경(E)적 측면에만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집중 및 강

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E,S,G 중에 정량화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 환경(E)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치중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감안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적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환경 관련 대응(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대응이 주된 방식인 경우⁹⁷⁾)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하여 기업들의 사회적 라이선스(social license)⁹⁸⁾ 등의 취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ESG 관련 업무가 보고서 작성과 평가 대응 자체에 치중된 것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기업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협력사로서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나 사회 전반적인 반부패 이슈 등이 ESG 실무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결국 ESG 경영이란 완전히 새롭거나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비즈니스 프랙티스가 진전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3 ESG 개념의 태생적 한계

산업계 및 기업에서의 본격적인 ESG 경영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불평등 등의 전지구적인 문제 자체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투자자 관점에서 조직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이라는 경제적 수치를 우선시하는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현재의 ESG경영과 그에 수반한 공시와 평가 업무는 사회 혹은 지구 환경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보고서를 잘 쓰고 평가를 잘 받는 단기적인 사안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ESG가 과연 진정한 ‘지속가능성’에 어디까지 도움이 될 것인가가 의문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97) 즉,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환경(E)과 관련한 ESG 경영을 한다고 할 때, 기업의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전략, 생산 및 판매 등의 각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할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기 보다는, 단순히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그만큼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한다는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

98) 일반적으로, 기업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비공식적,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업의 영업권 혹은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이는 기업, 산업의 표준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말한다. “소셜라이선스”, 머니투데이 (나석권, 2022)

2 기업 또는 업무 특성에 따른 입장 차이

2.1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간극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기업의 경우 향후 도입될 규제에 대한 대응이나 투자기관 혹은 고객사 요청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ESG 경영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국내외 대기업인 고객사 측의 요청으로 ESG 경영 및 관련 실무를 알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략 수립, 공시 및 평가 대응 등의 업무에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바, 대기업의 ESG 부서들도 업무가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인력이나 예산,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 비용,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며, 정부뿐 아니라 ESG 대응을 직접 요청하게 되는 당사자인 대기업들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알 수 있었다.

2.2 일괄적인 해결책 제안의 어려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ESG 실무자들이 공통적 또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ESG 실무의 어려운 점과 바라는 제도적 변화 부분을 파악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실무자 개개인마다 시각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특히 실무자들이 기업에 소속된 직원인지 아니면 외부 컨설팅 업체의 컨설턴트인지에 따라, 그리고 소속 기업이나 컨설팅 대상인 고객사의 산업, 규모, 상장 여부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기업 소속인 경우, 공시와 평가 관련하여 대응해야 할 기준과 기관이 굉장히 많다 보니 관련 기준과 지표들이 간소화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였다. 반면, 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ESG 실무자들은 오히려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지표나 단위로 공시하는 것이 ESG 위상의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들이 본 연구를 설계할 당시에는 현재 한국의 ESG 실무 현황을 문헌과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 해외의 현행 또는 도입 예정인 법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가능한 제도를 일괄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설문과 인터뷰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글로벌 공시 기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해외에 존재하는 법 제도나 기준들도 국내에 어떤 식으로 언제 도입할 것인가 여러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보편적으로 일괄 적

용될 해결책이나 대안의 제안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공시 의무 법정화 및 평가 기준 일원화

3.1 공시 의무 법정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ESG 실무상의 어려움에 대해 일괄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실무자들은 2023년에 확정되고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인 미국의 SEC 기후 공시 기준, 국제회계기준의 ISSB, 그리고 유럽의 CSRD 등의 의무공시 제도 도입의 움직임이 현재 ESG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들 기준들은 기존의 TCFD 및 GRI를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기준의 간소화와는 간극이 있다. 그러나 앞서 “IV. 3.2.5 공시 의무화 및 ESG 데이터 베이스의 공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G 공시 업무 및 대응의 효율성 증가, ESG 워싱 위험 감소, 기업들 간 ESG 경영 성과 및 현황 비교 용이 등 여러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범위 및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법규상으로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시간과 노력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 의무 법정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지표가 아닌 의무 공시 내용이 지정되는 만큼, 지표나 단위를 각 기업에 유리하게 선택하기가 어렵게 되어 ESG 워싱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고 모든 대상 기업들이 동일한 기준과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기업들간의 비교 또한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이들 의무 공시 제도에서는 제 3자 검증이 의무화되는 부분도 있어,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이 향상되는 이점도 기대할 수 있다.

3.2 평가 기준 일원화의 위험성

의무 공시를 통해 보고 기준의 수렴이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개선이 기대되는 ESG 경영 공시 부분에 비해, ESG 경영 평가의 경우는 평가 기준을 하나로 수렴하거나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위험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서 “2.4.1 다양한 ESG 평가 기준들 간의 내용의 상이함”에서 언급되었듯이, 설문에서는 많은 실무자들이 다양한 기준들의 존재를 어려움으로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 기준들이 있는 상황이 완전히 없어져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러 실무자들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기준들이 일원화 될 경우의 위

협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 각 평가 기관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영역, 평가 산정 방식, 타겟, 정보 수요층 등 특성이 다르므로 정보 수요자들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 된다.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알 수 없는 기업 고유의 특색과 가치를 수요자들이 파악하여 투자나 기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 등이 일정한 혹은 단 하나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면 ESG 평가 방법론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4 변호사(법조인)의 프로보노 영역으로서의 ESG

상기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ESG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법조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던 SEC 기후공시, ISSB 기준, CSRD-ESRS 등과 같은 해외 공시 기준 및 법 제도가 국내에 도입 혹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 예정되는 바, 해당 기준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한 번역 작업 및 관련 자료 작성 등이 기업·산업계 및 정부 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은 자발적 보고 기준과는 달리 강제성을 가진 법적 규범이기 때문에, 번역 및 검토 과정 그리고 각종 자료와 데이터 작성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상당히 많다고 보인다. 실제로 현재 CSRD-ESRS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는, 이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의 형식과 체계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 영역의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CSRD-ESRS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법률 전문가로서의 변호사들이 관련 규범의 체계와 내용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기준과 법제도와 국내법과의 정합성 여부도 감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고려된다. 실무자 인터뷰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각종 공시나 평가 기준을 국내 기업들이 활용함에 있어, 국내법의 내용과 제대로 상응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 상의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기준과 법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활용하기 전에 혹은 도입한 이후라도, 국내법 체계와 맞지 않지 않는 사항에 있어서, 법조인들이 평가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역할 혹은 공시 내용에 이를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법조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공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고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중요도와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ESG 경영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새로운 기준에 더하여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면,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많아질 우려가 크다. 이에 법조인의 전문성을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새로운 프로보노 활동의 영역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VII. 결어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및 평가 기관과 그들의 지표 내용과 함께 ESG 관련 현행 국내 제도들을 조사,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SG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를 설계하여 보다 심도 깊은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ESG 실무 관련 어려움, 대책 방안, ESG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내) 지원 사항, ESG 경영의 의미 등에 대해 총 52명의 실무자들이 설문에 참여하고 총 18명과의 심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및 인터뷰 결과 실무 관련 어려움으로는 공시 및 전략 관련하여 다섯 가지, 인식 관련하여 다섯 가지, 데이터 관련 한가지, 평가 관련 세 가지 및 기타 네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공시 및 전략 관련해서는 공시 관련 지표들의 난립 및 불통일성, 법률 등의 법적 제도와 ESG 관련 지표 및 가이드라인 간의 간극 혹은 괴리, 수시로 바뀌는 법 제도 가이드라인, 산업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 기업에 유리한 선택적 공시 및 ESG 위상의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인식 관련해서는 업무 이해관계자들의 ESG 경영 관련 이해도 부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어려움, ESG 및 지속가능성 개념의 모호성 및 그에 대한 개인간과 집단간의 인식 차이, ESG 경영 공시와 평가 대응 자체에 집중하는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공시 및 평가를 위한 데이터 측정 및 수집과 관련한 어려움, 다양한 ESG 경영 평가 기준들 간의 내용의 상이함,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관한 어려움, ESG 평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 그리고 ESG 업무를 할 역량 및 인력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책 방안 및 제언으로는 주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한국어 번역, 공시 및 평가 기준 관련 표준화 및 공시 의무화, ESG 데이터 측정·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 및 데이터 관리 툴의 보급 및 교육, 중소기업 ESG 업무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및 ESG 업무 지원, 그리고 ESG 관련 전사 교육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ESG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내) 지원 사항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사내 조직구조 개선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ESG 경영에 대한 아직 낮은 인식, ESG의 다면적 특성, ESG 개념의 태생적 한계, 대

기업과 중소기업 기업 사이의 간극 및 일괄적인 해결책 제안의 어려움 및 의무 공시 제도로 이러한 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할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또한 법조인의 새로운 프로보노 영역으로서 해외의 ESG 경영 공시 및 평가 기준 및 법 제도의 국내 도입 시에 수행될 번역 관련 업무, 국내 법 체계와 내용과의 정합성 검토와 대응, 그리고 이를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제공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ESG 경영 공시와 평가 부분 영역으로 가급적 한정 지으려고는 하였으나 ESG 전반에 대해 폭넓게 다루게 되었다. 후속 연구로는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영역(예를 들면 환경 영역 중 탄소 배출 또는 사회 영역 중 인권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VIII. 참고문헌

-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October 18).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boardNo=101&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5>
- Abatzoglou, J. T., & Williams, A. P. (2016). Impact of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on wildfire across western US forest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42), 11770-11775. <https://doi.org/10.1073/pnas.1607171113>
- de Freitas Netto, S. V., Sobral, M. F. F., Ribeiro, A. R. B., & Soares, G. R. da L. (2020). Concepts and forms of greenwashing: A systematic review. *Environmental Sciences Europe*, 32(1), 19. <https://doi.org/10.1186/s12302-020-0300-3>
- ESG Navigator. (2023). ABCs of ESG Frameworks and Ratings. *ESG Navigator*. <https://esgnavigator.com/knowledge-hub/esg-ratings-library/abcs-of-esg-ratings-reporting/>
- ESG경제. (2023, April 3). *ISSB, ESG공시 첫해인 '25년엔 기후공시만 의무화*.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7>
-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2018) (testimony of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18DC0097>
- European Union. (2022, February 23). *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nnex*.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proposal-directive-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and-annex_en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21). *Enhancing climate-related disclosures by asset managers, life insurers and FCA-regulated pension providers*. Financial Conduct Authority. <https://www.fca.org.uk/publication/policy/ps21-24.pdf>
- FTSE Russell. (2023). *ESG Scores / FTSE Russell*. <https://www.ftserussell.com/data/sustainability-and-esg-data/esg-ratings>
- Greenium. (2023, March 20). *EU ESG규제 중 가장 큰 부담 꼽힌 '공급망 실사법(CSDD)', AtoZ로 살펴봄! / 그리니엄*. <https://greenium.kr/greenbiz-policy-eu-csdd-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

- GRI. (2022, June 20). *GRI Standards*. <https://www.globalreporting.org/how-to-use-the-gri-standards/gri-standards-english-language/>
- HKEX. (2023a). *Appendix 27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Guide / Rulebook*. <https://en-rules.hkex.com.hk/rulebook/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reporting-guide-0>
- HKEX. (2023b, April 14). *Exchange Publishes Consultation Paper on Enhancement of Climate Disclosure under its ESG Framework*. https://www.hkex.com.hk/News/Regulatory-Announcements/2023/230414news?sc_lang=en
- KRX ESG 포털. (2023). *ESG의 개념*. <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100/ESG01010100.jsp>
- SASB. (2021, January). *SASB 기준 국문 번역본* (한국회계기준원, Trans.). <http://www.kasb.or.kr>
- SASB. (2023). *SASB Standards*. SASB. <https://www.sasb.org/standards/download/>
- SEC. (2022). *SEC Proposes to Enhance Disclosures by Certain Investment Advisers and Investment Companies About ESG Investment Practices*.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92>
- SGX. (2023a). *Sustainability Reporting—Singapore Exchange (SGX)*. <https://www.sgx.com/sustainable-finance/sustainability-reporting>
- SGX. (2023b). *Starting with a Common Set of Core ESG Metrics*. https://api2.sgx.com/sites/default/files/2023-05/SGX%20Core%20ESG%20Metrics_for%20website%20%28updated%20Apr2023%29.pdf
- Thomson Reuters Institute. (2022). *企業のESG対応をめぐる課題*.
- United Nations.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UNDP. <https://www.undp.org/ko/seoul-policy-centre/sustainable-development-goals>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World Wide Fund For Nature. (1991). *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https://wedocs.unep.org/xmlui/handle/20.500.11822/30889>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5987our-common-future.pdf>
- 공경신. (2022). *미국 SEC의 ESG 펀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Name rule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ar=2022&zcd=002001016&zno=1675&cno=5969
- 공경신. (2021). *유럽의 지속가능금융공시 최종보고서 및 기술표준 초안 주요 내용과 전망*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ar=2021&zcd=002001016&zno=1588&cno=5668
- 관계부처합동. (2022, December 28).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https://www.2050cnc.go.kr/base/board/cnc2050.go.kr>

- 국가인권위원회. (2021, December 28).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7568>
- 국가인권위원회. (2022a, August 4).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www.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2014, January 8).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www.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2022b, August 16).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www.humanrights.go.kr>
- 금융위원회. (2021, January 14).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5176>
- 금융위원회. (2022, March 7). *[보도자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https://www.fsc.go.kr/no010101/77476>
- 금융위원회. (2023, January 9). *S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추가 공개*.
<https://fsc.go.kr/no010101/79242>
- 나석권. (2022, April 12). *소셜라이선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519362469526%C2%A0>
- 데일리임팩트. (2022, September 22). *중소기업 ESG 도우면 동반성장 평가 가점 받는다*. 데일리임팩트.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54>
- 매일경제. (2021, April 20). *ESG 성적표 잘 받는 법...글로벌 3대 지수를 기억하라—매경ECONOMY*. <https://www.mk.co.kr/economy/view/2021/381138/>
- 매일경제. (2022, October 14). *혼란의 ESG 공시...어떤 기준 따라야 할까*. 매경ECONOMY.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909237/>
- 머니투데이 M. T. (2020, May 11). *기후규제, 법보다 '투자자 압박'으로 속도낸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511044457540>
- 법무부. (2021, December 28).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https://www.moj.go.kr/bbs/moj/182/554900/artclView.do>
- 산업통상자원부. (2021, December 9). *K-ESG 가이드라인*.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631&bbs_cd_n=30¤tPage=7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 산업통상자원부. (2022, December 7).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494&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1&dept_v=&search_val_v=

아웃소싱타임스. (2021, December 22). *[ESG경영, 알기쉽게 알아보기]—지속가능 경영과 ESG경영과의 차이점*.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999>

연합인포맥스. (2018, April 10). *〈사/사금융용어〉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3009>

연합인포맥스. (2022, November 30). *[사/사금융용어] GHG 프로토콜*.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4336>

이상현. (2022). *BOK 지속가능금융의 의의와 통계 현황* (국민계정리뷰).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3/view.do?nttId=10070683&menuNo=200707>

임팩트온. (2021, June 23). *대만, 2022년까지 상장기업 의무적으로 ESG 공개해야 한다*. IMPACT ON(임팩트온).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95>

임팩트온. (2023, April 19). *홍콩증권거래소, 2024년부터 상장사의 기후 공시 의무화*. IMPACT ON(임팩트온).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329>

중소벤처기업부. (2022, July 13).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해 시범 운용 실시*.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4839&parentSeq=103483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 (2023a). *ESG 진단*.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 (2023b). *ESG 통합 플랫폼*.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한국거래소. (2021). *ESG 정보 공개 가이드*.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20210274536

한국무역협회 K. (2022, February 25). *EU,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에 관한 지침'(안) 발표- 해외시장 뉴스*.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type=0&nIndex=1820068>

한국표준협회 K. (2023). *지속가능경영*. <https://www.ksa.or.kr/ksi/4971/subview.do>

[별지 1]

* ESG 실무자 대상 실시 설문조사 설문지 전문

소속 기관 특징 *

- ☐ 기업 소속 (In-house)
- ☐ 외부 컨설턴트
- ☐ 기관 투자자
- ☐ 금융기관
- ☐ 평가기관
- ☐ 시민단체
- ☐ 정부, 공공기관
- ☐ 학계, 연구자
- ☐ 기타...

기업 소속인 경우 기업의 특성 (여러개 선택 가능)

- ☐ 대기업
- ☐ 중소기업
- ☐ 스타트업
- ☐ 사회적기업
- ☐ 국내기업
- ☐ 외국계기업
- ☐ 기타...

기업 소속인 경우 해당하는 산업

- ☐ 금융
- ☐ 제조
- ☐ 에너지 (발전, 설비, 배터리 등)
- ☐ 패션, 뷰티
- ☐ 건설
- ☐ 환경 (폐기물, 수질, 대기 등)
- ☐ 식품
- ☐ 농축산임업
- ☐ 광업
- ☐ 서비스
- ☐ IT
- ☐ 엔터테인먼트
- ☐ 통신
- ☐ 유통
- ☐ 운수
- ☐ 교육
- ☐ 보건, 의료, 사회복지
- ☐ 부동산
- ☐ 기타...

현재 수행하고 있는 ESG 관련 업무 (여러개 선택 가능) *

- ☐ 보고서 작성
- ☐ 평가 대응
- ☐ ESG 전략 수립
- ☐ CSR 업무
- ☐ ESG 데이터 관리
- ☐ ESG KPI 관리
- ☐ 공급망 관리
- ☐ 컴플라이언스
- ☐ 법무
- ☐ 투자
- ☐ 정책수립
- ☐ 연구
- ☐ 기타...

업무 수행 상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개 선택 가능) *

- ☐ 보고 지표들의 난립 및 불통일성
- ☐ 법적제도(의무 공시사항 등)와 ESG 지표 · 가이드라인 간의 간극 혹은 괴리
- ☐ 다양한 ESG 평가 기준간 상이한 평가 기준
- ☐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관한 어려움
- ☐ 보고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측정 및 수집 관련한 어려움
- ☐ 업무 이해관계자들의 ESG 관련 이해도 부족, 공감대 형성 어려움

- ☐ ESG/지속가능성 개념에 대한 모호성 및 인식의 차이
- ☐ ESG 혹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통된 전제, 정의가 없음
- ☐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요자 간 ESG에 대한 관심도의 불균형
- ☐ ESG 업무를 할 역량 및 인력의 부족 (중소기업 등)
- ☐ 본인의 ESG 관련 전문성 부족
- ☐ ESG 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 기회 및 지원 부족
- ☐ 어려움 없음
- ☐ 기타...

업무에 도움이 될 제도적 개선이나 지원 (여러개 선택 가능) *

- ☐ 해외 주요 가이드라인의 공식 한글 번역본 제공
- ☐ 우선 순위로 볼 사항들을 정부 가이드라인 등으로 책정, 배포
- ☐ 글로벌 공시/평가 기준과 국내법 상의 관련 기준이 대체로 일치하도록 만들어서, 데이터 측정과 수집을 포...
- ☐ 지표 방법론 및 로직 자체가 폭넓게 공개되어 각 투자처 입장에 맞게 해당 공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 현실적인 공시 지표의 개발
- ☐ ESG 관련 데이터 측정, 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 ☐ ESG 업무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 ☐ 중소기업에 대한 ESG 업무 지원
- ☐ ESG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전사 교육
- ☐ 필요한 도움 없음
- ☐ 기타...

ESG 업무 관련 컨설팅시 우선적으로 도움 받고 싶은 내용 (여러개 선택 가능) *

- ☐ ESG 기본 개념 및 업무 범위 확립
- ☐ 수시로 바뀌는 ESG 관련 법, 제도,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 ☐ ESG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전사 교육
- ☐ 보고서 작성
- ☐ 평가 대응
- ☐ ESG 전략 수립
- ☐ ESG 데이터 관리
- ☐ ESG KPI 관리
- ☐ CSR 업무
- ☐ 컴플라이언스
- ☐ 필요하지 않음
- ☐ 기타...

본인의 업무 혹은 ESG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임원, 경영진 그리고 타 부서들로부터의 협조를 * 얻기 위해 필요한 것 (여러개 선택 가능)

- ☐ 예산
- ☐ 인력
- ☐ ESG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전사 교육
- ☐ 사내 조직 구조 개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조직을 ESG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개편)
- ☐ 관련한 법 혹은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 ☐ 필요하지 않음

현재 사내에서 ESG관련 교육(ESG의 의미, 필요성, 미션 등)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답변 여러개 가능합니다

- ☐ 관련 교육 없음
- ☐ ESG나 직접적인 관련 부서 (탄소중립, 환경 등) 팀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 ESG/환경 유관부서까지 이루어짐
- ☐ 전사적으로 이루어짐
- ☐ 내부강사 (관련 팀 임직원 등)
- ☐ 외부강사
- ☐ 일회성
- ☐ 주기적
- ☐ 기타...

사내 ESG 관련 교육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 ESG의 의미
- ☐ ESG의 필요성
- ☐ ESG 관련한 우리 회사의 미션, 나아갈 길
- ☐ ESG 전략
- ☐ ESG 보고기준
- ☐ ESG 평가기관 (종류, 대응 등)
- ☐ ESG 우수/실패 사례 (사내외)
- ☐ 사회공헌
- ☐ 컴플라이언스

☐ 인권교육

☐ 젠더교육

☐ 기타...

현재 사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ESG관련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아주 잘하고 있다

☐ 괜찮은 것 같다

☐ 미흡하다

☐ 아주 부족하다

☐ 아예 없다

☐ 기타...

현재 ESG 관련 업무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중지도 나쁘지...	아쉽다	매우 아쉽다
의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배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성장가능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금전적 보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워라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일의 강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조직문화

☐☐☐☐☐

인간관계

☐☐☐☐☐

ESG 관련 사항 KPI 반영 여부 *

- ☐ 본인 KPI에 반영됨
- ☐ 본인 KPI는 반영되지 않으나 다른 팀이나 임원들에게는 반영
- ☐ 본인 KPI는 반영되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음
- ☐ 누구에게도 반영되지 않음
- ☐ 기타...

K-ESG가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여러개 선택 가능) *

- ☐ ESG 이해도 증진에 도움
- ☐ 보고 내용 간소화에 도움
- ☐ 보고서 작성에 사용
- ☐ 업무량 감소
- ☐ 업무량 증가
- ☐ 참고만 함
- ☐ 사용하지 않음
- ☐ 기타...

본인이 생각하는 ESG 평가 및 공시의 목적은? (여러개 선택 가능) *

- ☐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
- ☐ 사회의 지속가능성 증진
- ☐ 기후변화 대응
- ☐ 투자금 유치
-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
- ☐ 기업의 사회적 의무 실행
- ☐ 고객사 요청
- ☐ 법적 의무
- ☐ 모르겠다
- ☐ 기타...

현재의 ESG 평가 및 공시가 기업과 사회의 실질적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 ☐ 매우 도움이 된다
- ☐ 없는 것 보다 낫다
- ☐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기타...

본인이 생각하는 ESG 경영이란?

장문형 텍스트

아래 항목부터는 ESG 공시, 보고서 작성, 또는 ESG 평가 대응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업무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신다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설명(선택사항)

현 직장이 사용하는 ESG 공시 기준은? (여러개 선택 가능)

- ☐ GRI
- ☐ SASB
- ☐ CDP
- ☐ TCFD
- ☐ WEF
- ☐ 없음
- ☐ 모름
- ☐ 기타...

ESG 공시 기준 및 보고서 작성 관련 어려운 점 (여러개 선택 가능)

- ☐ 보고 해야 할 지표가 너무 많음
- ☐ 지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함
- ☐ 지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집계를 위한 타 부서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려움
- ☐ 지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음
- ☐ 업무 인력 부족
- ☐ 기타...

현 직장이 대상/대응중인 평가 지표/기관은?

- ☐ MSCI
- ☐ S&P Global
- ☐ FTSE4Good
- ☐ Ecovadis
- ☐ Refinitiv
- ☐ KCGS
- ☐ K-ESG
- ☐ 서스틴베스트
- ☐ 없음
- ☐ 모름
- ☐ 기타...

평가 대응 관련 어려운 점 (여러개 선택 가능)

- ☐ 질문지 및 질문 내용이 방대함
- ☐ 질문 내용이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함
- ☐ 평가 기준을 알 수 없음 (불투명)
- ☐ 피드백 대응 내부 인력 부족
- ☐ 평가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피드백이 늦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 ☐ 기타...

ESG 분야 실무 경험 기간

- ☐ 1년 미만
- ☐ 1-3년
- ☐ 4-6년
- ☐ 7-10년
- ☐ 10-15년
- ☐ 15년-20년
- ☐ 20년 이상
- ☐ 기타...

ESG 업무 이전 경험한 업무 (여러개 선택 가능)

- ☐ HSE 보건 안전 환경
- ☐ CSR, 사회공헌
- ☐ 국제개발협력
- ☐ 기후변화
- ☐ 지속가능성, 환경
- ☐ 인권
- ☐ 기타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 ☐ 기획
- ☐ 전략
- ☐ 마케팅
- ☐ 재무, 회계

- ☐ 인사
- ☐ 법무
- ☐ 설계
- ☐ 기타...

심층 인터뷰 (30분~최대 1시간 소요 예정)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 네, 온라인
- ☐ 네, 오프라인
- ☐ 아니요
- ☐ 아직 잘 모르겠음
- ☐ 기타...

기프트콘 추첨 응모를 위해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설문 답변과 이메일 주소의 연결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probono.esg@gmail.com 로 설문 완료 스크린샷을 보내주세요. ** 심층 인터뷰 자원 해 주시는 분들은 꼭 연락처 남겨 주시거나 메일 꼭 부탁드립니다!!

단답형 텍스트

.....

기타 문의사항, 제안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장문형 텍스트

.....

* 심화 인터뷰 질문지 전문

인터뷰 질문 사항 (개인 답변용)

ESG 실무 현황 및 관련 제도 연구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참조용 질문지이며, 반드시 이 내용대로 혹은 이 순서대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하시는 업무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질문지에 없는 내용도 편안히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 관련]

1.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1) 담당 업무 혹은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소개
 - 2) 여러 업무를 담당할 경우, 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 (대략, 또는 시즌별)
 - 3) 담당 업무 연차
 - 4) 현재 담당 업무 이전에 했던 다른 업무(ESG 관련 여부 무관)는 어땠고 어떻게 지금 ESG업무로 오게 되었는지
 - 5) ESG나 기후환경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6) 어떠한 점에서 업무가 만족스럽거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지 (ex) 커리어 등의 성장 가능성, 워라밸, 금전, 조직문화, 일의 가치, 재미, 인간관계 등
 - 7) 담당하시는 업무가 조직 내외부에 어떤 임팩트를 준다고 생각하는지
2. 소속하신 곳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1) 재직 중이신 회사 혹은 조직 소개 (회사 규모, 산업, 기타 특성)
 - 2) 소속 팀이나 부서에 대한 소개
 - a) 팀명(팀의 전신), 팀 규모, 팀의 연혁(만들어진 시기, 조직 구성의 변동 등)
 - 3) 본인의 소속팀 혹은 ESG팀의
 - a) 조직 내 위치 (ex) 사장/CEO 직속? 전략실 소속? 마케팅 소속?)
 - b) 팀장 및 팀원들의 ESG 관련 업무 경력이나 배경
 - c) 팀 인원은 충분한지 혹은 업무 분장은 잘 되어 있는지

- d) 회사 내 ESG 관련 팀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 e) 회사 대표 혹은 경영진의 관심이나 지원 정도
- 4) 사내에 ESG관련 직원 대상 교육이 있나?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내용인가? 누가 진행하는가? 만족하는가?
- 5) 본인 업무나 다른 관련 부서 직원/임원들에게 ESG 관련 KPI가 있나?
- 6) 본인 소속 조직 혹은 함께 일하는 협력사/고객사/계열사에서 본 인상적인 ESG 예시. (잘한 것, 못한 것 등)

[설문지 문항 심화 관련 인터뷰]

3. 업무 수행 상 겪고 있는 어려움

1) 현재까지 설문 결과 답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보고 지표들의 난립 및 불통일성 (60.5%)
- b) 업무 이해관계자들의 ESG관련 이해도 부족, 공감대 형성 어려움 (55.8%)
- c) 보고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측정 및 수집 관련한 어려움 (46.5%)
- d)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관한 어려움 (41.9%)
- e) 다양한 ESG 평가 기준간 상이한 평가 기준 (39.5%)

2)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어려움은? (중요도를 매겨본다면?).

3) 선택지 외의 어려움이 있다면?

4. 업무에 도움이 될 제도적 개선이나 지원

1) 현재까지 설문 결과 답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해외 주요 가이드라인의 공식 한글 번역본 제공 (74.4%)
- b) 글로벌 공시/평가 기준과 국내법 상의 관련 기준이 대체로 일치하도록 만들어서 데이터 측정과 수집을 포함한 기타 공시/평가 작업에 (55.8%)
- c) 우선 순위로 볼 사항들을 정부 가이드라인 등으로 책정, 배포 (44.2%)
- d) 현실적인 공시 지표의 개발 (39.5%)
- e) 지표 방법론 및 로직 자체가 폭넓게 공개되어 각 투자처 입장에 맞게 해당 공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7.2%)

2)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개선이나 지원책은? (혹은 중요도를 매겨본다면?)

3) 선택지 외의 필요한 개선이나 지원이 있다면?

5. ESG 업무 관련 컨설팅시 우선적으로 도움받고 싶은 내용

1) 현재까지 설문 결과 답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수시로 바뀌는 ESG 관련 법, 제도,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67.4%)
- b) ESG 전략 수립 (39.5%)
- c) ESG 데이터 관리 (34.9%)
- d) ESG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전사 교육 (30.2%)
- e) ESG 기본 개념 및 업무 범위 확립 (25.6%)
- f) 보고서 작성 (25.6%)

2)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개선이나 지원책은? (혹은 중요도를 매겨본다면?)

a)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e.g. 보고서 작성의 경우 검증, 포맷, 내용, 용어 등등)

3) 선택지 외의 필요한 개선이나 지원이 있다면?

6. 본인의 업무 혹은 ESG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임원, 경영진 그리고 타 부서들로부터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

1) 현재까지 설문 결과 답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예산 (60.5%)
- b) 인력 (53.5%)
- c) 사내 조직 구조 개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조직을 ESG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개편) (53.5%)
- d) ESG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전사 교육 (44.2%)
- e) 관련한 법 혹은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37.2%)
- f) 기타: ESG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필요. 대표 및 임원진들의 ESG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관 형성

2)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혹은 중요도를 매겨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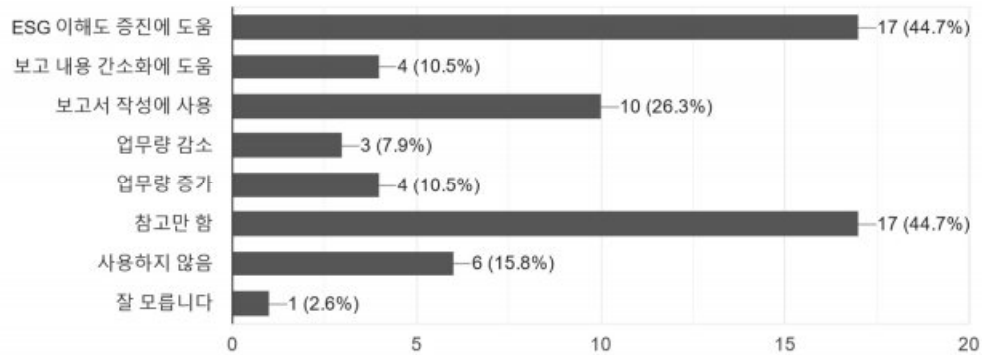
3) 선택지 외의 필요한 개선이나 지원이 있다면?

7. 상기 3~6번 질문과 관련하여 사내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조직 개편? 예산? 인력?)

8. K-ESG가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현재까지 설문 결과 답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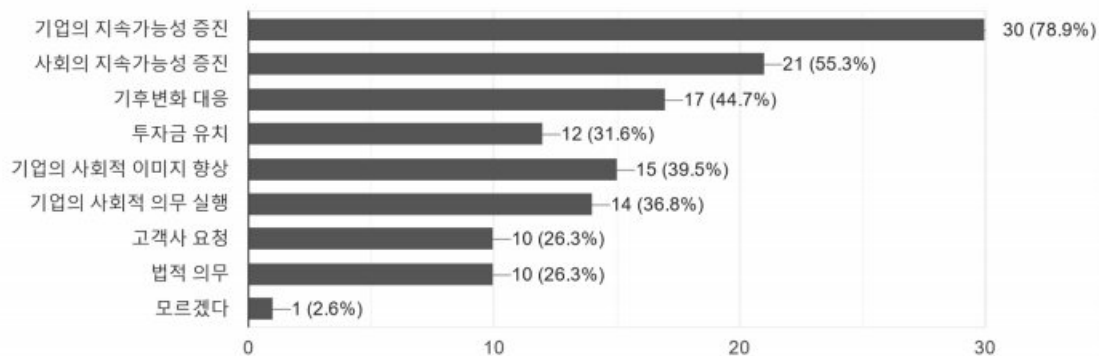


2)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혹은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9. 현재 국내외의 ESG 경영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하여 회사 직원들이나 다른 부서, 경영진 등 다른 사람들의 ESG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10. 본인이 생각하는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요? 이와 함께, 본인의 생각과 업무관계자 혹은 이해관계자 또는 대중(일반인, 언론 등)간의 생각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까지 설문 결과 답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ESG 경영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 및 공시 업무)가 정말로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효과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은 방향성은 맞지만 단지 시간의 문제일까요?)

[기타]

12. 이 연구가 활용되는 방식 등에 관해 혹시 기대하시는 바가 있나요? 만약 관련하여 후속 연구가 있다면 어떤 주제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설문과 인터뷰에는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별지 2]

K-ESG 가이드라인 (자가진단) 진단항목 체계 (K-ESG 가이드라인 v1.0 일부 발췌)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정보공시 (P) (5개 문항)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P-1-2	ESG 정보공시 주기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P-3-1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E)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E-1-2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E-2-1	원부자재 사용량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E-3-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E-3-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E-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E-4-1	에너지 사용량
		E-4-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E-5-1	용수 사용량
		E-5-2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E-6-1	폐기물 배출량
		E-6-2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7-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환경 (E) (17개 문항)	환경 법/규제 위반	E-8-1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E-9-1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 (S) (22개 문항)	목표	S-1-1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S-2-1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S-2-2	정규직 비율
		S-2-3	자발적 이직률
		S-2-4	교육훈련비
		S-2-5	복리후생비
		S-2-6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S-3-1	여성 구성원 비율
		S-3-2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S-3-3	장애인 고용률
	산업안전	S-4-1	안전보건 추진체계
		S-4-2	산업재해율
	인권	S-5-1	인권정책 수립
		S-5-2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	S-6-1	협력사 ESG 경영
		S-6-2	협력사 ESG 지원
		S-6-3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S-7-1	전략적 사회공헌

사회 (S) (22개 문항)	지역사회	S-7-2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S-8-1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S-8-2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S-9-1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G) (17개 문항)	이사회 구성	G-1-1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G-1-2	사외이사 비율
		G-1-3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G-1-4	이사회 성별 다양성
		G-1-5	사외이사 전문성
	이사회 활동	G-2-1	전체 이사 출석률
		G-2-2	사내이사 출석률
		G-2-3	이사회 산하 위원회
		G-2-4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권리	G-3-1	주주총회 소집 공고
		G-3-2	주주총회 개최일
		G-3-3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G-3-4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	G-4-1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G-5-1	내부감사부서 설치
		G-5-2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G-6-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K-ESG 가이드라인 v1.0 일부 발췌)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1	사회	인권		
항목	인권정책 수립				
평가 목표, 내용, 방법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직이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OECD 책임있는 사업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인권경영 추진을 선언하는 대외공식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조직이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을 통해 인권보호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조직의 인권정책 내 아래의 이슈 중 어떠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1) 차별금지, 2) 근로조건 준수, 3) 인도적 대우, 4) 강제근로 금지, 5) 아동노동 착취 금지,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7) 산업안전 보장,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9) 고객의 인권 보호, 10) 기타</p> <p>[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p>			
활동을 수준에 따른 평가 기준	점검 기준	1단계	조직의 대외공식적 인권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인권정책이 있으나, 상기의 이슈 중 1~2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2단계	상기의 이슈 중 3~4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3단계	상기의 이슈 중 5~6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4단계	상기의 이슈 중 7~8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5단계	상기의 이슈 중 9개 이상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평가기준의
근거 법률,
규제 또는
타기관 규제

추가 설명

- 본 '인권정책 수립' 항목 정의서는 UN, ILO, OECD 등에서 제시하는 인권 분야 이슈에 대해 조직이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각 인권 이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단, 제도, 상관습, 사회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인권 이슈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 차별금지 :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 근로조건 준수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를 제공함. 또한,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
- 인도적 대우 : 구성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 강제근로 금지 :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 것
- 아동노동 착취 금지 :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근로로 인한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것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구성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
- 산업안전 보장 : 구성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하는 것
- 지역주민 인권 보호 :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안전보건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것
- 고객 인권 보호 : 사업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 조직의 인권정책은 '인권 이슈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적/내용적 요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공식적 성명서
- 인권리스크 저감을 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담당조직과 그 역할
- 인권침해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
- 인권정책 제/개정일자, 정책문서 관리번호, 정책문서 담당자 및 승인자 등

참고 자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2021. 7. 6. 시행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1948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omepage > Topics
- 「UN Global Compact 10 Principles」, United Nations, 2011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0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별지 3]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사례 (2022년 SK hynix 인권경영보고서 중 일부 발췌)

인권 존중은 SK하이닉스의 비즈니스에 왜 중요한 것일까?

이러한 추세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인권침해와 남용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구성원들은 약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의 협력사와 공급망, 그리고 사업장 인근의 지역사회를 포함할 경우 아주 광범위한 규모의 이해관계자들이 SK하이닉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은 단순히 법규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 비즈니스 전반에 막대한 타격과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미래 가치에 영향력을 주는 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경영 추진 체계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3가지 프레임워크*



- 인권 위원회 및 실무부서, 워킹그룹 구성
- 인권 선언
- 인권 정보 공개
- 인권 교육
-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 확산

- 실사 담당자 및 팀 구성
- 실사 계획 수립
- 인권리스크 식별과 평가(인권영향평가)
- 기업 기능과 절차에 통합
- 모니터링과 효과성 추적
- 이해관계자와 소통

- 내부규정 제정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도입
- 절차 수립과 이행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2021)'의 내용을 시각화함

SK하이닉스의 인권정책

기업의 인권 정책 선언

SK하이닉스의 인권정책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근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소재 지역이나 국가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 너머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크게 '인권노동방침'과 '협력사 행동규범' 및 '협력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K하이닉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인권노동방침

2014년 처음 공개된 SK하이닉스의 '인권노동방침'은 수립 배경과 더불어 8가지 주요 인권요소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국제 표준과 국내 법규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인권경영 운영체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2021년 이 방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방침은 크게 3가지 영역(배경과 범위, 운영체계, 세부 운영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과 범위는 SK하이닉스가 인권 존중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와 이것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침의 적용 범위는 당사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파트너사, 합작사 등 거래관계에 있는 파트너를 모두 포함합니다.

운영체계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작동하는 내부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인권경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부터 전사적으로 인권경영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까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설명과,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실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시 이를 제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이 이 영역에 담겨 있습니다.

세부 운영지침은 SK하이닉스가 가장 중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13가지의 주요 인권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초 수립 시 정의되었던 8가지 주요 인권요소와 비교하여 5가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책임 있는 광물의 조달, 정보 보호, 취약계층 보호, 인권 옹호자 존중) 사항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⑧ 및 가이드라인 ⑧

‘협력사 행동규범’은 2011년 최초 제정되어 대외에 공개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회원사로서 RBA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RBA 행동규범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SK하이닉스의 규범 역시 업데이트되었으며 2021년 기준 최신 버전은 ‘인권노동방범’의 개정 사항을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규범에는 서문과 6개 영역(인권 및 노동, 환경, 합법적 광물 채굴, 안전 및 보건, 윤리, 경영시스템)에 대한 협력사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표준계약서 상에 규범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은 규범에서 정의한 영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서술한 것으로 각 세부사항별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검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당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중점 인권 영역

식별된 인권 이슈 보고

SK하이닉스는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모든 인권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인권 이슈가 비즈니스에 동일하게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유엔 이행지침 보고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이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심각한 인권 이슈’에 대해 집중하고 그에 대해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러한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외부 인권전문가 및 내부 유관부서 담당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내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중점 인권 영역을 도출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내 인권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OECD에서 제시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국제 NGO인 ‘기업인권벤치마크(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의 평가지표를 반영한 결과 도출된 중점 인권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슈에 대한 정의	이슈의 중요성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구성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인도적 대우	인도적 대우는 근로자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공정한 임금과 적절한 복리후생, 적정하게 관리되는 근로시간, 근로환경 내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금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인도적 대우는 중점 인권 영역 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비즈니스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은 근로자가 고려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며, 적절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인재유출로 인해 SK하이닉스의 미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		
차별 금지	모든 사람은 인종, 성별, 학력, 종교, 장애,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의 사유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승진 등에서의 차별 철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사항입니다.	차별은 직원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고용 기회나 승진의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받는 직원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차별의 존재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		●
결사의 자유	근로자는 자유롭게 조합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과 투쟁하고 공정한 협상에 참여하여 근로 및 고용 조건을 결정하고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사관계가 안정하게 운영될 경우 근로자와 사측은 단단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	●		

구분	이슈에 대한 정의	이슈의 중요성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구성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아동노동 금지	아동노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이들에게 해로우며 과도한 시간의 고된 일과 학교 출석이 결함되어 그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최악의 근로 형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만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과 근로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작업장 건강성 등 만 18세 미만 청소년로써 고용의 경우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과 야간 근로, 초과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최소한의 교육 이상을 보장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자격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사업장과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대해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재료인 광물 채취 과정에서 공급망 내 불법적 아동노동이 발생할 경우 아동들의 기본 인권이 침해되고 SK하이닉스의 비즈니스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	●		●
강제노동 금지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나 의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노동은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신분증 원본 문서를 압류하거나, 임금불 보류하고 과도한 초과근로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은 대한민국 기준에선 거리가 먼 일로 느껴지지만,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K하이닉스의 비즈니스는 보통 노동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농업과 같은 산업과는 거리가 멀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확장됨에 따라 강제노동의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	●		●
안전 및 보건	안전하면서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COVID-19의 전세계적 대유행은 근로환경 내 안전 및 보건의 중요성을 더욱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매년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최소 190만 명이 사망하고, 약 3억6000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알약한 산업안전보건 환경은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기업에 부정적 평판, 벌금 및 관련 책임을 통해 운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		●
핵심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위험을 파악할 경우, 그 영향을 중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를 통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매에 사용하는 SK하이닉스에 있어 공급망은 복잡하면서도 언제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향력 배급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슈더라도 공급망 내 연결을 통해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개인정보 보호	개인인 사생활, 가정과 주거, 통신 등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간섭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문 1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 구성원,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는 책임감 있게 수집,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는 법적 요구사항이며,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권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고객, 사업장, 공급망을 보유한 SK하이닉스에 있어 정보의 유출은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지역사회 인권 보호	특정 지역에 기업이 위치하게 되면 해당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지역사회의 문화와 주거권, 환경보호 등의 문제는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장과 법인이 위치한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토지권, 주거권, 환경보호권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시 평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결과정에서 운영 비용의 증가, 상환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어 비즈니스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SK하이닉스의 활동과 성과

SK하이닉스는 중장기 전략 방향과 목표들에 맞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SK하이닉스는 크게 3가지 영역(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공급망 ESG 평가 실시, 고충처리채널 확대)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인권영향평가 실시 과정 및 결과 보고

SK하이닉스는 앞서 제시하였던 중점 인권 영역에 관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생산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9개 중점 인권 영역과 더불어 인권경영을 이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영역이 포함된 10개 영역, 133개의 지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천/청주 사업장과 중국 우시와 충칭 사업장, 그리고 합작사인 하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국내 사업장의 경우 관리수준이 우수하며, 중국 우시와 충칭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 영역이 존재하고, 하이텍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차별 금지, 인도적 대우,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안전 및 보건 영역은 평균 점수 이상으로 인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경영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인권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은 인권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효과적인 개선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단기는 6개월 이내 개선 이행, 중기는 2년 이내 개선 이행, 장기는 개선에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로 정의하였습니다. 단기 과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책 및 규정 보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기 및 장기 과제는 주로 사업장 내 협력사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부분과 협력사에 대한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선정된 개선과제는 총 120여 개로 이 중 단기과제 40개를 100%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잔여 중장기과제들을 모두 이행 완료하기 위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공급망 ESG 평가 실시

사업장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공급망 인권에 대한 관리는 인권 경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SK하이닉스는 노동/인권을 포함하여 SK하이닉스의 공급망 내에서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 가능한 ESG 전반의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공급망 ESG 평가는 5개 영역(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131개 지표로 체크리스트가 구성되어 있으며, 자가평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과 협력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공급망 ESG 평가가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시행한 공급망 ESG 자가평가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를 종합한 결과 환경과 윤리 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권과 관련된 노동/인권, 안전/보건 영역은 평균 점수 대비 높게 파악되었습니다. 영역별 취약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인권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결성과 관련된 결사의 자유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안전/보건은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위험성 평가, 근로자 정보 제공, 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산업위생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고충처리채널 확대

인권 침해 이슈에 대한 구제절차 보고

SK하이닉스의 고충처리채널은 SK유리경영 제보채널과 '두드림' 제보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유리경영 제보채널의 경우 SK그룹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인권을 포함한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두드림' 제보 채널은 내부 구성원들의 성희롱 관련 고충 제보 채널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이를 괴롭힘을 포함한 기본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채널로 확장하였습니다. '두드림'에서 다루는 고충 주제들은 아래와 같으며, 인권 침해와 관련된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 제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존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으로 인한 불쾌감 및 수치심
확대	• 폭언, 폭행을 비롯한 인격모독성 발언 및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직장 내 따돌림 등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 전배, 평가, 보상 등 부당한 인사 처우로 인한 근무 의욕 감소 • 업무 과다,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한 업무 몰입 저하 • 모성보호, 장애인, 성소수자, 성차별 등으로 인한 불이익 • 협력사 직원 및 고객의 폭언, 성희롱 관련 고충 등

'두드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제보와 상담 내용은 엄격한 보안 절차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되며, 모든 제보와 상담 신청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연락이 진행되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충처리채널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제보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① 고충처리에 대한 세부 가이드 마련, ② 고충처리 결과에 대한 관리 및 효과성 검증, ③ 사건 인지 및 사후 관리 단계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채널 '두드림'



현재까지 우리가 배운 것

인권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때로 쉽게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유형은 크게 '유발(Cause)', '기여(Contribute)', '연관(Link)'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유발'은 기업이 직접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경우로 '유발'이 발생할 시 책임소재가 너무나 명확하고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인권침해는 발생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기여'는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에 기업이 기여한 것을 말하며, '연관'은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았으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와 비즈니스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여'나 '연관'의 경우 대부분 해당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인 영향을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해 이슈가 제기되는 시점에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에서 '유발'에 대한 점검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여'와 '연관'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사를 통해 면밀하게 점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의 비즈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앞으로 SK하이닉스가 달성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의 향후 계획

인권경영 평가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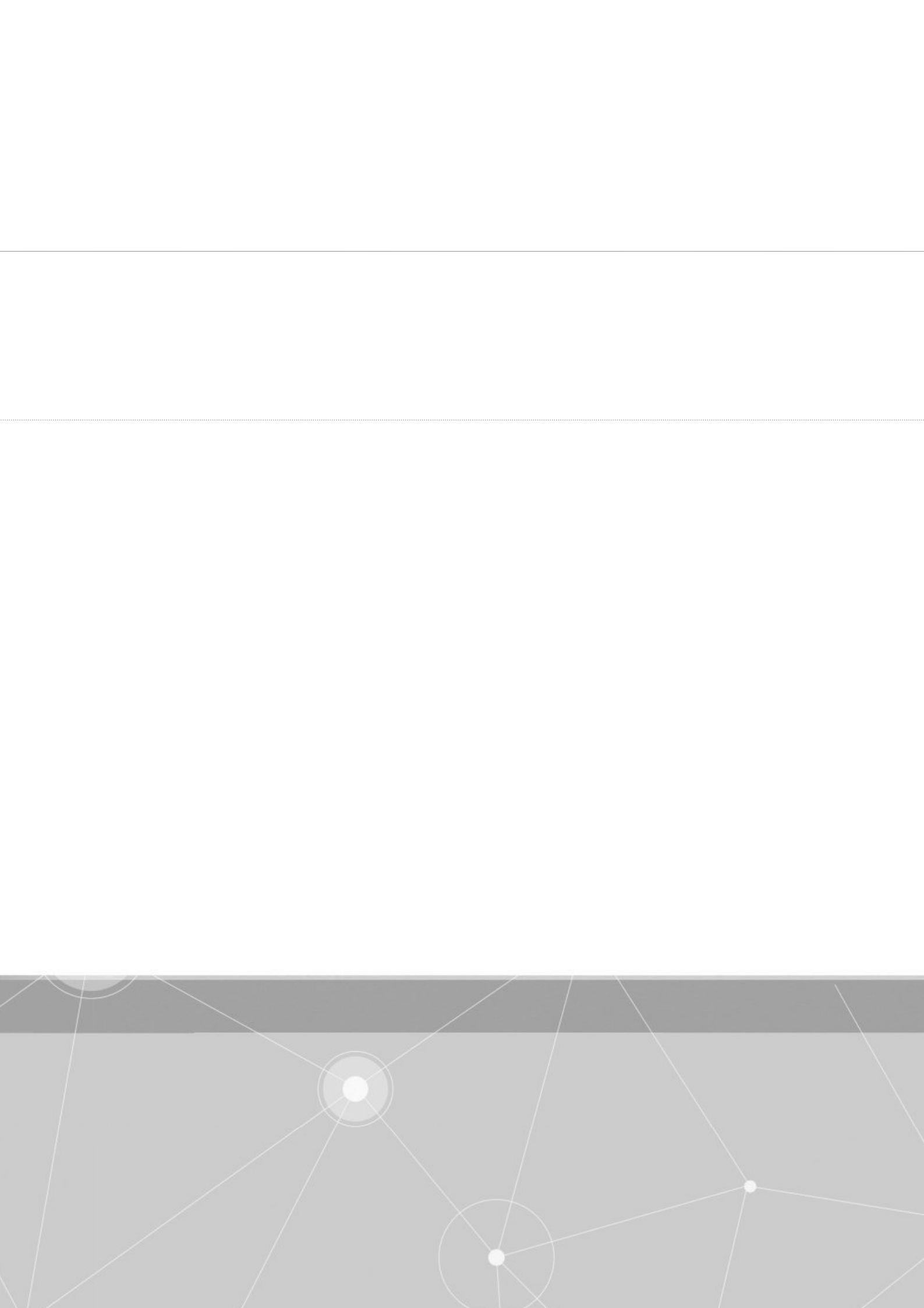
인권존중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 실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침해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사업장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 인권영향평가 자회사로 확대
- ▶ 사업장 대상 인권 실사(due diligence) 실시
- ▶ 인권노동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사내 협력사 인권영향평가 실시
- ▶ 고위험/중점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ESG 현장평가 지속적으로 실시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향후 인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과 관련된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해당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참고문헌

OECD	2011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대한민국 법무부	2021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UNGP	2017	Reporting Framework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법률교육안 제언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승)

김태환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일)

정구연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매년 약 2,500여 명의 보호종료 청소년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사회로 진출하여 자립하고 있음¹⁾.
- 보호종료 청소년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자립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사회경험과 법률 지식 부족에 따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임금착취, 임차보증금사기, 채무불이행, 채무상속 등의 법적분쟁에 휘말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채를 지게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²⁾.
- 법률지식이 부족한 보호종료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진출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자립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법률문제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이런 법률문제 발생 시 적절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에게 특화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일회성이나 특강형태의 단기성 법률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음.
- 여기서 보호종료 청소년이 현실에서 자주 겪게 되는 법률문제들을 영역별로 유형화한 후 영역별로 적실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법률교육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도출됨.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교육안을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호종료 청소년은 현실에서 자

1) 박승대,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9. 9). 1.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2020. 12.), 요약1.

주 겪게 되는 법률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보호종료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법령과 선행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법률교육안 등을 분석하고 보호종료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적실성 있는 법률교육안을 개발함으로써 보호종료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 보호종료 청소년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 현황 조사 및 이에 따른 필요 법률교육 분야 파악
 - 보호종료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법률지식을 교육의 내용에 담기 위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들을 파악하여 영역별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과 보호종료 청소년 및 보호종료 청소년 교육담당자로 구성된 포커스그룹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이 현실에서 자주 겪고 있는 법률문제들은 무엇이며, 보호종료 청소년이 어떤 법률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그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역별 법률교육 분야를 파악함.
- 보호종료 청소년의 학습능력과 연령 등을 고려한 교육방법 검토와 영역별 법률교육안 개발
 -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의 학습능력과 연령 등을 고려해 법률교육안에 포함될 내용과 적절한 수준, 교육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법률교육안에 반영할 필요 있음.
 - 기존 청소년 대상 법률교육과정과 법률교육안 등을 참고하여 청소년 연령층에 적합한 법률교육의 수준과 교육방법을 검토하고,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법률교육안을 활용한 시범강의 진행과 피드백을 통한 보완 및 개선
 - 개발된 법률교육안을 교안으로 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강의를 진행하고, 시범강의 후 강의대상 보호종료 청소년들로부터 법률교육안의 난도와 적정성, 수용성, 요청사항 등을

피드백 받아 법률교육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함.

- 개발된 법률교육안을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하는 보호자, 교육담당자 등에게 제공하고 의견을 구하여 법률교육의 난도와 적정성, 수용성, 요청사항 등을 피드백 받아 법률교육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함.

□ 각 영역별 코스워크로 구성된 법률교육안의 배포 및 보급

- 본 연구 결과 완성된 법률교육안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단체(브라더스키피,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배포 및 보급
-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의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법률교육안이 일회성 강의자료로 소모되는데 그치지 않고 보호종료 아동들이 법률문제 발생 시 수시로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II.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 법률교육 실태

1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 보호종료 청소년의 정의

- 보호종료 청소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하며,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³⁾임³⁾.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정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없음⁴⁾.
- 「아동복지법」 제16조는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종료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능력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조치 해제 및 시설 퇴소를 하여 자립해야만 함.
- 다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종료 청소년이 원할 경우 보호종료 시기를 25세까지 늦출 수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의 현황

- 2015-2022년까지 8년 동안 보호종료 청소년의 수는 전국적으로 15,003명에 달하며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는 아동 중 약 2,500명(서울의 경우 약 300명)이 매년 사회에 진출하고 있음⁵⁾.

3) “서울시복지재단, 보호종료아동 자립·범죄 피해 법률지원 협약”, 복지뉴스, (2022. 2. 25),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65>.

4) 김형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 Vol. 22 No. 2(2022), 470.

5)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종료아동 취업지원활성화 방안(2021.12), 요약1.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19년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수준평가대상자 12,796명 중 취업자는 38%, 진학자는 10.7%, 입대 3.5%, 무직이며 취업 의지도 없는 비율은 47.8%이며, 적지 않은 숫자의 보호종료 청소년이 사회경험과 법률지식 부족에 따른 사기피해, 정착금 편취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⁶⁾.
- 관계부처 합동 2020년 자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율이 36.1%에 이르며, 보호종료 청소년의 24.3%는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관련 부채가 평균 605.1만 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고시원, 숙박시설 등 임시·취약 주거 거주율은 16.7%이며,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나 높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⁷⁾.
-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 근거해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주요 자립지원서비스는 대부분 주거와 경제적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교육과 관련된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특화 사업이 없고, 어린 나이에 사회 경험과 법률지식 없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2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

□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제1호)’을 명시하고 있음(법 제38조).
- 또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법 제39조).

6) 허민숙, 자립지원의 공백 :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 국회입법조사처(2021. 4. 7.). 2.
 7) 김미영, 최정숙,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자의 자립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사회적기업 (주)브라더스키퍼 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3권 1호(2022),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법 제39조의2).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2일 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인력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⁸⁾ 2023년 현재 전국 18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17개 광역지자체별 1개, 경기도 2개)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자립지원교육 대상자는 ①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②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사람, ③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시행령 제38조)이며,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①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②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③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8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의 유형으로 ‘교육’이 제시되고 있지만, 자립지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필수적 커리큘럼 등이 부재하고, 시설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일회성 교육(성공한 명사들의 성공스토리, 외부 전문가가 아닌 기관/시설 담당자가 진행하는 기초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집단생활을 하기 위하여 통제받고 수동적인 생활에서 스스로 문제해결력을 기르지 못한 보호종료 아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법)에 대한 교육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필요하지만 실제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인 자립지원 교육에 ‘법률교육’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3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실태

□ 아동권리보장원 - 2022 아동복지시설 온라인 자립교육

- 아동권리보장원은 매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자립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2022년에는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연장보호 포함, 연령무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홈페이지(<https://ncrcjarip.kmaclxp.co.kr/>)에서 동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 국가가 ‘부모’심정으로 챙기겠습니다”, 2022. 8. 31.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였음).

- 교육내용은 ‘자립지원’ ‘주거’ ‘경제’ ‘진학’ ‘법률’ ‘자립정보’ 등 총 6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시간은 아래와 같음.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자립지원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1시간
2	주거	LH주거지원, 집 구하기, 집 계약, 집 관리	1시간
3	경제	통장관리, 지출관리, 금융상품, 금융피해	1시간
4	진학	수시/정시, 입시개요 및 전형, 대학생살, 장학금	1시간
5	법률	근로계약, 임대차, 금융사기, 성폭력, 생활 속 분쟁	1시간
6	자립정보	국가지원제도 신청방법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지원제도)	1시간

- 해당 교육영상은 2021년 온라인 자립교육 영상과 동일하고, 개별 과목별로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함.
-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중앙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총 6개의 교육 과정 중 ‘법률’ 분야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교육시간이 1시간으로 매우 짧고, 교육방식이 온라인 강의를 편면적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에 한계가 있음.

□ 광역지자체 설립 자립지원전담기관(전국 18개소)

-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청소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총 18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이 중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한 사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법률 교육 프로그램은 찾을 수 없었음.
- 다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의 경우 서울사회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2022년 2월 체결¹⁰⁾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과정에서 겪는 범죄피해와 제반 생활법률 분쟁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나,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9)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복지시설 온라인 자립교육과정 실시’ 결과 보고자료

10) 서울사회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보도자료]서울사회복지재단-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자립청년 범죄피해구제 법률지원 협약, 2022. 2. 25.

□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직접적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법무부는 이로운 법(법사랑 사이버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영상 등 법률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 홈페이지 : <https://www.lawnorder.go.kr/portal/main.do>
- 보건복지부는 2022년 ‘같이 서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자립정보북¹¹⁾’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자립정보북은 자립지원사업, 소득, 주거, 금융, 진학, 취업, 의료 및 건강, 기타, 알아두면 꿀팁 등 9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 중 법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민간기관(학교 및 시민사회단체)

- 공공 부문에서 충분하지 않은 법률교육 프로그램의 공백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부 해소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서울시 거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업하여 2021년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문제 Q&A’책¹²⁾을 발간하여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음. 기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법률자료들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내용이 많은 반면 위 책자는 질문/답변방식으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할 무렵 자발적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특강 교안을 만들어 각 분야별로 현장에서 직접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11) <http://www.gjarip.or.kr/ebook/gg05/>

1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외 1인, 서울대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문제 Q&A, 2021

4 당사자 및 관계자 경험 분석

□ 본 연구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의 현황을 조사함과 더불어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종료 청소년 관계자,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법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FGI를 진행하였음.

□ 기존 문헌¹³⁾에 따르면,

○ 보호종료 청소년은 착취에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 및 독립하여 고용주로부터 착취를 당하더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였고, 권리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¹⁴⁾.

- “학원 원장님은 일부러 사회 초년생 친구들을 고용해서 일을 과중시키거나 급여를 주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법적으로 엄청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만둘 때도 일 한 거를 다 받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학원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문자로 ‘그거 안 보내면 고발하겠다, 언제까지 보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제가 오히려 돈을 달라 얘기를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 “회사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하면 거기서 나와서 신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동법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노동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지도 모르다보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노동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 “사기 친 사람이 감금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현장에 같이 있어서 긴급체포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형들이 저한테 조사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형도 조사를 받으면서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도와주는 법률서비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 생활고로 인해 급한 마음에 도움을 청했을 때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연루되면서 오히려 금융사기를 당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음¹⁵⁾.

- “당장 돈이 필요해서 불법인지 모르고 동네 형이나 시설에서 생활한 분들이 돈 필요하면 이런 거 해볼래? 뭘 모르니까 따라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빚으로 돌아와서 개인회생 절

13) 정춘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나아갈 길”,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21.

14) 이하 사례 정춘숙(2021), 10면 참조.

15) 이하 사례 정춘숙(2021), 11면 참조.

차 밟는 사람 꽤 있어요.”

○ 불법도박이나 명의도용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여 벌금형을 받고, 세금을 체납하여 통장이 압류되기도 하면서 건강보험을 내지 못해 과도한 병원비가 부과되기도 하였음. 사회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했을 때 건강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개입이 없어서 불법적인 일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는 악순환을 만들었음¹⁶⁾.

- “보호자가 필요한 줄 알고 형을 불렀는데, 형이 정착금과 디딤 씨앗통장을 관리하면서 두세 달 만에 탕진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배를 땀는데 15~20만원 받아서 또 돈이 없고, 다시 PC 방에서 일자리 찾다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불법스포츠 토토, 핸드폰 강 하면서 기소당하고 벌금, 세금 등등 빚이 7000만원이 됐어요… 빌라를 제 명의로 사는 것처럼 바꿔놓고 담보대출을 2개 잡았어요. 대출 받고, 전세 세입자 받아서 돈받고… 신고하면 너도 처벌 받을 거라고 해서 각서 뽑아서 인주까지 찍으라고 해서 신고도 못하고 돈도 한 톨 못 받고 나왔어요.”

- “빌라 사기에 얹이면서 그때부터 집이 있으니까 건강보험료 한 달에 20만원씩 나왔는데 몰랐어요. 지금 260만원인가 밀려있고 주민세도 700만원이 미납돼 있어서 통장 압류될 거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건보 적용이 안 돼서 병원비가 180만원 나왔고 100은 국가에서 주는데 80은 내가 내야 한다고 해서 밀려 있어요.”

○ 자립지원전담기관이 8곳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도권과 지방에서 가용한 서비스와 자립지원 정보에 대한 격차도 경험함.

- “수도권은 선착순인데 대전 또 전남 쪽 보니까 거기는 상시 모집이더라구요. 이게 지원 사업이 너무 수도권에 치중되어있는 것이 아닌지 역으로 격차가 지방에서 나기도 하고…”

- “서포터즈로 지방에 사례발표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이런 곳들을 가보면 환경도 열악하고 친구들 자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사실 수도권 친구들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교육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동권리보장원도 서울에 있고 그런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를 접할 일이 전혀 없어요.”

○ 그 외에도 법률교육을 포함한 지원정책이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수혜율이 낮은 상태임.

- “연차별 고민수준이 정말 달라요.”

- “사업이 연 1일 정도 진행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필요하거나 뭔가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둔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취업패키지라고 조건부

16) 이하 사례 정춘숙(2021), 11면 참조.

수급자가 국비지원으로 학원 다닐 수 있게 하잖아요. 그 비슷한 개념으로, 예를 들면 검증된 국가공인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고자 할 때 좀 상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은 어떨까..”

□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 및 관계자의 FGI에 따르면,

○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는 법률교육 경험은 있으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생활지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특히 보호기간 중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교육의 경우 학습에 흥미를 보이는 일부 청소년 외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음.

- 보호종료 이전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고작 1년 이내, 또는 2~3년 이내에 시설을 나가게 되면 직면할 문제라고 설명을 하며 관심을 유도해도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보호시설 중 아르바이트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시설의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법률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욱 낮은 경향이 있음. 그에 비하여 아르바이트 등 외부 활동을 통해 갈등 상황을 경험해본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높은 관심을 보임.

○ 보호종료 이후 법률적·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고 나면 법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향상되나, 법률교육의 내용과 교육에서 사용되는 표현 등이 너무 어렵거나 낯설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기억하여 생활에 활용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법률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의지를 보였던 청소년의 경우에도 법률교육 중 한 번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 이후로 급격히 흥미를 잃고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임.
- 본인이 직접 경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나아가 다른 교육수강생들과도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도 있음. 직접 경험의 공유는 다른 청소년들의 법률교육 관심을 높이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집중도뿐 아니라 이해도에도 좋은 영향을 줌.

○ 보호가 종료되면 즉시 주거, 생계를 모두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적·경제적 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주거와 관련하여 스스로 집을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집에 입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임대차 전 과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례가 있음.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 유지보수나 원상회복 등에 대하여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했음.
- 직방 등 부동산 어플의 사용법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납부, 임대료 외에 관리비를 납부할 필요성과 같은 생활지식은 정확히 법률지식의 영역은 아니지만 주거 관련 법률교육에서 함께 다루어질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고취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음.
- 생계와 관련하여 지원금 외에 스스로 소득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정확히

- 어떤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음.
-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과 어디까지가 본인의 권리인지 알지 못하는 법률적 무지가 중첩되어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나 임금 체불 등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기도 함.
 - 충분한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고, 주위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좀 더 쉽게 넘어감.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한 번 범죄피해를 입으면 악순환이 반복되기 쉬운 것으로 보임.
-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금융사기, 성폭력 등)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음.
-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보이스피싱이나 작업대출, 다단계, 코인사기 등의 금융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의지할 보호자가 부재함.
 - 아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 실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함에도 이것을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고 나서 후회하기 쉽고, 한 번 피해를 입은 다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사례도 있음.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공범으로 얽히는 경우, 한 번 전과가 생기면 이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직장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며 상황이 악화되기도 함.
- 보호종료 청소년 관계자는 법률교육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만한 구성과 빈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이루어지는 교육도 지역별로 접근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이 있었음.
- 시설보호 청소년과 보호종료 청소년 모두 법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소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선택하지 못하고 주어지는 교육을 받는 환경이 법률교육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법·접근법에 따라 집중도와 교육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없는 환경임.
 - 서울-수도권-비수도권 도시-그 외 지역 사이에 법률교육 접근가능성에 너무 심각한 차이가 있음.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보호·보호종료 청소년들을 한 자리로 모으는 자립 캠프 같은 기회도 있지만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고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충분하지 않음.

5 문제점 분석 및 정리

-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는 보호종료 이후 다양한 법률적·경제적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지식을 구비하지 못하여 정확한 도움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교육의 필요성이 큼.
-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법률교육 분야는 주거, 생계, 범죄피해 등으로 파악됨.
 - 주거(임대차), 생계(근로관계),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이 법률교육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이고 생활밀착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인지하지 못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법률교육안에 반영해야 함.
 - 교육수강생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난이도나 교육방법을 연령대와 기초지식 수준에 맞추어야 함.
 - 일방적인 강의 방식보다 교육수강생들이 참여하고 경험해서 추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법률교육안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관계자들 역시 법률교육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보호종료 청소년들도 그 필요성과 효용을 조금씩 인지해나가고 있으나 아직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와 개선점이 있음.
 - 법률교육이 다소 일회적으로 이루어져서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충분히 고른 교육 기회가 보장되지 않음.
 - 법률지식은 독립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교육이 보호종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음. 법률교육의 필요성이 인지되는 시점과 법률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의 괴리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III. 청소년 법률교안의 개발

1 법률교안 필요사항

-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법률 교과과정에 맞는 법률 교안을 만드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크게 내용적인 측면과 교재 구성적인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음.
- 보호종료 후 자립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① 자립 시기가 빨리 오고, ② 자립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경제, 법률 등)을 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음. 이에 보호 종료 이전 시기부터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 이외에도 실제 자립생활에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함.
- 실제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경우 자립하고 나서 밖으로 그냥 내쳐진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과금을 내는 것도 해본적이 없고, 폰뱅킹을 사용하기도 어렵게 느껴지는 등,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다보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임대차계약이나 근로계약 등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문제는 더더욱 어렵게 느껴짐.
- 게다가 주변에 조언해줄 어른이 없다보니 사기나 기타 범죄등에 연루되어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 일부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법률 상담등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고, 청소년 지원 단체 등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2~3시간 정도의 일회적인 자립 지원 법률교육이 이뤄지고 있기도 함. 그러나 ‘자립지원 서비스’에서의 법률상담은 사후적인 상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적인 효과가 부족하며, 보호종료 예정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교육의 경우 일회적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학생들의 집중력등의 문제도 있어 기억에 오래 남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내용적인 측면과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용적인 측면에서,

- 기존의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의 경우 2~3시간 정도의 일회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 임대차, 형사 등 분야별 특강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몇 가지 대표 사례에 대해 QnA 형태의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뤄짐.
- 그러나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복잡한 법률관계의 양상이 예상되며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어짐에 따라 일회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는 법적 문제해결력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기존에 교육받지 못한 케이스를 접하더라도 법적 쟁점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며 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들의 조력을 받기 힘든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현장에서의 요구나, 학생들의 인터뷰, 기존 강의안 등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임.
 - 1) 근로관계 법률 교육 :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즉각 사회에 진출하여 근로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이 높음.
 - 2) 주택 임대차 등 관련 법률 교육 :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힘으로 주거를 마련,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이 높음.
 - 3) 형사 관련 법률 교육 : 혼자 사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사기 범죄등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져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이 높음.
- 따라서 위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구성적인 측면에서,

- 지금까지의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법률 교육은 각 쟁점에 대한 2~3시간 정도의 일방적인 형태의 법률강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형태의 강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기억에 오래 남지 않고, 2) 청소년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으며, 3) 배경지식이 없어 연계성이 부족한데다가, 4) 흥미 유발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구성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 2~3시간 특강형태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20~3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꾸려진 통합된 교안의 마련
 - 2) 실제 활동을 해볼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모의재판, 계약서 작성, 고소장 접수 등 앞으로 할 활동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흥미도 유발하고 기억에도 남도록 함.

- 3)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 : 특강자료 형태가 아닌, 책과 유사한 형태의 교재를 만들어 보호종료 이후에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법률교안의 분석 및 개선방안

□ 본 절에서는 기존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법률 교안 혹은 일반 청소년 대상 법률 교재들을 대해 간략히 살펴 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서울대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문제 Q&A¹⁷⁾

- 서울대에서 만든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문제 Q&A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FAQ 형태로 만든 책자임. 총 100여개의 질문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음.

추운 겨울이라 급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 비용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집주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보일러 수리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차
"임대차"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집을 빌려주고, 그 대가(차임·월세, 전세보증금)를 받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주거 목적의 임대차의 경우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보증금 회수할 때 우선순위를 주거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필요비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면서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벽지, 장판 교체 비용, 상하수도, 전기, 보일러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분인이 지출한 때에 그 즉시 임

전·월세 계약 해지와 갺신

2018년 6월 1일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0년 6월이 되어서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서 2021년 6월 1일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2년 연장되었으니 1년이 더 지나야 방을 빼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20년 6월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임차인인 저는 언제든지 방을 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인 2020년 6월에 서로 계약 만료나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갺신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갺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동의하면 협의한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

- 다만 어려운 법적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이에 대한 일부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바로 보기에는 난이도가 있다는 점,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 사례의 나열만 되어 있어 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프로젝트에서 만들 교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법률 지식과 사례를 결합하여, 법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해보임.

1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외 1인, 서울대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문제 Q&A, 2021

□ 청소년 법교육 자료 이로운 법(법사랑 사이버랜드), 법무부¹⁸⁾

○ 법무부에서는 이로운 법 법사랑 사이버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광범위한 범위의 법 관련 내용에 대해 영상 등 법률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영상 자료는 보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어도, 전반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며 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체계나 구성이 없어,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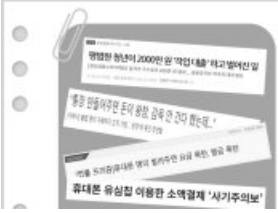
□ 청소년을 위한 법률강의 교안¹⁹⁾²⁰⁾

○ 본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연구진 및 연구진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등을 위한 특강에 사용했던 법률강의 교안들이 있음.

18) https://www.lawnorder.go.kr/portal/cluser/intro/lecture_bbs/lawYouth_intro.do

19) 정구연, 생활법률교육 강의안, 2022

20)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외 1인, 슬기로운 법률생활 주거&노동, 2022

 <p>일상생활형 사기</p> <p>보이스피싱? 스미싱??</p> <p>핸드폰 가개통? 유심사기??</p> <p>작업대출?? 동장 대연?</p> <p>다단계피해? 수상한 고객센터?</p>	<p>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내로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마친 자립이</p> <p>자립이의 선택은?</p> <p>A 그래, 전입신고는 굳이 하지 말자! 전입신고가 중요한가?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계약서도 썼으니깐 괜찮을거야!</p> <p>B 인터넷에서 보니까 전입신고는 꼭 하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자!</p>
<p>생활법률교육 강의를(정구연)</p>	<p>슬기로운 법률생활(서울대 공익인권센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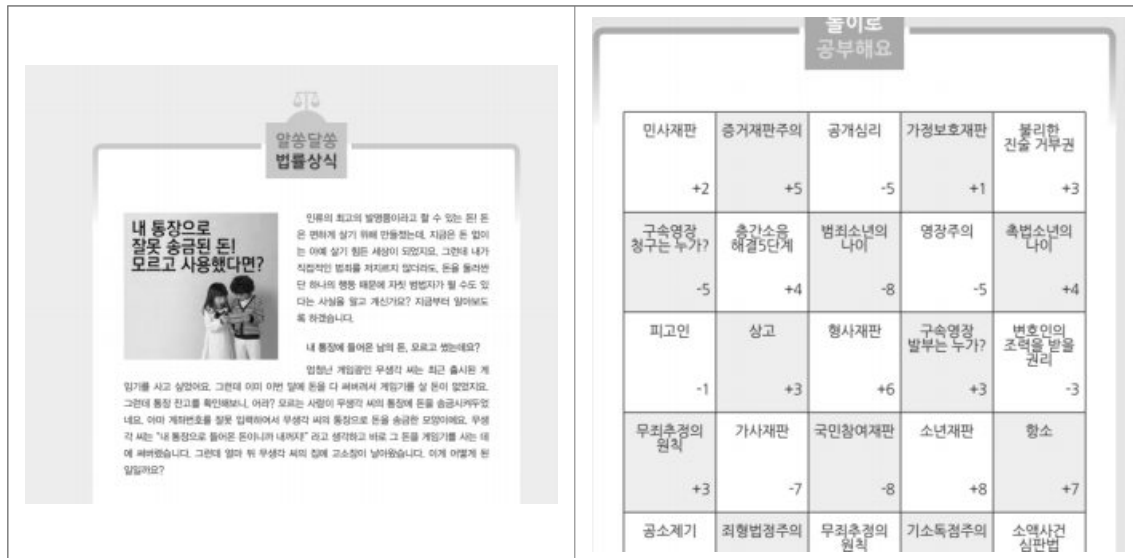
- 이러한 법률강의 교육안은 강의 요청 주체 및 보호종료 청소년들과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해 온 변호사 등의 수요 및 인식에 따라 만들어져,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 다만 일회적 강의로 끝나는 강의안이라는 점, 전반적인 법률 해석 능력 및 법적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일방적인 강의안이어서 인터랙티브한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점, PPT 자료만으로는 추후 학생들이 내용을 복기하기 어렵다는 단점 등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교안들에서 다뤄온 내용들을 새로 만들게 되는 법률 교안에 녹여내되, 법률 지식과 함께 서술하고, 일부 PPT는 활동 형태로 수정하여 인터랙티브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흥미 및 참여를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법과 사회 교과서

-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 중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만들어짐. 법과 사회 과목은 법적 사고력 신장 및 법 영역과 관련된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
- 크게 개인생활과 법, 국가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학교 생활과 법이라는 큰 카테고리 하에서 사법, 헌법, 공법, 노동법 등에 대해 다룸.
- 법과 사회 교과서는 교재로서의 완성도가 높고, 다양한 활동을 담고 있다는 점이 장점임. 그러나 일부 내용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가 없는 내용이며, 근로관계 및 임대차 관계, 형사관계 등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간략화 되어있다는 점은 단점임.
- 따라서 법과 사회 교과서의 활동, 구성 등의 틀을 참고하되, 전반적인 내용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내용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²¹⁾

○ 법원행정처에서 청소년에게 사법 제도 및 재판, 법률 상식등을 안내하기 위해 만든 교재



-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만큼 재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편이고, 흥미로운 사례들이나 법과 관련된 QnA, 법 관련 활동등도 다양히 수록되어 있는 것은 장점임.
- 다만 지나치게 재판이나 법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고, 어려운 법률 용어 등이 많이 사용되는 데다가, 청소년 용 교재여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해 실제 필요한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이 단점임.

3 법률교안 초안의 개발

□ 목차의 구성 : 강의 교재를 만들기 위해 우선 교안에 들어갈 내용 및 목차를 정하기로 함.

○ 현장에서의 수요 및 변호사들의 강의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종합한 결과 주요 수요는 앞서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음.

- 1) 근로관계 법률 교육 :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즉각 사회에 진출하여 근로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이 높음.
- 2) 주택 임대차 등 관련 법률 교육 :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힘으로 주거를 마련, 유지해

21) 법원행정처,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2021

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이 높음.

- 3) 형사 관련 법률 교육 : 혼자 사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사기 범죄등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져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이 높음.

○ 따라서 위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거기에 일반적인 법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일반법률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함.

○ 그 결과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1) 제1장 우리 생활 속의 법 : 일반 생활 법률
- 2) 제2장 임대차계약 및 주거문제와 법 : 주거 관련 법률
- 3) 제3장 범죄를 조심하는 법 : 형사 관련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을 담음.
- 4) 제4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노동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담음.

□ 구성적인 측면에서,

○ 제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 1) 2~3시간 특강형태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20~3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꾸려진 통합된 교안의 마련을 위해,
 - 각 장별로 1시간~1시간 30분량의 챕터를 나눠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 네 번째 수업으로 나눔.

첫 번째 수업. 법이란 무엇일까?

◇ 법의 정의(定意) : 법은 도덕의 최소라는 내용을 사회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 중에서도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사회 구성원들(우리나라라면 국민이겠지요?)의 약속에 의하여 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법률' 만해도 총 1500개가 넘게 있고, 각 법률마다 지켜야 할 내용들이 수십, 수백가지씩 있다고 하니, 정말 지켜야 할 내용이 많지요?

◇ 법의 종류 : 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라던가, '묘지는 남의 땅 위에 있더라도 묘지 주인의 후손이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적어놓은 법은 없지만, 실제로는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문자로 기록한 법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법은 성문법이지요.

- 2) 실제 활동을 해볼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소장 작성, 고소장 작성, 계약서 작성, 법률 검색 등의 직접 활동해볼 수 있는 '활동해보기' 프로그램을 작성

활동해보기 : 민사소송을 해보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이용하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홍길동에게 빌려간 돈 1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합니다.
3.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본안 - 소장을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민사 서류(소장) 홈 >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① 화면도움말 ② 출력

1 단계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 / 2단계 전자서명 / 3단계 소송비용납부 / 4단계 문서제출

1 사건정보 **2 입증/첨부서류** **3 작성문서확인**

사건기본정보 * 필수입력사항

* 사건명	선택	사건명 검색
* 청구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재산권상청구 <input type="radio"/> 비재산권상 청구 -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상 청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소가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금액 <input type="radio"/> 토지 등의 평가액 <input type="radio"/>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소가	<input type="text"/> 원 소가 산정 안내 (원) - 여러 개의 비재산권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여 위 금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상청구와 재산권상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여 위 금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개의 비재산권상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다액을 소가로 하여 위 금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가계산서는 첨부 단계에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는 민사 본안 사건의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법원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법원 찾기
------	----------	-------------------------

5. 사건명은 대여금, 소가는 1,000,000원, 법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을 입력합니다.
6. 당사자입력에서 원고는 본인이름, 피고에는 '홍길동',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을 입력합니다.
7. 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해봅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3)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 : 특강자료 형태가 아닌, 책과 유사한 형태의 교재를 만들어 보호종료 이후에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잠깐!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헛갈릴 때 주위에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첫째로, 언제든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경찰서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곳이거든요. “시민의 지팡이”라는 경찰을 믿고, 112로 전화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1301(검찰 보이스피싱 피해접수 전화), 1332(금융감독원 피해접수 전화)로 전화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스피싱은 범죄인 만큼 112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답니다.

둘째로, 경찰서나 검찰, 금융감독원 같은 낯선 곳에 전화하기가 무서울 때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명칭은 뭐라도 상관 없어요)에 방문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요. ‘민원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직원 분들 중에 어느 분이라도 붙잡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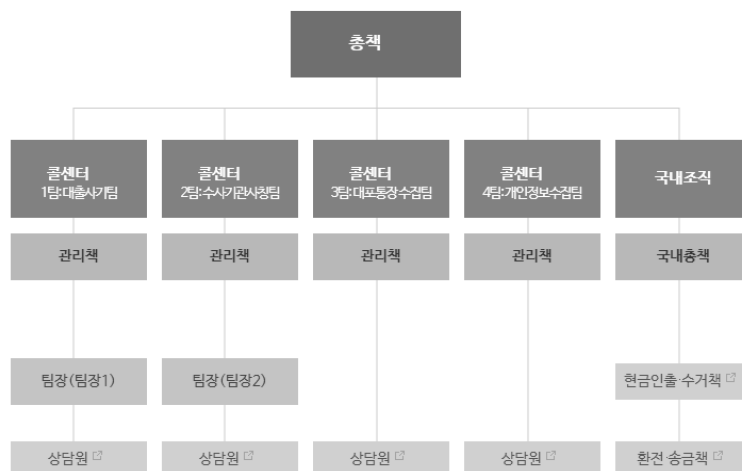
셋째로, 이미 보이스피싱 전화에서 시키는대로 은행에 가버린 상황이라면? 은행 창구에서 응대하는 직원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흔해져서, 이제는 은행 창구직원들은 전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 큰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면 어떤 목적인지, 어디에 쓸 예정인지 귀찮을 만큼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니 꼭! 돈을 꺼내거나 이체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직원에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 4) 심화학습을 통해 흥미를 느낀 학생들의 경우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심화학습

- ◎ 보이스피싱 범죄도 점점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아래 그림처럼 복잡한 범죄조직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아래 그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범죄조직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중 발췌〉

총책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각 세부 조직에 범행 방법이나 수익 분배 등을 지시하는 우두머리
콜센터	특정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전화 등 전화 설비를 설치해놓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전화를 하는 실제 공간
상담원	콜센터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자들로, 범행 초기에는 한국인이 서툰 외국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현재에는 한국인이 직접 교육을 받고 전화를 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포통장모집책	소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과 접촉하여 계좌를 만들고 인출조직에 판매하는 팀
현금인출·수거책	콜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
환전·송금책	인출·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미있으라고? 영화 같은 이야기이니까?

그런 가벼운 이유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부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특히 ‘대포통장모집’과 ‘현금인출·수거책’과 연관되지 않도록 꼭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평범하게 살면서 범죄랑 얽힐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얼떨결에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조심할 것들을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 내용적인 측면에서,

- 기존 교재의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법률 용어에 대한 의미를 최대한 쉽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함.

용어 훑어보기

- 원고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에는 ‘원고’가 있지요.
-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 피고인 : 형사소송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 피의자 :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 판사 : 판사(判事)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검사 :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변호사 : 변호사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변호인 :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리인 : 민사나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 당사자들 대신해서 재판을 진행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본 교재를 이용해 소장을 작성하거나 전자소송을 하거나,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에 있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함.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채권자(돈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시 ○○구 ○○길 ○○(우편번호 ○○○-○○○) 채권자의 주소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채무자(돈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는 모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시 ○○구 ○○길 ○○(우편번호 ○○○-○○○) 채무자의 주소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어떤 류의 돈을 받을 것인지 적습니다.

빌려준 돈이면 대여금, 물건값이면 매매대금 등

청구금액 : 금 30,000,000원 받을 돈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보를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원래 받아야 할 돈 30,000,000원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이자와 비슷한 것입니다) 및 소송비용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신청취지 및 청구취지입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낸 돈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2023. 3. 1. 채권자에게 30,000,000원을 빌리면서 2023. 3. 31. 까지 이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소갑 제1호증 차용증 참조). 그런데 2023. 4. 1. 이 되도록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보를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내가 신청취지에 적은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적습니다.

입 증 서 류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
내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줄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 | | |
|-----------|----|
| 위 입증서류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00. 00. 00.

위 채권자 000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은 아무 법원에나 신청할 수 없고, 내 집이나 상대방 집이 있는 인근 법원(관할법원이라 합니다)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교재에서는 법률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아 생략했던 상속문제나 실업급여 문제, 민원서류 발급 문제등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다뤄 청소년들이 교재를 지속적으로 옆에 두고 사용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활동해보기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실업급여 신청 | 모성보호 급여신청 | 인증서 로그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1 / 3 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로그인

개인명령서 프로그램 적용 ☐ ※ 개인명령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PC에 개인명령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위해 입력하는 개인 정보(주민번호, 비밀번호 등)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주세요.

인증방법 개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PASS 인증 | 디지털원패스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에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 인증에만 사용됩니다.

이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뒷자리

고용보험 인증서 로그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합니다.
3.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합니다.



2/8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1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종료 후 휴업급여 수급자
-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신청인

성명	김민준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전화번호	02-1234-5678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실업인정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	150일(135)일	총 실업인정일수	15일
수급기간	2019/09/06 ~ 2023/02/10	수급기간 만료일	2023/02/10
구직급여일액	60,120 원		

신청서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2022/10/13 (3회차) (제출일: 2022/10/13)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2/09/29 ~ 2022/10/13
지급은행	농협	예금주	김민준
계좌번호	1234567890123456789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 주세요.	

지급계좌번호변경

- 홈페이지 상단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봅시다.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해 봅시다.

4/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2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근로내역

닫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하거나 수급이 발생하는 회의참석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내역을 입력하십시오.
일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근로일에 대한 구직급여 일액이 감액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소득액과 무관하게 해당 근로일에 대한 구직급여 일액 감액)
1개월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한 경우 또는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기로 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표시는 필수항목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닫기 ^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형경심판(심사청구) 또는 형경소송 등을 통해 소급하여 산재 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취업내역

닫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하십니까?

☐ 예 ☒ 아니요

취업예정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중 근로자가 발생하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관할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3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1. 구직활동내역

Tip

워크넷을 통해 인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크넷을 이용하시면 구직활동/실업인정신청이 더욱 편리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 있음 ☐ 없음

사업체증복확인

지난구직활동내역보기

구직활동내역1

초기화(-)

구직활동확인(워크넷)

구직활동없음

구직활동일자 *	사업체명 *	인사담당자(담당부서) *	사업장 주소(E-mail)	전화번호 *
(기간)(2022/09/29 ~ 2022/10/13)				
2022/09/30	한대*	주식*	주식(주)한대*	010 - 9999 - 9999
모집직종 *	보수수준	구직방법 *	응모방식 *	활동결과 *
인사		신문광고(지면,인터)	직접방문	채용

6.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이 있으면 체크하고 아래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다.
7.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구직활동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해 보시다.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고용보험 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6/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Tip

온라인 취업특강은 각 과정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되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ex) 거래계, 직업훈련, 부당해고 구제자,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 있음
☐ 없음

과정

세부내역(훈련기관,과정명,기간 등)

선택하세요

+

7/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5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문기 ▼

자영업(대안계 판매업자, 차권수심원,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준비활동을 할 경우에는 관할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실업인정 당일 출근 예정일 경우 관할센터에 연락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

구직활동

구직활동20120

8/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6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귀하는 다음 실업인정일(2022/11/10)에 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업인정일은 예정된 날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제출(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완료 되었는지 제출상태를 꼭 확인하신 후 인터넷 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고 실업인정일 17:00가 지나면 더 이상 회수(수정)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제출을 원할 때는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을 '인원현황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경우, 제출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제출 후 문자를 못받으신 경우, 제출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유료)

작성하신 내용이 수정, 삭제, 제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1577-7114, 2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제출

8.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필수항목을 입력해 보시다.

9.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을 입력해보시다.

10.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을 모두 마쳤으면 우측 하단의 제출버튼을 눌러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것으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후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 일이 생기면 위에서 연습했던바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한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24

- 법률 Q&A 형태로 제공되던 책자들에 나와있는 사례들도 강의교재안에 녹여내어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함.

◇ 상속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등의 방법을 통해 받았어야 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권을 침해당한날로부터 10년안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사전증여(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을 말합니다)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원래 상속분의 1/2만큼은 법원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교안 초안에 대한 피드백 및 법률교안 보완

- 위와 같이 만들어진 교재 초안을 바탕으로 보호종료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및 강의를 해온 변호사 등 다수의 사람에게 인터뷰를 시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로 함.
- 인터뷰지는 강의유경험 변호사용 및 보호종료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용으로 각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법률교육안 제언을 위한 FGI 설문지

〈FGI의 배경〉

- ☐ 본 연구진은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교육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보다 개선된 형태의 법률교육안을 도출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 ☐ 본 FGI 인터뷰는 연구결과로서 제작될 법률교육안이 현장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뿐 아니라,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법률교육을 제공하는 보호자 내지 교육담당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육담당자의 경험과 수요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FGI의 대상〉

- ☐ 참석자
-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청소년 법률교육 관련자(법률교육진행 담당자)

〈FGI 사전 질문지〉

I.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청소년 법률교육(이하 “법률교육”) 경험 일반사항

1. 법률교육을 진행하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지요?
 - 1-2. 경험이 있다면 몇 번 정도인지요?
 - 1-3.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걸쳐 있는지요?
 - 1-4. 교육대상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어떠하였는지요?
2. 전반적인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세부내용은 II.항에서 답변 가능)

II. 교육주제 및 세부내용에 대한 경험 내지 의견

1.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요?
 - 1-2.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는 누구의 결정(ex: 교육주관기관 담당자, 지원업무 담당자, 본인)에 의해 선정되었는지요?
 - 1-3. 스스로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를 결정하여 전달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셨는지요?
 - 1-4. 본인 외의 주체가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를 결정하여 전달 받았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전달 받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요?
2. 실제 진행하였던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요?
 - 2-2. 교육진행하였던 교육주제를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2-3. 그 중 특별히 교육대상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었던 교육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요?
 - 2-3. 법률교육의 세부내용 중 특별히 기억나거나 교육대상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교육주제/세부내용에 따른 교육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집중도는 어떠하였는지요?
 - 3-2. 교육대상자들이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높은 집중도를 보인 교육주제/세부내용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교육주제/세부내용이었는지요?
 - 3-3. 교육대상자들이 연령대, 성별, 기타 조건에 따라 반응이나 집중도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요?
 - 3-4.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 주로 어떠하였는지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교육대상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법률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여 아쉬웠던 교육주제/세부내용이 있는지요?
 - 4-2. 있다면 어떤 교육주제/세부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III. 교육 방식

1. 법률교육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요?
 - 1-2. 특별히 기억이 나거나 깊은 인상을 받은 교육 방식이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교육 방식에 따른 교육대상자들의 호응이나 집중도는 어떠하였는지요?
 - 2-2. 교육대상자들이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높은 집중도를 보인 교육 방식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요?
 - 2-3. 실제 상황 또는 관련 서류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호응이나 집중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는지요?
 - 2-4. 교육대상자들이 직접 발언하거나 검색해보거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호응이나 집중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는지요?
 - 2-5. 교육대상자들이 연령대, 성별, 기타 조건에 따라 반응이나 집중도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요?
 - 2-6.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 주로 어떠하였는지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교육 방식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IV. 난이도 및 효과

1. 일반적으로 법률교육의 난이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는지요?
 - 1-2. 교육대상자들의 조건에 따라 법률교육의 난이도를 조절한 적이 있는지요?
 - 1-3.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조절하였는지요?
2. 법률교육의 난이도에 따라 교육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집중도가 어떠하였는지요?
 - 2-2. 난이도가 높은 경우 교육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집중도가 어떠하였는지요?
 - 2-3. 난이도가 낮은 경우 교육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집중도가 어떠하였는지요?
3. 법률교육의 난이도가 교육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3-2. 난이도가 높은 경우
 - 3-3. 난이도가 낮은 경우

V. 개선점에 대한 의견

1. 다음 각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점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1-2. 교육주제 및 세부내용
 - 1-3. 교육 방식

- 1-4. 난이도 및 효과
- 1-5. 법률교육 기회의 빈도 또는 접근가능성
- 2. 그 외에 법률교육과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나 요청사항,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의 유경험 변호사용 인터뷰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법률교육안 제언을 위한 FGI 설문지

〈FGI의 배경〉

- ☐ 본 연구진은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교육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보다 개선된 형태의 법률교육안을 도출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 ☐ 본 FGI 인터뷰는 연구결과로서 제작될 법률교육안이 현장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뿐 아니라,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법률교육을 제공하는 보호자 내지 교육담당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육담당자의 경험과 수요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FGI의 대상〉

- ☐ 참석자
 -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청소년 법률교육 관련자(당사자성 있는 비영리단체 종사자)

〈FGI 사전 질문지〉

I.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청소년 법률교육(이하 “법률교육”) 경험 일반사항

- 1. 법률교육을 진행하거나 주최한 경험이 있는지요?

- 1-2. 경험이 있다면 몇 번 정도인지요?
- 1-3.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걸쳐 있는지요?
- 1-4. 교육대상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어떠하였는지요?
- 2. 전반적인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세부내용은 II.항에서 답변 가능)

II. 교육주제 및 세부내용에 대한 경험 내지 의견

- 1.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요?
 - 1-2.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는 누구의 결정(ex: 교육진행자, 교육주관기관 담당자, 본인)에 의해 선정되었는지요?
 - 1-3. 스스로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를 결정하여 전달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였는지요?
 - 1-4. 본인 외의 주체가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를 결정하여 전달 받았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전달 받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요?
- 2. 실제 진행되었던 법률교육의 교육주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요?
 - 2-2. 교육진행되었던 교육주제를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2-3. 그 중 특별히 교육대상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었던 교육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2-3. 법률교육의 세부내용 중 특별히 기억나거나 교육대상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3. 교육주제/세부내용에 따른 교육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집중도는 어떠하였는지요?
 - 3-2. 교육대상자들이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높은 집중도를 보인 교육주제/세부내용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교육주제/세부내용이었는지요?
 - 3-3. 교육대상자들이 연령대, 성별, 기타 조건에 따라 반응이나 집중도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요?
 - 3-4.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 주로 어떠하였는지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4. 교육대상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법률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웠던 교육주제/세부내용이 있는지요?
 - 4-2. 있다면 어떤 교육주제/세부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III. 교육 방식

1. 법률교육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요?
 - 1-2. 특별히 기억이 나거나 깊은 인상을 받은 교육 방식이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교육 방식에 따른 교육대상자들의 호응이나 집중도는 어떠하였는지요?
 - 2-2. 교육대상자들이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높은 집중도를 보인 교육 방식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요?
 - 2-3. 실제 상황 또는 관련 서류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호응이나 집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2-4. 교육대상자들이 직접 발언하거나 검색해보거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호응이나 집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2-5. 교육대상자들이 연령대, 성별, 기타 조건에 따라 반응이나 집중도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요?
 - 2-6.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 주로 어떠하였는지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현장에서 보인 교육대상자들의 호응이나 집중도가 법률교육의 결과 및 실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3-2. 현장에서 호응이나 집중도가 좋았던 법률교육 이후, 교육대상자들이 법률교육 관련 내용 또는 다른 교육분야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가 있는지요?
4. 교육 방식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IV. 난이도 및 효과

1. 일반적으로 법률교육의 난이도는 어떠하였는지요?
 - 1-2. 난이도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다면, 어떤 부분(ex: 교육에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 교육주제 내지 내용 자체의 낯설, 교육시간의 길이 등)이 문제였는지요? 그때 법률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1-3. 난이도가 낮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다면, 어떤 부분(ex: 교육에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 교육주제 내지 내용 자체의 낯설, 교육시간의 길이 등)이 문제였는지요? 그때 법률교육의 내용

이나 방식에 대해 기억나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법률교육의 난이도에 따라 교육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집중도가 어떠하였는지요?

2-2. 난이도가 높은 경우 교육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집중도가 어떠하였는지요?

2-3. 난이도가 낮은 경우 교육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집중도가 어떠하였는지요?

3. 법률교육의 난이도가 교육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2. 난이도가 높은 경우

3-3. 난이도가 낮은 경우

V. 개선점에 대한 의견

1. 다음 각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필요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2. 교육주제 및 세부내용

1-3. 교육 방식

1-4. 난이도 및 효과

1-5. 법률교육 기회의 빈도 또는 접근가능성

2. 그 외에 법률교육과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나 요청사항,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 인터뷰 관련 각 파트별로 5~10여명에게 서면 혹은 화상, 대면 인터뷰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강의유경험 변호사 중 4명, 유관기관 관계자 1명이 인터뷰에 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강의 유경험 변호사들의 인터뷰 내용 정리

○ 강의 경험 분석 : 적게는 4~5회에서 많게는 수십회의 보호종료청소년 법률교육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강의 기간은 대략 2017년부터 현재까지이며, 대상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나 보호종료 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경우도 있었음.

○ 강의는 주로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제를 정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 강의방식은 사례를 소개하고 퀴즈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 강의에 대한 대상들의 반응 분석 : 대면의 경우가 비대면보다 집중도가 높았던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경우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피드백이 있음.
- 본 교재에 대한 피드백 : 함께 생활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상황에 대한 체험학습이 추가되는 것은 바람직해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 난이도도 지금보다 많이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강의에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었음.

□ 유관기관 관계자 인터뷰 내용 정리

- 강의 경험 분석 : 유관기관 관계자의 경우 수십차례 이상 법률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음.
- 강의는 주로 강의 요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제를 정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 강의방식은 사례를 소개하고 퀴즈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 강의에 대한 대상들의 반응 분석 : 대면의 경우가 비대면보다 집중도가 높았던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경우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피드백이 있음. 강의내용도 내용이지만, 강의자의 역량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유관기관 관계자의 의견이었음.
- 본 교재에 대한 피드백 :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20~30시간 정도의 강의를 학생들이 듣게 할 수도 없고, 듣고자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피드백이 가장 중요했음. 최대한으로 잡아도 2시간 정도의 강의를 1년에 2차례 진행하는 것이 최대일 것이라는 의견을 받음.

□ 인터뷰에 따른 피드백 내용 정리 및 교재 초안 개선 방안 마련

- 사례나 활동을 다수 집어 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시간 분량의 교재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는 지적. 이에 만들어진 교재는 외부 교육시 배포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 교재에 대한 동영상 강의등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 학생들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보호종료 청소년 대면 교육시에는 위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1시간 분량의 PPT 4편 및 PPT 내용을 설명해주는 표준 교안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보완하기로 함.
- 즉, 1)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대면 법률교육시에는 법률교육 요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 파트별 PPT를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2) 이때 참가한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교재를 배포하고 동영상 링크등을 안내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식으로 PPT 및 교안을 각 파트별로 작성, 향후 연구자들이 소속된 인권 단체 등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상대 교육을 나갈 시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함.



IV. 법률교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법률교안 활용방안

- 현재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그 중에서도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에서 지속적으로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교육시 표준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시간 분량의 본 교재의 경우에는 인쇄 및 제본작업을 한 후 향후 외부교육시 배포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 이러한 배포용 교재를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 청소년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위와 같은 자율학습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교육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기타 베네핏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참여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2 법률교안 제작에 따른 기대효과

- 본 법률 교재는 기존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좀 더 법률적인 상식 및 마인드를 키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많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됨.
- 지금 당장은 법률교육에 대한 수요나 참여도가 낮은 문제점으로 인해 높은 활용도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와 같은 교재가 시설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사용되어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법률적인 마인드를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를 위해 향후에는 ‘시설 관계자’ 들을 위한 법률 교육 및 법률 교육 교안 작성을 추후 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참여형 학습 및 실제 업무처리 메커니즘을 체험해보고 교재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V. 결론

- 매년 약 2,500여 명의 보호종료 청소년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사회로 진출하여 자립하고 있으나, 위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일상생활 상식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임금착취, 임차보증금사기, 채무불이행, 채무상속 등의 법적분쟁에 휘말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채를 지게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가 된 이후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대해 오히려 지나치다는 반발까지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현실에서 자주 겪게 되는 법률문제들을 영역별로 유형화한 후 영역별로 적실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나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교재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연구결과 및 추후 작업(동영상 제작 및 교재 배포, 현장에서의 활용과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고,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겪는 법과 관련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법원행정처,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2021
-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복지시설 온라인 자립교육과정 실시’ 결과 보고자료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외 1인, 서울대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생활속 법률문제 Q&A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보도자료]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자립청년 범죄피해구제 법률지원 협약, 2022. 2. 25.
- 정춘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나아갈 길”,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21.
- <https://www.lawnorder.go.kr/>
- <http://www.ggjarip.or.kr/ebook/gg05/>
-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외 1인, 슬기로운 법률생활 주거&노동, 2022
- 김범주 외, 법과 사회, 2022
- 김미영, 최정숙,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자의 자립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사회적기업 (주)브라더스 키퍼 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3권 1호(2022).
- 허민숙, 자립지원의 공백 :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4. 7.).
-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종료아동 취업지원활성화 방안(2021.12)
- 김형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 Vol. 22 No. 2(2022)
- 박승대,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9. 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2020. 12.),

제1강 일상생활과 법

교육개괄	법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강의		
교육대상	고등학교 고학년, 보호종료 직후 청소년		
수업목표	내용을 전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목	활동내용	시간	참고
법이란 무엇일까?	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을 검색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10분	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민사, 가사, 형사,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시간이 여유있다면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 중 위 개념을 잘못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주면 좋습니다.	15분	
일상생활과 법(1)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신청하는 법을 가볍게 연습해보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20분	지급명령신청서 및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위주로 강의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제도를 안내하는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일상생활과 법(2)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안내하고, 민원서류 발급하는 법을 연습해보기로 합니다.	15분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과 민원서류발급활동을 위주로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리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필요시 Q&A등 진행

제2강 임대차계약 및 주거문제와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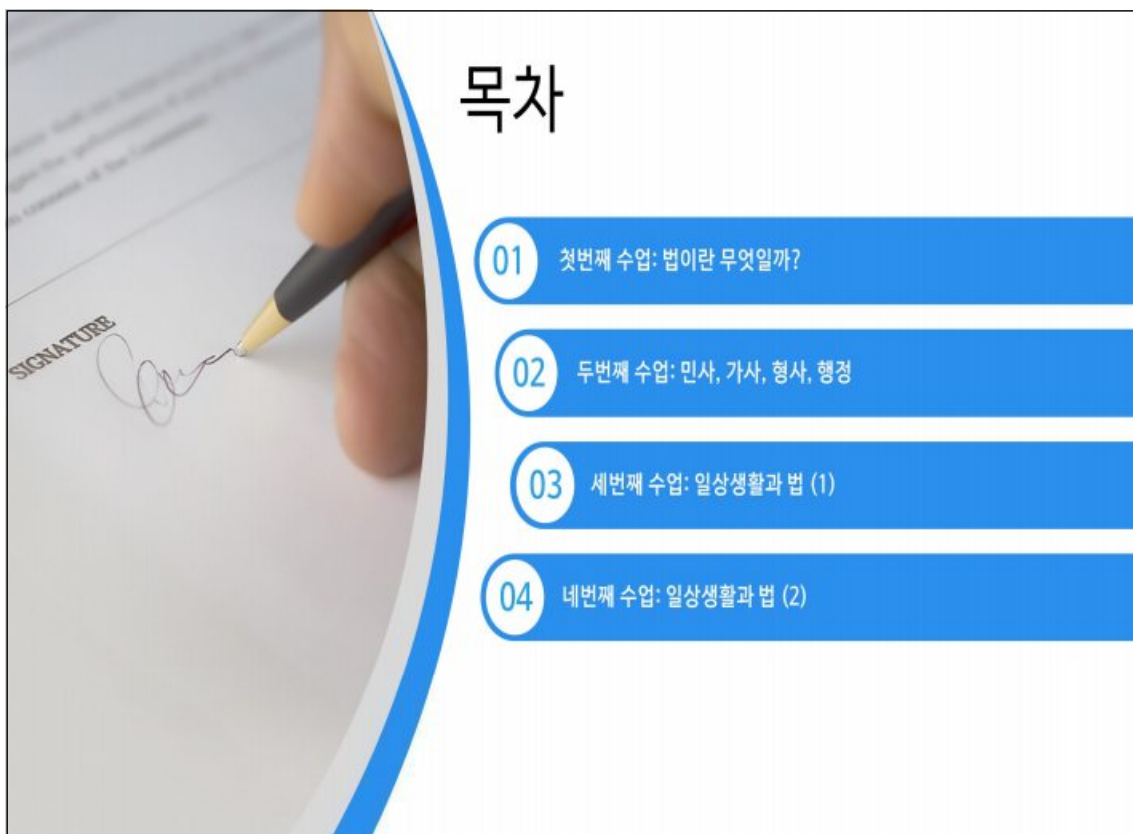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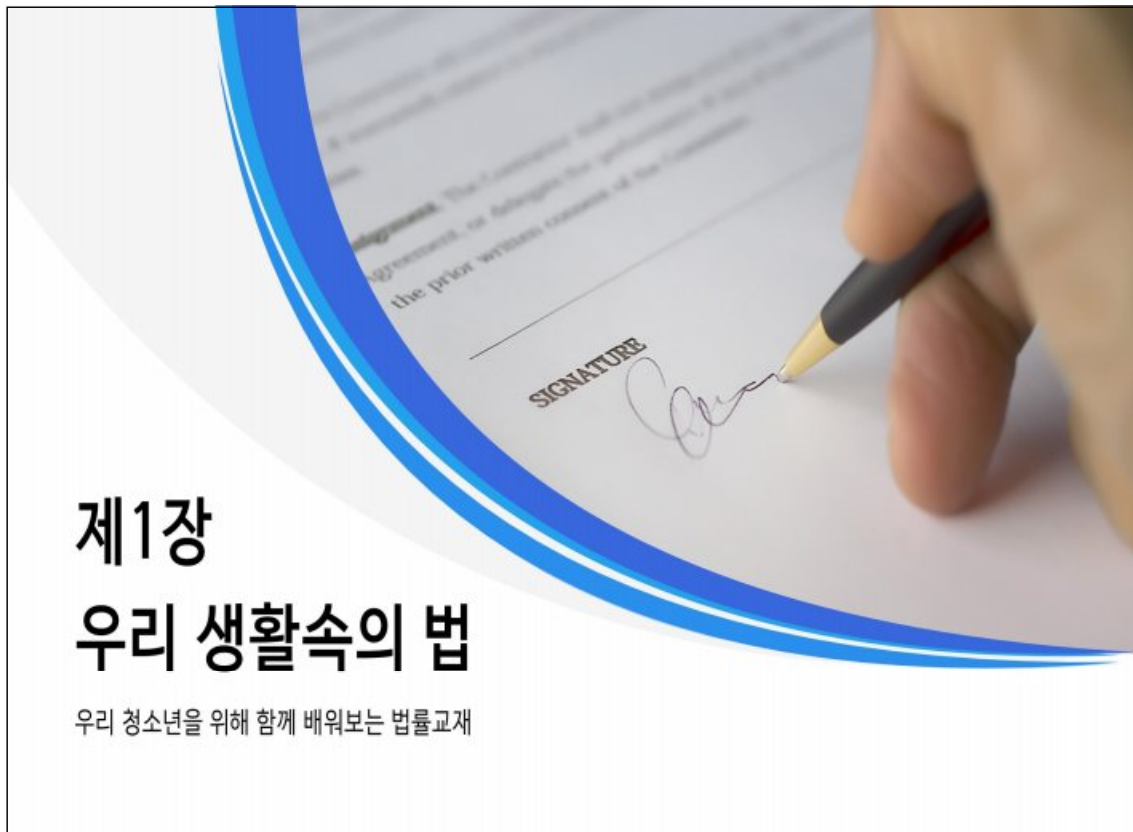
교육개괄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강의		
교육대상	고등학교 고학년, 보호종료 직후 청소년		
수업목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고, 향후 문제가 생겼을 시 위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목	활동내용	시간	참고
임대차계약의 출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0분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는 법을 연습시키고, 샘플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보자.	집을 구할 때 체크해야 할 내용을 숙지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20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계약시 주목해야 할 내용 및 자주 문제되는 계약 내용에 대해 숙지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차신고제도 및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20분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에 대한 부당한 증액청구 거부하는 법, 임대차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법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리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질문 및 답변시간	10분	필요시 Q&A 등 진행

제3강 범죄를 조심하는 법

교육개괄	범죄피해자가 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칠 때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강의		
교육대상	고등학교 고학년, 보호종료 직후 청소년		
수업목표	수상한 내용이 있을 경우 범죄와 관련이 되어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범죄와 연이지 않도록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목	활동내용	시간	참고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다양한 범죄방식들을 알아보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15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뉴스 등 영상을 시간이 허용할 경우 틀어주면 좋습니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위험하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고수의 알바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사례를 들어 안내하고, 위와 같은 알바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15분	관련 영상등을 시간상황에 따라 틀어주면 좋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고?	명의 대여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이러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0~15분	관련 영상등을 시간상황에 따라 틀어주면 좋습니다.
돈을 빌릴 때 조심해야 할 것들	작업 대출 등 돈을 빌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러한 위험한 대출을 피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합니다.	10~15분	관련 영상등을 시간상황에 따라 틀어주면 좋습니다.
정리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필요시 Q&A등 진행

제4강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교육개괄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근로자로서 리는 권리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됐을 때 대응법 강의		
교육대상	고등학교 고학년, 보호종료 직후 청소년		
수업목표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권리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목	활동내용	시간	참고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5분	표준근로계약서를 직접 보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못 받은 임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10~15분	임금체불 발생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는 법	부당해고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10~15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해고무효확인 소장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쉬는 도중에도 돈을 받는 법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법 등을 알아봅니다. 실제로 근무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0~15분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하면 좋습니다.
정리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필요시 Q&A등 진행



첫번째 수업

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해봅시다.

법이란?

- 법의 정의: 사회 구성원간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정한 것
- 법의 종류: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
- 헌법, 민법, 형법, 조례, 규칙, 명령... 이렇게 다 뭐지?

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법률, 명령 등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 명령, 조례, 규칙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을 찾아봅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041조를 찾아봅시다.
- 법을 읽는 법을 알아봅시다.

법의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있을까요?

두번째 수업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다양한 영역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민사란 무엇일까요?

- 민사소송이란?
- 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 차에 치였는데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이런 민사소송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형사란 무엇일까요?

- 형사소송이란?
- 명예훼손?
- 살인?
- 사기?

- 형사소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사란 무엇일까요?

- 가사란 기본적 신분관계에 대한 분쟁 등을 다루는 것.
- 혼인, 친자, 양자, 상속 등
- 가사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이란 무엇일까요?

- 행정소송이란?
- 나와 관련된 정보를 행정청이 안 알려줘요.
- 세금을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내라고 하네요.
- 행정소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활동해보기 - 어떤 소송으로 해결할까?

친구가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요. 어떡하죠?

길을 가다가 이유없이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코뼈도 부러져서 치료비만 해도 몇백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집 옆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진동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시청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활동해보기 –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해보기



<https://ecfs.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봅시다.

회원 가입 후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본안-소장 메뉴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세번째 수업

일상생활과 법 (1)

돈을 돌려받는 법, 돈을 갚지 않는 법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법

-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 채권자, 채무자 작성법
- 신청취지를 작성하는 법
- 신청이유를 작성하는 법
- 입증서류 및 기타 작성법
- 지급명령의 장단점은?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법

- 민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 당사자 작성법
-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법
-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법
- 입증서류 및 기타 작성법
- 민사소송의 장단점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법

- 강제집행이란 무엇일까요?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다.

회생과 파산

-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요?
- 개인파산제도란 무엇일까요?
-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활동해보기 - 지급명령신청서와 소장작성

다음 내용을 보고, 상황에 맞는 지급명령 신청서 혹은 소장을 작성해봅시다.

1. 친구가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2023. 3. 1. 에 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2023. 4. 1. 이 되었는데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번째 수업

일상생활과 법(2)

상속받는 법, 민원서류 발급받는 법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 이것만은 기억하자.

- 내가 상속인이 되는지
 - 유언장이 있는지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이 어떻게 되는지
 - 내가 받게 되는 재산은 얼마인지
- 를 확인한 후 상속을 받을지, 상속을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한정승인은 무엇일까?
- 상속포기란 무엇일까?
- 어떤 때 한정승인을 하고 어떤 때 상속포기를 하는 것일까요?

상속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을때

- 상속회복청구권
- 유류분반환청구권
- 상속 관련 내용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구체적인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좋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해보기-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 ✓ 교재에 있는 양식을 이용해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활동해보기- 민원서류 발급받기

- ✓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봅시다.

제2장 임대차 계약과 주거문제

우리 청소년을 위해 함께 배워보는 법률교재

목차

- 01 첫번째 수업: 임대차 계약의 출발, 등기부등본이 뭐야?
- 02 두번째 수업: 집을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서를 써보자
- 03 세번째 수업: 임주가 끝이 아니다! 살면서 생기는 많은 일.

첫번째 수업

임대차 계약의 출발이 되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 ‘등기’ : 국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나 저당은 없는지 등)를 기록해 놓은 공적 서류
- ‘등본’ :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옮겨 놓은 문서
-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의 누구의 소유인지, 다른 사람이 담보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등 정보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등기는 오프라인 지역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면 발급됨
- 온라인으로도 누구나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건물의
 종류(아파트는 집합건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와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 가능
- 열람 수수료: 등기부등본 1부당 700원



등기부등본 샘플

등기부 등본 (현재 유효사항) - 토지 [제출용]

[토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죽도리 1

고유번호 1758-1006-029014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집 수	소 제 지 면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	2005년 10월 7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죽도리 1	임야	3320㎡	축적변경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 1)	소유권보존	1968년 3월 11일 제56호		소유자 국 관리청 국토해양부 275	

수수료 800원 영수함

-- 이 라 여 배 --
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1년 6월 4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권산운영책임관

* 상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양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부제 기록원 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등기는 생략함. * 등기부는 원의 또는 축적으로 출력 가능함
 [인쇄일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거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의 3개월까지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752011750819200801090040175202004208111420111111

1/1

발급확인번호 APC-3208-0148

발행일 2011/06/04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토지 : 땅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 건물 : 건축된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 집합건물 : 건물 중에서 아파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건물은 '집합건물'로 별도 분류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주소,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가 담겨 있습니다. 표제부에 표시되는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별해 놓은 것인데 논, 밭, 과수원, 대지, 등 총 28가지로 나뉘집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둘째, 갑구입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표시됩니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변화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간에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유주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정보가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셋째,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데 주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으로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출이나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활동해보기 - 등기부등본 정보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건물 -

교유번호 1150-2004-00008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등기번호

« < | > »

[건물] 경기도 통무천시 보신동 220 고대빌딩

【 표 제 부 】 (건 물 의 표 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명 및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항목 및 기타사항
1	2004년1월24일	경기도 통무천시 보신동 220 고대빌딩	실근로콘크리트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번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6	1번갑이동지분권부 이전	2004년1월24일 제53호	2004년1월24일 박재	공유자 지분 360분의 1 김정숙 71.0111----- 서울특별시 김복규 미아동 853-1 지분 360분의 1 김재국 721.2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천동 1234번지 지분 300분의 1 최희영 720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123번지
7	1번갑이동지분권부 이전	2004년1월24일 제54호	2004년1월24일 박재	공유자 지분 360분의 1 김정숙 71.0111----- 서울특별시 김복규 미아동 853-1 지분 360분의 1 김재국 721.20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123번지

열람

활동해보기 - 등기부등본 정보 알아보기

순번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장인선 77110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00번지 지분 2880분의 1 이상건 711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원동 121 지분 2880분의 1 정은하 70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빌딩 20호 지분 2880분의 1 김결국 7101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53-1 지분 2880분의 1 김태욱 7212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294번지 지분 2880분의 1 오지영 720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29번지

[을 구] (소속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번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갑구7번김대옥지분전부및 오지영지분전부및 김정숙지분전부근거 달성설명	2004년1월28일 제71호	2004년1월24일 실경계측	제권리소재 금110,200,000원 최무자 이미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번지 오지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29번지 김정숙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53-1

활동해보기



- 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를 보고 스스로 학습해봅니다.
 - 1) 위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건물의 소재지번은 어디인가요?
 - 2) 건물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 3) 건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 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갑구를 보고 스스로 학습해봅니다.
 - 1) 위 건물의 현재 소유권자는 누구인가요?
 - 2) 위 부동산의 경우 언제,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나요?
- 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을구를 보고 스스로 학습해봅니다.
 - 1) 위 건물은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나요?

두번째 수업

집을 알아보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보자

집을 잘 구하는 방법

-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임대차를 할 때 크게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 물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목적물의 70~80% 수준으로 높게 지급하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고액의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임차인은 매달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액의 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증금을 낮춘 월세 또는 반전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잘 구하는 방법

- 둘째, 가능하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오늘 수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 다양한 집을 소개받을 수 있고, 등기부등본이나 권리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 살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고요. 다만,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집을 잘 구하는 방법

- 셋째, 집의 상태를 입주 이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집은 채광, 난방, 수도, 소음 등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산을 정하고, 적절한 부동산을 통해 집을 소개받은 경우에 소개받은 집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그 집의 상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이후에는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광이나 소음은 하루 중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낮과 밤에 한 번씩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 구할 때 꼭 살펴 볼 체크리스트

좋은 집 체크리스트

건축 시설	
<input type="checkbox"/>	원자력나 핵발전은 어느가?
<input type="checkbox"/>	방화문 잘 들어와나? (방문 날 '날'을 가운다)
<input type="checkbox"/>	전선이나 벽, 창문까지 곰팡이가 있는 곳은 없나?
<input type="checkbox"/>	방음이 잘 들어나? (벽 두드려보)
<input type="checkbox"/>	외풍이 심하지 않은가? (방문과 벽에 손대보)
<input type="checkbox"/>	문까지 잘 들어나? (문과 창문의 위치 확인해)
배수·난방 시설	
<input type="checkbox"/>	욕실의 배수호나 찬기 거름 등 배수호는 시일이 없나?
<input type="checkbox"/>	신과나 후드·수납장 등 배수호 주방 시설은 없나?
<input type="checkbox"/>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
<input type="checkbox"/>	냉장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전기·가스 시설	
<input type="checkbox"/>	전기 가스·수도·열기를 '행'으로 사용하나?
<input type="checkbox"/>	전기 콘센트가 적당한 곳에 없나?
<input type="checkbox"/>	가스 호스가 낡지는 않았나?
<input type="checkbox"/>	외부 가스 배관(배관도둑 방지장치) 설치되어 있나?
<input type="checkbox"/>	수도(수압) 수압은 없나?
<input type="checkbox"/>	배수호 잘 들어나?
주거환경	
<input type="checkbox"/>	학교·역·공원·거리는 적당하?
<input type="checkbox"/>	지체할 때나 배스(배수)는 적당하?
<input type="checkbox"/>	집 주변에 시장이나 골목이 있나?
<input type="checkbox"/>	집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나?
<input type="checkbox"/>	집 주변에 시외차나 시외차로가 있나?
<input type="checkbox"/>	집 주변에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가 있나?

현실적으로 집 안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내 하나 하나 다 살펴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을 보러 갈 때는 꼭 혼자 보다는 두 명 정도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사전에 역할을 나누어 짧은 시간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임장이나 임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온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본인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3가지

- 첫째, 위임장 또는 계약서에 날인하는 도장이 임대인의 등록된 '인감' 도장인지 확인하고 구청에서 임대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본인발급)'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이란 사용하는 도장 중 주민센터에 본인의 공인된 도장임을 확인하여 등록한 도장을 말합니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구청에서는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지문대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3가지

- 둘째, 임대인(집주인)과 **직접 통화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합니다.**
적법한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 사실을 임대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소, 임대차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3가지

- 셋째, 계약금 등 보증금은 모두 **소유주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간혹 월세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대리인이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임대차보증금과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활동해보기 -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써보자

주거임대차표준계약서

임대인: 김민준 임대차 계약 기간: 2024. 1. 1. ~ 2026. 1. 1.

임대차 계약서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임대차 계약서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임대차 계약서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임대차 계약서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 계약기간은 오늘부터 2년
- 임대인은 홍길동
- 임차인은 안어벌

으로 하는 계약서를 써보자!

세번째 수업

입주가 끝이 아니다!

살면서 생기는 많은 일.

계약이 끝이 아니다. 안전장치!

임대차 신고제란?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임대차 가격·기간·경신을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88>)

계약이 끝이 아니다. 안전장치!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신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移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거주지 이동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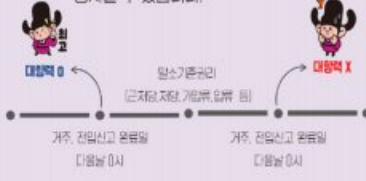
✓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집주인이 계약자에게 자신의 권리관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을 얻으면 전세를 사는 도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전 주인과의 계약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주, 전입신고 완료일
다음날 0시

거주, 전입신고 완료일
다음날 0시

계약이 끝이 아니다. 안전장치!



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고쳐야 하나?

- 민법 제 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임차인이 스스로 수선),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고쳐야 하나?

제4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임대인부담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관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임차인부담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이 쌍방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활동해보기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illegible]

- 신청서는 현재 계약이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체크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등기부등본에서 배웠던 '건물' '집합건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소재지를 상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한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활동해보기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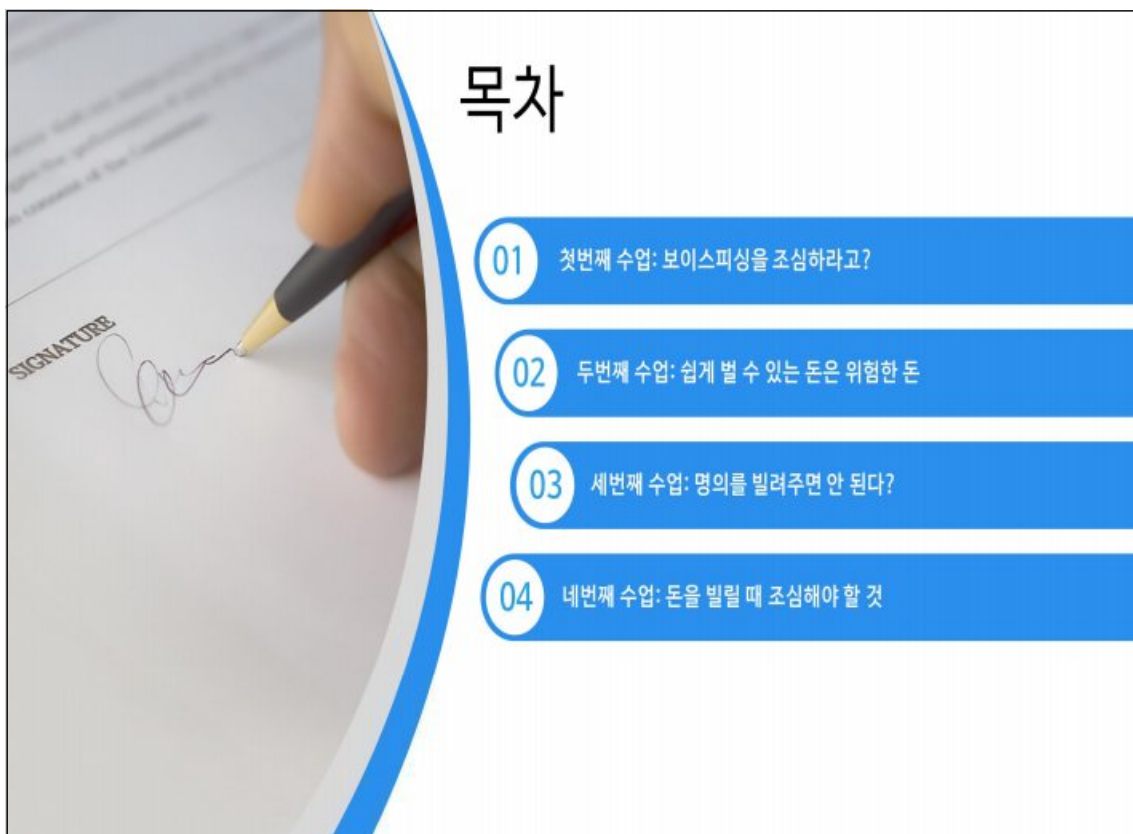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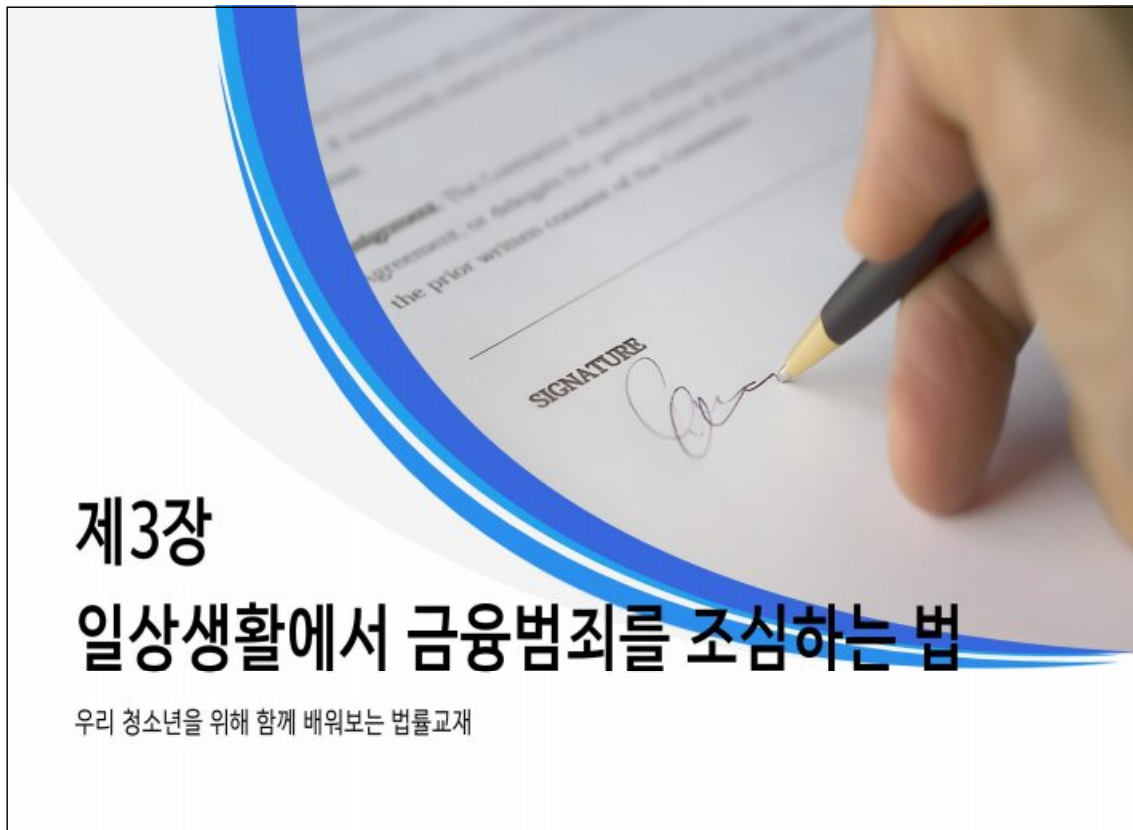
[illegible]

- 다음 창은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비교하면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전세 계약이라면 차임(월세)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정보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활동해보기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illegible]

-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문서를 스캔하여 첨부, '작성 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이후 처리상황은 이메일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수업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지 살펴봅시다

보이스피싱이란?

- “피싱(Phishing)”이란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직접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 보이스피싱 =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들
- 메신저피싱 =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친구나 지인,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빼앗는 사기 수법



흔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들

-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심지어 국가정보원을 사칭하여 돈과 관련된 행동을 지시하여 빼돌림
- 가족이 납치되었다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했다고 거짓말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
-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서 핸드폰 고장 등 현금이 꼭 필요하다며 자기기가 말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는 방법
-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서 구글 기프트 카드나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사서 사용에 필요한 PIN 번호가 다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방법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 어떤 경우에도 돈이 될 만한 것을 넘겨주지 않을 것
- 계좌이체, 계좌 출금+전달, 신용카드 정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정보 어떤 것이든!!
- 검찰, 경찰, 공공기관, 은행도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돈과 관련된 행동을 요청하지 않음
- 전화나 문자로 돈과 관련된 행동을 요청 받는 즉시 경찰(국번없이 112)에 신고할 것

활동해보기 - 생활 속 보이스피싱 예방

- 방금 받은 전화나 문자가 보이스피싱인지 진짜인지 너무 헷갈릴 경우에는?
 - ✓ 온라인 확인 방법 - 서울중앙지검 운영 “썬센터”
010-3570-8242로 언제든지 전화/문자 가능(365일 24시간 서비스)
 - ✓ (국번없이) 1301 - 검찰 보이스피싱 피해접수 전화
 - ✓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접수 전화
 - ✓ (국번없이) 112 - 경찰서에 언제든지 전화해 문의 가능
 - ✓ 오프라인 확인 방법 - 경찰서가 가장 확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은행

활동해보기 - 생활 속 보이스피싱 예방

- “스미싱” - 전화가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오는 링크를 통한 사기범죄
 - ✓ 신용카드/체크카드가 결제되어 큰 금액의 금전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랜섬웨어 같은 것으로 핸드폰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 1차적으로는 링크(전화번호, 온라인 주소 불문)는 누르지 말 것
 - ✓ 문자나 카카오톡이 오는 번호를 유의깊게 살펴보고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NO!



두번째 수업

알바를 고를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과

어떻게 해야 위험한 알바를 피해갈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들

- “의심스러운 고액 알바”를 유의할 것

① 근무강도에 비해 수당이 높은 경우, ② 업무 시작 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제대로 된 업무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고 무작정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 ③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고 이력서 사본과 통장 사본만 받고 근무를 시키는 경우, ④ 어떤 물건인지 불명확한 것을 주면서 전달하라고 시키거나 들고 다녀야 한다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이 높은 알바

범죄조직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이 높은 알바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서류 배달, 퀵서비스 알바 등에서 밀봉된 서류봉투나 작은 쇼핑백을 정해진 영업장이 아니라 개인 간 배송시키는 경우
 - 명확한 영업장이 아닌데 불규칙한 배송 업무를 시키는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마약 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 多
- 보이스피싱 전화를 조력하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작은 쇼핑백이나 가방을 들고 일정한 장소를 돌아다니게 만드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화 발신처를 조작하는 '심박스'일 가능성 多

불법다단계 주의보

- 오프라인 불법다단계
 - ‘네트워크 판매’ 등의 명목을 내세워 (사이비)종교단체 등에서 합숙을 시키며 효과가 불분명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 받도록 하는 등 가짜 상품을 떠맡기는 경우
- 온라인 불법다단계
 - ‘수익형 플랫폼 사업’, ‘팀부업’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홍보활동만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유혹하여 다단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



활동해보기 - 생활 속 위험 알바 공유

- 주위에서 불법다단계나 그 외에 위험한 알바를 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 처음에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점점 이상한 일을 시킨다면?
- 신고를 하면 나도 같이 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세번째 수업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면 절대 안 되는데,
명의를 빌려준다는 게 대체 뭐고 왜 위험한지 살펴봅시다.

명의(名義)가 대체 무슨 말?

★

명의²

名義

발음

[명의] [명이]

전체 2

전문가 1

서훈 1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예문 열기

명사

1. 어떤 일이나행동의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

동창회 명의로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름.

장관 명의의 확인서.

명의(名義)를 지켜야 하는 이유

- 법률적으로 명의란 “문서에 쓰인 내용을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의미함
- 누구든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내 명의’ 문서가 되면 문서에 적힌 내용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 됨
- 미성년자라면 자기 명의 문서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방법이 있지만 법적 성인이 되면 자기 명의 문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함



명의(名義)를 지키지 못한다면?

-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길고 복잡한 서류를 주며 무조건 아래 사인만 해달라고 재촉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 책임은 내가 질테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더라도 일단 사인을 해버리면 그 문서는 내 책임이 됨
- 그 서류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이면 나는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돈을 본 적도 없더라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함



명의(名義)를 지킬 수 있는 방법

- 종이문서나 서류에 함부로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지 말 것
- 유명한 은행이나 통신사(SK, KT, LG U+)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라 하더라도 내용을 전부 읽어보고 꼼꼼히 따지기 전에는 함부로 사인해서는 안 됨
- 온라인에서 홈페이지/어플/서비스 가입할 때에도 조심 필수
- 특히 '본인인증' 단계를 포함하는 절차를 매우 주의해야 함
-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모두 입력하려고 하는 절차는 모두 주의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함



활동해보기 - 생활 속 명의 보호

-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더니 뭔가 너무 여러가지 서류를 준다면?
- 은행에 통장을 만들러 갔는데 서류가 너무 많고 글씨는 너무 작은데?
- 원룸 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맨 뒷장만 주면서 무조건 사인 하라는데?



활동해보기 - 휴대폰 대여/폰테크 금지



- 아는 선배가 휴대폰이 하나 더 필요하다면서 내 명의로 개통해서 넘겨주면 요금은 전부 자기가 알아서 내겠다는데?
- 휴대폰 개통해서 공기계만 넘겨주면 일시불로 100만 원을 주고 나는 그 돈을 24개월 할부로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해도 되는 일이지?
- 2020년 4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데 얼마 정도로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할지?

네번째 수업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야 한다면,

최소한 어떠한 것들을 조심하여야 할지 살펴봅시다.

작업대출이란?



작업대출이란?

-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밖에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브로커가 '나라면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라면서 접근한 뒤, 가짜로 조건을 만들어서 높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의 20~50%까지 수수료로 가져가는 범죄행위

작업대출의 위험성

- 대출을 받는 단계의 문제
 - 직장이 없는데도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혹은 가짜로 회사에 명의만 걸어두는 등의 '작업' 행위는 모두 사기죄(詐欺罪)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 직접 서류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거짓 정보가 제출될 것을 알면서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음



작업대출의 위험성

- 대출을 갚아나가는 단계의 문제
 - 작업대출을 받으면 선이자처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의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10% 이율로 작업대출을 하면 대출이 나오자마자 200~500만 원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본인 수중에는 500~800만 원만 남게 되는데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총 1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작업대출의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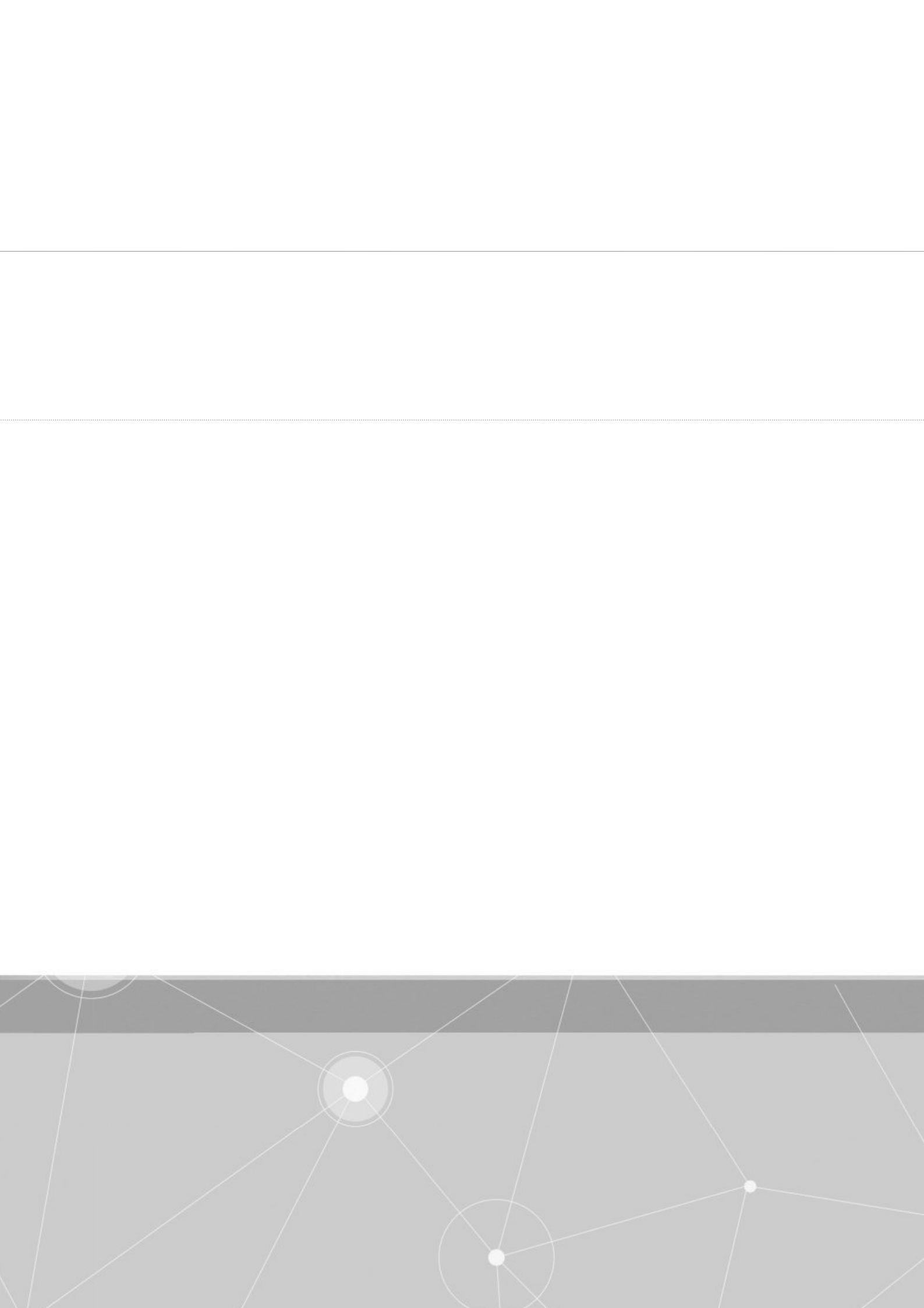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의 문제
 - 작업대출 과정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증 절차 등 모든 방식의 정보가 요구됨
 - 이 정보가 한 번 유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포함해서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나중에 작업대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싶더라도 본인도 공범이 될 가능성 때문에 법적 조치 어려움



활동해보기 - 작업대출 피해 정리



- 작업대출을 일단 받아서 급한 돈을 마련한 다음에 수수료를 안 주면?
-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절차로 빚을 면제 받을 수 있다던데?
- 그렇다면 급하게 생활비나 휴대폰비가 모자라다면 어디서 빌리는 것이 나은지?



메타버스 내의 아동권리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 아동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동진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법률사무소 율다함)

본 연구보고서는 2023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인권분야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것입니다.

I. 서론

1 연구 목적

가. 코로나 19가 아동의 삶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이하 ‘코로나 19’라 한다)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고 사람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양식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우리 일상생활 전 영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아동의 삶은 역사적으로 사회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해 왔던바,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아동의 일상은 더 큰 위기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감염 위험이 큰 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되었고, 아동 돌봄을 담당했던 지역사회 서비스 및 교육기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가 나누어지고 있던 아동에 대한 교육·보호·돌봄의 영역의 공백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 되었다.

아동에 대한 교육·보호·돌봄 등의 역할을 가정과 사회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 분담의 효율적 분배나 보호자의 부담을 덜다는 차원을 넘어, 아동의 보호와 권리의 실현에 있어 국가와 사회가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 차원의 논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이를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백 상태로 두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교육·보호·돌봄 영역에서 보완적으로 택한 방식은 아동의 교육 측면에 있어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방식의 채택과 돌봄 영역에 있어서의 비대면 소통방식이었다.

이상과 같이 교육·보호·돌봄 영역에서 비대면 방식이 상용화됨과 더불어 아동들의 일상 영역에 있어 친구들과의 교류·소통의 방식 역시도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이 부적절한 콘텐츠나 미디어 폭력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거나,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

한편, 아동들이 향유하는 문화 콘텐츠들의 상당 부분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온라인 전시, 영화와 공연에 있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 등이 채용되었다. 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공유하면서 사이버 공간 내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식도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비대면 활동과 온라인을 통한 소비 관행 등은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진 아동들이 예전과 같은 대면 문화의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메타버스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이프랜드 등으로 대표되는 메타버스(Metaverse)란, 일반적으로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일종의 가상세계를 뜻한다. 모바일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술 등의 발전과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하여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상세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와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현실의 시·공간을 초월한 ‘또 하나의 생태계’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사이버 공간(Cyber Space)과는 달리, 이용자가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동일하게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메타버스의 이용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 또는 기존의 콘텐츠를 이용·유통하여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사이버 공간과는 전혀 다른 법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일하고 여가를 즐기며, 교류할 수 있는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디지털 세계의 탄생으로 많은 경제적인 부가 가치도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글로벌 일간활성이용자(DAU)수는 일평균

4000만명을 넘어섰고, 국내 DAU는 일평균 42만2,378명으로 확인되었으며¹⁾,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개최된 블랙핑크 가상 사인회에는 4,600만명이 넘는 이용자 참가하였고²⁾,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포트나이트(Fortnite)’의 콘서트장에서 열린 트래비 스콧의 공연에는 1,230만 명 동시 접속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으며, 방탄소년단(BTS)도 ‘다이너마이트’의 안무를 포트나이트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하였다.³⁾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2조 6천억원을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고⁴⁾,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2025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매출액이 약 3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⁵⁾.

한편, 이러한 메타버스 이용자의 대부분은 아동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와 제페토 가입자의 70% 이상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대 청소년 총 7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메타버스(Metaverse) 이용 현황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 ‘메타버스 앱 또는 프로그램 사용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아니지만 사용경험이 있다(43.2%, 307명), 현재 사용하고 있다(24.8%, 176명)라고 응답하였으며, 메타버스 사용경험이 있는 48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앱 또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메타버스에서 친해진 친구들과의 친목(27.1%, 131명), 게임(26.1%, 126명), 실제 지인과의 친목(18.6%, 90명) 등이라고 응답하였다⁶⁾.

이처럼 메타버스는 단순한 플랫폼 또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생태계”로서 역할을 하며, 특히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학습, 사회화의 방식을 벗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통하여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일상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테크42, ‘글로벌 누적 가입자 3억명 제페토, 로블록스 뛰어넘을 수 있을까?’, 2022. 3. 16.
<https://news.zum.com/articles/74383287>

2) 테크M, ‘[테크M 이슈] 전세계 3억명이 쓰는 ‘제페토’... K-엔터사 쏠린 이유 있다’, 2022. 3. 7.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94938>

3) 매일경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일상을...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시대’, 2021. 1. 27.
<https://www.mk.co.kr/news/culture/9725812>

4)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2021. 7. 14.

5) 매일경제, ‘메타버스의 미래 그리고 우려...가상사 느끼는 五感, 범죄 위험은 과제’, 2021. 8. 3.,
<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1&no=751540>

6) 데이터숨, 청소년 10명 중 8명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인지”, 2021. 9. 29.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94>

다. 메타버스와 아동권리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 자원의 제약을 받는 현실세계와 달리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 비록 메타버스가 가상공간이라 하더라도 메타버스의 핵심은 그 공간에서 사회구성원인 사람들이 활동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메타버스 내에서는 해당 메타버스 설계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특별히 제공하거나 강제하는 특정질서나 원칙 외에, 일반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실과 유사한 새로운 공간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유뿐 아니라 “책임”이 부여되는 공간이라는 점, 공간적으로는 현실세계와 분리되어 있지만, 구성원은 현실세계의 사람들이며 또 하나의 “사회”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처럼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게 되었으며 사회적 가치가 공유되는 새로운 생태계인 이 메타버스의 이용자가 대부분 아동이라는 점은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동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의 권리가 아동친화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의 확인을 요청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의 일반적인 내용과 현황, 그리고 이를 둘러싼 현행의 법제도와 논의들을 짚어보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쳐오면서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존중되고 구현되고 있는지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중심으로 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 메타버스 내의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한 이제까지의 논의와 입법안 등을 살펴보고, 특히 메타버스가 가상의 “생태계”, “사회”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참여권(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의 아동권리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도록 하겠다.

2 연구설계 및 방법

가. 연구설계

첫째, 메타버스의 일반론을 소개하되, 메타버스가 다른 온라인상의 플랫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기존 아동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연구 중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아동권리 침해에 대

한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해당 연구에서 다룬 온라인 플랫폼, SNS 등과 메타버스가 다른 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메타버스가 가상의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규율을 구분한다. 기존 사회에서 이미 존재하는 규율(법제도)로서 메타버스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되는 것, 해당 메타버스의 설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메타버스 사용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규율 안에 포섭되지 않지만 이용자(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규율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의 4대 권리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살펴 본다. 특히 아동의 권리가 코로나 19를 거치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비대면, 온택트 문화로 인하여 생긴 변화와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셋째, 메타버스 내의 아동 권리 침해 및 구현에 대한 논의 중 특히 “보호권” 쟁점과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권리 침해에 있어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상의 아동 피해 상황에 대하여 현행법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한다. 특히, 메타버스의 경우 특수한 피해 양상을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현행법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한다.

넷째, 메타버스 내의 아동권리보장에 있어 “참여권”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하도록 한다.

- 1) 메타버스 내에서 참여권이 가지는 의의를 검토하고, 2)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와 관련한 국내(개인정보보호법령 등) 및 국외(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EU 등)의 법제도를 확인한 후, 3) ① 참여권의 전제로서 메타버스 내 아동친화적 정보제공, ② 아동권리보호적 측면으로서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비밀의 자유 보호 문제, ③ 권리실현적 이슈로서 메타버스 이용에 있어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실현 문제, ④ 향후 과제로서 메타버스 서비스에 아동 의견 개진, 메타버스 관련 정책입안에서의 아동의견 개진의 쟁점을 차례로 짚어 보도록 한다.

나. 연구방법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메타버스 및 아동의 권리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국내외 법령 및 법제도를 확인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근거자료로 삼았다.

II. 메타버스의 특징과 규율

1 메타버스(Metaverse)의 의의

가.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

초월·변화를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최근에는 ‘확장가상현실’로 번역하기도 한다. 메타버스 내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존재하고, 아바타를 통하여 소통·교류는 물론, 재화를 생산하고 생산하거나 획득한 재화를 사고팔며 이윤을 남기는 등의 경제활동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메타버스가 단순히 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일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가상세계 내에서의 연결, 가상세계와 외부의 연결, 가상세계 간의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러한 연결된 메타버스에서 생성되는 재화, 콘텐츠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사이버 세계는 온라인 영역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현실 세계에 종속이 되어 존재하거나 오히려 따로 분리되어 제한적인 영역의 활동만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현실과 동일한 모든 영역의 활동을 가상세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이버 세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할 것이다.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상의 일상 영위가 어려워지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급증하였는데, 유명인들은 자신들의 공연, 사인회, 신곡 발표 등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일반인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일, 여가, 일상의 소통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메타버스가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외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에서 발생하거나, 가상세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법적 이슈로서 가상 재화의 가치산정, 인플레이션, 아이템 거래와 사기 등의 문제, 메타버스 유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⁷⁾.

7) 이준복,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 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2021,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55쪽 ; 이진규, 메타버스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윤리: 논의의 시작을 준비하며, 2021, KISA REPORT, volume 02, ISSUE 03, 한국인터넷진흥원

또한, 메타버스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구현에 있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개인정보처리과정에 있어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럽의 GDPR 및 국내의 데이터 3법⁸⁾이 이와 관련된 법령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양상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가상세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징들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점에서 발생하는 여러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만, ① 종합적 가상 공간(collective virtual shared space)이 존재한다는 점, ② 현실 세계와 융합(convergence with physical reality)된다는 점, ③ 영속성(persistence), 즉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타버스는 그 자체로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공통적 특징으로 삼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⁹⁾.

나. 메타버스의 유형

메타버스가 발현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축을 확인해야 된다. 하나는 증강기술과 시뮬레이션 사이를 진동하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 사이를 진동하는 축이다. 이렇게 두 가지 축을 결합할 경우 메타버스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표 1]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거울세계 Mirror Worlds	라이프로깅 Lifelogging	가상세계 Virtual Worl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에 외부 환경정보를 증강하여 제공 - 실제 현실의 모습과 가상의 이미지 혹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을 모방한 가상공간을 의미 -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해서 디지털로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개체들의 현실 생활 정보를 기반으로 구현 - 센서가 부착된 각종 장비를 착용하고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공간으로 교육, 쇼핑, 업무까지 다양한 개인·개체들의 활

8)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하는 용어

9) 이준복, 앞의 글 참조

10) 이준복, 앞의 글 참조 ; 2006년 5월, 미국 미래학협회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주관으로 메타버스 로드맵 서밋(Metaverse Roadmap Summit)이 개최되었으며, 메타버스 개념과 전망에 대한 행사 토론 내용은 2007년에 '메타버스 로드맵(Metaverse Roadmap, MVR)'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ASF는 MVR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를 구현 공간과 정보 형태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거울세계 Mirror Worlds	라이프로깅 Lifelogging	가상세계 Virtual Worlds
효과를 결합하여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식이나 경험을 현실세계를 배경으로 하도록 하는 가상공간	현한 가상의 공간	활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전자적 데이터의 총합, 데이터를 공간의 형태로 재조합하여 구현	동이 가능한 환경 - 가장 익숙한 메타버스의 유형으로,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상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

위 유형 중 현행법률상 법적 쟁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라이프로그잉이라 할 것이다. 라이프로그잉은 개인이 생활하면서 수집된 모든 정보를 디지털 환경상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경우 다양한 범죄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크다. 한편, 형사정책적으로는 가상세계 형태의 메타버스 유형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 현실세계 사회적 활동의 일정한 기능적 보조수단에 불과했던 기존의 사이버 공간과는 달리 참여자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일정한 활동과 경험에 있어서 현실세계와 분리된 주체성과 자유를 가지고 활동과 경험을 함으로써 현실세계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독자적인 사회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¹¹⁾. 이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아를 투영한 아바타를 통하여 경험과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아바타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논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다.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와 사이버 인격권 개요

메타버스 공간은 단순히 개인들이 전자적 방식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보조적 공간이 아닌 아바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현실세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현실과 다른 차원의 독자적 가상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메타버스 내의 공간을 참여자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고 인적 교류활동을 하는 일종의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하 할 것이다.

11) 류부곤,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 정립-’, 2022. 형사정책, 제34권 제2호(통권 제70호), 12쪽

12) 류부곤, 위의 글, 14쪽 ; 한국경제, “메타버스, MZ 놀이터에서 경제공간으로 진화”, 2022. 6. 30.,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63086341>

즉,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의 사람들이 현실세계와 분리하여 새롭게 형성한 사회적 공간으로, 메타버스 유저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은 공간의 차원에서는 현실세계와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세계의 사람들이 형성한 또 다른 ‘사회’이므로, 해당 메타버스 설계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특별히 제공하거나 강제하는 특정 질서나 원칙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행동의 차원에서는 현실세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는 현실세계의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 같은 인격적 존재가치를 해당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는 부여받을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들의 활동은 철저히 개인 자신으로부터 조종되며, 메타버스 공간은 아바타를 통제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조를 거듭해 나간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메타버스의 아바타는 가상공간에서는 하나의 인격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¹³⁾, 아바타가 현실의 개인에 의해서 창조되고 조종된다는 점에서 현실의 개인이 가지는 인격의 투영체임과 동시에 아바타의 인격체로서의 존재근거는 현실의 개인이 가지는 현실적 인격권에 근거 한다고 할 수 있다.

2 메타버스 관련 법적쟁점

가.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정보의 침해 관련 법적쟁점

메타버스 플랫폼 유저는 메타버스 이용시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은 유저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 과정에서 위 데이터가 다른 유저들이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에 이용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메타버스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은 메타버스의 유저들이 생성한 데이터상의 개인정보, 유저들의 위치정보 등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쟁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유통될지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17조를 근거로 하며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

13) 이희옥,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2021, 헌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143쪽

되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¹⁴⁾.

메타버스에서는 확장 현실(Extended Reality, XR)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성되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어 처리될 수 있는데, 이용자의 이용과 관련한 정보로서 이용시간, 대화할 한 상대방, 대화 내용, 아바타와 아이템 등을 포함하여, 가상세계 내에서도 현실과 같은 내밀한 영역의 활동도 하게 되므로 사상, 신념 등과 같은 정보이용자의 내밀한 정보 및 맥박, 홍채 정보 등의 신체 반응정보 등이 모두 수집되어 빅데이터화 되어 처리될 수 있다. 다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와 제공의 시기가 비교적 명확한 것에 비하여 메타버스의 경우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서, 또 다른 유저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정보주체가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일련의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만으로는 메타버스 이용시의 개인정보 침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생체·건강·의료 정보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민감 식별정보가 수집될 때마다 별도의 특별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이용시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느 시점에 동의를 받을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더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 법령 및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에 따른 동의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 절차가 현재 메타버스 이용시에 제대로 반영되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불명확한 동의에 의하여 개인의 민감 정보가 수집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이슈 뿐 아니라, 데이터 공유 문제 및 해킹이나 범죄 목적의 개인 데이터 오용 등의 윤리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이동정보를 수집하는 메타버스의 경우 「위치정보법」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반대로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의 이동에 대하여 「위치정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자아로서 아바타의 이동정보는 메타버스 유저의 사생활과 연관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위치정보 수집 등에 있어 유저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4) 대법원 2014. 7.24. 선고 2012다49933판결 등 참조

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

(1) 저작권 침해 문제

메타버스 내에서 메타버스 유저들은 메타버스에서 제공되거나 스스로 획득한 도구를 이용해 건물을 짓거나 옷을 만들고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창작물의 성격, 권리의 귀속 내지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책임의 귀속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에서는 이용자들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들이 갖되, 그러한 창작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메타버스 운영자들이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으로 내부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창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신의 서비스 구조에 맞는 저작권 귀속 및 저작권 침해 주장 관련 사항을 미리 약관이나 이용정책 등에 명확하게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아바타가 스스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에 대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은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인공지능이 이미 문화예술 영역에서 상당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창작물이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상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결국 인공지능을 창작의 주체(저작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 창작자, 인공지능 창작자 및 이용자 모두의 이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제도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가상의 세계에서 더욱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게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무용, 건축저작물 등 다양한 저작물의 권리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가 취하는 특징적인 짧은 동작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가 확장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이 새롭게 조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의 패션, 공예품, 가구 등을 메타버스에 그대로 재현한다면 응용미술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메타버스에서 창작된 패션, 공예품, 가구 등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거나 혹은 다시 메타버스 세계에서 복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패션, 공예품, 가구 등은 ‘실용품’에 응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응용미술’로 인정될 수는 없겠지만, 별도의 ‘창작성’을 갖추었다

면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현실 세계에서는 ‘실용품에의 응용가능성’ 또는 ‘분리가능성’이 없어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창작물이 메타버스로 이전되거나 메타버스에서 창작됨으로써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례도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2) 상표권 침해 문제

패션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 등 기존 IP를 활용한 디지털 패션 상품이 아바타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에 유통되면서 메타버스 내에서 소위 ‘짜퉁’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와 함께 보호받으려는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상표권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메타버스 내의 특정 상품에 대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메타버스 내의 의류 등 상품을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있을지, 볼 수 있다면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호는 상표에 대해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메타버스 공간의 상품도 당연히 상표법상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메타버스 내의 상품이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화상 이미지’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상표법」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이용자 등이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¹⁵⁾¹⁶⁾.

15) 군용지프차 ‘햄비’ 제조사 AM 제너럴은 비디오 게임 ‘콜 오브 듀티’의 제작사 액티비전을 게임 내에서 햄비를 구현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군용차량인 햄비는 AM 제너럴 브랜드이자 상표권으로 지식재산권이 귀속되어 있으나 액티비전이 AM 제너럴과 어떠한 제휴도 맺지 않은 채 자사 비디오 게임 시리즈에 지속적으로 햄비를 노출시켜서 마치 자신들이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했거나 햄비 지식재산권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콜 오브 듀티 게임에서 이용자는 햄비를 사용해 적을 물리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등 단지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물체를 넘어 이를 가상세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햄비 차량이 실제 군사 작전에서 사용되고 있고, 전쟁게임의 효과적 묘사를 위하여 햄비를 등장시키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AM 제너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6) 이경렬 외1, ‘메타버스 공간의 신종범죄와 형사입법대책 : 메타버스 범죄 2.0을 중심으로’, 2023,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통권 72호)

(3) 퍼블리시티권 침해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이를 초상권이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⁷⁾. 기존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한정적 활동과 달리,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상업 거래, 창작 활동 등이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의 적용으로 K-pop 가수들을 아바타로 활용하고, 성적(性的) 대상화함으로써 초상권 침해 등의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가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유명인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 유명인의 초상권의 침해로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문제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¹⁸⁾, 「부정경쟁방지법」은 2021. 12. 7. 개정을 통하여¹⁹⁾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게 이르렀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이로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제까지 법원이 각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그 인정여부 및 침해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는 해소되었다.

(4) 부정경쟁행위

실제의 대상을 모방한 메타버스 속 짝퉁 상품이 현실 세계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 되지 않더라도, 상품 주체의 혼동이나 저명상표의 희석이라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위반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17)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등 참조

18) 서울지방법원 1995.6.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

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메타버스 내 상표침해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대한 특별한 유형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²⁰⁾.

여러 요소가 결합·접목된 환경인 메타버스 플랫폼과 같은 가상공간에서는 현실보다 더 폭력적인 부정 경쟁 양상 나타날 우려가 크다. 메타버스 내에서 고전적인 경쟁브랜드와 차별화하려는 목적으로 오인·허위·과장·부당비교 광고에서 더 나아가 악탈적으로 경쟁자 브랜드 상점을 파괴하면 그 대가로 자신의 상품을 제공하는 마케팅도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오프라인상의 범죄행위로 확장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메타버스는 국경 없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한다.

다. 형사범죄의 문제

메타버스 범죄도 상당한 부분은 현존의 특별법 등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그 일부는 기존의 사이버 범죄가 단순히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불과하다. 아이템을 헐박을 통하여 뺏아가거나 기망을 통해 교부받는다면 「형법」상의 공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상의 헐박과 기망이 지속된 채 오프라인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이 역시 이상의 「형법」을 통한 규율이 가능하다.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 내에서의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하고,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 규제가 적용되기도 할 것이다. 또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가 10대 등 미성년자가 대다수인 만큼,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그루밍(Grooming) 방식²¹⁾을 이용하는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로 이어지는 성착취 등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콘텐츠에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노출될 수 있고, 아바타 복제나 스토킹 등 관련 범죄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상품 기획, 인테리어 및 홍보물 디자인 조사, 포장 디자인의 개발, 마케팅을 위한 노력,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포장·간판·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의 이미지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21) 친밀하게 대하여 신뢰를 쌓게 한 후 심리적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범죄의 예비단계를 말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해킹, 사기범죄, 증오범죄 또는 혐오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내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로 그치지 않고 그 이용자를 표적으로 하여 실제 오프라인 공간으로 범죄양상이 이동하는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기존 사이버 범죄에서는 포섭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들이 메타버스 내에 등장하면서 유형화된 여러 범죄에 대해 구체적 형사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NFT²²⁾는 기존에 형법상의 재물로 취급할 수 없었던 전자적 정보를 사실상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나 유체의 물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NFT 저작물 자체가 국민국가 체계에서 실제로는 통제하기 곤란한 새로운 암호화폐와 결합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상세계유형에서는 아바타라는 새로운 유형의 객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인공지능과의 결합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 주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즉, 기술의 발전, 융합 및 확장에 따라 우리 형법과 특별법으로는 포섭하기 힘든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범죄 2.0이 탄생하였고 이러한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새로운 형사입법제안이 필요할 것이다²³⁾.

3 메타버스 내 규율의 분류

가. 기존 법 제도와 메타버스의 규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세계와 유사한 새로운 “현실”이 구현된 것으로,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하며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기도 하며 실제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도 하는 등 현실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경험과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내의 활동이 메타버스 유저의 개인

22) MIT Technology Review, ‘NFT가 도대체 뭐야?’, 2021. 4. 7.,

<https://www.technologyreview.kr/what-is-nft/>;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불가토큰’ 혹은 ‘대체불가능토큰’으로 번역된다. 대체가능(fungible)한 토큰들은 각기 동일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서로 교환이 가능하며, 동일 단위의 1:1 교환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교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다름이 없다. 명목화폐, 비트코인·이더 등의 통상적 암호화폐, 귀금속, 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대체불가능(non-fungible)한 토큰들은 각기 고유성을 지닌다. 발권자, 발행편, 좌석위치 등이 전부 특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품이 아예 존재할 수 없고, 암호화된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다

23) 이경렬 외1, ‘메타버스 공간의 신종범죄와 형사입법대책 : 메타버스 범죄 2.0을 중심으로’, 2023,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통권 72호)

정보·사생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과잉되게 수집되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창작활동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현실세계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의 문제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타인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형법 및 형사특별법이 규율하는 범죄의 상황이 메타버스 유저에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현실세계와 같은 새로운 또 하나의 사회로서의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는 현실세계에서 메타버스 유저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대응하였을 절차에 따라 현실세계의 규율로서 개입하면 될 것이다. 즉, 사실상 메타버스라는 장소에서 혹은 메타버스라는 도구를 통하였을 뿐이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기존 법제도를 통한 규율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가 “법익주체”가 될 수 있고, 범죄의 주체 또는 객체도 될 수 있으며, 인격권 등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다.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메타버스 유저의 제2의 자아인 아바타가 전면에 나서 활동과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과 경험이 귀속되는 주체가 메타버스 플랫폼 유저라는 것이다. 결국, 메타버스 내의 규율은 기존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사이버상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이 기존 법 제도를 적용하여 그 규율을 해 나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이용을 통하여 처리된 메타버스 유저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와 메타버스 유저 개인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가 과잉수집되거나 처리·공유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외부의 해킹 및 해킹을 한 자의 해당 정보 이용 등이 발생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업무방해 등으로 규율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이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하여 메타버스 내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보통신망법」, 「형법」이 적용될 수 있고 협박과 기망 등을 통하여 재물과 재산적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공갈, 사기 등 형법상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메타버스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문언·부호·음향 등을 보내는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율이 메타버스 내의 접촉을 계기로 오프라인에서 추가적인 성범죄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의 법제도로 규율하기 곤란한 영역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율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다른 사이버 범죄들과 달리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현실·세계라는 측면에서 현행법 위반이 있지만 검토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율의 사각지대는 보통 메타버스가 디지털 이미지로서만 존재하고, 메타버스 유저도 자신의 아바타로서만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디지털 이미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의미, 재산적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아바타가 메타버스 유저와 어디까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또는 독자적인 인격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바타를 상대로 한 범죄에 있어 인간을 상대로 한 범죄와 불법행위에 준한 피해를 인정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특히 성범죄쪽 규율은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문제는 이상의 논의들은 사실상 법철학적인 깊은 고찰이 필요하고, 입법으로서 해결이 되어야 할 영역이 있어서는 해당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입법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바타에게 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나 가상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가상”, “상상”으로 벌어진 강력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의들은 단순히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가상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은 현실과 유사한 인간의 상상이므로, 범죄를 저지르는 상상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 다만, 나만의 상상을 넘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평가는 달라져야 하고, 더욱이 인간의 상상에만 머물러 있던 생각들이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법익침해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²⁴⁾. 다만, 더욱이 아래와 같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하고 메타버스 유저들이 동의한 기술적 조치나 자율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민사상·행정상의 규제, 이를 넘어 형법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처벌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짜게 된다면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반하는 것은 물론, 메타버스가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의 판을 깨뜨려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나.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유저들에게 이용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규율들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최초 가입·접속시에 약관을 통하여 이를 안내하거나, 수시로 플랫폼

24) 윤지영, ‘메타버스 시대, 범죄의 재구성과 형사사법적 대응’, 2023,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 511쪽 참조

이용시 공지를 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구현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성급한 법적 규제보다는 기술적 대응이나 자율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로 보인다. 문제는 서비스 출시 전에 기술적 조치나 자율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⁵⁾. 아래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자율규제가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메타버스 유저의 조작으로서 다른 유저(아바타)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이 야기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타버스 내 상황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아바타에 의해 현실 침해 야기가 발생할 수 없도록 메타버스 코딩을 설정하거나, 침해 야기가 쉽게 발생할 수 없도록 아바타를 감시하고, 감시의 결과 침해 야기가 있을 때 침해 결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중지하거나 관련 국가기관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 등이다.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한다²⁶⁾.

- ①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유저들에게 당해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결합된 기술, 그리고 당해 기술이 메타버스 내 가상행위를 통해 현실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직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사용되지 않은 생소한 기술들이 결합되어 메타버스 내 현실과 유사한 피해상황을 만드는데, 유저들이 이러한 기술의 영향력에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② 해당 메타버스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에 권투나 격투기 시합 등과 같은 활동들이 참여하는 유저들 간의 동의 하에 허용이 된다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침해 자체에 대한 인식과 예견 가능성이 아니라, 유저에게 정확한 침해 허용 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비난가능한 침해에 대한 인식과 예견 가능성이 성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메타버스 내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메타버스 내 상황을 기반으로 당해 침해에 대한 유인 또는 억제 요인을 분석할 의무가 존재한다. 이를 넘우 메타버스 플랫폼 상호 간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25) 2016. 10. 가상현실 게임인 '퀴버(Qui VR)'의 이용자가 아바타 대상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가열되자 게임사 측은 자신의 아바타를 괴롭히는 다른 아바타를 튕겨낼 수 있는 '퍼스널 버블(personal bubble)' 기능을 추가함. 2021. 12. 출시된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 베타테스트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가상현실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남성 아바타들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음성채팅을 통해 "싫어하는 척 하지마"라는 성희롱 피해까지 입었다고 폭로했고, 이에 개발사 측은 2022. 2. 아바타 간 성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4피트(1.2m) 거리 내로 다른 아바타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 경계선(Personal Boundary)' 기능을 도입하였음.

26) 강성용,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를 위한 윤리 및 행정규제', 2022,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22쪽 이하

써 보다 정확하게 위험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할 수 있었던 침해를 두고 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므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메타버스 내 상황을 통제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 유인의 경우 향후 법적인 의무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 ④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메타버스 내 위험요인을 감시하고 분석하여 심각한 침해 야기와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실제 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우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수행하여 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스스로 찾아내어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업무 수행 중 발견된 아동대상 성착취물에 대하여 즉시 삭제 후 관련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행정규제화 하여 두고 있다.
- ⑤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른 유저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퀴브이아르라는 게임은 이용중의 유저의 행동 중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게임 내에서 이뤄질 수 없도록 상대방 아바타의 신체 가까이 손을 뻗으면 손 모양이 사라져버리도록 자발적으로 코딩을 수정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코딩 설정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즉, XR과 Haptic 기술이 결합되어, 메타버스 내 가상 행위가 상대 아바타를 넘어 실제로 현실의 상대방에게 중대한 신체적 침해를 야기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없도록 아바타의 행위의 자유도를 제한하는 형태로 코딩을 변경하거나 현실감의 극대화 하는 기술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①, ②, ③의 내용은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규제로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고, ④, ⑤의 내용은 자율적 규제로서 시도하거나 이를 넘어 ‘행정적 규제’ 정도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하겠다.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넘어 행정적인 규제로서 강제적 유인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적 규제가 해외 설립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내 설립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만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사용의 제약을 가져와 경쟁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불공정 국제 경쟁으로 인한 국내 설립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들의 부수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 행정규제에 대한 역외관할 적용과 규제의 국제화 추진하자는 견해가 있다. 한편, The Sandbox와 같이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

및 운영되어 탈중앙화 자율적 기구(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 코딩 자체에 대한 거버넌스가 중앙집권적 통제 권한을 가진 특정인이 아닌 메타버스 사용자 모두에게 통제 권한이 분산되는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누구를 대상으로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²⁷⁾.

결국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강제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자율규제로서 의무 준수를 독려하고, 실제 침해를 야기한 메타버스 유저에 대한 적용가능한 형사법을 찾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아동의 권리와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

이상과 같이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규율로서 현행의 법체계와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메타버스의 유저의 대부분이 아동인 상황에서²⁸⁾ 아동 이용자를 위한 특별히 요청되는 규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율은 아동의 보호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특히 디지털 세계에의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25번 일반논평(안),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룬다.

아동에 대한 새로운 규율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아동 권리 침해 금지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 유저들의 대다수가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유저가 아동일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해유저 아동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도 규율의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27) 강성용, 앞의 논문, 233쪽 이하

28) 데이터솜, 청소년 10명 중 8명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인지”, 2021. 9. 29.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94>

(1) 아동 이용자의 접근권

아동 이용자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 이용자의 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규율이 필요한데, 단순히 접근에 있어 거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방향이 아닌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와 접속회선을 적정한 비용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들을 위하여 아동의 연령과 인지에 맞는 아동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함으로써 아동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율도 요청된다 할 것이다. 특히, 시설거주 아동, 장애아동 및 인종적, 언어적, 기타 소수 아동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접근권이 보다 중요해지므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들 취약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할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에 접근한 아동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아동 이용자의 비차별

아동 이용자를 차별상황에 놓이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게 메타버스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장애아동과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메타버스 접근을 위한 설비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메타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 유저의 장애, 성별, 인종 등이 따돌림이나 폭력 피해의 원인이 된다면 이러한 폭력을 주도한 가해유저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아동 유저에 대한 보호와 위협 노출 방지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아동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메타버스 이용시 개인정보가 과도하고 포괄적이고, 비정형적으로 수집 및 처리되는 것의 위험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는 이러한 위험성이 보다 더 크다 할 것이다. 아동 관련 정보는 연계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더 많은 기간 누적적으로 보관·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은 오프라

인 상의 범죄 피해 등에 있어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용시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추가적인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국가 및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유저의 개인정보의 처리시 보다 강력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아동의 보호자와 국가는 아동의 보호를 내세워 아동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를 아동 동의 없이 과도하게 열람하고 수집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감시'로 아동의 사생활에 과도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 아동의 사생활 관련 정보의 열람과 수집은 아동의 메타버스 이용 상황에서 아동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동의 자유롭고 명시적인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아동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 대한 동의 절차와 동의를 전제한 보호자 등의 아동의 사생활 열람 절차가 아동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에서 다룬다.

또한, 아동의 사생활의 존중과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의무도 국가와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아동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나누며 현실세계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하여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활동의 제약하거나 이를 넘어 차단하는 방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아동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실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에 일정 연령을 조건으로 하여 아동 이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일정 서비스에 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부모의 의사로 아동 이용자의 행위나 경험에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즉, 특정 행위 또는 경험을 하는데 있어 아동의 정보를 제공함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 자체가 아동 이용자의 메타버스 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아동의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호자 동의의 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보호자 또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에 있어 아동 이용자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의 주체로서 아동 이용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공유하며, 창작활동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 이용자의 표현과 생성 정보가 차별적·혐오적 표현, 음란성 정보가 되지 않도록 정보 생성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아동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더불어 이러한 의사 표현으로 인한 비난이나 위협, 처벌이 따르지 않도록 국가는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는데, 집회·결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메타버스 서비스 내의 자율규제나 부모의 개입으로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넘어,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이용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에 있어 일정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 이용자가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발언 등의 경험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아동 이용자의 교육받을 권리

국가와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이용자에게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법, 콘텐츠 생성 관련 기술 등은 물론,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 윤리,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세계로서 다른 사이버 플랫폼들과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 있다. 이에 메타버스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메타버스 이용에 있어 현실사회의 법과 규칙을 교육받듯이 이용윤리에 대한 교육도 요청된다 할 것이다.

특히, 메타버스의 이용자의 다수가 아동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 범죄 및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가해자로서의 아동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6) 아동 이용자의 의견표명권(right to be heard)

“의견표명권”이란, 아동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에 나이 및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의견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및 국가적 논의에서 아동

의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이다. 따라서 국가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우선, 아동에게 의견표명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메타버스에서 아동 스스로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며, 의견표명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훈련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의견 표명의 장이 아동 친화적으로 또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아동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의견 표명의 장에 있어서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담은 내용의 규율도 요구된다. 또한, 아동의 의견표명권 행사로 인하여 아동에게 불이익, 즉 부당한 감시나 데이터 수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국가와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7) 아동 이용자의 피해구제

메타버스 내의 아동권리 침해에 대하여 아동은 국가기관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해구제에는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인 수단 뿐 아니라 사과, 시정, 불법적인 정보의 삭제 등을 포함한 아동이 원하는 방식의 기타의 방법을 포함하여 아동에 있어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다른 사법절차와 다르게 아동 친화적인 환경과 절차를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Ⅲ. 비대면 문화와 아동의 권리

1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은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1년 발효된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였으므로, 동 협약은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라 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고,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본문의 제1부(Part I)는 일반조항과 개별적 권리 부분으로 구분되며, 일반조항 부분은 아동의 정의, 차별금지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각국의 협약상 보장된 아동권리 이행의무, 그리고 부모 등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존중할 제약국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적 권리 부분에는 아동의 4대 권리라고 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2부(Part II)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감시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 구성, 권한, 기능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제3부(Part III)는 아동권리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 및 효력발생에 관한 사항, 개정에 관한 사항,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4대권리

생존권 (right to survival)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발달권 (right to development)	참여권 (right to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으로서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 아동들은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보장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적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한 명의 개인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도록 하는 권리 -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

생존권 (right to survival)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발달권 (right to development)	참여권 (right to development)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가 포함			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포괄

 [표 3] 아동권리협약 규정 목록²⁹⁾

구분	부	조	규정내용
전문			
본문	제1부	일반조항	제1조 아동의 정의
			제2조 차별 금지
			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제4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 의무
			제5조 부모 등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 책임 의무 존중
			제6조 생명권 및 생존 발달권
			제7조 아동의 출생 등록, 성명권과 국적취득권,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신분을 보유할 권리
		개별적권리	제9조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제10조 가족 재결합의 권리
			제11조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
			제12조 의견표명권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16조 사생활보호권
			제17조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제18조 부모의 양육 책임 및 국가의 후원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0조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보호

29) 장민영,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1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2020,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0-17-②, 132-134쪽 참조

구분	부	조	규정내용
		제21조	입양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
		제22조	난민 아동 보호 의무
		제23조	장애 아동 보호 의무
		제24조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권리
		제25조	보호아동의 정기적 검진을 받을 권리
		제26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제28조	교육 받을 권리
		제29조	교육의 목적
		제30조	소수민족 및 원주민 아동 권리
		제31조	여가에 대한 권리
		제32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제33조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34조	성폭력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35조	인신매매 및 유괴로부터의 보호
		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제37조	고문 등의 금지
		제38조	무력 충돌시의 보호
		제39조	피해아동의 심신회복 및 사회복귀
		제40조	형사절차상의 아동 권리
		제41조	유리한 법률의 적용
	제2부	제42조 - 제45조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구성, 의무 등
	제3부	제46조 - 제54조	협약 발효요건, 협약 개정절차 등

아동권리협약에는 세 가지의 선택의정서가 채택·발효되어 있는데,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아동의 개인통신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가 그것이다.

UN은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보장과 이행방안에 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발간할 수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국가보고절차(State Reporting Procedure)를 두고 있는데, 이로써 아동권리위원회는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이를 심의(consideration)하여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고,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위 최종견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등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게 된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가. 제25번 일반논평(안) :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보장과 이행방안에 대한 일반논평을 발간할 수 있는데, 아동권리위원회가 발간한 제25번 일반논평(안)은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인 바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2019. 3. 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회원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회원국,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반논평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제언(concept note)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2020. 8. 13.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라는 제목으로 제25번 일반논평(안)을 작성 및 발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안)은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확대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아동의 현재 생활 그리고 미래 생활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중되고 보호받고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이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의 경우에도 아동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혜택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역기능 양자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위한 기회, 위

협 및 도전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및 관련 의정서들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그리고 기타 적절한 조치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제반 아동인권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이행방안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안) 구성³⁰⁾

번호	제목	세부내용	관련조문
I	개관		
II	목적		
III	일반원칙	A. 차별금지	제2조
		B. 아동 최선의 이익	제3조
		C. 생명, 생존 및 발달권	제6조
		D. 의견청문권	제12조
IV	진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ies)		제5조
V	회원국의 일반적 이행 조치	A. 입법	
		B.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C. 조정	
		D. 자원의 할당	
		E. 정보 수집 및 연구	
		F. 독립적인 모니터링	
		G. 정보 확산, 인식 제고 및 교육	
		H. 시민 사회와 협력	
		I. 비즈니스 부분	
		J. 상업 광고 및 마케팅	
		K. 피해구제	
VI	시민적 권리 및 자유	A. 정보 접근	제13조, 제17조
		B. 표현의 자유	제13조
		C.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D.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제15조
		E. 프라이버시권	제16조
		F. 출생 등록 및 신분권	제7조, 제8조
VII	아동에 대한 폭력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30) 장민영, 위의 보고서, 138-139쪽 참조

번호	제목	세부내용	관련조문
VIII	가족 환경 및 대안돌봄		제5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IX	장애 아동		제23조
X	기초적 건강 및 복지		제24조
XI	특별보호조치	A. 교육권	제28조, 제29조
		B. 문화, 레저 및 놀이권	제31조
XII	특별보호조치	A. 경제적, 성적 및 기타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B. 소년 사법	제40조
		C. 무력분쟁, 이주 및 기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의 보호	제40조
XIII	국제적 및 지역적 협동		
XIV	배포		

나.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³¹⁾

유럽평의회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각종 인권 보호 이슈들이 온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범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왔다.

우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례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상의 인권의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1981년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있어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및 2001년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과 같이 온라인상 인권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약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조약 이외에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각종 권고 및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유럽평의회는 이상의 인권규범들 역시 아동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또한 아동을 인권향유자(human rights holders)로 보면서, 아동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국들로 하여금 온라인상 아동권리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1) 장민영, 위의 보고서, 146쪽 이하 참조

[표 5] 유럽평의회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 및 지침

인터넷필터와 관련하여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measures to promote the respect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with regard to Internet filters)
사회망서비스와 관련하여 인권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regard to social networking services)
인터넷사용자를 위한 인권가이드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a Guide to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
온라인게임제공자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Human Rights Guidelines for Online Game Providers)
2006.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부여를 위한 권고 (Recommendation on Empowering Children in th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2008. 인터넷에서 아동의 존엄, 안전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선언 (Declar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Protecting the Dignity, Security and Privacy of Children on the Internet)
2009.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유해한 콘텐츠 및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Content and Behavior and to Promote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2016년 유럽평의회는 아동권리를 위한 전략(2016-2021)을 발표하였는데, 다섯 가지 우선 영역 중 하나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꼽았다. 유럽평의회는 정보통신기술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참여, 보호 그리고 제공(provision)이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아동들을 위하여 기존의 규범들이 충실하게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럽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유럽인권협약 등 현행 인권규범체계에서 보장되는 아동의 권리들이 온라인상에서도 구현되어야 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조약이나 권고들이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특정 권리에 관한 사항들만을 규율하고 있거나 개괄적으로 이행방안들만을 언급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에 대하여 자세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유럽평의회는 온라인상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각료위원회 권고 형식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의 존중, 보호 및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Digital Environment, 이하 ‘유럽평의

회 가이드 라인'이라 한다)"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은 아동권리 보호를 명문으로 확인하면서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기존의 규범이나 논의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권뿐만 아니라 참여권까지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미래세대로서의 아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 함양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등 보다 진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³²⁾.

3 코로나 19와 아동의 권리

가. 코로나19와 아동의 생존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 경제적인 위기도 가져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내의 보호자들이 제대로 된 유급 병가나 휴가를 받지 못하고 직업을 잃을 가능성에 놓이기도 하였다³³⁾.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동에 대한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 폐쇄되거나 잠정 휴관하게 되면서, 아동에 대한 무료 급식과 도시락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학교 개학 연기와 급식 중단으로 아동의 결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등교가 중단되면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식자재와 생필품 구매 부담이 증가하였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수급이 어려워졌다.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어려워 밀착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³⁴⁾.

32) UN 인권규범체계 및 유럽의 인권규범체계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은 주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범죄(성폭력 포함)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33) 유니세프, COVID-19 pandemic 'quickly becoming a child rights crisis': Daily death rate could spike by 6,000 for under-fives", 2020, 참조

34) 아동권리보장원, 「감염병 관련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간담회 자료집」, 2020, 미간행자료 ; 김선숙외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0, 아동과 권리, vol.24 참조

코로나19 시기에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사안은 보호에 취약한 아동과 양육자의 확진·격리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과 가정이 빈곤화되지 않게 경제적 지원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므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원하였다³⁵⁾(보건복지부, 2020). 또한, 정부와 지자체, 국내 NGO와 기업체 등은 방역물품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필요 자원을 발굴하여 아동시설과 취약가정에 지원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시기에는 마스크를 우선 지원하고 손 소독제와 체온계 등 감염병 예방 용품과 식료품 및 생필품 키트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보호대상아동이 사는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했으므로 지자체별 전담공무원 운용 등을 통해 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자체소독과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였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시행되었고 시설 내 주요 공간에 대한 청소·소독을 강화되었으며, 입소자와 이용자, 종사자에 대한 수시 발열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감염병 심각단계에는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였다³⁶⁾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한시적인 현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제적 대응은 가정의 빈곤화를 막아 간접적으로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코로나19과 아동의 보호권

코로나19로 아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외출 자제가 장기화함에 따라, 부모와 아동 모두 스트레스를 발산할 기회가 줄고 휴업과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부모의 스트레스가 더 커짐으로 인하여 아동이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⁷⁾.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원인은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이 장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35)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 정책’, 2020,
<http://ncov.mohw.go.kr/supportPolicyBoardList.do>

36) 아동권리보장원, 위의 자료 참조

37) 이데일리, ‘코로나19 확산 후 아동학대 신고 13.8% 늘어…警 “주의 깊게 분석”’, 2020. 4. 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29046625733496>

학교와 돌봄 시설의 휴원에 따라 아동방임과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아 아동 학대의 정도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대두한 아동 보호권 관련 문제는 아동 돌봄에 관한 것이다. 학교와 돌봄시설 휴원으로 아동 돌봄의 공백이 커졌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 조사 결과³⁸⁾, 코로나19시기에 아동이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이내(33.4%)가 가장 많았고 5시간 이상 27.7%,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8.5%,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12.3%를 차지했다.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은 8.1%에 불과했는데, 이는 아동의 돌봄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며, 5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아동이 홀로 있지 않을 때는 부모(33.7%)와 형제·자매(26.3%), 친척(14.8%) 순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아동은 가정에서 TV 시청(19.6%)과 핸드폰 영상물 시청(19.5%), 컴퓨터 게임(14.9%) 등 영상매체를 보며 지내는 비율이 54%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를 통해 아동의 여가와 놀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감염병 상황에서 보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과 아동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낼 때, 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일이다. 코로나19로 학교폐쇄 조치가 내려지자, 정부는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하고,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의 돌봄비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³⁹⁾. 또한,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통해 긴급돌봄을 시행하여,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다. 코로나19과 아동의 발달권

코로나19로 아동은 제한된 운동과 학교 폐쇄 등에 따른 고립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다⁴⁰⁾. 바이러스 감염은 신체질환 문제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불안과 공포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감염 가능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회피와 불신, 지인의 사망이나 질환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아동은 양육자의 심리상태에 쉽게 영향받고 오랜 시간 집에 머물 때 어른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체활동이 제한된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더 큰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과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38)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설문조사 결과」, 2020, 미간행 자료 ; 김선숙외2, 위의 글 참조

39) 보건복지부, 위의 자료 참조

40) 유니세프, 위의 자료, 김선숙 외2, 위의 글 참조

의견이 있었다.⁴¹⁾

한편, 발달권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아동의 교육권 침해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0. 3. 초·중·고와 대학의 개학을 전면 연기하고, 4월부터는 온라인 개학을 하여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가정의 경제 상황, 학습 상황 차이로 인한 학습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은 빈곤 가정과 아동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다자녀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현장 수업과 달리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한계발생과 수업의 질적 수준을 보장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전국 초중고교 교사 1,933명에게 설문한 결과 교사 10명 중 8명꼴(80.4%)로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격차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으며, 그중 20%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현장 교사들은 가정에서 학습을 돌봐줄 어른이 없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가장 우려했으며, 도시지역 아동의 학력 격차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인원이 적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대부분 주 5일 등교수업을 했지만 도시지역은 주 1, 2회 출석하는 초등학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⁴²⁾.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⁴³⁾’에 따르면, 약 20% 정도의 국민은 척도상 중등도 이상으로 관심이 필요한 불안,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과 트라우마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된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여 심리상담·프로그램·캠페인 및 홍보 등을 진행하였다⁴⁴⁾.

41)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유아 부모 대상 심리방역 방법 제작·보급.’, 2020, 보도자료, 육아정책연구소·한국발달심리학회

42) 동아일보, ‘코로나로 실종된 ‘학력 중간층’…초1~중1은 학력진단조차 ‘깜깜’’, 2020. 7. 2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20/102077306/1>

43)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http://kstss.kr/> ; 코로나19사태 발생 후 처음 표준화된 척도를 통해 국민의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하고 서비스 요구도를 확인

44) 국가트라우마센터, 2020, <https://nct.go.kr/>

라. 코로나19과 아동의 참여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과 행동방안 수립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현실화하는 데 아동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아동권리의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참여권과 관련해 아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모든 아동이 동일한 정보를 접근가능하고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전달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아동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제작되어야 함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으며,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에 맞춘 것은 드문 편이고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처럼 의사소통 수단이 제한적일 때, 온라인 정보는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인터넷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양하고 신뢰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검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⁴⁵⁾.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불안 심리를 낮추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⁴⁶⁾. 감염병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⁴⁷⁾.

감염병 대응이라는 사회문제에 아동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에서는 아동으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형식의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하였다⁴⁸⁾. 이는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⁴⁹⁾.

45) OHCHR, 「Civic Space and COVID-19 Guidance」, 2020. 5. 4.,
<https://bangkok.ohchr.org/man-uals-covid19-guidance>

46) 베이비뉴스, '코로나19 재난 속 아동,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도와야', 2020. 3. 5.,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73>

47) OHCHR, 위의 자료 참조

48)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202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136958&memberNo=30808385&type=VERTICAL>

49) 김선숙 외2, 위의 글 참조

마. 취약계층 아동에 있어서의 코로나19의 영향⁵⁰⁾

취약계층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특정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은 취약계층 가정에 구성원으로 속한 아동으로,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아동, 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조손가정 아동 및 한부모 가정 아동, 인구학적 속성에서의 취약계층인 장애 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하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우리나라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되는 무상급식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식사 및 간식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학교가 휴교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휴원하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⁵¹⁾, 의료 및 보건에 있어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⁵²⁾.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아동이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 환경이 아동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 빈곤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위협하는 요소인데, 주거빈곤 아동의 경우 자기 방이 없어 다른 가족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난방과 환기, 채광이 잘되지 않는 주거에서 사는 경우 호흡기 질환과 천식 발병률이 높을 수 있다. 주거빈곤 자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의 우울과 불안을 높일 수 있어 정신적인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빈곤 상황에서는 부모의 스트레스도 극심해져 아동학대 및 방임의 위험이 증가해 보호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⁵³⁾.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⁵⁴⁾, 온라인 학습에

50) 최아라, '위드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아동의 삶에 대한 탐색적 고찰', 2021,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vol.11, 5-18쪽 참조

51) 문화일보, '코로나 봉쇄령에 선진국서 '결식아동' 급증', 2020. 5. 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401071239274001>

52) 한겨레, '대구 지역아동센터 일제 휴원...배굶는 아이들 감염도 무방비', 2020. 3. 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600.html

53) 최아라, 위의 글 참조

54) 오재호,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2020,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연구보고서

대한 어려움과 학습결손으로 인하여 빈곤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온라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디지털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2) 장애아동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고 각종 돌봄 사업들이 중단 및 축소되면서 장애 아동의 경우 가정 내에서 보호자가 돌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한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 증가는 자녀인 장애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았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재활, 사회서비스 등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⁵⁵⁾, 이러한 서비스 중단이 장애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장애아동의 배려가 없는 온라인 수업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영향을 미쳤는데, 시각 장애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 정보전달의 70~80%가 시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⁵⁶⁾. 시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에서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이 요청되는 등 모든 장애아동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교육적 격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장애 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3)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 아동

‘조부모가정 코로나19 영향조사⁵⁷⁾’ 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정 아동의 절반 이상(57%)이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부모의 경우에도 손자녀 학습활동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로 나타났으며, IT 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손가정의 아동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보호자들은 학습 관리 및 지도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손가정의 경우 단순한 디지털 기기의 지급이 아니라 디지

55) 뉴스1, ‘코로나 사각지대’ 취약계층, 복지관 등 폐쇄에 갈 곳 없고 집에만, 2020. 9. 16., <https://www.news1.kr/articles/?4059591>

56) 신연서외1,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각장애학교 교사 수업 경험 연구’, 2020,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36(4)

57) 세이브더칠드런, 「조부모가정 코로나19 영향조사 결과」, 2020, 참조

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코칭 등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학습과 디지털 접근권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더불어 위생용품 지원, 생필품 및 식료품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과 돌봄 공백의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 기간을 보냈는데, 육아와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 부·모는 아동의 돌봄을 선택하거나 생계를 선택해야 하며, 그 어느 것을 선택하든 모두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생계에 몰두하게 되면 자녀들이 방치되는 딜레마 상황 놓였던 것이다. 아동 입장에서는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서 실질적인 돌봄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4) 시설보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학교의 휴교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시설에서는 아동이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생필품 비용 등이 증가하고 각종 물품의 구매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방역 및 위생물품 수급도 어려워졌다⁵⁸⁾. 시설의 경우는 1명이 방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생활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으므로, 시설보호 아동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⁵⁹⁾. 또한, 집단생활의 보호아동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집단 내 심리문제가 발생하고, 아동 간 잦은 갈등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⁶⁰⁾. 이러한 심리, 정서적 문제의 발생을 비롯하여 시설거주 아동의 경우, 상당기간 폐쇄되고 통제된 생활을 하여 온 것이므로, 향후 코로나19의 경험이 아동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⁶¹⁾.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등의 확보가 어렵고 디지털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환경 미비로 인해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미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58)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2020, 참조

59) EBS뉴스, '집단생활 '불가피'...아동보호시설 방역 비상', 2020, 3, 3.,
<http://news.ebs.co.kr/ebnews/allView/20244504/N>

60) 아동권리보장원, 위 기록서 참조

61) 최아라, 위의 글 참조

바.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아니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권리의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은 의식주 해결과 같은 1차적인 보호에 우선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학교가 휴교를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아동들에 따라 접근성에서부터 학습권 보장에 있어서도 격차가 발생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수업의 진행과정에서 아동들의 의사나 아동 친화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다소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를 지나온 아동들이 취약한 환경 속에서 방치된 채 보호자의 감독이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의 이용윤리를 숙지하고 준수한다거나, 자신을 둘러싼 국가·사회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을 교육받는 등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디지털 환경 내의 왜곡되고 유해한 정보를 먼저 접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를 거처온 아동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⁶²⁾로서,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에 있어 누구보다 자연스러운 세대로, 가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상이 아동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그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중요한 시기를 그르친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향후 코로나19를 지나온 아동들의 디지털 환경 이용 실태와 이용윤리 준수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62)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는 디지털 원어민 세대를 뜻하며,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자라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처럼 유년기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관련 언어·장비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세대를 칭하는 용어다.

IV. 메타버스 내 아동의 보호권 침해

1 메타버스 내 아동 대상 범죄의 유형 및 특징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들이 아동이라는 점은 여러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80%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 역시 전체 이용자 중 16세 미만의 아동의 비율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³⁾. 한편 사이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2,690건이었던 것이 2021년 4,349건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⁶⁴⁾,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 4,223명 중 약 62%에 달하는 2,609명이 아동 성착취물로 인하여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⁶⁵⁾, 사이버상의 특히 성폭력 범죄에 있어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가 상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아동인 상황에서 범죄 발생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사이버상의 범죄에 있어 아동 피해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상관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이 범죄의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아동은 일체의 폭력과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는 가지므로, 아동의 보호권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침해되는 양상을 살펴 아동을 해당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침해 양상은 다음과 같은 범죄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63) 메가경제, '국내 상륙 '로블록스', 네이버 '제페토'와 메타버스 플랫폼 선점 경쟁 본격화', 2021. 7. 22.
<https://www.mega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6456529899>

64) 경찰청, 경찰청사이버성폭력범죄현황(2022).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65) 여성가족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도자료 최종배포본(2022)

[표 6] 메타버스 내 아동 대상 범죄 유형 및 세부 사례⁶⁶⁾

범죄유형		세부사례
성범죄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시지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전송 • 음성 채팅을 통해 성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신음소리를 들려줌 • ‘주인-노예’ 역할극을 하자며 성적 대화 시도
	아바타 성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타에게 접근해 더듬는 듯한 행위 • 역할놀이(왕게임)를 하며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함 • 아바타를 탈의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함 •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아바타 위에 올라탐
	아바타 스토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타의 일상생활을 엿담하고, 대화를 거부해도 아바타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대화 시도 • 아바타가 접속할 때 마다 음란 메시지를 전송 • 맵(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계속 쫓아옴
	온라인 그루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며 접근해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 • 메타버스에서 쌓은 친분을 이용해 다른 메신저로 이동해 성적 대화 시도
	성착취물 제작·소지·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아이템, 기프트콘을 주며 친밀감 쌓은 후 대화를 지속하다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여 성착취물 제작, 소지 •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며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 • 다른 이용자에게 성착취물 전송
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인증을 받은 계정을 팔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계정을 넘기지 않음 • 유료 아이템을 거래하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아이템을 거래하지 않음 • 기프트카드를 보내면 아이템을 거래하겠다고 한 뒤 기프트카드만 받고 아이템을 보내지 않은 채 협박, 욕설
협박/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타와 유사 성행위 자세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 • 대화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체 사진, 영상을 전송하라고 강요
모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팅 기능을 통한 욕설, 비하, 인신공격
개인정보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쌓은 후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
사이버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놀이를 한다고 하며 여러 아바타가 특정 아바타에 집단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가함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숨기는 경우도 많아 현재 메타버스 내의 이상과

66) 이해진 외1, ‘메타버스 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한 연구 :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2023, 청소년학연구, 제30권 제2호 199-200쪽

같은 아동 대상 범죄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⁶⁷⁾.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자신의 아바타를 ‘제2의 자아’로 인식할 정도로 아바타에 높은 애착과 몰입감을 보이고, 이에 아바타를 꾸미기 위하여 다양한 유료 아이템을 갖고 싶어하거나, 자신의 아바타 팔로워 수를 늘리고 싶어하는데, 범죄자들은 이러한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거나 팔로워 할 것을 약속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의도적인 접근을 하는 양상이 확인된다⁶⁸⁾. 현재의 아동들은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디지털 환경에 매우 친숙하고, 이에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용율도 가장 높은 상황인데,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법제도적 규율은 물론 사용 윤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들이 무분별하게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됨으로서 야기되는 아동의 정신적인 충격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⁶⁹⁾. 향후 메타버스가 보다 몰입도가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메타버스 내에서 당하는 범죄 피해에 있어 피해 아동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의 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⁷⁰⁾.

한편, 메타버스는 초국적(超國籍)성의 특징이 있으므로 범죄 수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있어 외국 소재 플랫폼에서 발생한 범죄라거나, 피의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병확보와 수사에 있어 해당 국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계의 아동들을 상대로 하여 범죄를 시도할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내의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하여 현행법상 처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메타버스 내 아동 대상 범죄의 유형과 같이 메타버스 유저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음성과 메시지를 통하여 성희롱, 협박, 모욕 등을 행하는 것을 넘어 아바타 이미지를 상대로 한 성폭행이나 스토킹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메타버스 유저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그 유저가 아동이었는지를 피의자가 인식하였는지에 있어 공방이 있을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게 된

67) 중앙일보, “‘썸타자’며 내위 올라탔다...어른들은 모르는 10대 무법천지”, 2022. 6. 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645#home>

68) 중앙일보, “메타버스서 미성년자 11명 성착취물 만든 30대 남성 구속”, 2022. 4. 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475#home>

69) 서울신문, ‘아바타 성범죄, 노예방... 메타버스로 옮겨간 학폭’, 2022. 1. 2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7001021>

70) 서울신문, ‘접속 1시간만에 “성폭행 당해”....성착취도 이뤄지는 ‘가상세계’’, 2022. 7. 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2500021>

다면 그마저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술력의 발달로 가상현실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동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단순히 처벌규정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동의 보호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없다할 것이다.

결국, 이상의 입법부재를 해소할 신속한 법제도의 마련이 요청될 것이고, 더불어 현행법상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의죄,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의 조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의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가입절차 및 가입자 관리의 방식을 변경하여, 익명계정, 도용계정, 복수의 중복계정 등의 가입을 제한하고 본인인증을 통하여 가입자를 관리하도록 자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행하는 대응은 성적인 단어에 대한 금치어 지정, 내부 신고, 차단 안내 등에 그칠 뿐인데, 이를 넘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효적인 대응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2 메타버스 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법제도 현황

현행법률 중 디지털 환경, 더욱이 아동의 디지털 환경 내의 아동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온·오프라인의 한계 없이 또 아동과 성인의 구분 없이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의 일련의 행위들을 해당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으로 포섭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이 있을 수 있고, 사이버 환경에서의 특수한 상황 및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아래의 현행 법률들에서 해당되는 조문을 검토해 본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조문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N번방 사건⁷¹⁾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쳤는데, 2020. 6. 2. 개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⁷²⁾. 2020. 12. 8. 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⁷³⁾, 2021. 3. 23. 개정된 사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⁷⁴⁾.

71)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거래·유포한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해당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일련의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을 통칭하는 용어.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시행 2020. 6. 2., 개정이유]

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41호, 2020. 12. 8., 일부개정, 시행 2020. 12. 8, 개정이유]

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시행 2021. 9. 24,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신설 2020. 12. 8.>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 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메타버스 내 범죄 적용 가부

아바타 이미지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것인지 살펴보면, 위 조항은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그 이미지를 활용한 성착취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며, 가상세계의 아바타에게 행하는 일련의 성적 접촉이나 표현이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불리한 확장해석이라 할 것이다. 한편, 동 조문에서 ‘표현하는 것’이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기타 화상영상 형태로 이미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바타가 “현재”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미”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메타버스 내 성착취 및 폭력 피해 등 디지털 환경을 매개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양상의 범죄에 대하여, 현행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규정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을 비롯한 관련법에서 디지털 환경을 아우르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입법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조문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는데, N번방 사건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도 규정되었다(동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처벌되며(동조 제4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행위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4조의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2) 메타버스 내 범죄 적용 가부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의 이상의 조항들의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내의 아바타 이미지가 메타버스 유저인 인간과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성폭력처벌법」의 위 조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범위에 아바타 그 자체를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전송하거나, 해당 아바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스스로 촬영하게 하였다거나, 해당 아바타를 가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곧장 해당 아바타, 즉, “사람”이 아닌 이미지에 대한 범죄로 구성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이상의 행위들을 메타버스 유저에 대한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개개의 사안마다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메타버스 유저인 “사람(특정인)”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전달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거나, 아바타 이미지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주는 촬영·합성 등의 일련의 행위가 메타버스 유저인 “사람(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법 제13조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아바타 이미지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주는 촬영·합성 등의 일련의 행위가 메타버스 유저에 대한 협박·강요 등을 하고자 하는 고의로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닌 형법상의 협박·강요 등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바타 이미지 자체에 현존하는 특정인(사람)에 대한 합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지 합성에 이용된 특정인에 대한 동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이상의 일련의 범죄행위들이 연계되어 메타버스 유저와의 오프라인상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착취 등의 추가범죄가 이루어질 경우, 미성년자인 메타버스 유저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 「형법」상의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검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은 2018. 3. 13. 일부개정을 통하여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⁷⁵⁾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동법 제7조의3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2021. 1. 12. 일부개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 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⁶⁾

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51호, 2018. 3. 13., 일부개정, 시행 2018. 3. 13., 개정 이유]

7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5호, 2021. 1. 12. 일부개정, 시행 2021. 7. 13., 개정 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1. 1. 12.>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본조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20. 1. 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2021. 7. 13.>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7. 13.〉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 7. 13.〉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구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10년
 3. 그 밖에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 5년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3.〉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본조신설 2018. 9. 13.]

[제목개정 2020. 4. 29.]

(2) 메타버스 내 범죄 적용 가부

「성폭력방지법」의 이상의 규정들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 이미지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이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규율을 받을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바타 이미지 그 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의 법체계에서는 해당 아바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스스로 촬영하게 하거나, 해당 아바타를 가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성폭력처벌법」제13조의 규율을 받거나 형법상의 협박·강요 등에 해당하는 것 외에 이를 「성폭력처벌법」제14조상의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다⁷⁷⁾.

77) 한편, 「성폭력방지법」의 위 삭제지원 규정의 이용에 있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아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방안 연구, 한국-필리핀 아동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개인정보와 콘텐츠 관련 위험 및 대응방안』, 202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37쪽). 미성년 피해자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14세 미만의 피해자의 경우는 삭제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효율적인 사건 개입을 위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 함께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수사시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사법절차 지원이 더불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48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메타버스 내 범죄 적용 가부

‘음란’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표현’을 말하는데, 다수가 입장한 공간인 메타버스 내에서 유저의 아바타를 상대로 이러한 음란한 문자를 채팅창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낸다거나, 자신의 아바타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이나 포즈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하여 공공연히 전시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위 규정을 통하여 처벌에 이룰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법원은 ‘해킹’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장애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한 명령’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바⁷⁸⁾, 해킹 혹은 악성코드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의 경합법이 성립할 수 있다.

마. 형법

(1) 조문 검토

형법은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 메타버스 내 범죄 적용 가부

메타버스 내의 가해유저의 일련의 행위, 즉 성희롱적 발언을 계속 쏟아내거나, 아바타를 상대로 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같은 행태를 보여주는 것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업체의 업무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78)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

3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메타버스 내의 아동 대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현행법상 대응은 한계가 있다. 특히 많은 아동들이 불쾌감과 피해의 충격을 호소하는 유형으로서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로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입법함으로써 현재의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메타버스 이용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현재 제안된 입법안 등을 검토해 본다.

가. 메타버스 내 범죄 처벌 조항 신설시 고려 요소

메타버스 플랫폼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서의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일정 시점에 동시적인 참여에 있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동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루어지는 당시 이를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거나, 다수가 개입하였다고 하는 경우 직접 행위를 한 행위자(정범)와 환경에 머문 나머지 유저들을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사고를 확장해 보면, 오히려 아바타 등으로 메타버스 내에 존재하였던 유저가 아니라, 메타버스 내의 위험한 환경을 제공한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특정한 기술력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내에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던 것이 범죄의 유인이 되었을 경우 이를 주의깊게 예상하지 못한 콘텐츠 기획자,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시에 상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 메타버스 내의 실시간 광고 등 홍보의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광고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환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의되는 입법의 취지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메타버스의 이용자가 대다수가 아동인 점을 감안한다면, 처벌규정의 입법으로서 실제 처벌에 이르게 되는 가해자 또한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처벌 일변도로 이를 대응하는 것이 과연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방법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가해행위를 한 아동이라고 하여 아동에 대한 개입과 보호를 모두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아동인 경우에 있어 처벌로 곤장 이어지게 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를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함께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고, 메타버스 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고민하자는 취지라면, 결국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 논의의 범위가 좁혀지게 되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아동”인지 여부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에서는 자신의 현실세계의 외모, 나이 등과 전혀 다른 또 다른 나인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는 실제 아동의 연령이나,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나이가 많은 것처럼 하여 아바타를 생성시키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를 “아동”대상 범죄행위로 볼 것인가,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제 연령이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아동에 대한 범죄의 의도 없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

결국, 이는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의 법적 지위를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논의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아바타”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이용자가 아동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고 의도한 범죄에 대하여는 “아바타”의 의도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논의를 비약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법익의 주체는 “사람”일 수 밖에 없으므로, “아바타”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아바타”에 대한 범죄행위를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 근거는 “아바타”를 운용하는 실제 사람인 이용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⁷⁹⁾.

나. 메타버스 내 성적 침해행위 처벌 규정 신설 검토

(1) 아바타의 법적 지위

아바타는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에서 또 하나의 자아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유저의 조종으로 움직이며 전자신호나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유저의 취향, 사상, 생각 등의 사생활적 정보와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반영되어 유저의 인격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최근 메타버스가 갖는 독자적 사회적 가치와 형사정책적인 개입을 위하여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79) 이경렬외1, 위의 글, 103쪽 ; 아바타가 그 자체로 인격권을 갖게 된다면 논의의 지평은 완전히 달라진다. 아바타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용자도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아바타에 대한 강제추행과 자연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경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성적) 인격권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사실상 자연인과 같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적용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또는 형법 제298조의 대상을 자연인에 한정하지 않거나 조문 자체를 개정·적용해야 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된다.

개개의 침해적 성격의 행위에 개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격유지권·인격형성권·정보공개청구권·인격표현권이며,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명예, 성명, 초상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⁸⁰⁾’로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격권, 즉 ‘사이버 인격권’ 개념을 인정하고, 아바타에 대하여도 적어도 메타버스 내에서는 구체적 기본권 보호규범의 근거가 되는 인격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⁸¹⁾. 이처럼 아바타에 대한 ‘사이버 인격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아바타에게 행해지는 인격침해적 행동에 직접적인 가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아바타에게 인격권 등을 포함한 일신전속적 가치를 부여해 형사적 보호대상으로 삼거나 제재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⁸²⁾. 아바타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존재도 아닌 가상세계의 존재로서 전자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능도 감정도 갖지 않으므로 동물과는 달리 권리를 가질 존엄성의 근거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우 재산권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별도의 인격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나, 아바타는 그 아바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연인과 동일성을 갖게 되어 굳이 법률로서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자연인의 권리가 곧 아바타의 권리가 되는 것으로 의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바타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는 자연인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로 보고 법률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22. 1. 28.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따르면, “사회 변화에 따라 인격성(personhood)이 인정되는 개인의 범위가 온라인상 가상공간 또는 사적 이미지·물건 등으로 확대되면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침해의 범위 또한 신체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비신체적 영역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성폭력 관련 법령에 일부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성적 침해행위에 관한 처벌의 흠결을 보완해 왔으나, 이러한 대응은 개인의 인격을 온전히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바, 독자적인 성적 관념 하에 자기의 성적 정체성과 자아상을 결정하고 유지할 권리인 ‘성적 인격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는 것이다⁸³⁾. 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는 ‘사이버 인격권’과 유사한 ‘인격권’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인격권 침해의 피해는 아바타가 아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입는 것이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를 피해자로

80) 임흥순, ‘인격권의 법적성질과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2021,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1249쪽

81) 류부곤, 위의 글, 33쪽 이하 참조

82) 이경렬외1, 위의 글 참조

83) 법무부,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 2022. 2. 28., 보도자료.

하여 범죄구성요건을 개설했던 것이다.

결국,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사이버)인격권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격권의 주체는 실제 인간일 수 밖에 없으므로, 현행법상 아바타가 인격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현행 민법은 인격권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만을 인정하고 있고, 인격권 관련 민법 개정안 역시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이나 사자를 보호법익의 주체로 하고 있는 것 등이 그 근거이다⁸⁴⁾.

(2) 성적 침해행위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등의 성범죄 행위가 아니라,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이루어진 성적 행동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겠느냐의 논의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디지털 화상이미지에 불과한 아바타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경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될 뿐이다. 그러나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는 그 아바타를 조종하는 유저의 자아가 투영된 특별한 존재이므로, 단순히 음란한 영상을 도달시켰다는 정도의 법익침해로서 실제의 피해와 충격의 정도를 포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당 피해를 당한 유저는 현행 형법상 규정된 각종 성범죄 유형의 가벌성 요건이 되는 성적 수치심, 분노감, 모욕감, 무력감을 실제로 느끼고 있고, 현실세계에서 자연인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즉, 원치 않는 상태에서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소극적 자유의 경우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유저의 특별한 매개체인 아바타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메타버스 내 아바타에 대한 성적행동 또는 성적언동에 대하여 “성적 침해행위”로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 주된 논의이다.

이러한 “성적 침해행위” 처벌규정의 신설은, 앞서 살펴본 “(사이버)인격권” 인정 논의와도 연관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메타버스 내에서 구체적인 기본권 보호규범의 근거를 부여하게 된다면, 아바타를 상대로 일어나는 “성적 침해행위”의 처벌의 근거와 보호법익을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

84) 유주선, ‘메타버스 내 인격권 침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2023, 저스티스, 통권 194-3호, 281-282쪽

러워 지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바타에 대하여 “(사이버)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인격권”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아바타를 조종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유저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성적 침해행위”는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유저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있는 행위로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최근 발의된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바타에 대한 성적 침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의 경우 아바타 간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안들 역시 자연인인 메타버스 플랫폼 유저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그 유저를 대신하는 아바타에 대한 성적 침해로서 메타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항에서 다룬다.

이러한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는 아바타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를 자연인에 대한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감정의 침해가 과연 형사처벌로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철학적 문제를 수반한다⁸⁵⁾. 성적 감정의 침해를 입증하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의 피해가 막대한 정도로 증가할 가능성과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모호한 기준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성적감정의 침해를 보호법익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성적 감정의 침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된다면 이로써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성적 언동’을 ‘성적 괴롭힘’이라는 유형으로 포섭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안된 강선우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⁸⁶⁾, 법무부는 ‘성적 언동’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행정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볼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유저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사각

85) 이경렬 외1, 위의 논문 참조

86) 의안정보시스템, '[21159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Y2E0P2E007G1M7M5E9U2S6R0N5M6

지대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다만, 처벌규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치중하여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성문형법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시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고민하여야 하며, 적용시에도 법관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정의 정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텔레딕 기술과 같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이 가상세계와 연동되는 경우, 현실 세계와 유사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유저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와 메타버스 시스템 내 안전장치 구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말 먼 미래에 신체 전부분에 대한 촉각 전송이 가능해진다면 메타버스상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를 신설하거나 해석학적으로 현행 형법의 대상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⁸⁷⁾.

다. 입법안 검토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하여 최근 제안된 입법안들을 살펴본다. ①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시의 성적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② 아바타 등을 이용한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제재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민형배의원이 제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인바,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직접적 성폭력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13조의2 신설한다는 것이다⁸⁸⁾.

87) 이경렬 외1, 위의 논문 참조

88) 의안정보시스템, '[21154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P2V0H4N0C1N1M1J2U4A2T7V2D5X9

해당 입법안의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아바타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일견 아바타의 성적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아바타를 조종하는 실제 유저(사람)에 의 성적 인격권 침해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발의〉

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강선우의원이 제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언어적 성폭력, 소위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노인·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 처벌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권고,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성폭력 범죄 유형은 현실 세계에서의 중대 성범죄를 예비·음모하거나 이를 조장·방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등 비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피해 감정 내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최근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13조의2를 신설한다는 것이다⁸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발의〉

제13조의2(성적 괴롭힘)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9) 의안정보시스템, '[21159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Y2E0P2E007G1M7M5E9U2S6R0N5M6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 발의)

윤영덕 의원이 제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 공간과의 유사성이 높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44조제3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⁹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덕의원 발의〉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행하는 음란한 행위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제4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 1의3.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74조의2(벌칙) 제4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0) 의안정보시스템, '[21166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2W0S7F2C2O0U9N2N4A2B3J4S0L8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 발의)

신현영의원이 제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은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현행법상의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의 경우 수사당국이 압수영상을 발부받기 전까지 증거물을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의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및 제44조의7제4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⁹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현영의원 발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2의 정보 및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및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1) 의안정보시스템, '[21159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등 14인)', 제안이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R2M0V6Y1R3Y1Y6J0N5S5P7Z1K5B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현영의원 발의〉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이 제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내 성희롱 발생 등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해당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가 제도화되었으므로, 이와 동시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조항을 제34조의2 및 제67조 제4항으로 신설한다는 것이다⁹²⁾.

앞서 살펴본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중 심각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가기관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입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선우의원 발의〉

제34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목적 범죄행위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2) 의안정보시스템, '[21144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등10인)', 제안이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Z2C0K1U0J5A1E4E3D5E3C1B8Y1H5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권고안

2022년 1월 2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신중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⁹³⁾.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메타버스란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시켜 가상의 공간에서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연결되는 시스템상의 공간”인데, 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최근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적 공격이나 언어적 성적 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법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성적 인격권’, 즉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독립적인 보호 법익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의 전제는 아바타 대상 성적 가해 행위도 그 사용자인 사람에 대한 법익침해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언동’으로서 성적 침해행위를 범죄구성요건에 포함한 권고안과, 「정보통신망법」상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권고안 : 1안〉

제13조의2 (성적괴롭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권고안 : 2안〉

제13조의2 (성적괴롭힘) 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①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93) 법무부, “신중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 2022. 2. 28., 보도자료.

라.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타버스 내 아동 대상 범죄의 유형과 같이 메타버스 유저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음성과 메시지를 통하여 성희롱, 협박, 모욕 등을 행하는 것을 넘어 아바타 이미지를 상대로 한 성폭행이나 스토킹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메타버스 내의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하여 현행법상 처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아동들이 불쾌감과 피해의 충격을 호소하는 유형으로서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로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술력의 발달로 가상 현실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동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처벌규정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입법함으로써 현재의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았다. 다만, 이러한 “성적 침해행위”가 지나치게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중심을 두고 입법 및 적용이 되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시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고민하여야 입법함으로써 메타버스 내의 성적 침해행위로서 고통 받고 있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메타버스 내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제언

1 메타버스 내 참여권이 가지는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입법과 정책 등 국내의 논의는 대부분 아동에 대한 보호권을 중심으로 하여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한 논의에 치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논의나 이에 대한 전제로서 사생활 보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의견표명권 등의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자생적으로 참여권이 보장되는 방식보다는 법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 당사자에게 권리를 인식시키는 교육과 홍보 등도 더불어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메타버스를 비롯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참여권 관련 논의는, 아동의 참여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법제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된다 할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상 아동권리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특히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는 법제도적 측면이 메타버스 내의 참여권과 연관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아동의 참여권 구현의 현실과 향후 개선점을 중심으로 아동 참여권의 의의를 짚어보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내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이 미흡하다. 이러한 메타버스 내의 프로그램 참여라는 것은 단순한 디지털 기기 보급을 통한 물리적 접근권 보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아동 스스로가 메타버스 내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접근을 스스로 허용하고 판단함에 있어 양질의 다양한 정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야 하며, 아동 자신의 이익에 이러한 메타버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의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동 자신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의 전제는 아동이 참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아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어서의 지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아동이 참여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동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 등 외에 아동의 부모, 교사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교육과 아동 참여권에 대한 인지와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의 경우 아동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디지털 환경과의 접촉과 활동이 자연스러운 것에 비교하여 학부모나 교사 등이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환경 내의 아동의 사생활 침해를 자행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참여권 및 참여권 보장의 전제되는 환경의 마련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법적 기반들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서 관련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부모나 아동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⁹⁴⁾.

아동의 참여권의 전제로서 또 참여권 행사의 방식으로 메타버스 내의 표현의 자유 보장도 중요한 쟁점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법률로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아동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숙지시킬 것인지의 준비도 필요하다. 아동의 경우 아직 보호자와 사회의 보호아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불이익과 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있고, 이에 아동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법률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여러 압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부적절한 제한은 아동의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활동과 표현, 의견개진의 참여를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의 메타버스 내의 표현의 자유가 아동의 의사와 다르게 제한될 가능성을 주목하여 관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의견 개진과 참여에 있어 부모의 동의 요건을 가중하는 형태를 하기보다는 아동과 보호자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의견 표명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한편, 아동에게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의견이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도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인지에 맞는 아동친화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의 의견이 표명되고 반영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플랫폼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친화적 플랫폼이 아동들이 많이 활용하는 메타버스 내에 구현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메타버스 내에

94) 장민영, 위의 보고서, 참조

서의 아동 참여권 논의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에게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국가적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은 물론이고, 특히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러한 의견 표명의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가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의견표명의 장에 아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서 아동의 연령과 인지에 맞는 언어로 충분히 아동의 권리 및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아동친화적인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참여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아동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며, 아동의 참여와 의견개진으로 취합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참여와 관련하여, 2020. 4. 29.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라는 사회문제에 아동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주관으로 진행한 ‘어린이 특집 정례브리핑⁹⁵⁾’을 주목할 수 있겠다. 당시 브리핑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동들의 가지는 궁금증에 대하여 정부에서 충실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아동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텍스트가 아닌 영상을 통한 송출 및 실시간 온라인상의 아동의 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아동들의 질문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즉석에서 답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으로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참여권이 일견 조화되는 형태를 시도하였다는 평가다.

2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에 대한 국내외 논의

가. 국내의 논의

1. 국내 법률 개관

국내의 법률 중,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디지털 환경에만 초점을

95) sbs, ‘[라이브] 어린이가 묻고 정은경이 답한다...’어린이 특집’ 코로나19 브리핑’, 2020. 4. 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68385&plink=COPYPASTE&cooper=SBNEWSSEND

맞춘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등과 같이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하여만 초점을 맞춘 법률은 확인되나, “아동”과 “디지털 환경”의 범주를 모두 아우르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상의 법령들의 적용 범위를 전자에 있어서 적용대상을 아동으로 제한하고, 후자에 있어서는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의 적용으로 제한하여 공통점을 도출한다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내 법률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전자의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데이터, 정보 등에 대한 이용 촉진, 건전한 활용, 보호 등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각종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아동을 포함한 정보주체들의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해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 내의 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한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에 초점을 둔 후자의 법률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과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국가가 복지와 교육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선언적인 조항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국내 법률에서 확인되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아동의 권리란, 디지털 환경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아동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생활과 정보의 공유와 처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유해환경이나 폭력으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국가의 아동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교육이 있어야 하며, 디지털 환경 안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에서 다뤘다.

최근 디지털 환경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고 광범위하며, 오프라인 현실세계가 아닌 오히려 디지털 가상 세계가 일상을 주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아동들의 성장과정 및 아동의 미래의 삶에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장, 정보 등의 보호, 권리의 실현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를 아우르는 특별한 단일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나,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의 권리 중 주요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친화적인 정보제공과 아동의 동의권 보장’이 그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은 이용자이자 참여자로서 다양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아동 친화적인 정보제공과 아동의 동의권 보장’이라는 내용은 매우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본 보고서에서 ‘아동의 참여권’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 결론을 맺으려는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가이드가 아동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한을 조정하려고 한 시도가 아동의 디지털 환경 접근과 참여권의 제한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아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환경, 메타버스 이용 등에 있어 아동의 권리, 특히 참여권의 구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기준에 참고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표 7] 개인정보보호법 아동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⁹⁶⁾

아동 범위	14세 미만
대상 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특례 규정 있음)
일반원칙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의무 개인정보위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 규정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도 있음)
특징	법정대리인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권 규정
제재	〈개인정보처리자〉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과징금)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등의 책무로서 ‘만 14세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5조 제3항), 아동의 개인정보 처

9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2002), 11쪽

리에 대한 동의에 있어 별도의 조항을 두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동법 제22조의2 제1항), 아동의 연령과 인지에 맞고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아동에게 명확하고 쉬운 고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2조의2 제3항, 제39조의3 제5항). 또한, 만 14세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방법과 동의 확인의 방법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시행일: 2023. 9. 15.]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개인정보보호법〉

18., 2023. 3. 14.〉

④ 삭제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⑥ 삭제 〈2023. 3. 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시행일: 2023. 9. 15.]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시행일: 2023. 9. 15.]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9. 15.]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시행일: 2023. 9. 1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8. 4.]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아동, 특히 만 14세미만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아동친화적이고 명확하고 쉬운 방식의 고지 등의 내용과 법정대리인 동의에 있어서도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는 아동에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 등은 다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⁹⁷⁾

(가) 추진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아동이 영상·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한 상황임에도, 아동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노출 등 침해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 행사가 미숙한바, 아동의 연령·인지적 발달 등에 비추어 차등적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안내하는 등 아동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으로서 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히고 있다.

(나) 주요 내용

(1) 가이드라인 규율대상 아동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

9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2002) 참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EU·영국 등 해외에서도 특별한 보호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에서의 논의는 후술한다. 이에 위 가이드라인에서 규율하고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만14세 미만의 아동보다 범위가 넓다.

(2) 아동 개인정보 관련 특성

아동의 개인정보 관련 특성으로, 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동의 의사표시는 불완전하며, ②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동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시절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장기간 축적되어 정보주체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보의 지속성의 특성이 있고, ③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아동은 교육·문화·여가·대인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대규모 개인정보가 집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활동 범위를 가지며, ④ 아동에 대한 후견적 개인정보 보호와 향후 정보주체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 보호자, 사업자, 국가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가 공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3) 아동 개인정보 보호 원칙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으로, ① 아동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②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③ 아동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개인정보 침해시에 스스로 구제 절차를 이용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법정대리인, 국가, 기업 등의 다방면의 가각적인 적극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④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명확하고 알기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이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⑤ 아동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 과정을 거칠뿐 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온라인 이용행태도 다르므로,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8] 아동의 개인정보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⁹⁸⁾

특성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의사표시의 불완전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수집한 정보의 지속성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광범위한 활동 범위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를 기획·설계,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 권리보장으로 나누고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9]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⁹⁹⁾

단계	단계별 보호조치
기획·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방법으로 연령 확인 -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 - 현금·상품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설계 자제 - 위치추적 옵션 비활성화 기본값 설정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관련 사항 고지 -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 시 사전동의 -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로서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맞춤형 광고 자제 - 부적절한 네티지기술 사용 자제
이용·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이용·제공 확인 -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부적절한 내용 정보 제공 금지 -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서비스가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 마련
보관·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개인정보 보관·관리 - 개인정보의 적법한 파기
권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 행사 안내 - 개인정보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등 적극 지원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안내

9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2002), 17쪽

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2002), 50쪽

(다) 소결

이처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있어 보호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 있어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준수사항을 두고 있는 바, 다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해외의 논의

1.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표 10] EU GFPR 주요내용¹⁰⁰⁾

아동 범위	16세 미만 (개별 회원국별로 기준 연령을 13~16세 범위에서 조정 가능)
대상 사업자	1데이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일반원칙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작성
동의	보호자 고지 및 동의 필요
특징	아동을 미래 사회구성원으로 보고, 아동에 대한 정정권, 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인정
기업의 자발적 노력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¹⁰¹⁾)
제재	1천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의 2% 중 높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

EU는 2016. 6. 24.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들과 제도들에 대한 법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정의 배경은 EU 전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에 발맞추어 개인정보의 처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면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EU 역내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를 수범 대상으로 하는 역외조항(법 제3조)이 있으며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잊혀질 권리), 처리에 대한 제한권,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1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2002), 10쪽

101) §40.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각 범주를 대표하는 협회 등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아동의 보호, 친권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음

제8조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원칙적으로 16세 이상의 자는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고,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회원국별로 기준 연령을 16세에서 13세까지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평의회(European Council)가 각 회원국의 민사법에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연령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EU 차원에서 연령을 특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⁰²⁾.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부모가 특정 연령의 아동에 있어 그 권리를 대신하는 형태(동의)이고(제8조), 또 하나는 아동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자 하는 접근(empowerment)이다(제12조).

아동의 동의 또는 아동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보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 directly offered to a child)’로,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란,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적 요청에 대해 통상 보상을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any servic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at a distance, by electronic means and at the individual request of a recipient of services)”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정보사회 서비스”는 실제 동의자가 그 ‘부모’가 맞는지를 확인하여 유효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데이터 관리자가 이용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이용하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2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information)를 구체적이고, 투명하며, 인식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하며, 특히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스스로 그 위험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결정할 능력을 제고해 주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커넥티드 토이(Connected toys)와 같은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의 디자인에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data minimization)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과 디플트에 의한 데이터보호를 정하는 제25조,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동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102) 각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한 연령은 13세(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등), 14세(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5세(그리스, 프랑스), 16세(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으로 다양하다.

경우에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를 실시하여 아동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저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에 관해 규정하는 제35조는 리스크 기반 접근의 맥락에서 아동의 보호에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17조는 잊혀질 권리(right to erasure, the right to be forgotten)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8조에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그 대상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또한 Recital 38은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활동 중 하나로 프로파일링을 들고 있는데, 제22조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들(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에 관한 규정으로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과 또는 그에 유사한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관련된 Recital 71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아동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결국 아동이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표 11] 미국 COPPA 주요내용¹⁰³⁾

아동 범위	13세 미만
대상 사업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지하는 상업적 웹사이트 운영자 및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웹사이트 운영자
일반원칙	아동이 이해하기 쉬워야 함(짧고 다채로운 표현, 속어 및 대중문화 문구 등 이용)
동의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전 웹사이트 운영자의 아동 부모에 대한 고지 및 동의
특징	법정대리인에 대한 아동 개인정보의 접근 및 삭제권 보장
기업의 자발적 노력	세이프하버 프로그램(Safe harbor programs ¹⁰⁴⁾)
제재	주 법무장관에 의한 민사소송 및 FTC 법에 따른 벌금

1998. 미국연방의회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이하 ‘COPPA’라 함)」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아닌

1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2002), 9쪽

104) COPPA §312.11. 사업자가 COPPA와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FTC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규제(§312.2~§312.8)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반 시 해당 운영자에게는 공식 집행조치 대신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의 자체 검토 및 징계 절차를 적용함

영역별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해 왔는데, COPPA는 현재 미국에서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라 함)가 소관 행정청으로서, FTC는 COPPA의 위임을 받아 상세한 행정입법(rule)을 제정하고 있다.

COPPA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동(13세 미만)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중심으로 하는 후견적 접근을 주된 수단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① 명확하고 포괄적인 온라인 프라이버시 정책을 게시하고, ②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부모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③ 부모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④ 부모들의 열람을 허용하며, ⑤ 부모들의 동의 철회 및 정보 삭제 요청권을 인정하며, ⑥ 수집한 정보의 비밀성, 안전성 및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정립하고 유지할 의무와 ⑦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제한 및 삭제 의무, ⑧ 활용에 필요한 합리적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을 온라인 서비스 참여의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COPPA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제 의무의 수범자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13세 미만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운영자”에 한하고 있는 점이다. COPPA는 아동 보호에 특화된 법률로,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식 또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¹⁰⁵⁾.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아동임을 예상한 서비스 운영자로 규제 대상이 좁아지면서, 국가가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시책 등을 마련하고 입법과 집행을 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 보여진다. 또한,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¹⁰⁶⁾은 FTC가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입법인 ‘COPPA Rule’을 통하여 구체적 방법들이 마련되었다. 이 부분은 비대면인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위한 동의를 누가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제도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서, 규제 의무를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하고 규제 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¹⁰⁷⁾. 마지막으로,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COPPA Rule’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COPPA Rule’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정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시

105) EU GDPR도 아동에 관한 규정의 수범자를 COPPA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동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다.

106) “온라인에서 아동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하기 전에 부모들로부터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to obtain verifiable parental consent for the collection, use, o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children)”

107) 현재 지식기반인증(knowledge-based authentication), 안면인식기술의 이용도 승인되어 있다.

의성 있게 마련하였고, 개인정보 식별자를 추가하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게 되었다.

3. 2018년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

미국 연방법 차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지 못한 가운데, 2018. 캘리포니아주 차원에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하 CCPA 라 함)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삭제(deletion), 공유(sharing)에 관한 소비자들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주고 있다.

아동과 관련하여, CCPA가 신설한 소비자의 권리 중에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opt-out)에 있어, 정보주체가 16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적극적 승인(affirmative authorization)”, 즉, 사전동의(opt in consent)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적극적 승인은 COPPA 및 ‘COPPA Rule’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가능한 부모의 동의에 추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는 적극적 승인을 받은 때에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사후에 선택을 철회할 (opt-out) 권리와 그 아동을 위해 철회하는 절차를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Minors)의 정보를 수집 또는 보관하는 사업자는, “적극적 승인”하는 자가 그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4. 영국의 「연령에 적합한 디자인 규칙(Age Appropriate Design Code)」

영국은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2020. 8. 12. 「연령에 적합한 디자인 규칙(Age Appropriate Design Code, 이하, ‘AADC’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와 전기통신 규칙(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PECR)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지는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AADC는 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 설계 시 준수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2] 영국 AADC 일반원칙¹⁰⁸⁾

아동의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 of the Child	사업자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개발할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1차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연령 적합성의 적용 Age-appropriate application	이용자의 연령대(age range) 및 연령이 다른 아동들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인을 아동들과 구별할 수 있는 강력한 연령인증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이 지침상의 기준을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공표된 조건, 정책, 커뮤니티 기준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간략한(bite-sized)' 구체적 설명이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유해한 이용 Detrimental use of data	아동의 개인정보를 아동의 복지에 유해하다고 입증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산업의 업무지침, 기타 규제 규정, 정부의 권고 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 또는 커뮤니티 기준 Policies and community standards	사업자가 공표한 조건, 정책, 커뮤니티 기준 (프라이버시 정책, 연령 제한, 행위규범, 내용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하지 않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디폴트 셋팅 Default settings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초기상태를 달리할 강력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초기상태를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high privacy)' 상태로 맞추어야 한다.
데이터 최소화 Data minimisation	아동들이 참여하는 서비스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보유하여야 한다. 아동들에게 활성화하기를 바라는 요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터 공유 Data sharing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강력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은 한 아동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위치정보 Geolocation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할 강력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선택항을 끄는 것을 기본설정으로 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위치추적을 활성화시킬 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아동의 위치를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선택항은 각 세션의 종료 시점마다 꺼진 상태로 돌아가도록 기본설정값을 맞추어야 한다.
부모의 통제 Parental controls	부모가 아동의 서비스 이용에 개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아동에게 이에 관해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가 부모 또는 돌보는 자에게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아동에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108) 장영민, 위의 보고서 참조

프로파일링 Profiling	프로파일링 ¹⁰⁹⁾ 기능이 꺼진 상태를 기본설정값으로 하고 이를 바꿀 수 있는 선택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프로파일링 하여야 할 강력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아동을 모든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들을 마련한 경우에만 프로파일링을 허용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에 유해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을 피할 것)
넛지 기술 ¹¹⁰⁾ Nudge techniques	아동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을 확장 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넛지 기술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커넥티드 토이 ¹¹¹⁾ 와 디바이스 Connected toys and devices	커넥티드 토이와 디바이스를 제공할 경우 코트 14를 준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온라인 도구 Online tools	아동들이 데이터 보호 권리를 행사하고 우려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돕는 가시적이고 접근가능한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저감시키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령대의 차이, 능력, 발달상 필요를 고려할 것.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가 이 코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버넌스와 책임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사업자가 데이터 보호의무를 어떻게 준수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서비스의 디자인과 개발에 관해 모든 스텝들에 대한 데이터 보호 훈련 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책, 절차, 서비스조건등이 이 코드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13] 영국 AADC 주요내용¹¹²⁾

아동 범위	18세 미만 연령 범위 구분(5개 단계)
대상 사업자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일반원칙	① 아동 최선 이익의 최우선 고려, ② 연령별 적용, ③ 개인정보의 유해한 사용 금지, ④ 투명성, ⑤ 정책 및 커뮤니티 표준 유지, ⑥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 ⑦ 데이터 수집 및 ⑧ 공유 최소화, ⑨ 위치정보 비활성화 기본 설정, ⑩ 아동보호기능 제공 시 아동에게 고지, ⑪ 프로파일링 비활성화 기본 설정, ⑫ 부적절한 넛지기술 사용 금지, ⑬ 인터넷에 연결되는 완구 제공 시 규약 준수방안 마련, ⑭ 아동 스스로 정보보호권 행사 및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온라인 도구 제공

109)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분석하여 특정 상황이나 영역에서의 행동을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110) “넛지 기술”(nudge techniques)이란, 공급자가 심리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의도한 대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술을 말한다.

111) “커넥티드 토이(Connected toy)”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장난감으로, 스마트 기기와 접속·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커넥티드 토이라 부른다.

1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2002), 8쪽

동의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DPA Art.9)
특징	아동 기본 권리 보호 책임 및 아동 최선의 이익 강조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정보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
제재	2천만 유로(1,75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벌금 부과

5. 글로벌 인권규범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인권규범은 아동의 권리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이나 보호권과 같은 전통적인 아동에 대한 보호를 넘어 발달권 및 참여권의 구현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제도의 설계에 있어 아동의 성장 단계에 비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과 아동의 권리 보호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부분이다.

특히 글로벌 인권규범 체계는 아동이 디지털 환경 내에서 권리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각국이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단순히 아동을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생성하며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아동 권리 보장 기반을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국에 아동이 양질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교육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제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경을 초월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프레임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아동친화적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하여 아동의 디지털 기기 및 환경에 접근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 교육 및 아동의 부모 등 아동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도록 하며, 아동친화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침해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메타버스 내 아동친화적 정보제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의 참여권 구현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동에게 자신이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특히, 아동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의견을 개진할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의 존재를 인지시키며, 아동으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구축하여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아동의 권한과 권리에 대하여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인지한 아동이 스스로 숙고하고 판단하여 해당 플랫폼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지 여부와 참여의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메타버스 내의 아동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아동이 ‘아동친화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친화적인 정보제공이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인지 등을 고려하여 아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방식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충분히”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의 ‘정보’는 아동이 판단하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관련 절차에서의 피청취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아동친화적인 정보제공의 방식은 디지털 환경,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독특한 플랫폼에서는 보다 더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단순히 텍스트로 나열하거나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전달 받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보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아동의 정보 숙지 정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대의왜곡, 도덕적 판단의 편향성과 관련된 문제¹¹³⁾가 ‘아동친화적’인 방식을 내세워 대화형, 소통형의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경

113) 연합뉴스, ‘커지는 챗GPT 우려...’대의 왜곡·도덕적 판단 영향 가능성까지”, 2023. 4. 20.,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8102200518>

우에 동일하게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제공에 있어 인공지능의 자체 알고리즘이 아동의 판단을 위한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이 일정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거나, 국가·사회의 의제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이 자신들이 의도한 방식으로 아동의 의사를 수렴해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거나, 허위 정보의 발견시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가 수시로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의 규범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대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닌, 정보가 범람하는 온라인 세계에서 자신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찾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성인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이상의 우려점은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습득, 정보의 취사선택, 정보의 종합, 정보의 생산, 창작 등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이에 국가는 이러한 아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도적 지원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4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은 아동의 보호권 등과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구현되기 위한 전제로서, 또 참여권이 구현되는 과정에서의 안전장치로서 메타버스 내의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1.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와 참여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출생 이전부터 그들 자신과 관련된 많은 개인정보들이 개인정보처리자들에 의하여 수집 및 처리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처리 동의를 요청받고 있다. 개인정보 자체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 유출시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관련 법제도 등이 마련되고 보완되어 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갖는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갖는 위험도, 아동기의 정보가 성인기까지 누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의 문제, 아동기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아동의 피해에 대한 정도의 예측, 아동의 후유증 등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아동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아동의 권리 대리(동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민법」을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가 1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는 관련 법령의 정비에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동의 법정대리인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보다도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실제로 이용해 본 경험도 많지 않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한 상황이므로,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아동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아동이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접하는 것에 있어 제한적 요소가 되는 사실상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요소가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동을 예상치 못한 사이버상의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과 함께 이러한 위험성을 포함한 메타버스 등의 가입, 메타버스 내의 프로그램 등에 참여 등에 있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애초 경험과 참여를 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얻어진 어부지리(漁父之利)의 결과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메타버스 내의 프로그램과 의견개진 기회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 아동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아동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의 참여가 애초부터 봉쇄되어 버린다면, 그것도 아동의 의사가 아닌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법정대리인의 일방적인 편견에 의한 선택이라면, 메타버스 내의 아동 참여권의 논의는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정대리인과 아동의 의사가 상충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의”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의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할 것이다. 아동의 참여권은 말 그대로 “참여”하는 것 자체에도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아동의 권리를 구현하는 과정 자체를 경험해 보는 것이 아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험과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아동의 법정대리인들이 개인정보의 처리와 활

용 등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도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다른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많고,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화되어 처리될 위험성이 크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간, 소통한 상대방, 메타버스 내의 대화, 아동의 인격적인 요소가 가미된 아바타 및 아바타를 비롯하여 눈동자, 맥박, 목소리 등의 신체 반응, 대화나 아바타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상, 신념, 성향 등이 메타버스 이용시 수집될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기의 정보들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또 장기간 활용되면서, 아동이 성인이된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의 특징으로서 생성된 데이터가 공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아동의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 누군가와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메타버스 내의 개인정보보호가 완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험성만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의 참여권은 소극적으로 행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동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된 의견을 메타버스의 다른 유저들과 나누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과 관련한 아동의 정보가 수집되고, 다른 아동의 개인정보와 함께 빅데이터화 되어서 공유된다고 한다면, 아동으로서는 논쟁이 되는 이슈를 포함한 메타버스 내의 프로그램 등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메타버스 내의 아동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제하거나 자율적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아동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이 안심하고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견 개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참여권

헌법상 보장되는 프라이버시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이러한 간섭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는 광범위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2018년 영국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 “Children's data and privacy online, Growing up in a digital age, An evidence review”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개인정보를 비밀로 할 권리 또는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적절한 흐름에 대한 권리(a right to appropriate flow of personal information)”으로 정의하기에 이른다.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전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없고,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정보의 흐름 속에서 구현되며, 그 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간에 비밀을 유지할 것인지 공유할 것인지를 협상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의 온전한 비밀을 보호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는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의 논의와 유사한 흐름을 갖는다. 아동의 사생활이 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공유되는 것에 대하여, 아동의 접근성을 차단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려는 과도한 조치가 있을 수 있고, 반면 아동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양상이다. 후자의 경우, 과도한 아동의 사생활 공개가 셰어런팅(Sharenting)¹¹⁴⁾ 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동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보호자로부터의 사생활 침해 및 아동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현 시대의 아동들이 온라인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빼앗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어 살펴볼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 현실 세계에 비교하여 훨씬 더 다양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표현의 가능성과 정보 생성, 창작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은, 아동의 안전에 중점을 둔다

114) 전복일보, ‘셰어런팅(Sharenting)을 아시나요?’, 2022. 8. 23.,

<https://www.jjan.kr/article/20220823580090> ; 셰어런팅(Sharenting)이란, 2013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SNS에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현상을 말하고, 그런 부모들을 셰어런츠(sharents)로 일컫는다. 표현의 자유와 육아 정보 공유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이의 인격권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에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아동의 안전 등의 이유로 하여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메타버스에의 아동의 접근을 차단 또는 제한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모든 아동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가 과도히 제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흐름에 대한 권리”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의 사생활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거나 완벽한 비밀을 보장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아동시기부터 자신의 사생활이 공유될 경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생활을 공유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받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하여 추가적인 위험이나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결국, 사생활 보호를 위한 메타버스에의 접근의 제한과 자유로운 메타버스의 이용 및 참여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이 요청된다 할 것이고, 모든 아동들에 있어 전적인 접근 제한과 같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 아동의 연령,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과 같이 아동의 연령 등으로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불어,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라인상의 사생활 노출과 관련하여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관련 한 교육 등을 통하여 자기 보호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아동의 표현의 자유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에서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표현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아동의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유로운 사고를 확장시키며, 이로써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아동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형태, 어떠한 매체, 어떠한 공간인지를 불문하고 보장이 되나,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법률로서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더불어 규정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메타버스 내에서도 아동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더욱이 아동의 참여권과의 관계에서 아동이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험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의 구현의 형태와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를 매우 좁게 보고 있고, 이러한 제한도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하여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통한 사실상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순히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글로벌 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 성숙도, 아동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규율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마련된 것이다.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권에 대한 법제적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처럼 아동의 연령, 성숙도,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에 따른 아동의 역량 강화 방안과 아동의 권리 보장의 확대까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은 아동의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활동과 표현, 의견개진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의 메타버스 내의 표현의 자유가 아동의 의사와 다르게 제한될 가능성을 주목하여 관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의견 개진과 참여에 있어 부모의 동의 요건을 가중하는 형태를 하기보다는 아동과 보호자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의견 표명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6 아동의 의견 개진

아동의 참여권은 아동의 “참여”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아동이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절차, 그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이러한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아동의 주체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우선,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고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의견이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참여에 있어 아동친화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동친화적인 정보제공의 의미에 대하여는 제3절에서 서술하였다. 아동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는 아동의 의견이 표명되고 반영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플랫폼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의 이용이 많은 메타버스는 다른 어떠한 디지털 플랫폼보다 아동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에게 의견 개진의 권한과 의견표명의 방법,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의 장까지 마련을 해준 이상, 의견 개진의 여부는 아동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러한 장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의견 표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결국, 아동의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의견표명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아동에게 익숙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은 도구적 차원에서 공간을 변경한 개념으로 디지털 환경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부터 아동들이 자신감 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시민교육을 활성화 하자는 견해가 제안되고 있는데, 시민교육 차원에서 ‘공동체 문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는가’ 등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이를 디지털 환경에 접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¹⁵⁾.

또한, 아동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의사를 표명하고 싶을 관심 주제를 제안하고, 아동의 의견이 제안될 경우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자신이 실제 개진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동들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비롯한 오프라인에서 미

115) 장민영, 위의 보고서

리 의사결정과정과 반영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특정 주제를 정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소통과 의견 개진의 루트를 마련하고, 실제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 시대의 아동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환경과 메타버스 내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표명과 취합, 반영의 절차와 필요한 기술적 수단, 디지털 공간의 구조적 이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아동의 의견 개진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온·오프라인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 필요 이상의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된다거나, 사생활에 대한 감시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규제를 마련하여야 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 처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 수업 등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의 접근에서부터 학습을 위한 정보의 활동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열악한 디지털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있어,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 참여권을 독려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지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아동들의 의견이 아동정책, 디지털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의 일반적인 내용과 현황, 그리고 이를 둘러싼 현행의 법제도와 논의들을 알아보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으면서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존중되고 구현되고 있는지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중심으로 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중 메타버스 내의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한 이제까지의 논의와 입법안 등을 살펴보고, 특히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의 아동권리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월·변화를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세계를 의미하는데, 메타버스 공간은 단순히 개인들이 전자적 방식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보조적 공간이 아닌 아바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참여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현실세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현실과 다른 차원의 독자적 가상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내의 활동이 메타버스 유저의 개인정보·사생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과잉되게 수집되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창작활동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현실세계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의 문제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타인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형법 및 형사특별법이 규율하는 범죄의 상황이 메타버스 유저에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법제도로 규율하기 곤란한 영역들도 메타버스 내에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율을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유저들에게 이용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규율들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최초 가입·접속시에 약관을 통하여 이를 안내하거나, 수시로 플랫폼 이용시 공지를 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구현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성급한 법적 규제보다는 기술적 대응이나 자율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로 보인다. 이에 아동 이용자를 위한 특별히 요청되는 규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동 이용자에 대한 규율은 아

동의 보호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특히 디지털 세계에의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25번 일반논평(안),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아동 이용자의 접근권, 아동 이용자의 비차별, 아동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아동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아동 이용자의 교육받을 권리, 아동 이용자의 의견표명권, 아동 이용자의 피해구제의 내용에 관한 규율이 요청된다. 또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아동 권리 침해 금지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 가해유저 아동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도 규율의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아니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권리침해의 정도가 심각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은 의식주 해결과 같은 1차적인 보호에 우선하여 이루어졌다. 아동들은 학교가 휴교를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아동들에 따라 접근성에서부터 학습권 보장에 있어서도 격차가 발생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수업의 진행과정에서 아동들의 의사나 아동 친화적인 요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메타버스 내의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하여 현행법상 처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많은 아동들이 불쾌감과 피해의 충격을 호소하는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로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술력의 발달로 가상현실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동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처벌규정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입법함으로써 현재의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을 고민하여야 한다. 이에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았는데, “성적 침해행위”가 지나치게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중심을 두고 입법 및 적용이 되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시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고민하여야 입법함으로써 메타버스 내의 성적 침해행위로서 고통 받고 있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메타버스를 비롯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입법과 정책 등 국내의 논의는 대부분 아동에 대한 보호권을 중심으로 하여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한 논의에 치중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논의나 이에 대한 전제로서 사생활 보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의견표명권 등의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자생적으로 참여권이 보장되는 방식보다는 법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 당사자에게 권리를 인식시키는 교육과 홍보 등도 더 붙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국내에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를 아우르는 특별한 단일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나,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의 권리 중 주요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매우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으로, ‘아동 친화적인 정보제공과 아동의 동의권 보장’을 담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가이드가 아동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한을 조정하려고 한 시도가 아동의 디지털 환경 접근과 참여권의 제한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의 법제와 글로벌 인권규범 등은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환경 구축과 아동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마련의 필요성, 아동의 부모 등에 아동권리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 역시 메타버스 내의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내 아동의 참여권을 구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참여권 보장의 전제로서의 아동친화적인 정보의 제공, 아동의 보호적 측면에서의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아동의 권리행사 측면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아동의 의견 개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의 참여권 구현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동에게 자신이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특히, 아동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의견을 개진할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의 존재를 인지시키며, 아동으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구축하여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아동의 권한과 권리에 대하여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인지한 아동이 스스로 숙고하고 판단하여 해당 플랫폼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지 여부와 참여의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메타버스 내의 아동의 개인정보의 보호가 완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험성만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의 참여권은 소극적으로 행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아

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제하거나 자율적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아동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 등의 이유로 하여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메타버스에의 아동의 접근을 차단 또는 제한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모든 아동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가 과도히 제한될 우려가 있다. 결국, 사생활 보호를 위한 메타버스에의 접근의 제한과 자유로운 메타버스의 이용 및 참여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이 요청된다 할 것이고, 모든 아동들에 있어 전적인 접근 제한과 같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 아동의 연령,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은 아동의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활동과 표현, 의견개진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의 메타버스 내의 표현의 자유가 아동의 의사와 다르게 제한될 가능성을 주목하여 관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고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의견이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아야 한다. 아동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는 아동의 의견이 표명되고 반영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플랫폼도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의 이용이 많은 메타버스는 다른 어떠한 디지털 플랫폼보다 아동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부터 아동들이 자신감 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동이 의사를 표명하고 싶은 관심 주제를 제안하고, 아동의 의견이 제안될 경우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 시대의 아동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환경과 메타버스 내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표명과 취합, 반영의 절차와 필요한 기술적 수단, 디지털 공간의 구조적 이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아동의 의견 개진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온·오프라인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열악한 디지털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있어,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 참여권을 독려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지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아동들의 의견이 아동정책, 디지털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민영,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1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2020,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0-17-②
- 김아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방안 연구, 한국-필리핀 아동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개인정보와 콘텐츠 관련 위험 및 대응방안』, 202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2020
- 유니세프, COVID-19 pandemic ‘quickly becoming a child rights crisis’: Daily death rate could spike by 6,000 for under-fives”, 2020
- OHCHR , 「Civic Space and COVID-19 Guidance」, 2020. 5. 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 2002
- 아동권리보장원, 「감염병 관련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간담회 자료집」, 2020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설문조사 결과」, 2020, 미간행 자료
- 세이프터칠드런, 「조부모가정 코로나19 영향조사 결과」, 2020
- 경찰청, 「경찰청사이버성폭력범죄현황」. 2022,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2021. 7. 14.
- 여성가족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도자료 최종배포본, 2022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 정책」, 2020
- 법무부, “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 2022. 2. 28., 보도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유아 부모 대상 심리방역 방법 제작·보급.’, 2020, 보도자료, 육아정책연구소·한국발달심리학회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2020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http://kstss.kr>
- 국가트라우마센터, 2020, <https://nct.go.kr/>
- 이준복,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 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2021,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 이진규, ‘메타버스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윤리: 논의의 시작을 준비하며’, 2021, KISA REPORT, volume 02, ISSUE 03, 한국인터넷진흥원
- 류부곤,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개념과 침해유형 정립-’, 2022. 형사정책, 제34권 제2호(통권 제70호)
- 이경렬 외1, ‘메타버스 공간의 신종범죄와 형사입법대책 : 메타버스 범죄 2.0을 중심으로’, 2023,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통권 72호)
- 강성용,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를 위한 윤리 및 행정규제’, 2022,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 김선숙 외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0, 아동과 권리, vol.24
- 최아라, '위드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아동의 삶에 대한 탐색적 고찰, 2021,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vol.11
- 이혜진 외1, '메타버스 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한 연구 :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2023, 청소년학연구, 제30권 제2호
- 이희옥,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2021, 헌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 임흥순, '인격권의 법적성질과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2021,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 윤지영, '메타버스 시대, 범죄의 재구성 과 형사사법적 대응', 2023,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
- 신연서외1,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각장애학교 교사 수업 경험 연구', 2020,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36(4)
- 유주선, '메타버스 내 인격권 침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2023, 저스티스, 통권 194-3호
- 오재호,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2020,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연구보고서
- 테크42, '글로벌 누적 가입자 3억명 제페토, 로블록스 뛰어넘을 수 있을까?', 2022. 3. 16., <https://news.zum.com/articles/74383287>
- 테크M, '[테크M 이슈] 전세계 3억명이 쓰는 '제페토'... K-엔터사 꽃힌 이유 있다', 2022. 3. 7.,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94938>
- 매일경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일상을...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시대', 2021. 1. 27., <https://www.mk.co.kr/news/culture/9725812>
- 매일경제, '메타버스의 미래 그리고 우려...가상서 느끼는 五感, 범죄 위험은 과제', 2021. 8. 3., <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1&no=751540>
- 데이터숨, '청소년 10명 중 8명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인지"', 2021. 9. 29.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94>
- 한국경제, "메타버스, MZ 놀이터에서 경제공간으로 진화", 2022. 6. 30.,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63086341>
- 메가경제, '국내 상륙 '로블록스', 네이버 '제페토'와 메타버스 플랫폼 선점 경쟁 본격화', 2021. 7. 22., <https://www.mega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6456529899>
- 중앙일보, "'썸타자'며 내위 올라탔다...어른들은 모르는 10대 무법천지", 2022. 6. 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645#home>
- 중앙일보, "메타버서서 미성년자 11명 성착취물 만든 30대 남성 구속", 2022. 4. 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475#home>
- 서울신문, '아바타 성범죄, 노예방... 메타버스로 옮겨간 학폭', 2022. 1. 2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7001021>

- 서울신문, '접속 1시간만에 "성폭행 당해"....성착취도 이뤄지는 '가상세계'', 2022. 7. 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2500021>
- 연합뉴스, '커지는 챗GPT 우려...'대의 왜곡·도덕적 판단 영향 가능성까지'', 2023. 4. 20.,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8102200518>
- MIT Technology Review, 'NFT가 도대체 뭐야?', 2021. 4. 7.,
<https://www.technologyreview.kr/what-is-nft/>
- 전북일보, '셰어런팅(Sharenting)을 아시나요?', 2022. 8. 23.,
<https://www.jjan.kr/article/20220823580090>
- 이데일리, '코로나19 확산 후 아동학대 신고 13.8% 늘어...警 "주의 깊게 분석"', 2020. 4. 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29046625733496>
- 동아일보, '코로나로 실종된 '학력 중간층'...초1~중1은 학력진단조차 '깜깜'', 2020. 7. 2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20/102077306/1>
- 베이비뉴스, '코로나19 재난 속 아동,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도와야', 2020. 3. 5.,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73>
- 문화일보, '코로나 봉쇄령에 선진국서 '결식아동' 급증', 2020. 5. 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401071239274001>
- 한겨레, '대구 지역아동센터 일제 휴원...배굶는 아이들 감염도 무방비', 2020. 3. 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600.html
- 파이낸셜 뉴스, '메타버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 2022. 2. 1.,
<https://v.daum.net/v/20220201023756349>
- 뉴스1, '코로나 사각지대' 취약계층, 복지관 등 폐쇄에 갈 곳 잃고 집에만', 2020. 9. 16.,
<https://www.news1.kr/articles/?4059591>
- EBS뉴스, '집단생활 '불가피'...아동보호시설 방역 비상', 2020. 3. 3.,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244504/N>
- sbs, '[라이브] 어린이가 묻고 정은경이 답한다...'어린이 특집' 코로나19 브리핑', 2020. 4. 29..

초·중등교육에서의 발달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징계절차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엄선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수연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한상원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I. 서론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유행하고, 공직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되는 등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 등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¹⁾이 발의되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대응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들은 대부분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행위에 따르는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이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등 당사자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의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이른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²⁾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당사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소수의 관련 연구 또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요령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징계절차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등 장애 특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징계사건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1) 이태규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899 (2022. 8. 18.) [계류 중] 참조.

2) 조미옥, 김고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비판사회정책 제56호 (2017), 63-64, 79-81.

특성과 교육 환경의 상호작용과 같은 징계의 원인이 된 행동의 배경과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징계로 인한 선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서는 의사소통 조력과 같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이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발달장애학생이 징계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령 또는 정책 등의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초·중등 교육에서의 발달장애학생 징계와 관련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헌 분석, 비교법적 연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징계절차 마련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학생이 징계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 당사자가 될 경우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내법상 초·중등 교육기관에서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크게 「초·중등교육법」(이하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원지위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절차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및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현행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및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를 경험한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학내에서 장애학생의 징계절차와 관련된 선행연구, 관련 통계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색 결과 발달장애학생이 징계절차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의 절차적 권리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징계절차 연구, 특수교육 환경에서의 교권침해에 관한 연구 및 발달장애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 중 본 연구에 시사하

는 점이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장애학생 징계에 관한 법령 및 제도를 찾아 한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보았다.

초점집단인터뷰는 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겪어보았거나 그로 인한 징계절차를 경험해보았던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얻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도록 구두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내용, 익명성 보장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 내용을 전사한 내용을 교차 검토하였고,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진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인터뷰 분석 중 면담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하여 자료 분석의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연구자들은 국내외 법령 및 제도와 심층면접내용을 분석하여 징계절차에 있어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원지위법 등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징계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외 장애와 관련한 법령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향까지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인터뷰 분석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 및 개선방안 중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개선이 필요한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특성에 대한 교육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 마련 등 다양한 사전적·예방적 성격의 대책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Ⅲ. 선행연구 분석

발달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징계 관련 연구논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IA) 등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장애학생’, ‘학교폭력’, ‘교권침해’, ‘징계제도’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실태조사, 인식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 다방면에서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사례에 대한 분석, 학교폭력 사건으로 내몰리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징계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룬 연구는 드물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연구는 20년간 약 40편 정도의 연구만 수행될 정도로 연구 주제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의 수가 많지 않아 그 결과를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기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³⁾

교권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의 경험과 사례 관련 연구,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회복 관련 연구,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대응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장애학생이 교권침해의 가해학생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징계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룬 연구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초·중등 교육기관의 징계제도와 관련한 연구,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교원(이하 ‘특수교사’라고 함)에 대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일부 연구에서 발달장애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한다.

3) 이미지, 안예지, 김은삼,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국내연구 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6권 제2호 (2020. 4.).

□ 이현수, “장애아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장애아동인권연구, 제4권 제2호 (2013. 12.).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경우 학교폭력이 쉽게 은폐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 장애아동에게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나아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지원교육을 명시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인력 확대, 개별적 돌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 것 등을 제언한다.

□ 홍정숙 외,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경험과 개선 방안”, 지적장애연구, 제23권 제2호 (2021).

이 연구에서 특수교사가 겪는 교권침해의 원인을 심층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공격행동을 교권침해로 보았으며,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하여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해해야 한다는 문화와 인식이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문헌분석을 통해 연구별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공격행동의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리더라도, 특수학급에 배치된 발달장애학생의 특수교사에 대한 우발적 폭행을 법률적으로는 교권침해로 보았다. 나아가 교사를 공격하고 폭행할 때 학교에서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과정을 겪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하여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교사 교권침해와 관련된 법적 규정, 지원체계 구축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활성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권침해 매뉴얼 개발, 원스톱 사후처리 지원체계 구축, 심리상담센터 운영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등 교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지원체계 구축과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 관계 형성 방안, 특수교육 및 특수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특수교육 보조인력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 손희권, “현행 초·중·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한국교육, 제33권 제4호 (2006).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의 징계의 헌법적합성을 검토한다. 장애학생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이 장애와 관련이 있을 경우 징계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이 대상자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징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제한할 위험성이 있는 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비장애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장애학생, 특히 발달장애학생이 징계절차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수의 연구에서 장애학생의 교권침해나 장애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를 일부 언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주된 연구주제로 삼은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보고서 말미에 징계절차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집중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하여 밝히면서 심도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IV. 국내 법제 및 해외 사례 분석

1 국내 법제

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2항은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의견진술권 보장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 3. 23.>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는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8조의3은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징계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징계조치에 비해 그 벌목의 종류가 적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징계조치 또한 법정 징계절차로서 발달장애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침익적 조치이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장애를 고려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고려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은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원지위법에 따른 각 징계절차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 이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의 경우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처분권자 또한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라는 특징이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⁵⁾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대상자가 되므로 ‘퇴학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학생도 존재하므로 징계절차뿐만 아니라 퇴학처분을 받은 장애학생에 대한 재심절차에서도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5) 개별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당한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 심의절차를 경험해 본 한 인터뷰이는 교육지원청은 실제 개별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며 우려를 보이기도 하였다.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법 또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퇴학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심의절차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5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함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제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7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학

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3조).

한편 위 고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위 고시에 따른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은 장애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이라는 부가적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애학생이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일 경우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 및 실제적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심의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담기구 또는 전문기관의 조사 절차 단계에는 장애를 고려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심의 단계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이하 ‘장애 전문가’라고 한다)의 의견 청취를 심의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가해학생의 학교폭력행위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와 같이 장애와 학교폭력행위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각 절차를 담당할 기구의 구성에 있어 장애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 당사자 또는 목격자, 보호자 등 관련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일 경우 진술 조력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⑥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 중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장애학생에 대한 대안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장애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매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북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추가적 고려사항을 권고하고 있

으나 이는 강제력이 없다. 특히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할 때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발달장애학생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에서 이러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를 목격하였다는 참여자는 없었다.

2023년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사항

- 1)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1)에서 특수교육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교육부, 2023년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 70.]

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7가지 유형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교원지위법 또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퇴학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단서), 해당 조치를 하기 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고(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6항).⁶⁾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도록 위임하고 있다(교원지위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 고시의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은 추가 판단 기준 중 1단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단, 장애학생에 대한 감경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6) 단, 교원지위법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과 달리 학교장이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심의에 기속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심의에서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되더라도 각급학교의 장에게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 내용보다 경한 조치를 하거나 대안적 조치를 취할 재량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관련 내용은 보다 명확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에 부가 조치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2022년도 교육활동 보호매뉴얼

Q: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감경사유인 “장애”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학생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나요?

A: 여기서 “장애”란 “신체적 기능의 결함이나 발달장애 도는 정신 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라는 뜻에서 넓은 의미의 장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등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중·감경할지 여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가중·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2022년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2022), 45.]

이처럼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이를 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① 학교폭력예방법과 달리 교원지위법 및 하위 법령에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를 고려한 의견 청취 규정이 없는 점,⁷⁾ 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는 심의 기준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장애여부에 따른 감경 또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④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

7)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항 장애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규정과 비교.

한 경우와 같이 장애의 특성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각 절차를 담당할 기구의 구성에 있어 장애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⑥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또는 목격자, 보호자 등 관련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일 경우 진술 조력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⑦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중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장애학생에 대한 대안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장애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교육부 지침⁸⁾에 따라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 장학사(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학교(급) 교장(감) 및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법률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인권보호 관련 기관장 등),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학교폭력 및 인권 담당 인력, 장애인권교육 핵심 교원 등 장애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은 매월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교를 방문하여 정기 현장지원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피해학생을 특별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매뉴얼’에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일 경우 진술 조력 지원 및 전문가 의견진술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⁹⁾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인해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일 경우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공식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그 성질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장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 양 절차 모두 심의 과정에서 장애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판단하며 해당학생의 장애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이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진술 조력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8) 교육부, 각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201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2012),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2017) 참조.

9) 교육부 외 공저, 2022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 (2022), 22-28 참조.

2 해외 사례

가. 미국

(1) 연방법

미국의 장애인교육향상법¹⁰⁾(IDEIA)은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문제에 대한 절차적 보호조항(Procedural safeguards)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사전 서면통지, 불복통지, 절차적 보호내용 고지, 청문, 조정, 징계, 체류 절차 등).¹¹⁾

IDEIA는 아동이 징계 목적으로 일시적 정학, 퇴학 또는 임시 대체 교육 환경(IAES)¹²⁾에 놓였을 때 아동의 권리와 학교당국의 권한을 설명하고 있다. IDEIA는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며, 행정명령 및 주법을 통해 구체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IDEIA에 따르면 학교당국은 원칙적으로 장애 학생에게 한 번에 최대 10일 동안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0일을 초과한 정학 처분은 ‘징계로 인한 배치의 변경’으로 간주되고, ‘징계로 인한 배치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IDEIA §300.530 ~ §300.536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¹³⁾

IDEIA는 학교 당국자가 징계로 인해 장애학생의 배치의 변경을 함에 있어 배치의 변경이 학칙을 위반한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사례별로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학칙을 위반한 장애학생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대체교육환경을 설정하거나 다른 환경으로의 이전 또는 정학 조치를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10일을 초과하는 배치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장애발현판단, Manifestation Determination)을 하여야 한다. 장애발현판단은 ① 학생의 문제행동이 장애와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② 문제행동이 LEA(지역교육청)의 IEP¹⁵⁾가 실패

10)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11) 우이구 외 공저, “특수학교 현장의 구성원간 갈등현황 및 해소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16).

12) 학생에게 장기간의 정학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교육 및 서비스를 받는 곳과 다른 임시적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3) 34 C.F.R. Sec. 300.530 ~ 300.536.

14) <https://www.ecfr.gov/current/title-34/subtitle-B/chapter-III/part-300/subpart-E> (2023. 4. 30. 확인).

15)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는,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필요(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작성된 교육계획안이다.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전략 등의 개요를 담고 있으며, 학교가 학생의 장애에 알맞은 지원을 통해 제한을 최소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이루어진다.¹⁶⁾ 즉, 장애학생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일지라도 그 행동이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장애 특성의 영향없이 발생한 비행과는 구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장애학생의 배치의 변경을 하기 위하여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낸 후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당국자는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행동,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을 지원할 때 긍정적인 행동 중재(PBIS)¹⁷⁾를 하도록 요구된다.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이 장애특성의 발현으로 판단된 경우, 문제행동 이전에 그 학생에 대한 행동기능 평가 및 행동지도계획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IEP 팀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요구된다.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이 장애 특성의 발현으로 인정된 경우, 학부모 등이 배치의 변경을 행동지도계획수정의 일환으로써 동의하지 않는 한 그 학생은 배치의 변경 이전의 교육 환경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다만 문제행동이 마약이나 무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인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징계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장애를 고려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¹⁸⁾

한편, IDEIA는 장애아동의 특수교육과정에서의 결정 등에 부모와 교육당국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청문회와 소송을 통한 공식적 쟁송절차와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제도(Mediation)를 인정하고 있다. 청문절차에서는 부모의 진술권,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 등을 두고 있다. 특히 부모는 장애발현판단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다.

16) 문제행동이 장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정학조치를 할 수 없으며, 변경 이전의 교육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로 인한 행위라 할지라도 학교 또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나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최대 45일 동안 임시대체교육 환경으로 배치될 수 있다.

17) 미국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기술지원센터(U.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Technical Assistance Center)의 설명에 따르면 PBIS(긍정적 행동중재)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행동중재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행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중재기법이나 이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행동에 기반을 둔 체제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긍정적 행동지원이란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교나 가족, 지역사회 노력의 통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바람직하고 적절한 행동을 미리 가르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는 지원법을 지칭한다. 주로 자폐 등 발달장애아동에게는 주 행동전문가가 참여하여 FBA(행동기능분석)를 토대로 개별화된 행동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18) 백종인, “미국에서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 8.), 553-554.

(2) 장애학생 지원과 차별적 징계 방지에 관한 지침

한편, 미 연방교육청은 지난 2022년 “장애학생 지원과 차별적 징계 방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¹⁹⁾ 이 지침은 연방 장애재활법 섹션 504 조항에 따라 장애로 인해 발생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학교가 해당학생의 필요에 따른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와 학교가 장애학생을 징계할 때 장애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추가적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은 사전예방적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IEP에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 등을 포함시키고, 교육자에게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자원을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회복적 관행과 학교 전체의 긍정적 행동 지원 간의 결합을 통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징계가 남용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3)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심각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 및 학교 차원의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²⁰⁾ ‘Hughes Bill’로 알려진 이 법령은 혐오 자극을 이용한 행동 중재(Aversive Behavior Interventions)²¹⁾의 사용을 금지하고, 행동기능분석평가(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를 실시한 후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특수교육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s)의 개발 및 실행을 의무화하고 있다.²²⁾ 장애 학생이 심각한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경우, 교육구는 행동중재사례관리자(긍정행동 중재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사람)가 ‘기능 분석 평가’를 제공하고 행동중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사례 관리자는 먼저 행동의 기능을 식별하고 도전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인 긍정적 대체 행동을 가르친다.²³⁾

19) U.S. DEPARTMENT OF EDUCATION,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Avoiding the Discriminatory Use of Student Discipline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2022).

20) Cal. Ed. Code Secs. 56520– 56524.

21) 체벌이나 충격 등 혐오자극을 제시하여 부정응적인 행동을 제거하는 행동 중재 방법을 의미한다.

22) 5 C.C.R. Secs. 3001, 3052.

23) 김미옥 외 공저,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0), 92–93.

나. 영국

영국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의 협의 하에 작성된 EHC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년기에 학습 장애나 그 외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특수교육필요(Special Education Nee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적 제공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와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행동지원 계획(Behavior Support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는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과정, 위험사정, 개별화된 약물지원전략 등 교육적·치료적 개입 방법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신체적 개입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²⁴⁾

징계와 관련하여 영국은 OIA(Office of the Independent Adjudicator)라는 고등교육 대체분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비록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절차이기는 하나 OIA 홈페이지에는 장애학생 징계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²⁵⁾ 이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장애의 결과로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의 성격과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중재 또는 화해의 형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장애학생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이 없는 이유로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살피고, 학생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 집행 과정에서도 발달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 심의 절차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생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명확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결정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4) 김미옥 외 공저,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0), 72-84.

25) Office of the Independent Adjudicator, "When things go wrong", <https://www.oiahe.org.uk/resources-and-publications/good-practice-framework/supporting-disabled-students/when-things-go-wrong/> (2023. 4. 30. 확인).

V. 심층인터뷰

1 인터뷰 대상자 및 심층인터뷰 일정

인터뷰 대상으로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징계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징계절차에 참여해 본 당사자 또는 가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	인터뷰 진행일	참석자	인터뷰 장소
특수교사 C	2023. 2. 22.	이수연, 엄선희, 정제형, 한상원	zoom
교육전문가 D	2023. 2. 23.	이수연, 엄선희, 한상원	사단법인 두루
특수교사 A	2023. 2. 28.	이수연, 엄선희, 정제형, 한상원	사단법인 두루, zoom
일반교사 B	2023. 3. 16.	이수연, 엄선희, 정제형, 한상원	zoom
발달장애학생 부모 F	2023. 3. 21.	이수연, 엄선희, 정제형, 한상원	개롱역 근처 스티디카페
발달장애학생 부모 G	2023. 3. 23.	이수연, 엄선희, 정제형, 한상원	재단법인 동천
발달장애학생 부모 E	2023. 3. 31.	이수연, 엄선희, 한상원	재단법인 동천

2 심층인터뷰 결과

가. 참여자 특성

(1) 교원

1) 참여자 신상

	특수교사 A (중등 특수)	일반교사 B (초등 일반)	특수교사 C (유아 특수)
교원 유형	중등 특수	초등 일반	유아 특수
장애 관련 전문성 (관련 학위/자격증/ 교육이수/연구/저술 등)	석사 학위(직업 특수) 취득, 관련 교과서 제 술 등	관련 강의 출강, 통합체 험프로그램 개발 참여	석사 학위(유아교육) 취득, 박사 학위 과정 중(유아특수)
교육 경력 (특수/통합학급 경험 여부, 발달장애학생 교육 경험 포함)	특수학교, 특수학급, 순회교육, 직업교육 거 점학교, 특성화고등학 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가족 중 발달장애인 유무	없음	있음	없음
연령	40대	40대	40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있음	있음	있음

2) 교내 특수(통합)교육 환경

	특수교사 A (중등 특수)	일반교사 B (초등 일반)	특수교사 C (유아 특수)
학교 유형	공립 일반	공립 일반	공립 특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발달장애학생 수)	13명 (13명)	6명 (6명)	4명
특수(통합)학급 수	특수학급 3학급	특수학급 1학급 통합학급 6학급	특수학급 1개 통합학급 3개
특수교사 수	3명	1명	1명
교육지원인력 수 (특수교육실무사/특수교육 지도사/사회복무요원 등)	없음	특수교육실무사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특수교육실무사 1명
특수교육 슈퍼바이저(고연차 특수교사 등) 존재 여부	없음	배치된 1명이 15-16 년 경력임	본인이 20년 이상 경 력임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전문성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사, 일반교사, 진로직업교사, 보건교사, 교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대체로 통합학급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높으나 통합학급을 실현하는 방법이 알기 어려워 고충을 겪고 있었다.

□ 동료 일반교사 및 관리자(교감/교장 등)의 특수교육 인식

교사마다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이해, 관심도가 다른 것으로 보였다. 십수 년 전보다는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단순히 하게 큰 이슈 없이 한 학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동료 일반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2) 전문가

1) 참여자 신상

	교육전문가 D
장애 관련 전문성 (관련 학위/자격증/교육이수/연구/저술 등)	특수교육학 박사, 아동발달센터에서 발달장애부모 상담서비스 운영
가족 중 발달장애인 유무	있음
연령	50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있음

(3) 발달장애학생 부모

1)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관련 사항

	발달장애학생 부모 E (가/피해 경험)	발달장애학생 부모 F (피해 경험)	발달장애학생 부모 G (교권침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음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도 움 없이 할 수 있으나,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함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함
의사소통수행능력	완전하게 의사소통이 가 능함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 통이 가능함	스스로 간단한 의사소통 이 가능함

2) 발달장애학생이 경험한 징계절차 당시의 교육 환경

		발달장애학생 부모 E (피해 경험)	발달장애학생 부모 E (가해 경험)	발달장애학생 부모 F (피해 경험)	발달장애학생 부모 G (교권침해)
당시의 연령		14세	18세	15세	15세
당시의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일반학교 일반 학급(도움반 병행)	일반학교 일반 학급	일반학교 특수 학급	일반학교 일반 학급(도움반 병행)
		국공립	국공립	국공립	국공립
당시의 특수 (통합) 교육 환경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발달장애 학생 수)	한 학년당 3-4명 (모두 발달장애 학생)	한 학년당 5명 정도(대부분 발달 장애학생)	한 학년당 6명 정도(발달장애학생)	한 학년당 1~7명 (발달장애학생 수 확인 불가)
	특수(통합)학급 수	2학급	2학급	2학급	2학급
	특수교사 수	2명	2명	2명	2명
	특수교육지원 인력 수(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등)	사회복무요원 1명	(교내 상담센터 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1명, 사회복무요 원 1명	특수교육실무사 1명, 사회복무요 원 1명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전문성

학교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및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개별화교육 회의가 늦어지거나 서면으로 이루어졌기에 발달장애학생에게 맞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 교사 및 관리자(교감/교장 등)의 특수교육 인식

학교마다 교사와 관리자의 특수교육 인식 및 관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으나,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교원 및 관리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도 있었다.

나. 내용 분석²⁶⁾

(1) 교원의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경험

1) 발달장애학생 관련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

□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

① 비장애친화적 교육 환경

[특수교사 A] 제일 힘든 건 그,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오는 어려움. 특히나 인문계 고등학교 이런 데는 수능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 아이들의 작은 행동들이 문제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죠. 아이들이 기죽어서 사니까. 특수학급 아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도전적 행동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물론 애한테 맞아보고 특수 학급에서도 그랬지만, 특수학교에서는 도전적 행동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 적은 있고요. 아, 특수학교에서, 아 제가 학급만 생각했구요. 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교육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아서 어렵기는 하죠. 왜냐하면 보조인력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뭐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든지, ABA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못하냐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 8명씩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② 발달장애학생 관련 연수 및 자료의 부재/부족

[일반교사 B] “제일 어려웠던 거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관련 연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연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수를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통합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한 교육청마다 예를 들어 도마다 한 두분 있을까 말까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하다. 실제 시행하고 있는, FM대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 교사의 수가 전국에 뭐 열손가락? 이럴 정도로 굉장히 현저히 적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26)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은 익명화 처리한 부분 외에는 답변 그대로를 옮겨 작성하였음.

□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① 연수 제공

[일반교사 B] 일단 실제 연수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신규교원들이나 또는 1종 연수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승진하기 전에 하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연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의무사항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교육청 중에서 몇몇 군데는 통합교육이나 뭐 일반교사들이 통합에 대한 전문성을 할 수 있는 연수가 없거나, 또는 그 이제 원격 연수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 연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우리를 알려줄 수 있는 선임자 또는 앞에 끌어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지만 배울 데가 없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청들 차원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제 그냥 형식적인 시행인 거죠. 원격연수를 이수하면 통합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원격연수 자료 목록을 봐도 10년이 지난 자료가 목록으로 그대로 제공되고 있고요, 최신화된 원격연수도 한두 건 있나 하는데, 심지어 그 원격연수를 제공하는 장학사나 그 밑에 파견된 교사들, 공문을 작성하는 분들이고 그 연수를 다 살펴보지 않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경남이나 이런 다른 지역들, 특수교육원이 있는 지역들은 그 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특수교사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연수를 활성화시키긴 하죠. 단, 이때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강화되었을 뿐이지, 일반 교수(사)를 위한 연수는 현저히 적고, 시행도가 낮습니다. 또한 그 교대나 사대에서 실습과정에서도 통합에 대한 연수는 거의 있기는 있되, 거의 전무하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운이 좋게 내가 실습을 갔는데, 그 학급이 만약 통합 학급이다. 그러면 통합을 경험하는 거지, 모든 예비교사들이 통합에 대한 실제 경험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특수교육원은 지역마다 있는 것인지?) 국립 특수교육원이 하나가 있고요, 충청도 쪽에, 그리고 각 지역청마다 인제 연수원을 개설한 데가 있고, 안 개설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② 전문가 양성 및 충분한 인력 확보

[일반교사 B] 일단 1번은 통합 교육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AI교육, SOFT, AI 교육 또는 뭐 그 트렌드에 드는 교육들에 대해서는 각자 전

문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현재 우리나라에 굉장히 현저히 적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전문가 양성과정 자체가 전무하다는 게 1번이고요.

[특수교사 A] 필요한 지원이 음, 지원인력을 좀 주는 거. 교육청의 같은 곳에서는 통합교육지원단. 무언가 지원단들이 있기는 하죠. 어쨌거나 지원인력을 많이 주고 특수교사를 많이 주면 좋겠어요. 보조교사보다 특수교사를 더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보조교사이거든요.

③ 긍정적 행동지원 및 환경 조성

[특수교사 C]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방적 차원에 것들이 있고,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예방적 어떤,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교실에는, 각 교실에는 아이들이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화가 났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발작을 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교실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는요. 그런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되고, 이렇게 증증장애에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사실 이게 특수교육의 이중진단의 문제라고 하긴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중진단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중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중진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특수학교에는 각반에 두세명은 있어요. 어떤 발달장애 이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거는 교사들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신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인력이 학교에는 하나도 없어요.

④ 장애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운영

[특수교사 C]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예컨대 이제, 표준수업 시수, 표준수업 시간 이런 게 있어요. 교육과정 하는 학교에는, 그러니까, 예컨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한 50%선에서 교사의 자율에 의해서 창의적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어가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은 해야 돼,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는 다른 걸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교사들이. 그렇게 주긴 했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교과 자체가 스트레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과를 포기하고 이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과정 자체를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 발달장애학생 관련 징계 경험

□ 절차적 측면

①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불충분한 의사소통 지원

[일반교사 B] 학교측에서는 특수선생님이 상담식으로 이제 조사를, 원래 같으면 학폭이면 그 서류 같은 것도 다 작성을 하잖아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데 이제 학폭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1차적으로 담임 쌤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담임 쌤이 장애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가닥을 못 잡고, 특수 선생님 혼자서 끙끙대면서 이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② 징계절차에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장애 전문가의 참여 부재

[특수교사 C] 교사의 의견은 전적이죠. 부모님의 의견과. 그게 전적이죠. 장애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장애학생도 당연히 자기를 변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장애학생이 와서, 그 상황이 어땠고,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학폭위가 열린다는 얘기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특수교사들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 해주기도 해요. 일반학교도 마찬가지고요.

③ 징계 관계자의 낮은 장애 이해 및 전문성

[특수교사 A]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교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장애 이해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 별다른... 아, 전문위원이 한 분 들어오시기는 했었어요. 외부위원이셨는데, 학교 관련 변호사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사안에 대한 심각한 내용들이 몇 개 나와서 그런 것들을 막 걸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는지 장애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교사 B] 그리고 이때도 학폭 상황이 생겼을 때 방금처럼 일반 교사가 장애 이해도나 이런 게 떨어질 경우 특수교사한테 일방적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도 차원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자문기관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자문기관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들도 고경력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신규교사들만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있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특수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그래서 교육청 마다 또 다르거든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령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도 이제 제가 아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매뉴얼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달리 다른 게 없고. 굳이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저희는 전라도 지역인데 XX학교라는 나주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원이 교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상호 각서 같은? 협약서 같은 것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교칙)으로? 학교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지. 그리고 규칙이 법령보다 좀 낮다 보니까 결국 상황이 터지면 그에 대한 것들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학교나 청에 이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내용적 측면

① 징계심의과정에서 심의 대상 행위의 배경이 된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음

[일반교사 B] 70~80%는 적절한 지원이 없어서 도전행동이 일어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결과만 놓고 판단하다 보면 그래서 도전행동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2차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2) 발달장애학생과 부모가 경험한 징계절차

1) 학교폭력 가해 사안 (고등학교/ 일반학교 일반학급)

□ 절차적 측면

① 징계절차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지원 및 법정대리인의 동석 여부

[발달장애학생 부모 E] (충분히 발언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었나요?) 네.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네, 진술서 이런 거는 작성은 안 했어요.

② 징계 관계자의 장애 이해 및 전문성 관련

[발달장애학생 부모 E] (징계절차에서 특수교사라든가 외부의 장애 전문가나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고려가 되었나요? 위원 구성까지 혹시 좀 아실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하... 글썄요

(제 기억에는 이게 약간 학폭위가 열리면 앞에 이렇게 해서 변호사 위원, 경찰위원 학부모 위원 이런 팻말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예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혹시 특수교사 선생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오셨고요.

(담임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 선생님 어떤 분이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오래전이라서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절차에 맞춰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 그때 맞춰서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셨으니까... 경찰도 왔었던 것 같고요.

(경찰이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경찰은 왔었던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분 계셨었어요.

□ 내용적 측면

① 징계심의과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고려 여부

[발달장애학생 부모 E] (ADHD나 발달장애 특성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조금 발현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2) 학교폭력 피해 사안

□ 절차적 측면

① 징계절차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지원 및 법정대리인의 동석 여부

[발달장애학생 부모 F] 저희 아이는 변호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폐 아이들의 특성상 어떤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랬니?”, “네”, “아니 다시 말해볼까? 저랬니?”, “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테이블에 애를 앉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우리 애는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글을 적으니까 그걸 증거자료로 채

택을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다 이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도움반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배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OO이의 특성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거기에 앉아 있는 다른 분들은 우리 아이의 특성을 전혀 모르니까.

② 징계 관계자의 장애 이해 및 전문성 관련

(교내 절차) [발달장애학생 부모 F]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출을 한 거를 모든 분들이 다 보셨는데, 그 당시에 교감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 아직까지도 되게 아픈데, 애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응은 그 거죠. 왜냐면은 가해를 한 아이는 정상, 일반 아이니까 아주 자기를 잘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적 없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선생님들이 한 번씩 물었을 때마다 답이 달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OO이 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었고 바로 그때 도움반 선생님께서 “OO이는 이때까지 봐왔던 OO이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정확하게 따라 한다. 그리고 기억력이 애는 현격하게 좋은 애기 때문에 시간이나 그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특정을 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 말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도움반 선생님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도움을 줬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어머니들이 동조를 해주신 거죠. 거기에 참여하였던... 그분들이 저를 좀 불쌍하게 보셨죠. 장애아동 어머니니까. 딱딱딱 얘기를 하니깐 당황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 편이 조금 되어 주셨던 것 같아요.

(위원회 당시 도움반 선생님 두 분은 어머니와 학생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교감선생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발언을 좀 하신 것 같고 다른 선생님은 혹시 또 발언을 하시거나 그랬나요?) 다른 선생님들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그냥 듣고만 계셨고, 윤리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분위기가 저에게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동조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신 거죠?) 네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교육청 절차) [발달장애학생 부모 F] (징계심의위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느끼셨는지?) 전혀요. 학교보다 못했어요. 자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었죠. (학교에서는 도움반 선생님들이 이해하신 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현출이 되었는데?) 그리고 선생

님들도 원반 수업에서 저희 아이를 봤으니까 이해를 한 구석이 있었고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올라온 것만 봐서는 애가 크게 맞아서 뭐 어디가 터지거나 뼈가 부서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임상심리사가 자폐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그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듣고 있었어요.

(임상심리사께서는 어쨌든 자폐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발언을 해주셨나요?) 근데 충분하다고... 이게 자폐라는 게 특성이 원체 다양한데 그냥 몽뚱그러서 자폐아이는 이래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임상심리사 분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자녀 분의 장애에 대한 이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장애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데까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쵸.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 자폐 특성이 이런 게 있구나'하고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당사자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아이는 아니었죠

(너무 약간 일반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 내용적 측면

① 징계심의과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고려 여부

[발달장애학생 부모 F] 일단은 제가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주셨으니까요.

(어떤 사항들을 요구하셨을까요?) 분리시켜 달라고 나는 재를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분리시켜 달래서 2주 동안 즉각 분리조치 취해주셨고, 학교에서 조치를 굉장히 좀 저, 제가 요구한 대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극도로 불안해하니까 어차피 애가 학교에 남아있는 동안은 또 보게 될 것이고.

3) 교권침해 사안

□ 절차적 측면

① 징계절차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지원 및 법정대리인의 동석 여부

[발달장애학생 부모 G] (징계절차에 있어서 발달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진술서 작성이나 심의위원회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석이 보장되었나요?) 아니요. 저한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심의위원회는 참여했어요.

② 징계 관계자의 장애 이해 및 전문성 관련

[발달장애학생 부모 G] 처음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징계 심의위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또는 전문성이 충분하였다고 생각되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다 일반인 일반 다 교사 분들이고 학부모 두 분도 오셨는데 그분도 다 그냥 일반 학부모들이어서 전혀 장애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심의위원 중에 특수교사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 없었어요.

□ 내용적 측면

① 징계심의과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고려 여부

[발달장애학생 부모 G] 어 사람마다 그쪽 기준이 있고 저희 쪽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 쪽 기준에서는 전혀 전혀 배려해 주신 게 (없었어요).

(3) 징계 관련 의견

1)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징계절차 관련

① 도전적 행동이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특수교사 A] 저는 이거는 ‘무조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이나 어떤 과정이나 상황 같은 거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상이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인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을 때 법에 저촉이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건 학교 안에서 어느 정도 교육상에서도 그걸 무조건 봐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행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옆에서 뭐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원인행위에서 문제행동이 나타난 거면 조금

징계를 하든 뭘 하든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 같고요.

[발달장애학생 부모 E] 저는 그걸 징계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징계 말고 어떻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옆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옆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자극을 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게 가라앉을 때, 그 때 이야기 하자. 그때까지 좀 너무 옆에서 해주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도 좀, 다른 발달장애도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표현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더 하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주면 그게 좀 가라앉았을 때 상태를 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거나 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돼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 ②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 학교의 교육 환경(적절한 교육인력이 지원되었는지, 장애학생이 진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는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매뉴얼이 존재하고, 지켜졌는지 등)이 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일반교사 B]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심리안정실이라고 특수학교는 있거든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심리안정실이 있기는 있되, 심리안정실에서 뭘 해줘야 할지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니까 순전히 경험의 경험에, 카더라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만 절차들이 진행되어 왔지,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그야말로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 것이기 때문에 다들 당황하시고 특수쌤에게 이제 몰아버리죠.

- ③ 징계 관계자 관련

-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징계심의, 징계조정, 행정심판에 장애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은 어떠한지

[특수교사 A] 있으면 훨씬 좋죠. 의무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전문가도 들어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떠신지?)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전문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의 원인도 다 다르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왜 일어났는지를 지켜본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가설밖에 얘기를

못하니까요. ‘이러이러 했을거야’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거든요.

- 발달장애학생 징계절차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일반교사 B] 뭐 이제 가령 자폐 아동이나 자폐 청소년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사실 한국자폐인협회도 있고 또는 소아정신과의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아정신과의를 참여위원으로, 교육청마다 한 명씩 소속이 되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전학을 가야 할 정도의 큰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바쁘고, 아시다시피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숫자가 굉장히 현저히 적다 보니까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만큼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④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폭력위원회처럼 교육지원청에서 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일반교사 B] 어... 어렵네요. 왜냐면 그 업무를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좀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 하시면?) 그냥 위원회의 그 이관했을 때 이관한 그 담당하는 청에 있는 그 분들이 그거에 대해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배정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도상으로 마련해 놓고 거기에 그 이제 위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배치되는 형국이라, 그래도 저는 이관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제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2) 발달장애학생의 방어권 보장 관련

- ① 발달장애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참고인(발달장애학생측에서 선임한 전문가) 출석 요청권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의견은 어떠한지

[발달장애학생 부모 E] 저는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보장해야 된다. 요청하면 보장해야 된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그 이유야 뭐, 계속 하는 이야기죠. 그 아이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무슨 별책을 준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봐서 그냥 장애가 있을 뿐이지 그걸로만 보면서 일반 아이들 처럼 똑같은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옆에서 이야기 해주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다 하면서 거기에 좀 반영을 좀 하게끔 해서 하면은 좀 부모보다는 그래도 다른 전문가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들어주는데, 조금

더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② 발달장애학생 권리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인(혹은 절차조력인) 도입에 관한 의견은 어떠한지

[발달장애학생 부모 F] 개인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필요하면 그걸 하겠지만, 저는 공익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고 신청이 있으면 파견이 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3)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① 1. 학교에서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출석정지 / 5. 학급교체 / 6. 전학 / 7. 퇴학처분 또는 그밖에 학칙으로 정한 징계 중 발달장애학생의 특성상 부적절한 징계처분한 처분이 있는지

[발달장애학생 부모 E]

1. 학교에서의 봉사는 선생님 계시니까, 특수선생님이 계시니까 괜찮고.
2.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저는 사회봉사를 해도 괜찮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같이 해주시면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4. 출석정지, 더 힘들 텐데. 아이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럴 것 같아요. 학교 안 가고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엄마나 아이나 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교육적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5. 학급교체로 환경이 변화되면 아이들이 좀 더 힘들 텐데. 아이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꾸면 안 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6. 전학은 힘들 것 같은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아까 학급 바꾸는 것도 그렇고 지금 강제전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면 이 아이에게 그러면 그만큼 또 다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환경 바뀌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강제전학을 또 시켜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들도 전학을 안 가고 다른 대안학교로 그렇게 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② 발달장애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징계별목 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특수교사 C] 네. 그리고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학교라는 공간이 철저하게 교육적인 행위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벌주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교육적인 처리를, 그러니까 교육적인 후속 조치가 되는 절차들 내지는 그런 것들이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사실 이렇게 하면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이런 절차들을 했었을 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친구들은 결국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 말고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아이한테는.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과연 교육적인 의미가 클까? 싶기는 해요.

③ 발달장애학생이 강제전학처분을 받는 경우, 교육권이나 적응과 관련된 문제, 건강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특수교사 A] 뭐 학생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긴 하겠지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새로 익혀야 되고, 그 익히는 과정이 더 힘들 테고, 새로운 사람을, 뭐 복지관을 옮겨야 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적응하는데도, 새로 옮겨야 된다면, 그런 어려움도 있을 테고. 네, 더 어려울 수는, 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너무 일방적으로, 장애로 인해서 뭔가를 다 허용해 주는 느낌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VI. 제도개선 방안

1 정책 제언

가.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장애 확인 및 권리 고지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발달장애학생에게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권리 고지가 필요하다.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없을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학생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알지 못해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단 발달장애학생이 징계절차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학부모, 증인 등 징계절차의 관련자 등에 대하여도 장애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징계절차의 주재자는 관련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였을 경우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발달장애인일 경우에는 징계절차의 각 단계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징계절차를 설명해야 하고 관련 지원제도 및 징계절차상의 권리 역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설명하고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교권보호심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등의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결과통지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정된 징계조치의 내용 및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또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통지해야 할 것이다.

나. 심의 과정에서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의사소통조력인 또는 절차조력인 제공

교내 징계사건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학생에게 의사소통조력인 또는 절차조력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것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심층면접과정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이 징계절차의 당사자가 될 경우 의사소통 또는 절차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에 응한 관련자 모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원지위법에서 징계조치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가해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그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²⁷⁾ 이처럼 교육기관에서의 징계조치는 징벌적 성격과 함께 선도적, 교육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여 해당학생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동을 하게 된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징계의 모든 단계에서 의사소통조력인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반성여부 등 장애학생의 의사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징계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학생에게는 절차조력인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징계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징계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학, 퇴학 등의 중한 징계조치의 경우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이러한 중대한 조치에 대하여 각 법령에 규정된 재심절차 등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조력인 또는 절차조력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의사소통조력인, 수어통역인 등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등에서도 사법절차에서의 보조인, 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인 등석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편의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발달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조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애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의 특성상 징계절차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 고유의 장애 특징과 의사소통방법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 또는 오랫동안 장애학생과 관계를 맺어 온 언어치료 교사 등 신뢰 관계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장 등의 허가 하에 가족 또는 장애학생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조인 등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조력

27)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등 참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방법이 될 수 있다.²⁸⁾

발달장애학생이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자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심리적 안정 및 의사소통의 지원 등 절차를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절차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나 사안이 복잡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징계를 위한 심의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징계 심의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관계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층면접 사례 중에서는 학교에서 변호인의 동석을 거부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 관련 법령상 변호인 등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징계절차에서 장애 전문가 참여 보장 및 내실화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부당하게 과도한 징계를 예방하고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절차에 장애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배경이 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²⁹⁾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온전히 발달장애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없이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이른바 ‘간접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³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28) 이 때 구체적인 제도화 과정에서는 진술조력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개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조력인이 해당 학생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당 학생의 진술을 명백히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력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29) 조미옥, 김고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비판사회정책 제56호 (2017), 63-64, 79-81.

30) 특히 발달장애학생 중 지적능력의 저하가 동반되지 않은 고기능 자폐성 장애학생의 경우,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외부 자극에 비장애인과 다른 형태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는 징계심의과정에 피해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장애학생의 특성을 설명하고 장애학생을 조력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의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에는 교내 특수교사가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거나 장애학생 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발달장애학생이 교권침해의 가해학생으로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장애 전문가의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특수교사가 교권침해의 피해교원이 된 경우에는 장애학생과 직접적인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동료교사가 교권침해의 피해자가 된 경우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을 실질적으로 조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심층면접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와 실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징계 심의 절차에서 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발달장애학생의 특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그 장애학생이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장애특성의 영향 등을 설명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이 장애학생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의 범위, 장애학생의 행동교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 제출이 장애학생이 가진 장애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장애학생 고유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미친 영향 등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 등의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교원지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장애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2인 이상의 장애 전문가의 의견제출권을 명시하거나 학내 특수교사 외에 외부의 객관적인 장애 전문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장애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마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적정한 징계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징계조치의 정도를 논의하기 전에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특성 등과 징계 대상이 된 행동 사이의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교원지위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가해학생의 장애를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징계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 감경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심의절차에서 장애의 영향을 먼

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장애학생이 징계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 행위가 장애로 인한 것인지 등을 판단한 뒤 구체적인 징계절차로 넘어가는 제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징계의 원인이 된 발달장애학생의 행동이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절차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 환경 등 행동의 배경이 되는 환경적 요소와 장애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는 절차가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학교 등 교육당국이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관계 법령 등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영향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징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 마련

만약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장애 특성과 명백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거나, 사실상 징계조치를 통해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계를 대신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원지위법에 따른 징계조치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사회봉사,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 등이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장애학생의 학부모 및 특수교사 등 모든 관련자는 징계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장애학생에게는 이러한 징계조치가 행동의 중재나 교정을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학과 같이 발달장애학생의 교육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조치의 경우 발달장애학생의 발달과 건강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현하였다.

발달장애학생 중에서 징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출석정지나 학급분리와 같이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선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행동의 중재와 교정의 관점에서 대안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동중재특별지원과 같은 대안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³¹⁾ 그러므로 발달장애학생과 같이 기존 징계규

31) 교육부, 202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02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서울 특수교육 운영계획 (2022).

정 상의 조치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바.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 비중 확대

교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교내 교원의 비중을 줄이고 외부위원 및 외부의 장애 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발달장애학생이 교권침해의 가해학생으로서 징계절차를 경험하였던 사례에 관한 심층면접에서 특수교사를 비롯한 교내 구성원들이 교권침해행위를 한 장애학생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학생 간의 사건이 아닌 학생과 교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동료교원 또는 학교의 입장에 영향을 받기 쉬운 학부모 위원 등 학교 관련자가 심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게 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교권침해 사건을 처음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교육지원청의 담당자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사건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사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여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되,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중 외부 인원을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등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 각 학교에 교권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인력을 파견하여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외부위원 및 외부의 장애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으로 심의가 이뤄질 때 학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심의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법 개정안

이상의 정책 제언에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초·중등교육에서 발달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징계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만들고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기 전 학생의 장애 유무 및 장애유형과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애를 고려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학생의 징계) ①·② (생 략) 〈신 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기 전 학생의 장애 유무 및 장애유형과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애를 고려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u>

○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기 전에 학생의 장애 유무 및 장애유형과 정도를 확인하고,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함. 또한 학교의 장이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적합하면서도 선도적,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애를 고려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3항).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학교의 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의 조치 대신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대안적 조치를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학교의 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의 조치 대신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대안적 조치를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u>

○ 장애학생의 행위가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행동이라 판단되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고 징계조치를 통하여 행동을 교정할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징계보다는 장애학생이 징계 대신 이수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조치를 마련하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학생에게 징계 대신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대안적 조치를 이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1조 제9항).

다.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 전단 중 “성폭력”을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폭력사건, 성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전담기구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구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구는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조인 등으로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조인 등으로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때에는 장애를 고려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 ⑦ (생략)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⑧ -----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폭력사건, 성폭력 ----- -----, -----.
<신설>	⑨ 전담기구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구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⑩ 전담기구는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조인 등으로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략)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다만,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illegible]

-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폭력사건’을 명시하여 전담기구가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안 제14조 제8항).
- 전담기관의 심의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심의과정에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여 조사과정에

서부터 장애학생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9항).

- 조사과정에 참여한 장애학생의 고유의 장애 특징과 의사소통방법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존에 장애학생과의 관계를 맺어 온 교사나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담기구에 요청할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조사과정에 동석할 것을 의무화하여 장애학생의 진술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 제10항).
- 현행법은 장애학생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2항 단서).
- 장애학생의 고유의 장애 특징과 의사소통방법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존에 장애학생과의 관계를 맺어 온 교사나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과정에 동석할 것을 의무화하여 장애학생의 진술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3항).
-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장애학생이 비장애인과 같은 체계의 교육 및 치료를 받는 경우 적절한 교육적, 선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 장애학생의 장애를 고려한 교육 및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제12항).
- 장애학생의 행위가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행동일 경우 그 책임을 묻거나 징계조치를 통하여 행동을 교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징계보다는 장애학생이 징계 대신 이수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조치를 마련하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선도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이에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학생에게 징계 대신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대안적 조치를 이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제13항).

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7.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⑧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 제7호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제5호 중 “피해학생”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 ----- -----.
1. ~ 6의3. (생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신설〉	7.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 제7호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⑧ (생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⑩ ----- 제9항----- -----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5.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 현행법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있어 장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의 자격으로 명시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내지 위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제7호).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가 심의위원회 위원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함(안 제14조 제8항)
-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에 장애의 특성이 일부라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있어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역시 고려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제5호).

마. 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학교교권심의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교권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⑧ 학교교권심의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조인 등으로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장애를 고려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 대신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대안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학교교권심의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교권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⑧ 학교교권심의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조인 등으로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장애를 고려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 대신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대안적 조치를 할 수 있다.</u>
⑦ ~ ⑨ (생 략)	⑪ ~ ⑬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 장애학생이 교권침해 행위의 가해자로 신고되어 심의가 열리는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에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진술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은 심의위원들에게 장애학생의 보편적 장애 특성, 학내에서의 해당 학생의 행동 특성 등을 설명하고 교권침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지원인력 없이 징계조치를 받게 되기도 함. 이에 학교폭력예방법과 마찬가지로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장애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7항).

-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교권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과정에 동석할 것을 의무화하여 장애학생의 진술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 제8항).
-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장애학생이 비장애인과 같은 체계의 교육 및 치료를 받는 경우 적절한 교육적, 선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장애학생의 장애를 고려한 교육 및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제9항).
- 장애학생의 행위가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행동일 경우 그 책임을 묻거나 징계조치를 통하여 행동을 교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징계보다는 장애학생이 징계 대신 이수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조치를 마련하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선도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이에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학생에게 징계 대신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대안적 조치를 이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제10항).

바. 교원지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해당 학교의 교원을 제외한다)

⑥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는 제2항 제6호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 ----- -----, ----- ----- -----.

현 행	개 정 안
1. ~ 5. (생 략)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해당 학교의 교원을 제외한다)
6.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는 제2항 제6호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⑦ (생 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 현행법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내지 위촉될 수 있도록 함. 특히, 교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학생 간의 사건이 아닌 동료 교원이 호소하는 피해에 대한 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심의하는 절차이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동료교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해당 학교의 교원을 제외하고 외부의 장애 및 특수교육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 제2항 제6호).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가 심의위원회 위원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함(안 제15조 제6항).

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교육책임자는 징계절차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징계절차에 접근·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애를 고려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의사소통조력인 지원
- 제26조제6항 전단 중 “사법기관”을 “사법기관 및 기타 권리분쟁·인권침해·징계사건에 관한 조사·판정(조정·중재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사법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사법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법기관”을 “사법기관 등”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사법절차 등”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차별금지) ① ~ ⑧ (생 략) 〈신 설〉	제13조(차별금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교육책임자는 징계절차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징계절차에 접근·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애를 고려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의사소통조력인 지원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6. (생 략) ②·③ (생 략)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생 략)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법기관 및 기타 권리분쟁·인권침해·징계사건에 관한 조사·판정(조정·중재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사법기관 등’이라 한다) ----- 사법절차 등 ----- 사법기관 등 ----- 사법절차 등 ----- ----- ----- ----- ⑦·⑧ (현행과 같음)

-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징계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견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조력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통하여 행동을 교정할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징계가 아닌 대안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행동에 해당하는지,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미비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등이 징계양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3조 제9항).
- 징계절차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장애학생이 교권침해의 가해자로 신고되어 심의가 열리는 경우, 장애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동료교원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제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함. 또한 장애학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징계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의사소통의 조력을 지원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 제1항 제6호).
- 현행법은 ‘사법기관’의 ‘형사사법 절차’에서만 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조력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은 사법기관의 형사사법 절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절차,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징계절차 등에서도 폭넓게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를 넓혀 장애인의 진술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 제6항).

VII.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며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의 징계절차를 중심으로 발달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초점집단인터뷰(FGI), 해외사례 분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주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심도 있는 문헌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또한 초점집단인터뷰의 경우 그 대상이 7명에 불과하여 관련자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해외사례 분석의 경우에도 영미권의 대표적인 사례를 인용하였을 뿐 다양한 국가의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한편, 연구진은 초·중등 교육기관의 장애학생 징계 관련 통계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교육부 등 유관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를 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진은 의원실을 통하여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에 대한 징계 현황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의 결과, 장애를 이유로 감정이 이루어진 징계 건수, 진술조력인,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제도가 활용된 건수 및 징계결정 후 후속 조치 상황 등의 통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존에 없던 신규 통계라는 이유로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요청한 통계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우선 해외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학생 징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더욱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발달장애학생 징계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분석하며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도전적 행동 등 장애특성과 부적절한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달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서 징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지원계획을 포함한 적절한 교육지원 및 도전적 행동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특수교육학, 장애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발달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과목 중심의 협의를 넘어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도전적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과 같은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찰 및 중재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특수교육학의 영역에서의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나아가 인터뷰에 참여한 일반 또는 특수교사들은 발달장애학생의 징계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 또한 이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달장애학생이 징계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배포할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제언들이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학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포함한 교육당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과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후속연구에서는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장애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등 다양한 관련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교원 등의 관련자들의 의견 또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징계절차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통합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III. 결론

초·중등교육에서 발달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제안하고자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문헌 분석 결과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및 징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사례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징계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는 도전적 행동과 발달장애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교사 및 학생, 학부모가 모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다음의 6가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①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장애 확인 및 권리고지
- ② 심의 과정에서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의사소통조력인 또는 절차조력인 제공
- ③ 징계절차에서 장애 전문가 참여 보장 및 내실화
- ④ 장애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마련
- ⑤ 징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 마련
- ⑥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 비중 확대

또한 이상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구체적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해 보았다. 개정안은 발달장애학생이 아닌 장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징계절차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가 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학생의 징계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깊이 있는 문헌연구가 어려웠던 점, 학제간 연구가 제한되었던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가 널리 보도되며 가해학생 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식의 법령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징계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없이 엄벌주의식으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발달장애아동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이후에도 징계절차에서 발달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발달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첨언하고자 한다.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 과정에서 발달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발달장애학생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특정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전적 행동을 보인 발달장애학생을 가해자로 묘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언급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심지어 “장애학생은 통합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에, 나아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조차 거리낌 없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달장애학생의 통합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발달장애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와 후속 연구들이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토대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참고문헌〉

논문

- 조미옥, 김고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비판사회정책 제56호 (2017).
- 이미지, 안예지, 김은삼,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국내연구 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6권 제2호 (2020. 4.).
- 이현수, “장애아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장애아동인권연구, 제4권 제2호 (2013. 12.).
- 홍정숙, 조정민, 조정현, 최광현,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경험과 개선 방안”, 지적장애연구, 제23권 제2호 (2021).
- 손희권, “현행 초·중·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한국교육, 제33권 제4호 (2006).
- 우이구 외 공저, “특수학교 현장의 구성원간 갈등현황 및 해소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16).
- 백종인, “미국에서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 8.).
- 김미옥 외 공저,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0).

판결례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공공기관 지침

- 교육부, 각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2011).
-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2012).
-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2017).
- 교육부 외 공저, 2022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 (2022).
- 교육부, 202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023).
- 서울특별시, 2022 서울 특수교육 운영계획(2022).
- U.S. DEPARTMENT OF EDUCATION,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Avoiding the Discriminatory Use of Student Discipline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2022).

웹페이지 상 글

- Office of the Independent Adjudicator, “When things go wrong”, <https://www.oiahe.org.uk/resources-and-publications/good-practice-framework/supporting-disabled-students/when-things-go-wrong/> (2023. 4. 30. 확인).

제7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인 쇄 2023년 9월
발 행 2023년 9월
발 행 처 서울지방변호사회
발 행 인 회장 김 정 욱
주 소 0659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서초동, 변호사회관)
전 화 02) 6200-6200
홈 페이지 [http : //www.seoulbar.or.kr](http://www.seoulbar.or.kr)
인 쇄 경성문화사(02-786-2999)
* 비 매 품

제7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지방법변호사회

0659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변호사회관
대표번호 02)6200-6200 www.seoulbar.or.kr